

2012

규제개혁백서

2013.3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규제개혁백서



2012 Regulatory Reform Book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규제개혁백서



2012 Regulatory Reform Book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 등 경제인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활동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기 활성화 지원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민생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총 1,41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주차장 등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개방처럼 작지만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에 불리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중소 기업 공생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경제활력 회복과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집행을 중단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시행하여 OECD 등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부처가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규제 중 행정목적에 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보완하거나 철회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국민불편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 노력의 결과,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에는 전년(67.2점) 대비 2.2점 상승한 69.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는 정부가 정책집행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그 자체로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규제완화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대상황과 정책여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규제가 필요한 곳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고, 풀어야 할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뒷받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처가 규제를 새롭게 만들거나 강화할 경우, 부처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분과(경제·행정사회) 및 규제개혁 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규제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규제개혁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이인영



규제개혁은 미래 신성장의 밑거름입니다

규제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듭니다.
규제선진화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반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흔들림 없는 규제개혁,
규제개혁 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선진화의 수레바퀴입니다.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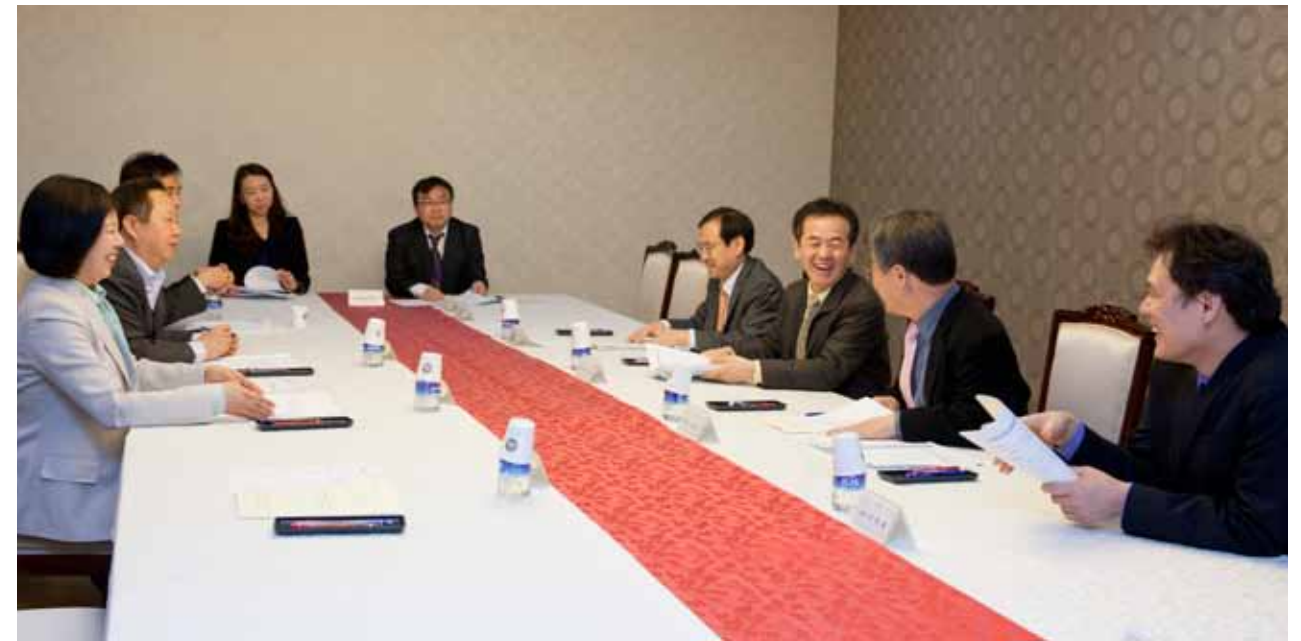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선진일류국가, 따뜻한 사회

규제개혁으로

이루어가겠습니다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없애고
서민의 부담을 줄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2012

REGULATORY REFORM BOOK

*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규제개혁백서



제1장 | 규제개혁 추진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020

- 1. 규제개혁의 의의 020
- 2. 2012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021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023

- 1. 추진체계 개요 023
-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024
-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027
-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030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031

- 1. 규제등록제도 개요 031
- 2. 등록대상 규제사무 031
-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032

제2장 | 기존규제의 정비(규제개혁 과제 발굴 · 개선)

제1절 각 부처 규제개혁과제 추진 036

- 1. 개요 036
-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037

제2절 공공기관 입찰계약규제 개선방안 039

- 1. 추진배경 039
-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040
- 3. 향후 추진계획 043

제3절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향 044

- 1. 추진배경 044
- 2. 추진방향 044
- 3. 주요 내용 045
- 4. 향후 추진일정 052

제4절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 053

- 1. 추진배경 053
- 2. 추진방향 053
- 3. 세부 추진과제 054
- 4. 향후 추진계획 058

제5절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059

- 1. 추진배경 059
- 2. 주요 과제 060
- 3. 향후 조치계획 066

제6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 067

- 1. 추진개요 067
-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069
- 3. 향후 일정 080

제7절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081

- 1. 추진배경 081
- 2. 규제개선 추진방향 082
- 3. 규제개선 주요 내용 083
- 4. 기대효과 086
- 5. 향후 계획 087

제3장 |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 요 090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092

- 1. 기획재정부 092
- 2. 금융위원회 103
- 3. 공정거래위원회 146
- 4. 관세청 165
- 5. 국세청 172
- 6. 금융감독원 173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183

- 1. 지식경제부 183
- 2. 중소기업청 220
- 3. 특허청 222

제4절 국토·해양 분야 227

- 1. 국토해양부 227
- 2. 해양경찰청 352

제5절 농림·수산 분야 355

- 1. 농림수산식품부 355
- 2. 농촌진흥청 422
- 3. 산림청 425

제6절 방송통신 분야 437

- 1. 방송통신위원회 437

제7절 노동·환경 분야 462

- 1. 고용노동부 462
- 2. 환경부 480
- 3. 기상청 529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531

- 1. 교육과학기술부 531
- 2. 문화체육관광부 541
- 3. 문화재청 556
- 4. 원자력안전위원회 563
-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566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567

- 1. 보건복지부 567
- 2. 식품의약품안전청 604
- 3. 여성가족부 623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631

- 1. 통일부 631
- 2. 외교통상부 634
- 3. 국가보훈처 636
- 4. 국방부 640

제11절 일반행정 분야 646

- 1. 행정안전부 646
- 2. 소방방재청 665
- 3. 경찰청 683
- 4. 법무부 687
- 5. 국무총리실 690
- 6. 국가인권위원회 695

제4장 |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제1절 규제일몰제 698

- 1. 규제일몰제 개요 698
- 2. 기존 규제일몰제 운영의 문제점 698
- 3. 규제일몰제 도입 확대 699

제2절 규제정보화 추진 701

- 1. 추진배경 및 경과 701
- 2. 규제정보화 사업 내용 702
- 3. 향후 추진계획 704

제3절 행정조사 정비 705

- 1. 행정조사 개요 705
- 2. 행정조사 정비원칙 706
- 3. '12년도 행정조사 운영 및 정비실적 696
- 4.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자료 감축 사업 707

제4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709

- 1. 개관 698
- 2. OECD 국제회의 참석 710
- 3. APEC 국제회의 참석 713
- 4. 규제개혁 경험전수 715

제5장 |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2년 규제개혁평가 718

- 1. 규제개혁평가 개요 718
- 2. 2012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719
- 3. 부문별 평가결과 719

제2절 외부전문가 평가 721

- 1. 등록규제 DB를 이용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 721

제3절 2013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740

- 1.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740
- 2. 중점 추진분야 741

부 록

제1절 규제개혁 관련법령 746

- 가. 행정규제기본법 746
-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758
-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일부개정 2012.7.6) 767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772

- 가. 규제개혁위원회 772
- 나. 경제분과위원회 775
-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 777

01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1. 규제개혁의 의의
2. 2012년 규제개혁 추진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1. 추진체계 개요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1. 규제 등록제도 개요
2. 등록대상 규제사무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1절 |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신지성 | 사무관(044)200-2398, ooo2879@pmo.go.kr

1. 규제개혁의 의의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당위적인 사회현상이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속성상 기존에 확립된 이해관계질서를 재편성하게 되므로 기득권자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궤도난마와 같은 해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1)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의 과감한 개혁은 필수이다.

(2)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이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을 신설·강화되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4) 부정부패 추방

모호한 규제, 과다한 재량을 인정해 주는 불확실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5) 규제제도의 국제화

선진국들의 새로운 규제기법들과 규제개혁기법들을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2. 2012년 규제개혁 추진 방향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국정 최고의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잘할 수 있고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민간과 시장이 자유롭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8년말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와 국민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시적 규제유예와 같이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추진 등을 통해 위기 극복 이후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경기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규제개혁의 역량을 보다 결집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성과 점검과 홍보 노력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였다.

(1)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2012년도는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투자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민생친화적(Life-Friendly) 규제환경 조성, 개방화·국제화에 부응한 제도정비 등에 중점을 두어 각 부처가 총 1,413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그중 1,186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의뢰, 대국민 공모 및 여론조사 실시, 민원 및 언론 보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 수요를 파악, 과제에 반영하였다.

(2)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존규제 정비

‘공생발전’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국정과제와 직결되거나 다수 부처와 관련되는 분야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점 개선하였다. 특히, 규제 현장에서 총리주재 규제개혁 회의를 개최하여 농어촌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였고,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연령제한 폐지, 중소기업에 불리한 공공기관 입찰·계약규정 정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등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경제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3) 체계적 규제품질 관리와 성과홍보

부처별 규제개혁과제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고,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처별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연말 최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규제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을 독려하였다.

또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기업·오피니언 리더 대상별로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규제개혁 성과자료집(국·영문)’을 발간, 개혁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5년 동안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61.9 → 69.4, 총 7.5점 상승)하여, 2012년도에는 전년(67.2) 대비 2.2점 상승한 69.4점으로 나타났다.

2절 | 규제개혁 추진체계

이훈범 | 서기관(044)200-2397, hblee14@pmo.go.kr

1. 추진체계 개요

가. 추진체계의 변화

참여정부에서 덩어리 규제개혁을 담당하던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과 규제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하던 규제신고센터는 2008년 2월 폐지되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였다(’08.3월).

나. 업무 추진체계

(1)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의 관리 및 평가, 불필요한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 관련 제도의 운영을 담당한다.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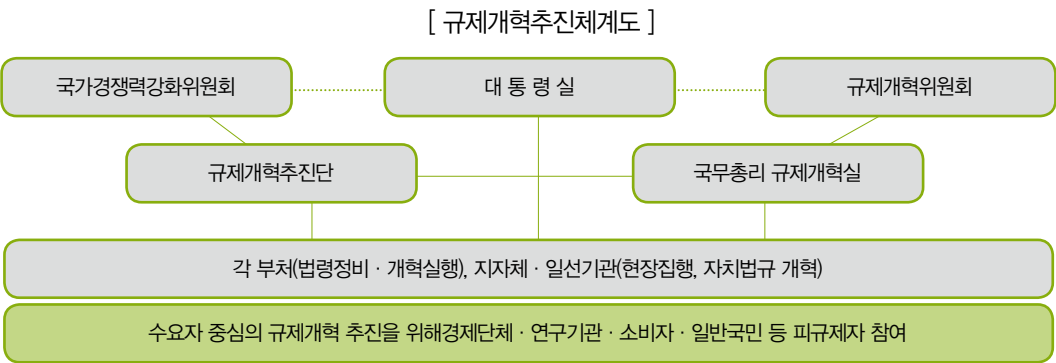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 설립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성 규제나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다.

(3) 중앙행정기관별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가. 구성 및 기능

(1)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3) 구성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5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2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 명단]

(2012년 12월 기준)

구 분	성 명	현 직
위 원 장	김 황 식	국무총리
	김 용 담	한국법학원장
정부위원 (6)	박 재 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 형 규	행정안전부 장관
	홍 석 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 종 룡	국무총리실장
	김 동 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재 원	법제처장
민간위원 (15)	이 병 진	경상대학교 초빙교수
	조 원 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노 명 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김 경 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 주 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김 태 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배 희 숙	이나루티엔티 대표
	사 공 진	한양대 경상대학장
	박 영 일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박 통 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백 윤 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 명 선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이 영 신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 학 태	녹색식품안전연구원장
	홍 은 주	한양사이버대 교수

나. 회의 운영

(1)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한다.

(2)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조정 및 의견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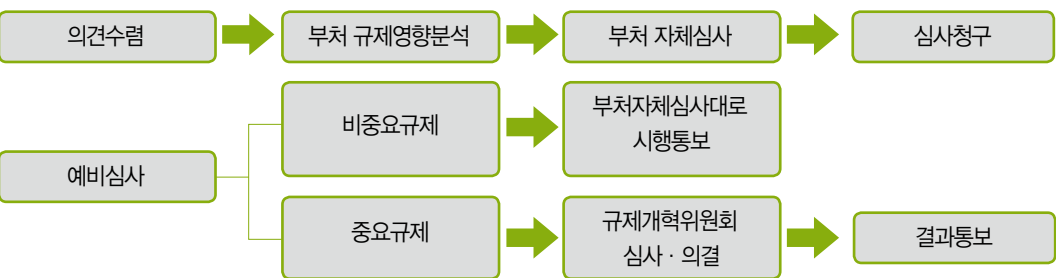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신설·강화규제 심사

(1)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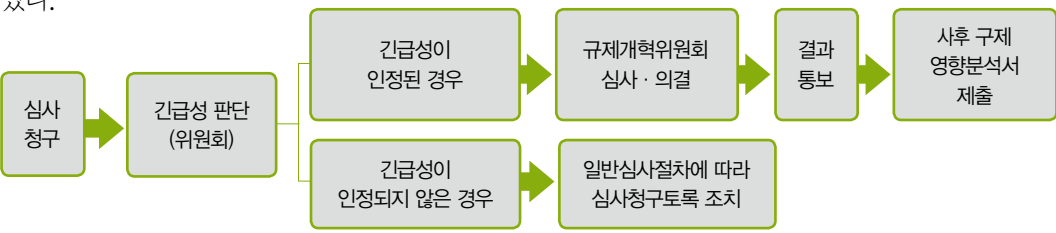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및 기능

(1)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12월 현재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7~8인, 정부위원 4인 등 12~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12년 12월 기준)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민간위원	이 병 진(위원장) 강 경 수 김 주 훈 김 태 준 노 명 선 배 희 숙 사 공 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16개 부처 1원)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조 원 철(위원장) 박 영 일 박 통 희 백 윤 기 이 명 선 이 영 신 이 학 태 홍 은 주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 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 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25개 부처)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나. 회의 운영

(1) 회의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규제심사위원회

① 기능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구성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있다.

(2) 규제개혁 총괄부서

① 기능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는 규제개혁 업무 총괄조정,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평가, 정부 내 규제개혁 관련 부처간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구성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기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 추진기구에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2) 구성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절 |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이훈범 | 서기관(044)200-2397, hblee14@pmo.go.kr

1. 규제등록제도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의 등록·공표에 더하여 1999년 이후 등록규제를 전산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를 통해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다.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등과 함께 부처별·유형별·성격별로 분류된 규제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규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업종별, 규제활동별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 등록대상 규제사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하는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나 규정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는 유사·동일 규제라도 별개의 등록단위로 하고, 동일법령상의 규제조항을 복수의 부처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 기관 허가, 1개

기관 협의 등)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제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에는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들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 등록했던 기존의 기준을 바꿔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분리해 등록토록 해, 규제등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에게 더욱 정확한 등록규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이와 같은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던 바, 등록규제 수는 규제등록 초년도인 '98.8월 총 1만 717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으로 2008년말에는 총 5,186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각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등록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규제신설 등으로 2012년 말 현재 7,088건(주 규제 기준)이 등록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등록규제 수(2012.12.31 현재)]

부처명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경찰청	124	124	122	97	97
고용노동부	313	330	321	304	221
공정거래위원회	208	198	161	115	116
관세청	31	30	32	30	36
교육과학기술부	419	417	494	488	247
국가보훈처	51	51	52	24	16
국무총리실	4	4	4	0	0
국민권익위원회	2	2	1	1	2
국방부	20	16	22	22	9
국세청	14	14	9	9	9
국토해양부	1,530	1,477	1,574		929
금융위원회	747	714	708	707	759
금융감독원	1	1	0	0	0
기상청	16	16	16	16	8
기획재정부	146	129	124	124	113

부처명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부	687	703	675	641	416
농촌진흥청	12	13	10	10	5
문화재청	55	55	49	50	33
문화체육관광부	219	222	222	238	160
방송통신위원회	170	182	195	133	138
법무부	116	113	116	69	72
병무청	3	3	3	3	6
보건복지부	524	512	536	535	616
산림청	105	78	76	76	67
소방방재청	126	132	133	110	108
식품의약품안전청	111	109	110	99	86
여성가족부	77	59	62	59	17
외교통상부	11	10	19	20	20
원자력위원회	77	77	0	0	0
중소기업청	89	89	88	86	35
지식경제부	399	400	424	407	295
통계청	5	5	5	5	3
통일부	15	15	18	16	20
특허청	30	30	30	29	17
해양경찰청	45	37	41	41	37
행정안전부	193	189	208	153	146
환경부	393	396	395	389	327
전체	7,088	6,952	7,055	6,740	5,186

02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개혁과제 발굴 · 개선)

제1절 각 부처 규제개혁과제 추진

1. 개요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제2절 공공기관 입찰계약규제 개선방안

1. 추진배경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3. 향후 추진계획

제3절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향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3. 주요 내용
4. 향후 추진일정

제4절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3. 세부 추진과제
4. 향후 추진계획

제5절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1. 추진배경
2. 주요 과제
3. 향후 조치계획

제6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

1. 추진개요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3. 향후 일정

제7절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1. 추진배경
2. 규제개선 추진방향
3. 규제개선 주요 내용
4. 기대효과
5. 향후 계획

1절 | 각 부처 규제개혁과제 추진

신지성 | 사무관(044)200-2398, ooo2879@pmo.go.kr

1.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각 부처는 소관 기존규제 중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2012년 규제개혁방향은 공생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을 담은 2012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의결(12.12.6)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총 1,18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다. 총리실에서는 각 부처의 규제개혁과제를 종합하여 201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고, 동 계획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2012.2.7)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당초 연초에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는 총 1,184건이었지만,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되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누적적으로 연말까지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총 1,413건에 달했다.

과제발굴은 현장점검, 전경련 및 경제 5단체 건의과제 등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발굴토록 하였다. 또한 규제건수보다는 규제 준수비용 절감, 시장 친화적 규제대안, 그리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두어 발굴하였다.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 부담을 주는 핵심적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장애요인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토록 하였는 바, 존치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폐지하되 부작용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존치해야 할 경우에는 규제품질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규제개혁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규제개혁 수혜자 단체와의 협조, 효과적인 교육·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 중소기업의 국유·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 확대(2012.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폐기물재활용 방법·규모에 따라 시설·장비·기술기준 차등 적용(2011.12, 「폐기물 재활용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기준 관련 고시」 제정)
-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2012.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행정상 납세규제 완화(2012.1, 종합지원대책 수립)

■ 투자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 재건축 부담금 2년간 한시 면제(2012.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2012.9, 「건축법 시행령」 개정)
- 석유수입업자 비축의무 폐지 및 석유수입업자 등록기준 완화(201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
- 전자제품 안전검사 중복규제 개선(2012.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해지 허용(2012.12,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 자동차 매매시 번호판 변경신청 기한 연장(2012년 하반기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
- 취약계층 ‘인터넷전화요금’ 감면(2012.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농지부담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2012.7, 「농지법 시행령」 개정)

■ 개방화·국제화에 부응한 제도 정비

- FTA 원산지 자율점검제도 도입 및 원산지 사전심사범위 확대(2012.4, 「특혜원산지 자율점검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기업 FTA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및 위반시 제재부담 완화(2012.10,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개정)

2절 공공기관 입찰계약규제 개선방안

최두영 | 사무관(044)200-2414, choedy@pmo.go.kr

1. 추진배경

- 공공기관*은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체규정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유사행정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27) · 준정부기관(83) · 기타 공공기관(176) 등 286개가 지정('11년 말 현재)
 - **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특정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공공기관의 자체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유사행정규제 전반을 검토 후 문제사례를 발굴하여 '11년에 1차로 개선하였음*
 - *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11.1. 총리실) :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 주관적 재량규정의 투명화, 과도한 감독권행사 개선, 기타 규제개선 등 4대 분야 32개 과제를 발굴, 개선완료
- 지난해에 이어 '12년에는 특히 공공기관의 입찰 · 계약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제2차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음
 - 국내외 경제성장세 둔화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처로서의 공공분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입찰 · 계약 부문에서 공공기관의 자체규정이 국가계약 법령 등 정부기준에 비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1)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업무 참여 허용

- (현황) LH는 감정평가사 50인 이상의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만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은 31개 법인 중 14개에 불과한 실정임
 - (문제점) LH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 규모는 다양함에도 대형 감정평가법인만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
 - (개선) 감정평가 예상금액 300억원 미만의 평가업무에 대하여 중소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 10~49인)의 참여 허용으로, 중소규모 감정평가법인(17개)의 사업기회 확대
- * 300억원 미만 감정평가(‘10년 기준) : 112건, 수수료 3억 5,000만~5억 3,000만원(추정치)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

- (현황) LH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전심사 기준 중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정부기준보다 강하게 설정
 - (문제점) 사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기준보다 과도하게 기준을 높이 설정하여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 보증자리 주택사업 등 아파트 건설사업이 많아 업체 부도시 다수의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등 파급효과가 커서 신용등급 기준이 중요
- (개선)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책임성이 높은 대표회사를 제외한 구성원 회사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함으로써 LH의 공사입찰에 중소 건설사의 참여기회 확대 (3,200여개사가 사전심사에 추가로 참여가능)

공사규모 \ 컨소시엄	대표회사	구성원 회사(현행→개선)
500억~1,000억원	BBB ⁻	BB ⁺ → BB ⁰
1,000억~1,500억원	BBB ⁰	BBB ⁻ → BB ⁺
1,500억원 이상	BBB ⁺	BBB ⁰ → BBB ⁻

(3) 입찰참가 제한기간 단축

- (현황 및 문제점)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정부·공공기관에 입찰참가 제한되면 경영상 타격이 큰 만큼 제재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계약법령은 부정당업자의 사유에 따라 1월~2년 내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영화진흥위 등 5개 기관은 제한기간을 6월~3년으로 운영하여 입찰참가를 지나치게 제한
 - (개선)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국가계약법 수준(1월~2년)으로 재조정
- * ‘06~’09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80개 종합건설업체 중 56개사(70%) 폐업

(4) 신규업체에 불리한 영업기간 요구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국가계약법령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은 경우 영업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감정원 등 2개 기관은 입찰참가자격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당해 영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신규업체에 게 불리
- (개선) 입찰참가자격에서 일정기간 영업종사 요구부분 삭제

(5)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수의계약 기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국가계약법령은 중소기업자의 신기술 제품개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생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은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기간을 정부기관보다 짧게 운영
- (개선)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국가계약법령처럼 3년으로 연장

나.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 개선

(1) 포괄적·자의적인 수의계약 근거 삭제

- (현황 및 문제점) 정부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해양연구원 등 18개 기관은 기관장의 판단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적·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
 -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 (개선) 포괄적·자의적 수의계약 허용규정 삭제

(2)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국가계약법령은 종전에는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계약보증금 수준을 달리 규정하였으나 연대보증 업체의 부도시 건설한 타 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부작용 때문에 '10.7월 이후 연대보증제를 폐지하였으나, 가스안전공사 등 21개 기관은 개정 전 국가계약법령을 원용하여 연대보증제를 여전히 운영 중
- (개선) 국가계약법령과 같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3) 공공기관 납품실적에 따른 차등적 계약보증금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국가계약법령은 일반적인 조달계약시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석유관리원은 공공과 민간을 차별할 이유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실적만 인정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불합리하게 더 많은 (20%)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
- (개선) 공공기관 조달실적에 따른 차등적 계약보증금제도 폐지

(4)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정부기관은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한국거래소 등 16개 기관은 보증금 면제기준을 정부기준보다 낮게 설정

- (개선) 계약보증금의 면제기준을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로 확대

(5) 저가낙찰공사 계약보증금 현금납부 의무화 폐지

- (현황및문제점) 정부기관은 계약보증금납부시 현금 외에도 은행보증서, 정기예금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투자공사 등 2개 기관은 예정가격 100분의 70 미만의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현금납부토록 하여 불편을 초래
- (개선) 낙찰가격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식의 계약보증금 납부 허용

3. 향후 추진계획

가. 과제추진 관리

- 소관부처(기관)는 추진과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부처가 관계 공공기관에게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조치
- 총리실은 추진상황을 점검,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평가에 반영

나. 유사행정규제 정비노력 강화

- 각 부처의 유사행정규제 정비실적을 총리실의 부처 평가에 반영
- 각 부처는 소관 공공기관의 규정 담당자에 대하여 규제 및 법령 관련 교육 실시

3절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향

나민희 | 사무관(044)200-2442, iammini@pmo.go.kr

1. 추진배경

- 일부 지자체·학교 등은 편의시설물을 개방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시설물 개방실태 조사 결과 개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
⇒ 공공기관 보유시설을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2. 추진방향

- (개방원칙)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시설물을 최대한 개방하되,
- 공공기관의 성격, 주요시설 보호,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방 범위 및 방식, 이용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 (대상및 시기)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보유시설 중 국민의 이용수요가 높고, 시설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 운동장, 교육시설(연수원), 체육시설을 우선 개방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계획 마련 후 '12.7월부터 개방]

개방시설	중앙부처 소속기관 (710개, 약 65%)	공공기관 (137개, 약 75%)	전체 개방수량 (847개)
주차공간	59,060대	116,461대	175,521대
운동장	65개소	182개소	247개소
교육시설	191개소	165개소	356개소
체력단련실	31개소	176개소	207개소

3.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12.3.9)에서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을 확정
- '12.5.1일부터 5개 공공기관(한전,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보공단)이 편의시설을 시범 개방
- 7.1일부터는 847개 공공기관(중앙부처 소속기관 710개, 공공기관 137개)의 편의시설물이 일반국민에게 확대 개방
- 주차공간(17만 5,521면), 운동장(247개소), 교육시설(356개소), 체력단련실(207개소)뿐만 아니라 테니스, 축구, 농구, 스케이트 전용 시설과 함께 컴퓨터실, 도서관 등의 시설까지 포함
- 대부분의 시설물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나, 교육시설이나 잔디구장 등 일부 시설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
- 다만 국가보안, 임대건물, 주변환경(예 : 이용수요가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시설), 기관 특성(예: 외부오염을 차단해야 할 연구·실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방하기 부적합한 기관들은 당초 개방대상에서 제외

[부처별 개방 현황]

기관 / 시설		개방수량
국무총리실(공공기관) 10개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주차공간	5개소, 522대
	체력단련실	1개소
	기타	연못 등(1), 회의장(1), 음용수(1), 결혼식장(1)

제3절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향

기관 / 시설		개방수량
재정부(공공기관) 2개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등	주차공간	2개소, 38대
	운동장	1개소
	기타	테니스장(2), 체육관(1)
교과부(소속기관) 5개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특수교육원	주차공간	463대
	교육시설	54개소
	기타	테니스장(2), 농구장(1), 족구장(2), 배드민턴장(1), 기숙사·식당(1), 캠프관·전시관 등(1), 강당(1)
교과부(공공기관) 25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주차공간	6,407대
	운동장	8개소
	교육시설	45개소
	체력단련실	3개소
	기타	테니스장(6), 족구장(2), 농구장(1), 인터넷카페(1), 도서관(3), 교육시설(7), 강당(3), 회의실(6)
외교부(소속기관) 1개 *외교안보연구원	주차공간	1개소, 120대
통일부(소속기관 1개) *남북출입사무소	주차공간	1개소, 298대
법무부(소속기관) 62개 *법무연수원, 울산보호관찰소 등	주차공간	71개소, 3,860대
	운동장	12개소
	교육시설	29개소
	기타	테니스장(26), 궁도장(1)
법무부(공공기관) 2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차공간	13개소, 197대
	운동장	4개소
	교육시설	10개소
	기타	테니스장(1), 족구장(1)
국방부(소속기관) 1개 *국립서울현충원	주차공간	10개소, 515대
	교육시설	1개소
국방부(공공기관) 1개 *전쟁기념사업회	주차공간	3개소, 754대
행안부(소속기관) 7개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주차공간	3개소, 480대
	운동장	2개소
	교육시설	1개소
	기타	테니스장(4), 예식장 용도 대강당(1), 강의실(1), 집회·관람실(1), 구내식당(1)

기관 / 시설		개방수량
행안부(공공기관) 3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주차공간	4개소, 797대
	기타	화장실(1)
문광부(소속기관) 19개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등	주차공간	19개소, 3,214대
	운동장	1개소
	교육시설	31개소
	체력단련실	5개소
문광부(공공기관) 15개 *한국문화번역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주차공간	16개소, 2,542대
	운동장	7개소
	교육시설	12개소
	체력단련실	8개소
	기타	자료실(1), 상영실(1), 국제스케이트장(1)
농림부(소속기관) 26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수산대학 등	주차공간	104개소, 2,203대
	운동장	4개소
	교육시설	11개소
	기타	테니스장(22), 족구장(1), 실내체육관(1), 공원(2), 야외잔디밭(3), 대강당(2)
농림부(공공기관) 7개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주차공간	12개소, 15,711대
	운동장	4개소
	교육시설	8개소
	체력단련실	12개소
	기타	테니스장(9), 족구장(4), 농구장(1), 도서관(2), 회의장, 공원(4), 대강당(2), 야외잔디밭(1), 실내결혼식장(1)
지경부(공공기관) 27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차공간	277개소, 21,833대
	운동장	49개소
	교육시설	32개소
	체력단련실	130개소
	기타	테니스장(27), 체육장(11), 전시관(4), 결혼식장(1), 자료실(3)
복지부(소속기관) 10개 *국립나주병원, 국립부산검역소 등	주차공간	7개소, 404대
	운동장	3개소
	교육시설	5개소
	기타	테니스장(4), 실내체육관(1)

제3절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향

제2장

기관 / 시설		개방수량
복지부(공공기관) 5개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주차공간	3개소, 2,415대
	운동장	8개소
	교육시설	5개소
	기타	숙박시설(1)
환경부(소속기관) 11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주차공간	12개소, 1,450대
	운동장	2개소
	교육시설	9개소
	기타	테니스장(5)
환경부(공공기관) 4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주차공간	47개소 8,345대
	운동장	2개소
	교육시설	7개소
	체력단련실	1개소
	기타	테니스장(1)
고용부(소속기관) 39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주차공간	34개소, 1,777대
	기타	회의실(21), 토요 직업진로 프로그램 운영(8)
고용부(공공기관) 6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주차공간	51개소, 6,417대
	운동장	45개소
	교육시설	4개소
	체력단련실	6개소
	기타	테니스장(26), 실내체육관(5), 복도·벽면 미술전시관(1), 컴퓨터실(1), 음식점 용도 강당(12) 및 회의실(17)
여가부(공공기관) 1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차공간	7개소, 460대
	운동장	4개소
	교육시설	15개소
	체력단련실	12개소
	기타	수영장(1), 천문대(1), 체육장(6), 청소년시설(4), 도서실(1)
국토부(소속기관) 34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등	주차공간	29개소 1,200대
	운동장	3개소
	교육시설	1개소
	체력단련실	1개소
	기타	테니스장(20), 족구장(6장), 축구장(1), 풋살(2), 게이트볼(1), 배트민턴장(1), 회의실(2), 야외공연장(2)

기관 / 시설		개방수량
국토부(공공기관) 17개 *한국공항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주차공간	567개소 47,943대
	운동장	47개소
	교육시설	20개소
	체력단련실	3개소
	기타	테니스장(76), 족구장(2), 농구장(5), 탁구장(2), 수영장(1), 배구장(1), 실내체육관(9), 회의실(25), 다목적홀(1), 식당(1), 야외결혼식장(1)
방통위(소속기관) 3개 *중앙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등	주차공간	3개소, 74대
	기타	테니스장(6)
방통위(공공기관) 1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차공간	1개소, 424대
금융위(공공기관) 5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주차공간	28개소, 629대
	운동장	2개소
	교육시설	6개
	기타	구내식당(1), 전시관(1), 강당(1), 정보자료관(1), 여가·휴식공간(1), 예식공간 및 회의시설(=국제회의장, 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공기관) 2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주차공간	5개소, 467대
	운동장	1개소
	교육시설	1개소
	체력단련실	1개소
	기타	테니스장(1)
보훈처(소속기관) 7개 *대전현충원, 영천호국원 등	주차공간	7개소, 7,727대
	기타	산책로(3)
국세청(소속기관) 96개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지방국세청 등	주차공간	99개소, 6,850대
	운동장	1개소
	교육시설	5개소
	기타	테니스장(7), 실내체육관(1)

제3절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향

기관 / 시설		개방수량
관세청(소속기관) 32개 *관세국경관리 연수원, 서울세관 등	주차공간	32개소, 841대
	운동장	1개소
	교육시설	1개소
	체력단련실	3개소
	기타	테니스장(9), 족구장(1), 대강당(1), 화장실(3), 세관공원(1), 실내체육관(2)
조달청(소속기관) 10개 *품질관리단, 대전지방조달청 등	주차공간	9개소, 369대
	기타	테니스장(5), 통로(1)
통계청(소속기관) 31개 *호남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등	주차공간	31개소, 766대
	기타	테니스장(1), 족구장(1), 배드민턴장(1)
검찰청(소속기관) 8개 *대구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등 *대검 및 지청(37개)도 개방 예정	주차공간	45개소, 3,750개
	기타	테니스장(21), 족구장(1)
병무청(소속기관) 11개 *서울지방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등	주차공간	11개소, 653대
	기타	테니스장(4)
방위사업청(공공기관) 1개 *국방과학연구소	주차공간	7개소, 217대
경찰청(소속기관) 217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교육원 등	주차공간	71개소, 16,548대
	운동장	7개소
	교육시설	16개소
	체력단련실	20개소
	기타	테니스장(17), 족구장(10), 풋살(4), 배드민턴(2), 축구장(2), 수영장(1), 농구장(6), 탁구장(3), 당구장(1), 검도장(1), 유도장(1), 태권도장(1), 다목적구장(10), 체육관(7), 이발소(1), 강당(1), 산책로(1), 정원(1), 볼카페(1), OD기(1), 회의장(3)
경찰청(공공기관) 1개 *도로교통안전공단	주차공간	1개소, 215대
	기타	예식장(1), 갤러리(1)
문화재청(소속기관) 20개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 등	주차공간	19개소, 1,268대
	운동장	1개소
	교육시설	4개소
	기타	족구장(1), 잔디밭(2), 화장실(1)

기관 / 시설		개방수량
문화재청(공공기관) 1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차공간	1개소, 58대
농진청(소속기관) 8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주차공간	1개소, 304대
	운동장	1개소
	기타	테니스장(11)
농진청(공공기관) 1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차공간	1개소, 70대
문화재청(공공기관) 1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차공간	1개소, 58대
산림청(소속기관) 36개 *산림교육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주차공간	65개소, 2,905대
	운동장	25개소
	교육시설	21개소
	기타	수목원(2), 유아숲체험원(2), 테니스장(7)
중기청(소속기관) 9개 *경기지방중기청, 충북지방중기청 등	주차공간	10개소, 656대
	기타	테니스장(11), 회의실(10)
특허청(소속기관) 1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차공간	1개소, 177대
	운동장	2개소
	교육시설	2개소
	체력단련실	1개소
	기타	테니스장(2)
식약청(소속기관) 5개 *부산지방식약청, 대전지방식약청 등	주차공간	6개소, 188대
	기타	테니스장(1)

4. 향후 추진일정

-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안) 발표 : 3월
- 부처별 개방계획 마련 : 5월 말까지
 - 부처별로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개방계획 마련
- 부처별 개방계획 취합 및 종합 발표 : 6월 말까지
 - 국무총리실, 공공기관 개방계획 종합 발표
 - 공공기관 별로 개방시설의 운영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시민에 공개
 - *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개방내용 게재
 -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지역 내 공공기관 개방시설 안내
- 부처별 이행실태 점검 : 11월 중
 -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필요시 개선권고 등 예정

4절 |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

김동욱 | 사무관(044)200-2407, tangouniform@pmo.go.kr

제
2
장

1. 추진배경

- 농어촌은 도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가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농어촌에 과도한 규제부담 발생
 - 낮은 인구밀도 : '10년 인구밀도(명/㎢) - 서울(16,189), 강원(88)
 - 고령화된 인구구조 : '10년 노령화지수(%) - 서울(65.1), 전남(129.8)
 - 규제부담으로 농어촌에는 기본적 서비스(의료 · 교통 · 교육 등)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삶의 질이 떨어짐
- 농어촌 관련규제 중에 현실에 맞지 않아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완화하여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

2. 추진방향

- Two track 방식으로 농어촌의 규제부담 완화 추진
 - 도시와 농어촌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규제의 경우 농어촌에는 기준을 완화
 -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 중 과도한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

3. 세부 추진과제

가. 도시와 동일한 규제의 차등화

(1) 의료·교통·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1)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도입 추진

(현행) 농어촌은 영유아 수가 적어 보육시설 시설·교사 자격기준* 준수시 과도한 부담으로 보육 시설 운영이 곤란

* 조리시설·놀이터 등 시설, 원아 3명당 교사 1인 인력 요구 등

※ 1,416개 읍·면 중 보육시설 미설치지역은 전체의 약 30%인 426개(‘10년 복지부)

2)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차등화

(개선)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은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양육이 가능토록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개발·보급

(현행) 농어촌 보육시설 교사에게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월 11만원)을 지급 중이나, 도서벽지에 대한 고려가 없어 당해지역 보육교사에게는 인센티브 효과 부족

(개선) 농어촌 지역을 구분(2~3등급)하여 특별근무수당을 차등지급

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완화

(현행) 환자수가 적은 농어촌에도 도시와 동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기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어려움

※ 지역응급의료기관 : 최소 10병상, 전담의사 2인 이상, 간호사 5인 이상 등 기타 응급실 : 30㎡ 이상 진료 공간, 의사 1인, 간호사 1인 이상 등

(개선) 농어촌에 한해 응급의료기관·응급실 기준을 완화(내원환자수 1만명 미만 지역의 경우 시설·인력 기준을 50% 완화)

4) 농어촌 지역 학교선택권 제한 완화

(현행) 농어촌은 학생수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으나 도시와 동일한 배정 기준 적용으로, 통학구역 밖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이전이 필요

(개선) 농어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이 없이도 학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통학 구역 확장 추진

5)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처리기준 완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현행)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철거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능력이 없고 매립가능시설이 부족(전국 9개)하여 수집·운반·처리에 애로

(개선) 농어촌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특례 신설(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및 매립시설 허용)

6) 도서지역 여객선 정원 증원 허용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현행) 농어촌 지역축제 기간 중에는 여객이 폭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거주 농어민에게 불편 발생

(개선) ‘지역축제기간’에도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객선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예외허용기준 완화

(2) 토지·폐기물 등 자원이용 관련

1) 소규모 농업용 시설은 도시계획심의위 면제

(현행) 녹지 및 비도시 지역 내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농업용 창고·축사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

(개선) 자연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농·임·어업용 창고·축사 등 소규모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시설에서 제외

2) 농업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신고로 간소화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농어촌 지역에 있는 대지화된 토지를 초지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불편

(개선) 농어촌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초지·논·밭·과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간소화

3) 농촌 지역 버섯배지용 폐기물 재활용 절차 완화

(현행) 농가 등에서 식물성 잔재물을 버섯재배용 배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환경성조사서 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

(개선) 식물성 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

나. 농어촌에 불리한 규제의 개선

(1) 농어촌에만 있거나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

1) 농지에 곤충사육시설 설치시 농지전용허가 면제

(현행) 곤충사육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농지에서 곤충사육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필요

(개선) 곤충사육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

2)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단독주택 설치 허용

(현행)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동 지역 내에서는 농어가 주택만 허용

(개선) 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단독 주택 설치 허용

3) 농어촌 정비사업의 측량설계·공사감리 위탁대상범위 확대

(현행) 현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영 중

*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한정

(개선) 위탁대상범위를 일반 건설업의 설계나 감리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사 사무소나 감리 전문 회사에게도 확대하여 농어촌 정비사업의 질을 제고

4) 농지취득자격 기준 개선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뿐 아니라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

(개선)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이 농지취득을 위한 절대조건이 아닌 만큼, ‘신체적 조건’은 삭제

5) 농업기계화 사업의 위탁제한 폐지

(현행) 농업기계화사업의 수탁자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 전문기관의 진입이 어려움

(개선) 민간 전문기관의 진입 확대를 위해 위탁범위 제한 규정 삭제

6) 임시시장 개설절차 완화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시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토지면적이 1,000㎡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000㎡ 이상인 경우

(개선) 농산물 소비증대 등을 위해 신고로 임시시장 개설절차 완화

7) 전통주 통신판매 관련규제 완화

(현행)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등 통신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성인인증수단(범용인증서만 가능)과 1일 구입수량(1일 50병) 제한 등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

(개선) 성인인증수단 확대(금융기관인증서) 및 통신판매수량 확대(1일 100병)

8)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수출업 겸업 허용

(현행) 현재 ‘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 겸업 불가

(개선)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 겸업을 허용

9) 어선등록시 어선건조(발주) 허가서류 등 감축

(현행) 어선등록 및 어선 관련 증서 재발급시 내부확인이 가능함에도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거나 구비서류를 중복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어업인 불편 초래

(개선) 어선등록 및 어선 관련 증서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어선건조·발주허가서) 제출 생략

(2) 일반적인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

① 농지대리경작 체납 임차료 가산금 비율 완화

(현행) 국유재산사용료 연체가산금 등 일반적인 연체 가산금 비율은 기간별 연12~16% 수준인 반면, 농지대리경작자가 농지소유자·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미지급 시 부과하는 가산금 비율은 연 25%로 과다

(개선) 당해 가산금 비율은 타법령 수준으로 완화

② 정부양곡매입시 양곡 생산자·소유자의 반납이자율 조정

(현행) 민법상 이자채권 이율(연 5%)이나 상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연 6%) 수준과 달리

(개선) 양곡의 생산자·소유자가 양곡매입 약정 불이행시 부과하는 반납이자율은 7%여서, 이를 5%로 완화

③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

(현행)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사업위기 등의 경우까지 폭넓게 분납이 가능한 반면, 농지전용시 보전부담금 분납은 제한적으로 허용*

* 현재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관광단지·중소기업 공장용지(중소기업기본법)로 농지 전용시 분할 납부 가능

(개선) 당해 부담금 분납을 ‘모든 공장용지’로의 전용까지 확대 허용

4. 향후 추진계획

가. 국무총리 주재 「농촌 현장애로해소회의」에서 과제 확정

- 각 부처는 '12년 하반기까지 소관 과제를 추진
- 총리실은 각 부처 추진상황 점검

나. 연말까지 농어촌 규제부담 형평제고를 위한 과제발굴 지속 추진

5절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최원철 | 사무관(044)200-2420, chjm0524@pmo.go.kr

1. 추진배경

■ 골재(자갈, 모래)는 주택 및 도로 등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기초재료로서 바다와 산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채취

(’12년 골재공급계획, 국토해양부)

※ 채취량 비교 : 바다(14.8%), 하천(1.4%), 산림(46.7%), 육상(3.9%), 비허가*(33.2%)
* 하천정비,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

■ 최근 건설경기 침체,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골재채취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특히, 수질환경 및 수자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바다와 하천에서의 골재채취는 한계가 있음
- 반면, 골재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자갈은 산림에서 대부분 채취되고 있어 향후 산림골재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

■ 산림지역에서의 토석채취 허가절차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채석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골재업계 의견수렴('12.2~3월) 및 관련 부처(국토해양부·산림청)와의 협의('12.4월)를 거쳐 토석채취 분야 관련 8개 개선과제 선정

2. 주요 과제

가. 토석채취 허가제도 개선

(1) 조경용 석재의 채석경제성 평가 예외 인정

1) 현황 및 문제점

- 토석채취 허가절차에는 채취대상 석재(쇄골재용,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에 대한 채석 경제성 평가가 포함됨
 - 다만, 토목용 석재(매립, 방파제 축조, 도로성토 등 토목공사용)는 압축강도, 내구성 등이 크게 요구되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채석경제성 평가는 지질조사, 시추탐사, 매장량·석질분석, 경제성분석 등을 실시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 압축강도나 내구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경관조성 등에 사용되는 석재에 대해서도 평가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

2) 개선방안

- 정원·공원 등의 경관조성에 사용되는 조경용 석재도 평가 제외

3) 기대효과

- 채석경제성 평가 생략으로 평가비용(최소 허가면적인 5만㎡ 기준 3,500만원) 절감 및 허가 소요

기간(2~3개월) 단축

(2) 채석경제성 평가시 시추탐사 예외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채석경제성 평가내용에는 지질조사, 시추탐사, 매장량, 경제성분석 등이 있으며, 이 중 시추탐사는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채석경제성 평가비용의 70~80%를 차지
- 현재 기허가지역과 연접하여 추가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암반이 노출돼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을 알 수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시추탐사를 생략해 주고 있음
- 그러나, 면제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면제받은 후 추가 채취시에 육안으로 석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추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의 부담 초래

2) 개선방안

- 암반이 이미 노출돼 육안으로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허가시 종전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시추탐사 생략

3) 기대효과

- 시추탐사 생략으로 평가비용(최소 허가면적인 5만㎡ 기준 2,500만원) 절감 및 소요기간(1개월) 단축

(3)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도로 주변은 도로로부터 100m까지 토석채취를 제한하며, 도로에서 채취 산지가 보이는 경우, 보다 먼 거리까지* 채취 제한
 - * 고속국도 및 철도는 2,000m, 일반국도 1,000m 지방도 500m 이내

- 또한,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으로 인해 이전의 채취가능 지역이 제한지역이 된 경우에는 이전 제한지역까지* 추가 채취 허용

* 예를 들어, 당초 일반국도 지역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고속국도로 변경되었다면 기존 일반국도 제한거리인 1,000m까지 토석채취 가능

- 다만, 이 경우 추가 채취는 기존 허가기간 내에서만 가능
- 그러나, 기존 허가기간은 당초 채취량의 규모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동 기간 내에 추가 채취를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
- * 도로의 신설 등 토석채취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추가 허가시에는 채취량에 따라 3~10년의 별도 허가 기간 부여

2) 개선방안

- 도로의 신설 · 변경으로 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기존 허가기간 외에 별도의 허가기간을 부여 하여 추가 채취 허용

3) 기대효과

- 예상치 못한 채취행위 제한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기대

(4) 토석채취 허가시 재해방지계획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토석채취는 채취지역 전체에 대해 벌채와 토사를 제거한 후 채취하고, 산지복구는 채취기간의 종료 시점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
- 따라서, 채취자는 사업기간 동안 장기간 산지를 훼손한 상태로 작업
- 이에 따라 토석채취지는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폭우시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위험이 상존
- 또한, 채석한 암석의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2) 개선방안

-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에 대비한 재해방지계획 수립을 토석채취 허가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3) 기대효과

- 산사태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 및 경관 보전

나. 토석채취 사업환경 개선

(1) 채석단지 추가 지정시 변경지정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은 20만㎡ 이상이며,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채취하는 경우에도 동일 면적 이상이어야 추가 지정 가능
- *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돼 있어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정하며, '11년 말 현재 15개소 지정 · 운영

- 그러나, 20만㎡는 통상 15~30년 정도 채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추가 지정시에도 20만㎡ 이상 신청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대규모 산지에 대한 매입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여 현실적으로 추가 신청 곤란

2) 개선방안

- 기존 채석단지를 복구하는 경우, 동 단지와 연접한 지역에 대해 복구면적 범위 내에서 단지 확대를 허용하는 변경지정제 도입
- *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는 변경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 기대효과

- 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채석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과 경관 개선 기대

(2) 산지복구비 예치방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산지복구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하며,
- * 서울보증보험(82%), 골재협회(6%), 전문건설공제조합(8%), 건설공제조합(2%) 보증, 기타 현금(2%) 등
- 허가권자가 매년 재산정한 복구비가 예치한 복구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매년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

- 그러나, 추가 복구비를 매년 예치하는 경우 금액이 소액*임에도 매년 전체 금액(추가금액 포함)에 대해 보증인들의 보증동의를 다시 받거나 추가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 발생
- * 허가면적 5만㎡ 경사도 25도일 경우, 복구비('12년 복구비산정기준)는 13억 7,000만원이며 10% 인상시 인상분 1억 3,7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수수료율 0.5%)는 68만 5,000천원으로 실제 부담액은 많지 않음

2) 개선방안

- 장기간(3~5년)의 산지복구비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 * 그동안의 인상비율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3~5년)의 추가 예치비율을 결정

3) 기대효과

- 사업자의 보증보험 이용상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 절감

(3) 토석 채취장비 대여사업자 선택 범위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토석채취 허가신청자는 굴삭기 등의 장비를 소유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장비를 보유해야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 리스계약으로 리스이용자가 특정 물건을 일정기간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대가(리스료)를 지급하고 기간 종료 후 매수 또는 반환
- 그러나, 대여업자를 여전법상의 대여업자로 한정함에 따라 리스계약 방식에 따른 부담으로 이용 실적 낮음(20% 정도)
- * 리스계약시 높은 보증금(장비가격의 30%) 및 리스수수료, 장기계약(주로 3년), 해지시 높은 위약금 등 법률적 문제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
-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대여는 보증금 등의 부담이 적으며, 건설기계조종사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
- * 건설기계 대여는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 등이 있음

2) 개선방안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함

3) 기대효과

- 장비 대여사업자를 확대함으로써 장비 대여 관련 경쟁체제 형성과 계약상대방 선택권 확대

(4)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1) 현황 및 문제점

- 토석의 채취로 인한 산지의 훼손은 불가피하며 한번 훼손된 산지는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
 - 또한,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과 불법적 채취행위*로 사업자가 처벌되는 등 많은 문제 야기
 - * 경계침범, 지하무단채취, 불법반출, 채취방법 위반 등 44건('08~'10)
- 이로 인해 토석채취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감 등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토석채취가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필요
- * 일본 채석법에서는 채석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방지를 위해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업무관리자는 채석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2) 개방안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 관련법규, 자연친화적 채취방법, 불법행위, 주민피해방지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주기적 교육 실시(채석행위 전 1회, 이후 1~2년 간격)

3) 기대효과

- 채석으로 인한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자연적인 채석이 되도록 유도하여 주민 피해 예방 및 경관 보전

3. 향후 조치계획

- 과제별 추진상황 관리
 -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하여 과제 추진 상황 관리
 -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산립청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등록
- 관련법령 개정 추진
 - 관련법령, 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부처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완료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추진상황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고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업체 등 수요자에게 홍보

6절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

유경호 | 사무관(044)200-2429, khyoo@pmo.go.kr

제
2
장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2012년 한국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것으로 전망
 - * IMF, 2012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하향조정('12.9.21)
- 이에 다각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과 병행하여 규제측면에서도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 대두

■ 기본방향

-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서민·자영업자 애로해소와 관련 있는 과제에 집중하여 대폭 발굴
-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 등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
- 불가피한 사안은 한시적으로 완화

■ 추진방식

- 입법예고기간 단축(40일→10일) 등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 시행하여 효과가 최대한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이를 위해 법령개정 목표를 설정
 - 법률 개정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 시행령 개정사항은 10월 중 개정 완료(총리실 주도 일괄개정)
 - 시행규칙 이하 개정사항은 각 부처가 최단기간 내 조치

■ 추진경과

- 경제단체, 지자체, 각 부처 등으로부터 약 1,20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부처가 검토하고, 이견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비경제 분야), 기재부(경제 분야) 주관으로 소관부처와 협의·조정
- 이러한 과정을 거쳐 투자·창업 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서민애로 해소 등 3대 분야 236개 추진과제 선정

[과제 세부내역]

구분	과제내역
분야별	투자·창업 활성화 51건(22%) 영업활동 부담 경감 147건(62%), 중소기업·서민 애로해소 38건(16%)
부처별	국토부(65건), 복지부(32건), 환경부(33건), 농식품부(22건) 문화부(8건), 기재부(7건), 지경부(8건), 기타 부처(61건)
유형별	한시적 완화 26건(11%), 항구적 완화 210건(89%)
개정법령별	법률 41건(17%), 시행령 58건(25%), 시행규칙 이하 137건(58%)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가. 투자·창업 활성화(51건)

(1) 투자활성화

1) 부담금 완화

-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25%)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그 외 지역 100%)

* 기대효과 : 연간 약 400억원 감면 예상(수도권 : 240억원, 지방 : 160억원)

●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우선 시설물 소재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차등 적용(도심 100%, 부도심 80%, 도시외곽 50%)하고, 향후 시설물별 조사 후 합리적으로 재조정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경감

-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50% 경감해 주는 기한을 6개월 연장('12년 말 종료 → '13.6월 종료)
- 플라스틱 수입자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면제기준을 변경하여 비용 및 행정부담 경감(건별 수입량 100kg 이하 or 건별 수입금액 9,000달러 이하 → 연간 수입량 3톤 이하 or 연간 수입금액 9만달러 이하)

● 중소기업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3년 이내→4년 이내) 및 분할납부 횟수 확대(3회→4회)

2) 산업단지 규제완화

- 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규제개선

제6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

- 사업자가 산단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산단 내 기존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 사업자가 산단 주변(200m 내)에 공공녹지를 조성할 경우, 산단 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녹지 비율 완화

● 지원시설용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시 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 비율을 완화(50% 이상 → 40% 이상)하여 지원시설용지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

* 현행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의 3% 이내 및 1만 5,000㎡ 이내로 제한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기업 입주시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하여 배치하던 것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캠퍼스(12년 현재 6개)로 인가받은 대학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 산단에 실제 필요한 경영컨설팅업, 전시업 등 5개 지식서비스업종*을 산업시설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현행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광고물 작성업, 출판업 등 일부 업종만 입주 허용

- 산단 인근지역에서 허용된 관련사업에 열공급시설(관로설치)을 포함시켜 산단에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

3) 기업도시 활성화

●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재투자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민간자본 참여 촉진

- 최초 계획 승인시 산정했던 이익보다 준공시 개발이익이 일정수준* 감소하는 경우 재투자**비용의 경감요건을 대폭 완화(20% 이상 감소시 → 5% 이상 감소시)

* 현행은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 재투자비용의 사후조정 허용

** 도서관, 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적정개발이익을 늘리고, 재투자 부분이 감소(10~20%)하도록 산출비율을 개선

* 현재 적정개발이익(개발이익×산출비율)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개발구역 안에 공공편익시설 등 설치를 부담시키고 있음

● 기업도시 개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기업도시의 면적기준(현행 최소 330만㎡)을 1/2까지 완화

* 현행은 기업도시와 인접하는 경우에만 축소개발 허용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인구기준을 완화(1만명 → 5,000명)하고, 개발면적 축소시 인구기준도 비례적으로 추가 완화

* 현행 상주인구 기준 : 지식기반형 및 산업교역형(2만명)

4) 부동산 거래 및 개발 촉진

-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제한(현행 : 자본금의 50%) 폐지 및 공모의무기간 연장(6개월 → 1년 6개월)을 통해 부동산 투자 촉진

-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용도*에 관광호텔, 전시장, 회의장 등도 추가하여 관련 기업 투자확대 촉진

* 현행은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한정

(2) 창업활성화

1) 창업 중소기업 지원

- 유망창업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서 13개(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로 확대하여 전체 신성장동력 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도 확대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창업기업(창업 후 6월~2년 이내)이 근로자 고용시 연 720만원 임금보조금 지원

- 매출액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사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의 부담 완화

- 제조업 분야에서 1인 창조기업 인정업종을 현행 식료품, 의료 등 11개에서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악세서리 및 모피용품 제조업 등 15개로 확대

- 주류 제조시설 기준과 주류 판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주류업에 대한 시설투자와 창업을 촉진
 - － 소주·일반증류주 등 제조를 위한 발효용기 시설기준 완화(총 용량 6kl 이상→5kl 이상)
 - － 특정주류 도매업(탁주·약주·청주·전통주 취급)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 완화(33㎡이상→22㎡ 이상)

2) 관광산업 활성화

- 주거지역 내 호텔업(소형호텔업, 호스텔업)의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수도권 지역 내 호텔건립 활성화

-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실기준 또는 등록기준·시설 기준을 완화

- － 소형호텔업(20~30실)을 신설, 중저가 외국관광객 수요를 흡수하면서 메디텔 등 다양한 신종 수요에 대응

* 다만, 객실 연면적이 50% 이상이고,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은 없어야 함

- －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완화(30실 이상→20실 이상, 1년 한시적)

- － 농어촌 휴양시설 및 온천장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상종목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을 완화**, 투자를 촉진

* 농어촌 휴양시설 : 재배지 또는 양육장을 일정면적 확보하는 요건 폐지

* 온천장 : 실내수용장 구비요건 한시적 폐지(1년)

** 요트장업 : 5척 이상→3척 이상, 조정·카누장업 : 10척 이상→5척 이상

3) 농어업 등록기준 등의 완화를 통한 창업 유도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2억원→1억원)

- 종묘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완화 : 50a 이상→30a 이상, 자가소유일 것→자가소유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4)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지원

- 법인이 자연장지 조성시 최소면적 규제를 개선, 자연장 활성화 유도

- － 신규조성시 조성면적 기준 완화(10만㎡ 이상→5만㎡ 이상)

- － 기존 장사시설 내 또는 연접지역에 새롭게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시설 내 또는 연접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편의시설(관리사무실 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없이 기존시설 공동이용 허용

나. 영업활동 부담 경감(147건)

(1) 영업활동상 의무 완화

1) 환경관련 부담 경감

- 산업단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입주기업은 별도로 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없도록 개선

-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량 산정방법을 총 합산 방식에서 폐기물 종류별 각각 산정 방식으로 1년간 변경하여 보관가능용량 확대

* 현재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량기준 3톤 이상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음

-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범위를 '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연간 배출량 3톤 미만→4톤 미만)하여 중소기업에 편의 제공

* 현재 보관기간 : 보관시작일부터 45일(폐산·폐알칼리 등) 또는 60일(기타)

2) 사용료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영세극장*에 한해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 납부 면제

*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이 일정 금액(예 : 연 600만원 이하)에 미달하는 상영관(40여개)

- 인천공항 이·착륙시 조명을 제공받는 항공기에 부과되는 조명료* 면제

* '11년 실적 기준 연간 158억원 감면(편당 12만 4,000원 부과)

- 각종 사용료·수수료 부과 한시적 유예, 분할납부 범위 확대
 - 지하수 개발관련 허가·등록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수수료 부과를 6개월간 한시적 유예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납부금액이 30만원(현행 :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허용
-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적용금리를 연 6%에서 국유재산(행정재산) 사용료 분납시 적용하는 금리*로 완화
 -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현재 약 4%)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

3) 의무위반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제재 개선

-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부과하던것을 중요도에 따라 한 가지만 부과토록 합리화하여 기업들의 부담 경감

근거법률	위반의무	현행	개선
가축분뇨처리법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지정요금 초과징수	과태료+영업정지	영업정지만 부과
	변경신고 미이행 교육미실시 자료 허위보고		과태료만 부과
수질보전법	폐수처리업 기술요원 교육의무 미이행		과태료만 부과
원양산업발전법	휴업신고 미이행		영업정지만 부과

4) 의무이행 필요기간 연장

-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설공사를 착수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연장(2년 이내 → 3년 이내)
- 존치예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양계약이 완료된 분양사업장을 철거해야하는 기한을 연장, 사후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지원(즉시 철거 → 6개월 후 철거)
-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로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2년 → 3년)하여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된 기계 제작을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신고기간을 타 업종(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수준으로 연장하여 혼선을 예방(피상속인 사망 후 60일 이내 → 90일 이내)

5) 행정조사 및 절차간소화를 통한 부담 경감

- 불필요한 서류제출 폐지
 - 건강기능식품 사업 양도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폐지
 - 의약품 광고 심의시 품목허가증 제출을 면제
- 서류제출 및 현장점검 주기를 완화하여 부담 경감
 -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취업현황을 협회에 통지해야 하는 주기 개선(매월 말 통지 → 분기별 통지)
 - 우수사업장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축소(연 1회 이상 → 연 1회)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
 - 폐기물 인·허가 신청 및 폐기물 재활용 보고를 온라인으로 처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시 해임사실만 전화 또는 구두로 통보
 - * 현재는 해임·퇴직 사실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타법에 의하여 승인·등록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IPTV법에 따라 승인·등록한 것으로 간주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처리기한 단축(7일→5일)

(2) 교육의무 부담 경감

1)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교육부담 경감

- 식품위생 교육시 중복교육, 교육내용 등 측면에서 제도 개선
 - 식품영업자가 2개 이상의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교육을 받을 필요없이 한 번의 교육으로 갈음
 - * 대부분의슈퍼마켓은 식품위생교육대상업종인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등을동시에운영하여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함

제6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

- 세무관리 등 위생교육과 무관한 교육을 금지하고, 지역별로 다른 수강료(2만~2만 9,000원)를 합리적으로 단일화

● 공중위생 교육은 고령자·장기 영업종사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

* 현재는 매년 모든 영업자(총 20만명)가 교육이수 필요

2) 온라인 교육 확대 및 기타 교육부담 경감

● 식품위생의 온라인교육*을 전체 교육기관으로 확대, 수강유효기간도 연장(10일 내→30일 내)하며 재수강료는 폐지

* 신규영업자 온라인교육 : 10개 기관 중 3개 기관에서 시행,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 9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시행 중

● 대기/수질 분야 환경기술인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 현재 4·5종 사업장 중 일부만 시행 중

● 어린이집의 신임원장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는 교육 면제

* 현재는 신임원장교육 이수 후 타 어린이집으로 옮길 경우 교육을 다시 이수

● 산모·신생아도우미가 유사돌봄 서비스* 자격이 있는 경우 총 80시간(기본 40시간+심화 40시간)중 기본 교육과정(40시간) 감면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다. 중소기업·서민 등 애로 해소(38건)

(1) 중소기업 경영 개선

1) 중소기업 사업여건 개선

● 대한상공회의소 회비규정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20% 이상 감소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간 회비 50% 감면 (13.1.1 시행)

●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인 기술제한 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2년)으로 최대 10개사(현행 5개사)까지 확대

● 인테리어 공사 등 업체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문건설공사'의 기준을 완화(1,0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하여 소규모 건설업체 경영환경을 개선

●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능력 제고

- 일자리 창출사업 배정인원 한도 완화(일자리 수 : 5~30인 → 1~50인)

- 전문인력 지원사업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도 포함(1인 이내, 2년 한도)

● 친환경적 매장운동을 하는 점포(녹색매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최대 30%)하여 녹색성장을 지원

* 기대효과 : 연간 1억 2,000만원~3억 6,000만원의 경감효과 발생(경감비율 최대 30% 적용시)

● KS 인증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 KS 서비스 인증에 대한 정기심사 기간연장(1년 → 2년)

- 인증을 받기 위해 일부 고가의 시험·검사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던 것을 외부설비 사용도 가능하도록 개선

- KS 인증을 받기 위해 CEO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던 표준화교육(16시간) 이수 의무를 폐지

● '15년부터 적용할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입법예고안: 90ppm)을 하향 조정하여 업계의 저감 시설 설치부담을 완화

2) 중소기업 인력 확보요건 완화

● 서비스업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 서비스 업체를 지원

- 현행 '100명 이하'를 하위 업종별로 '300명 이하'까지로 확대

* (300명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등 (200명 이하)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100명 이하) 하수처리, 교육,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여 하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서 우대를 받는 기업

● 중소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인적요건 완화

- 해당분야 4년 근무경력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에게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부여

* 현행은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분야 2년 경력자로 제한

- '13.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5인 이하→3인 이하)되어 있던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를 항구적으로 완화

* 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연구인력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받는 등 혜택을 제공

(2) 서민생활 지원

1) 취약계층 지원·편의 확대

● '14학년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는 39개** 국립대학에서 입학전형료 감면

* 기대효과 : '13학년도 수능기준 16억원 면제 효과

** 이 중 36개교는 '12년부터 감면(입학전형료는 1인당 3만 5,000원 수준)

●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에 휴대인터넷(WiBro)를 추가하고, 장애인·유공자에 대한 유선전화(시내·시외·VoIP) 및 인터넷서비스의 감면 대상을 확대('수급자'→'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 기대효과 : 약 5만가구에 연 60억원 정도 감면 예상

●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급시 지급대상 요건 중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기준을 삭제하여 지급기준 완화

* 현재는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적용 :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 의료급여증 유효기간(1년) 및 매년 재사용 확인제를 폐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을 해소

2) 농민 및 중소 자영업자·서민 불편사항 개선

● 농촌 관련 제도 현실화를 통한 애로 해소

- 농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리 요건을 완화(주소지로부터 20km 이내→30km 이내)

- 소규모 농업용시설(축사, 창고 등)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콘크리트 타설 허용, 농막에 전기, 수도시설 설치 허용 등 불편사항을 해소

● 세탁업소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할 경우 회수건조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 완화(모든 세탁소→세탁용량 30kg 이상 세탁기 사용시)

● 공동주택 주민이 허가나 신고 없이 교체 및 철거가 가능한 '경미한 행위'(CCTV 교체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방법강화 및 생활불편 경감

*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국기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CCTV 교체

● 다가구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제한 폐지(2면만 확장→면수제한 폐지)

3) 결혼·출산·보육관련 편의 확대

● 도시공원 내 결혼식을 장려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확산토록 지침 시행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전통·검소 혼례 등에 한정

●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1일 사용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총액 50만원, 1일 6만원까지 사용가능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시 공개경쟁 폐지(다만,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공개경쟁 원칙 적용)

-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유아용 변기 설치의무 완화
 -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

3. 향후 일정

-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
 - 10월 중 개정완료, '11.1일 시행 원칙
 - 11월 시행이 가능한 시행령은 총리실이 일괄개정하고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시행령은 각 부처가 개선사항을 반영
 - 시행규칙, 고시 등 기타규정은 각 부처가 즉시 개정
- 법률 개정사항
 - 정기국회에 각 부처가 개정안 제출 원칙
 -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개정안은 최대한 조속히 국회에 제출
- 각 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실이 점검
 - 법령개정 및 시행상황 : 월별 점검
 - 한시적 개선과제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시점에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항구적 개선여부 검토
- 향후 각계의 의견수렴, 정책 분석 등을 통해 검토 필요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

7절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김동욱 | 사무관(044)200-2407, tangouniform@pmo.go.kr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기대수명도 1980년 66세에서 2011년 81세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전체인구의 16%)의 정년(약 55세) 도달로 '대량 조기 은퇴'가 본격화(연 14~15만명)되는 반면, 선진국에 비해 빠른 은퇴로 고령층 경제활동이 부족
- 고령화 · 조기은퇴는 전문지식 매물, 노동력 부족뿐 아니라 중산층 경제력 저하로 노년 빈곤, 부양부담 증대 등 문제 초래
- 고령층의 근로욕구와 의지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는 미흡
 - * '17년 생산인구 감소, '21년 노동력 부족 전망(KDI, '11)
 - * 연금소득대체율(연금/은퇴전소득) 42.1%(OECD 평균 68.4%)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Workfare)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연령제한 장벽이 존재함

●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35~75세까지 각종 일자리 연령제한을 설정, 고령층의 일자리 확보 진입장벽으로 작용

● 이러한 연령규제는 건강수명의 연장에도 맞지 않고, 대부분 업무 적합성에 대한 근거 없는 관행적 규제로 존치 중

– 동일 직종에 대해 부처 내(구치소·교도소, 지방교육청 등) 상이한 연령규제, 각 지자체별로 다른 연령규제 등 편차도 상당

* (예시) 환경미화원(93건)에 대한 지자체별 연령제한 규제 현황 : 40세 이하 1건(1%), 41~50세 이하 58건(62%), 51~60세 이하 34건(37%)

2. 규제개선 추진방향

■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연령규제를 개선하고, 홍보·인식제고 등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확산

●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연령제한 폐지

● 동일유사 직종에 대한 기관별·지역별 편차 제거

■ 조속한 개선(연내 즉시폐지 원칙)을 통해 개선효과 제고

● 예산반영·세부절차 협의 필요시 내년 상반기 이전 완료

3. 규제개선 주요 내용

가. 정부사업 일자리

1) 돌봄·자원봉사 등 인력채용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 사업시행 지침·규칙 작성 시 관행적으로 연령을 제한

• 28개 사업 일자리 연령규제를 개선, 약 6만 5,000개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2) 아이돌보미 사업 등 총 5개 사업의 돌봄·교육 사업에 설정되어 있는 연령규제를 폐지하여 총 2만 558개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일자리명	내용	규제개선	인원(명)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65세→폐지(즉시)	10,758
키움보듬이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 의한 조손가족 가사지원		500
전문 상담사	초중고 전문 상담교사		3,500
방과후 과정 보조 인력	유치원 및 초·중·고 방과 후 과정 운영 보조인력	60~69세→폐지('13년)	3,300
배움터지킴이	등하교 안전지도 등 수행	60~70세→폐지('13년)	2,500

3) 후계농어업 경영인 양성 등 총 5개 농어촌 등 관련 사업의 연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총 9,942개의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일자리명	내용	규제개선	인원(명)
후계농어업 경영인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45세 → 50세 완화('13년)	1,564
농어촌체험 마을 사무장	체험마을 관리·운영	65(농촌)·60세(어촌)→폐지(즉시)	420
영농규모화 사업자	규모화를 위한 저리자금 지원	60세→64세 완화('13년)	3,400
과원규모화 사업자			400
임업후계자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임업경영	50세→55세 완화('13년)	4,158

4) 해외봉사단 등 총 3개 해외봉사 사업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총 1,031개의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일자리명	내 용	규제 개선	인원(명)
해외봉사단	은퇴자를 활용한 해외봉사사업	62세 → 폐지(즉시)	1,000
국외파견 한국어교원	해외 한국어교육 요원	60세 → 폐지(즉시)	20
국제읍서버	수산 과학조사 및 어업활동 감시	55세 → 폐지(완료)	11

5) 고산지대피소 관리원 등 총 5개 환경·산림 보호 사업의 연령규제를 폐지하여 총 1만 3,665개의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일자리명	내용	규제개선	인원(명)
고산지대피소 관리원	대피소 운영·관리	45세 → 폐지(완료)	20
국립공원지킴이	재난구조, 탐방객 안내 등	48세 → 폐지('13년)	103
자연환경안내원	자연환경 해설사	35세 → 폐지(완료)	327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예방 및 진화	55세 → 폐지('13년)	9,950
사회서비스일자리	공공산림 가꾸기(산림정비)	50~65세 → 폐지(즉시)	3,265

6) 취약층 지원 사업(총 1만 8,986명)

일자리명	내용	규제개선	인원(명)
산재근로자 재활스포츠지원자	산재근로자 대상 재활스포츠 및 창업 지원, 직업훈련을 위한 직업재활급여 지원	60세 → 폐지(완료)	2,500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자		60세 → 폐지('13년)	107
산재근로자 직업급여 대상자		60세 → 폐지(완료)	5,740
취약농어가 인력지원	사고·질병으로 영농이 곤란한 농어업인 지원	75세 → 80세 완화('13년)	9,639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대상자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매입, 경영회생 지원	71세 → 75세 완화(즉시)	1,000

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

1) 환경미화원·조리원 등 기간제 근로자는 중앙부처·지자체가 채용규칙·지침을 근거로 357건의 사례에서 연령 제한

- 규칙·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약 1만 5,000개 일자리에 대한 연령규제를 폐지하고, 동일직종에 대한 기관별 편차 제거

※ 기간제근로자 현황('11.7월) : 6만 6,000여명(중앙 1만 9,000명, 지자체 4만 7,000명)

2) 중앙부처는 124건의 채용사례에서 연령규제 부과, 이중 123개 사례를 개선(120개 폐지, 3개 완화)하고 1건 현행유지*

* 국립극장 예술단원 채용 규제(54~58세)로 직업성격 등 감안 필요성 인정

3) 지자체는 233건의 채용사례에서 226건을 개선(205건 폐지, 21 완화)하고, 7건 현행 유지*

* 환경미화원(4), 공원 녹지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채용 등

- 자체인력 고용으로 지자체 고유권한이나 합리적인 규제사유가 없음을 감안,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

다.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

1) 정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57~60세까지 기관별로 상이한 사무보조원 등 무기계약직 정년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에 맞추어 60세로 연장(고용부 권장)

※ 무기계약직 현황('11.7월) : 5만 8,000여명 (중앙 1만 2,000, 지자체 4만 6,000명)

2) 정년을 60세 미만(57~59세)으로 적용하던 행안부·광주시 등 82개 기관 모두 60세로 연장완료 또는 추진

라. 이통반장 위촉

1)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80개 지자체가 조례·규칙을 통해 연령상한을 규제 중

- 다수 지자체가 개선해 3만 7,000개 일자리 연령규제가 폐지되었으나, 일부 미흡한 기관에는 지속개선 촉구

- 2) 80개 지자체 중 서울시 강남구 등 55개 지자체에서 연령규제를 폐지, 12개 완화, 13개 현행유지
- 3) 연령규제를 유지하는 지자체(현행유지·완화)에 대해서는 규제 불합리성, 여타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감안, 행안부·소속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속적 개선 유도
 - 폐지결정 기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등 실행 독려

4. 기대효과

- (1) 고령층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진입장벽을 제거해, 약 11만 7,000개 일자리에 대한 고용기회를 제공
 - 특히, 돌봄·보육·농어촌·자원봉사 등 청년층과 일자리 경합이 적고, 고령층에 적합한 정부사업(28개, 약 6만 5,000개 일자리)에 대한 연령규제를 폐지
- (2) 고령사회에 대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각종 연령규제를 개선해 고령층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
- (3) 공공부문 내 지역별·기관별로 존재하던 불합리한 차별과 편차를 개선
- (4) 행정 일선조직인 이통반장 연령을 개선(67개 기관, 약 3만 7,000개 일자리), 지역간 형평을 유지하고 농어촌 고령화에도 부응

5. 향후 계획

- (1) '12.10.19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보고 및 홍보
- (2) '12.12월 과제별 관련규정 개정 및 후속조치
- (3) '13년 초 공공기관 연령규제 개선조치(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 (4) '13년 연령차별금지 연구용역 추진(고용노동부)
- (5) '13년 1/4분기 개선 추진상황 점검(국무총리실)

03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기획재정부
2. 금융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4. 관세청
5. 국세청
6. 금융감독원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1. 지식경제부
2. 중소기업청
3. 특허청

제4절 국토·해양 분야

1. 국토해양부
2. 해양경찰청

제5절 농림·수산 분야

1. 농림수산식품부
2. 농촌진흥청
3. 산림청

제6절 방송통신 분야

1. 방송통신위원회

제7절 노동·환경 분야

1. 고용노동부
2. 환경부
3. 기상청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1. 교육과학기술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재청
4. 원자력안전위원회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2. 식품의약품안전청
3. 여성가족부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통일부
2. 외교통상부
3. 국가보훈처
4. 국방부

제11절 일반행정 분야

1. 행정안전부
2. 소방방재청
3. 경찰청
4. 법무부
5. 국무총리실
6. 국가인권위원회

1절 개 요

최병근 | 사무관(044)200-2441, cbk3095@pmo.go.kr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위원회를 거쳐 2012년도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598건 (비중요규제 포함)을 심사하여 이중 111건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철회 또는 개선권고된 대상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규개위의 권고를 이행하였다.

[‘12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부 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12년도 규제심사결과			
			비중요	(자진) 철회권고	개선·부대권고	원안의결
기획재정부	10	27	22	2	3	22
금융위원회	34	116	91	3	6	107
공정거래위원회	18	43	40		3	40
관세청	9	16	10	3	2	11
국세청	1	1	1			1
금융감독원	10	19	18		1	18
지식경제부	45	117	100	2	9	106
중소기업청	2	2	2			2
특허청	3	17	15	2		15
국토해양부	156	350	324	9	10	331
해양경찰청	2	6	6			6

부 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12년도 규제심사결과			
			비중요	(자진) 철회권고	개선·부대권고	원안의결
농림수산식품부	43	162	156	2	2	158
농촌진흥청	3	3	3			3
산림청	7	31	31			31
방송통신위원회	28	72	56	1	7	64
고용노동부	12	33	33			33
환경부	62	156	127	1	15	140
기상청	2	2	2			2
교육과학기술부	18	22	16	1	2	19
문화체육관광부	18	28	24		3	25
문화재청	8	17	17			17
원자력안전위원회	4	6	5		1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1			1	
보건복지부	49	154	151		2	152
식품의약품안전청	34	33	33			33
여성가족부	13	31	31			31
통일부	1	6	6			6
외교통상부	3	4	1		1	3
국가보훈처	5	9	9			9
국방부	7	14	14			14
행정안전부	13	48	24		10	38
소방방재청	18	35	30	1	1	33
경찰청	3	4	2		2	2
법무부	2	4	3			4
국무총리실	2	8	4		3	5
국가인권위원회	1	1	1			1
계	647	1,598	1,368	27	84	1,487

2절 |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기획재정부

강 보 란 | 사무관(044)200-2416, gelsomino@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정안, 관세법 개정안 등 1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1건, 강화 5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2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7건 중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1건, 부대권고 2건이고, 2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3.29)	원안의결 3	내용심사 1, 강화 2 *비중요 3
2.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2.6.28)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7.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7 부대권고 2	신설 9 *중요 2, 비중요 7
5. 관세법 개정안	334회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세무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2)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7. 관세사법 개정안	451회 경제분과위 (2012.10.12)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8.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2.10.2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2 개선권고 1 철회권고 2 부대권고 2	신설 21 강화 5 내용심사 1 *중요 5, 비중요 22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내용심사 1, 강화 2)

■ 심사내용

- 현지금융 신고(내용심사)
 - 현지금융* 신고사항 중 내용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신고기관**에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 * 국내기업 또는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

☞ 현지금융(차입, 보증) 신고의무는 기존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부과되어 있으며 본 개정안에서는 기신고된 내용의 변경 발생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임. 본 규정은 형식상 규제신설이나, 사실상 절차간소화를 통한 피규제자의 편의제고가 목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재외동포 재산반출 기준(강화)

-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시 제출 서류에 기존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 이외에 납세증명서도 추가

☞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에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 규정(제출서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자금출처 확인서)이 있으며 본 개정안에서는 기존 제출서류 외에 납세증명서가 추가되는 사항임.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시 체납세금 징수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체납확인을 위해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수출결제방법의 신고(강화)

- 본지사간 수출거래에 있어 5만달러 초과 수출대금을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해 3년을 초과 하여 수령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토록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본지사간의 대차거래 및 이와 유사한 외상거래는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신규 외상거래 행태가 개발됨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신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계약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는 행위 금지

☞ 본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11.6.6 비중요규제) 거쳐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법안으로, 동일 내용으로 재입법 추진되는 사안이며 18대 국회 폐기법안 입법과정

효율화 방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신설)

-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 행사하는 행위 금지

☞ 본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11.6.6 비중요규제) 거쳐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법안으로, 동일 내용으로 재입법 추진되는 사안이며 18대 국회 폐기법안 입법과정 효율화 방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시스템 이용료 부과(신설)

- 나라장터 이용료 및 정보이용료 부과기준을 법제화하고, 부과대상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본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11.6.6 비중요규제) 거쳐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법안으로, 동일 내용으로 재입법 추진되는 사안이며 18대 국회 폐기법안 입법과정 효율화 방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전자조달센터의 명칭사용 금지(신설)

- 법률로서 허용된 명칭(전자조달지원센터)에 관하여 동일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 본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11.6.6 비중요규제) 거쳐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법안으로, 동일 내용으로 재입법 추진되는 사안이며 18대 국회 폐기법안 입법과정 효율화 방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분류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조달업체에 품질관리비용(직접생산확인비용) 부과(신설)

-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품질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등 제반비용을 해당 조달업체가 부담한다는 근거 규정 신설

☞ 본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11.5.24. 비중요규제) 거쳐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된 법안으로, 동일 내용으로 재입법 추진되는 사안이며 18대국회 폐기법안 입법과정 효율화 방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분류

●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신설)

– 품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업무수행시 관계서류의 허위 작성·제출, 점검 거부 및 방해행위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본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11.5.24. 비중요규제) 거쳐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된 법안으로, 동일 내용으로 재입법 추진되는 사안이며 18대국회 폐기법안 입법과정 효율화 방침(‘12.5.8일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분류

(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규정(신설)

–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법 제15조 및 제71조)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하지 못한 세부 신고사항과 절차*를 규정

* 설립신고서 제출서류(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등), 요건을 갖춘 설립신고 접수시 신고증 교부 등

☞ 주택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유사 법령에서도 특정 조합을 설립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인가의무 등을 부과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 등에 규정하고 있고, 설립요건의 충족여부 등 확인을 위해서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한 것은 국민편의를 위해 필요하며, 세부 서류(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등)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

☞ 다만,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상위법령을 개정,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부대권고

* 유사입법례인 소비자생활협 등에서 법에 명확한 위임근거를 두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규정(신설)

– 법 제8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인가기준 및 절차를 규정

– 인가기준은 일반 사업을 영위할 경우(안 제11조 제1항)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안 제11조 제2항)를 구분하여 규정

☞ 일반 협동조합보다 엄격한 의료협동조합의 인가요건(최소 조합원수, 최저 출자금, 1인당 최저 출자금 등)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법보다 강화된 요건을 향후 법 개정에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 명칭에 관한 규정(신설)

–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중복 명칭 및 혼동 명칭 규정

– 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명칭 사용시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중복·혼동될 수 있는 협동조합 명칭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 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관련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농협, 수협, 신협 등 각종 협동조합법령 등에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임직원 겸직 범위에 관한 규정(신설)

–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임직원 겸직 가능범위(사업의 성격·조합원 구성 등)를 규정

–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와 요건이 중복되지 않는 한 임원의 1/3 이내만이 직원 겸직 가능하며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준용

☞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해 주도록 규정한 상위법률에 따라, 그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범위에 관한 규정(신설)

–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범위를 규정

–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비조합원 이용 범위 규정

-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는 조합원과 동일하게 사업 이용 가능

☞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을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해 주도록 규정한 상위법률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중 보건·의료 협동조합의 경우, 현재 공정위의 소비자생협법의 제한 범위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3년까지 기존 소비자생협법 개정을 완료하여 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규제수준을 동일하게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협동조합 등의 운영의 공개에 관한 규정(신설)

- 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공시가 의무화되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규정

-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기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경영공시자료 게재 의무화

☞ 대의원총회 기준 및 코스닥 상장요건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안)의 기준(조합원수 200인 이상, 자본 규모 30억원 이상)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에 관한 규정(신설)

- 소액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조합원당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소액대출 사업은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 계리하도록 규정

☞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금융업(대출)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상위법률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이자율,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것으로, 제정안 규정(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대출한도 등)이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에 관한 규정(신설)

-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회비, 상호부조계약을 규정하고 상호부조 사업은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 계리하도록 규정

☞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보험업(상호부조)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상위법률에 따라 그 사업범위, 한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정안 규정(사업범위, 한도)이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신설)

- 상위법 과태료 규정에 근거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구체적 과태료 금액을 구분

☞ 상위법 위임 근거가 명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제정안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5) 관세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보세운송업자 등이 조세법 처벌법 제4조(면세유의 부정유통)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현행 규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선박금융업자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해상면세유 취급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부과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6) 세무사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세무사 보수교육 도입(신설)

-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등록된 세무사는 등록갱신기간(5년) 내 40시간 이상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98년 이래로 "사업자 단체의 보수교육 폐지"를 추진한 규개위 입장에 변화가 없고, 보수교육을 재도입할 중대한 사정변경(세무사의 전문성 약화 및 윤리의식 저하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규정 신설을 허용시 기존에 폐지된 70여개의 다른 보수교육의 재도입을 막을 수 없음

☞ 아울러, 법에 규정이 없어도 세무사회의 회칙으로 보수교육의 자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며, 현재도 매년 2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최근 3년간 협회 자율적으로 연간 2회 총 8~10시간의 세법 및 윤리교육을 실시, 교육 이수율은 평균 9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 규정을 철회권고

(7) 관세사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관세사의 등록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등록거부시 30일 이내에 통지토록 규정하여 등록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부당거부행위 방지(강화)
 - ☞ 관세사 등록은 업무를 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등록거부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관세사회에 대하여 회원과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연수와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신설)
 - ☞ 관세사회에 대한 연수의무 부과는 회원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관세사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개혁장관회의('06.6)의 '사업자교육 개선방안'에 위배되는 사안이므로 철회권고

(8)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협동조합 등 설립 신고·인가 등 신청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신설)
 - 설립신고 및 정관변경, 해산신고,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하여 규정
 - ☞ 시행령에서 위임한 설립신고서 등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첨부서류 목록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유사사례와 비슷하게 규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협동조합 등 운영의 공개에 관한 규정(신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공통 공시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추가공시 사항 및 공개사항의 열람 및 복제 제공을 규정
 - ☞ 현재 법률상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조합원 권익 증진을 위해 협동조합 등의 채권자 및 조합원에

게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회의록, 회계 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경영공시자료는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 법 취지 및 유사입법사례와 비교해 볼 때, 동 시행규칙 제정안 각 호의 사항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경영공시자료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

- ☞ 영업비밀 및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정안의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현재 협동조합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사회적기업의 규정과 유사하게 결산 결과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별지로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정의, 판단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신설)

- 주 사업의 판단기준, 주 사업의 판단방법을 규정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 사업의 판단기준 및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타당하고, 제9조의 주 사업 판단방법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고유식별정보처리(강화)
 - 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가능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 ☞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취급시 법령에 근거토록 규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국환업무의 등록은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처리로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가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이러한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1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취득 신고(강화)
 - 비거주자 등의 원화증권 취득시 보고를 강화하여 현재 매달 보고에서 매일 보고하게 하고, 증권 투자계정 전체 현황보고에서 증권종류별(주식, 채권, 파생 등), 증권투자자별로 보고하게 함
 - ☞ 현재 실무상 증권투자계정 보고시스템에 따라 매일 보고하고 있어 거의 부담이 없고 외국환은행, 투자 매매업자 등의 경우에도 투자자별로 투자계정 현황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증권종류별 매매 현황도 실시간 파악되고 있으므로 보고에 거의 부담이 없다는 점과 투기적 거래확산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할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2. 금융위원회

강보람 | 사무관(044)200-2416, gelsomino@pmo.go.kr
박완근 | 전문위원(044)200-2413, wnkpark@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4개의 법령 및 규정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41건, 내용심사 4건 등 총 11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6건 중 철회권고 3건, 개선권고 5건, 부대권고 1건이고, 10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9)	원안의결 5	강화 5 *비중요 5
3.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2.20)	원안의결4	신설 4 * 비중요 4
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440회 경제분과 (2012.2.23)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78회 본위원회 (2012.3.8)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철회권고 2	신설 12 *중요 6, 비중요 4
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279회 본위원회 (2012.3.22)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4.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5.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6.6)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6.6)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2.6.6)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6.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6.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5.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6.11)	원안의결 9	신설 6, 강화 3 *비중요 9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45회 경제분과 (2012.6.14)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강화 6 *중요 3, 비중요 3
17.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6.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446회 경제분과 (2012.6.11)	원안의결 4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19. 산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7.1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0.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제448회 경제분과 (2012.7.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안	제287회 본위원회 (2012.7.19)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중요 4, 비중요 1
22.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8.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5.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제448회 경제분과 (2012.8.30)	원안의결 10 부대권고 1	신설 7, 강화 4 *중요 4, 비중요 7
26.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452회 경제분과 (2012.10.25)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4, 강화 1 *중요 3, 비중요 2
2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21)	원안의결 2	강화 3 *비중요 2
30.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제453회 경제분과 (2012.11.8)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강화 2, 신설 2 *중요 1, 비중요 3
3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1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32.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2.12.21)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33.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107 개선권고 5 철회권고 3 부대권고 1	신설 71 강화 41 내용심사 4 *중요 25, 비중요 91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준수사항(강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
 - ☞ 동 규제로 인한 제고되는 공익에 비해 편의 제공에 따른 금융기관의 규제비용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필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음성 녹취, 대리인 작성 등)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5)

■ 심사내용

●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강화)

- 자기자본 기준 등으로 운영되는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에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었으나 자기자본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에 금액 기준을 도입

☞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방지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일정 수준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저축은행의 사례*를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법인사업자 100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개인 6억원

● 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 운용(강화)

- 여유자금으로 매입 가능한 회사채 종류만 규정되어 있으나 유가증권 투자를 제한(“신협 여유자금 모범규준”을 규정으로 상향)하고 회사채 투자한도(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 및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 신설(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최대 20억원) 중 큰 금액)하였으며 매입가능 회사채 신용등급을 상향조정(BBB+ ⇒ A-)

* 여유자금 : 예치금 및 유가증권의 합계(상환준비금 제외)

☞ 회사채 및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는 현재 시행중인 사항으로 근거 규정을 상향하여 규정한 것이고, 회사채 매입기준은 수협 및 산림조합*의 사례와 유사하게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회사채 신용등급 A- 이상 매입가능

●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공시(강화)

-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시공시 사항에 추가하고, 수시공시 방법에 중앙회 또는 조합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며, 공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소비자 알권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유사사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수시공시사항 : 은행(적기시정조치), 보험 및 저축은행(적기시정조치, 임원 등 행정처분)

●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비율 유지(강화)

- 신협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13.7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 상호금융의 연체율(4.2%)이 전 금융권(1.84%)에 비해 높고 수신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여신건전성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 수준으로 상향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여신건전성 기준 강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2~3년간)으로 상향 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지도감독(자료요구, 평가·공시 등 및 감시 후 조치 등)(강화)

-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시 임직원 조치(임원의 개선 및 직무정지 등, 직원의 면직·정직·견책 등) 및 조합에 대한 조치(주의 또는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 경영개선요구 상태에 있는 조합의 추가부실을 방지하고 경영정상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조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반 조합의 부담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농협 조합의 민원 전담창구 운영 고지(신설)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 본점에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업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농협 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대신하여 민원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민원전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계약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통지방식을 구두, 서면, 전자적 방식 등으로 다양화하여 농협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회사 채무보증 요건 확인 위한 자료제출 의무(신설)

- 보험회사는 해외 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려는 경우, 해외자회사 및 채무보증 관련 보

고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규정

- ☞ 금융위의 사전승인이나 신고제도가 아닌 해당 자료제출을 규정하여 과도하지 않은 규제이며 지급보증을 허용한 제도 취지상 해당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보수 신설 및 신계약비 이연 한도 제한(신설)

- 현재 판매수수료 지급방식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는 판매수수료의 대부분을 설계사 등에게 선지급하고 있으나(선지급한 판매수수료 전액을 비용이 아닌 이연자산으로 처리), 판매수수료의 30%를 보험료 납입기간(7년 이내) 동안 분급하여 지급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규정(선지급한 판매수수료의 50%를 이연자산으로 처리)

- ☞ 판매수수료는 기존에 비해 일부 감소하지만,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영향이 적고(계약 초기 해약 방지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서비스 향상 및 해약환급금 증가로 보험계약자의 혜택이 증가하며 회계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1년 유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시정확성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절차 마련 및 담당계리사 지정(신설)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자료의 정확성 확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공시자료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내부절차 마련 및 이를 확인할 계리사를 지정하도록 규정

- ☞ 허위공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절차 마련 등은 필요하며 현재 보험계리업무를 담당하는 계리사를 고용하고 있어 별도 채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부담이 크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조사권 대상 확대(강화)

- 예금보험공사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 대상을 확대

- (현행)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권고 기준

- BIS자기자본비율 5% 미만
-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이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등급 4등급 이하
-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위 두 가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개정안)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저축은행을 추가

- ① 적기시정조치 기준 BIS비율(5%)에 2%를 더한 7% 미만인 저축은행
- ②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한 저축은행
- ③ 예보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저축은행

- ☞ 예보의 조사권 발동 기준인 부실우려 저축은행을 현행과 같이 사실상 부실이 이미 현재화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제한할 경우 조사권 행사를 통해 부실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인정되며, 금감원의 부정, 판단착오 등에 의한 금감원 검사시 미적발된 불법·위규가 예보 조사시 발견될 수 있다는 점과, 예보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감원이 인지함에 따라 금감원 검사가 보다 엄밀하게 실시하게 되는 효과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안동의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12)

■ 심사내용

● 이사회(신설)

- 금융회사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여야 하나,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1/4 이상으로 의무화

* 현행 : (은행) 과반수, (그외 업권) 1/2 이상

* 시행령에서 범위규정 예정(예 : 자산 2조 미만 금투·보험·카드)

- ☞ 본 제정법의 적용범위는 은행, 금융지주 등 6개 업권이며, 그동안 각 개별법에 규정되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정들을 통합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 6개 업권의 전체 금융회사에 대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일반 규범인 상법에서 '09년에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기존의 상법 체계에서 규율하는 일반회사보다 완화된 사외이사 기준을 금융회사에 적용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 이사회 의결 사항 확대(신설)

-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동 심의·의결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 의무화

* 현행 은행에만 적용되던 사항을 전체업권으로 확대

☞ 은행법을 제외한 현행 금융법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중요사항 조차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인지 불분명하고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유도하고 이사회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예·결산 부문에 보수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사회 의결사항 중 임직원 보수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내이사 참여 금지(신설)

- 사추위 위원수를 현행 2명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현행 1/2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

- 사추위에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 등 기존 회사 내 인사의 참여를 금지(외부인 참여·구성방법 등은 회사가 정관을 통해 자율적 결정)

- 이에 따라, 사추위는 '전원 사외이사' 또는 '과반수 사외이사 + 외부전문가 등'으로만 구성

☞ 사추위 위원수 3인,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 원안동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에서 사내인사의 무리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미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일반규범인 상법에서 규정('12.4.15 시행예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체계를 따라 원안동의

☞ 사내이사 등 사추위 참여금지 : 철회권고
현행 상법상 회사의 사추위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추위 위원에게 등기이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 사내이사의 참여를 배제하여, 회사에 대한 일반규범인 상법상 체계와 상충

☞ 사추위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경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가능성이 있으며, 견제장치가 없어 사외이사의 전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지분소유 없는 외부인사가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통해 이사회 구성에 관여하고 그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주주자본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철회권고

●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신설)

-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규정 신설

* 이사·감사가 아닌 면서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전무·상무·이사, 기타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정안 제2조의 「업무집행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개념·범위가 모호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회사조직과 운영의 일반원리를 규정하는 상법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와 유사한 개념의 「업무집행지시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임면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이사 이상의 직급을 이사회에서 모두 임면토록 한다면, 인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재무관리, 경영전략 책임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핵심업무집행책임자에 한정하여 이사회 의결로 임면토록 수정하여 개선권고

● 감사위원 선출방법(신설)

- 이사 선임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를 분리하여 선출

일괄선출 방식 (현행)	- 1단계(주총) : 전체 이사를 일괄선출(의결권 제한 없음) - 2단계(주총) : 일괄선출된 이사 중 감사위원 선임(3% 의결권 제한)
분리선출 방식 (제정안)	(주총) 이사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안건(3% 의결권 제한)과 나머지 이사 선임 안건(의결권 제한 없음)을 분리하여 처리

☞ 감사위원은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하고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성·중립성 유지가 필요하나 그로 인해 이사회를 대주주와 차단시키는 것은 주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대적 M&A에 취약해질 수 있음

☞ 상근 감사위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비상근) 중 1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보수체계 개선(신설)

- 금융회사는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보수위원회 설

치*(감사위원회로 대체 가능)

* 시행령에서 자산 2조 미만 금투·보험·카드, 카드 외 여전사, 자산 3,000억 미만 저축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할 계획

– 일정한 범위의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공시

* 보수위원회의 구성·권한·책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수총액 등

☞ 기존 대표이사(CEO)가 전적으로 결정했던 임직원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직원의 과도한 보수 취득 또는 고위험의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고 주주, 예금·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금융위원회의 입법 취지에 동감하여 원안동의

● 대주주 자격유지 의무 및 위반시 처벌(신설)

–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주기*마다 대주주 변경승인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심사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의 경우, 매 2년(자산 2조 이상 1년)마다 주기적 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금융권에 확대

– 금융위의 심사결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 충족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10%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 행사가능하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의 처분을 명령

☞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를 충족하지 못한 자격미달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보유주식 강제처분 명령조치는 시장경제체제하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핵심규정으로, 법률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건이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 재산권 행사의 핵심적인 사항(적격성심사 요건, 대상, 주기)을 모두 시행령에 백지 위임하고 있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의 원칙과 상충된다고 보임

☞ 시행령에 정해질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골격입법으로 판단되며,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소유권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여 동 규정 전체를 철회권고

● 내부통제(신설)

– 준법감시인을 이사회가 사내이사·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기(2년 이상)를 정하여 선임

* (현행) 이사회가 선임하되 지위·임기 규정 無 → (개선) 지위향상 및 임기보장

–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자격을 제한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시 즉시 자격 상실

* (현행) 자격요건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은행·금투·지주의 경우 주의·견책 등 조치를 받으면 즉시 상실되어 사실상 해임·면직에 해당

☞ 기존에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던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규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위험관리(신설)

– 자산운용이나 업무수행 기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위험의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험을 점검·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 금융회사는 예금자 또는 투자자 등 주주 이외의 보호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일반회사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경영 건전성이 요구되고, 대주주에 의한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 결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지배구조내부규범(신설)

– 금융회사는 CEO를 포함한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함

* (현행) 은행 → (개선) 전업권 확대

☞ 금융회사는 예금자 또는 투자자 등 주주 이외의 보호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일반회사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경영 건전성이 요구되므로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 현황,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고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과태료 등 제재사항(신설)

–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제재*를 부과

* (금융기관) 영업정지, 시정명령, 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임원)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요구

- ☞ 지배구조법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기존 개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규정 위반 제재조치와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위험관리(신설)

- 자산운용이나 업무수행 기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위험의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
-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험을 점검·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 ☞ 금융회사는 예금자 또는 투자자 등 주주 이외의 보호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일반회사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경영 건전성이 요구되어 대주주에 의한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 결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정하는 회사규모 설정(신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임원으로 정하는 회사 규모를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설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012.5.15 시행예정)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내용을 반영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2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정해야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도 다른 법령을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판단

- ☞ 한편 규제의 효과가 중·대형 회사에 한정되고 검직이 가능하여 회사 여건에 맞게 임원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업계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세부 자격요건 설정(신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의 자격요건* 설정

* 유관 학위·자격 소지자: 유관 학사학위·전문자격 + (2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또는 3년 이상 IT경력 보유) 등
유관 학위·자격 미소지자: 학사 학위 + (4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또는 5년 이상 IT경력 보유) 등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내용 반영

- ☞ 농협 전산사고,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유출 사태 등과 같은 보안사고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전문자격 등을 갖춘 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의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 없는 등 금융회사에 큰 부담이 없는 합리적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강화)

-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련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가계대출 및 개인 할부금융자산 중 '요주의' 분류 자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8% 및 2%에서 은행 가계대출 수준**인 10%로 상향

* 현행 대손충당금 적립률: 정상(1%), 요주의(개인할부 2%, 가계대출 8%),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 은행업감독규정 제29 ① 2호(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가계자금대출금) 나목 "요주의" 분류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 ☞ 여신전문금융사의 요주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은행 수준(10%)으로 적립토록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여신전문금융사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대손준비금 증가로 이익금의 내부유보가 확대되고 배당이 억제되어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가계대출 연체율('11년말 기준) : 여신전문금융사 3.56%, 은행 0.67%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강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동일기업에 대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기금 총신용보증재원의 5%*로 축소
 - * 현재는 30%로 되어 있으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축소 조정
 - ☞ 2004년 주택금융공사 설립 후 총신용보증재원이 5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도 크게 증가하여 동일기업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잠재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고 신용보증한도 축소에 따른 기업에의 영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9)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내용심사)
 -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접근매체에 대해 해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규정
 - ☞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09.7.7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내용심사)

- 금융기관 대표의 IT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등은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토록 함

-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체 보안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등의 자체 취약점 분석, 평가 의무화

- ☞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1.17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업무제휴 또는 외부주문 기준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의무(내용심사)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검사시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1.17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내용심사)

- 영업정지 사유에 안전성준수의무(제21조 제1항, 제2항)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추가

- ☞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1.17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기준 설정(신설)
 - 투자은행을 일반 증권회사와 차별화되는 법적 개념(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구분·정의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i)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ii)비상장주식 등 내부주문집행 (iii)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허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설정

☞ 제18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0.20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 모집주선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강화)

– 주선인도 인수인과 동일한 민사책임을 부담토록 함

☞ 제18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0.20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 주권상장법인의 실권주 처리 제한(신설)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실권주 발생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실권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일반공모 방식 선호 여건 조성)하되 제3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의 발행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함

* (i) 애초부터 시가를 반영한 적정가로 주주배정, (ii) 금융투자업자의 실권주 전부인수, (iii) 신주인수에 관한 기존 주주의 초과청약(over-subscription privilege) 등

☞ 제18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0.20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 폐지(강화)

–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

☞ 제18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0.20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신설)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제18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2.29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 대출모집인 신설(신설)

– 대출모집인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행위규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

☞ 제18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2.29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 판매행위규제(신설)

– 금융상품 속성에 따라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당권유금지, 구속성계약 체결금지, 광고규제 등 규제 적용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속성에 따라 위탁금지 규제, 고지의무, 이해상충방지의무 등의 규제 적용

☞ 제18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2.29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 금융분쟁조정제도(신설)

– 금융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가능하며 일반금융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분쟁조정사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분쟁사건(500만원 이하)에

대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 제기 금지

☞ 제18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2.29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 과징금 제도(신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제18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2.29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 비교 공시(신설)

– 동일한 상품군을 기본으로 주요내용을 비교공시하고 금융상품 유형별로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협회에 업무를 위탁

☞ 제18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경우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2011.12.29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음)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중개 금액의 5%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제한(신설)

☞ 국회임기 종료에 따른 내용변경 없는 재추진입법사항으로 관련 지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처리

(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부동산신탁회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신설)

– 타 업권의 부동산 PF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PF대출에 적용되는 수준(금투·여전 동일)으로 강화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재 적립율에서 추가되는 적립율의 50%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 나머지 50%는 1년 이후부터 반영

☞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다른 권역의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건설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희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펀드판매사의 계열사펀드에 대한 차별적인 판매촉진행위 금지(신설)

– 펀드판매사가 계열운용사 펀드 등이라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펀드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행위를 금지

☞ 주요 펀드 판매사의 경우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이 50%를 상회(상위 5개사의 경우 '11.9 말 기준 56.5%)하여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여 판매촉진 노력을 하는 행위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건전영업행위의 일종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대한 규제(신설)

– 수익증권 발행한도를 신탁재산(시가 또는 공정가액 평가)의 순자산가치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수익증권의 경우 개발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감평가 확인·공시 의무 부과

– 수익증권 발행을 기명식으로 제한하고 일괄예약발행을 의무화하며 신탁업자 고유재산을 통한 수익증권 매수를 원칙적으로 제한

☞ 신탁법 개정으로 금전신탁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던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에 대하여 허용함에 따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투자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을 일부 적용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관리형신탁의 수익증권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신설)

– 관리형신탁 수익증권은 관리형신탁 수익권*에 유통성이 부과된 것으로서 매매거래시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

* 수탁자가 위탁자 등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신탁으로서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통해 발행된 수익증권은 유통되어 매매손익이 발생가능하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통해 발행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본시장법 제3조 제①항 :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업자가 아닌 자(유사신탁업자)가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통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기신탁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발행규제 등*을 적용

* 수익증권 발행시 금융위 사전 신고, 수익증권 발행한도 제한 등

☞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업자가 아닌 자(유사신탁업자)도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사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15)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신설 6, 강화 3)

■ 심사내용

● 대주주 직접 검사(신설)

– ①대주주가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대주주에 대해 직접검사 실시

* 저축은행에 대한 비공개정보 요구행위, 위법행위, 요구행위 등

** 대주주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예금 등을 받는 행위, 대주주가 다른 저축은행으로부터 교차지원 받는 행위 등

☞ 국회임기 종료에 따른 내용변경 없는 재추진입법사항으로 관련 지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처리

* 신설·강화규제의 내용변화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서면심사(예비심사)로 규제심사 완료

●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제재(강화)

– (현행) 과징금 대상 : 저축은행, 수준 : 위반금액의 20% 이하

– (개정) 과징금 대상 : 저축은행 및 대주주*, 수준 : 위반금액의 40% 이하

* 은행법의 경우 ’09년 기 도입

– (현행) 형사처벌 대상 : 저축은행 및 대주주, 수준 : 5년 · 5,000원 이하

– (개정) 형사처벌 대상 : 저축은행 및 대주주, 수준 : 10년 · 5억원 이하

☞ 국회임기 종료에 따른 내용변경 없는 재추진입법사항으로 관련 지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처리

* 신설·강화규제의 내용변화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서면심사(예비심사)로 규제심사 완료

● 동일 PF사업장에 대한 여신 규제강화(신설)

– 동일한 부동산 PF사업장 내 2개 이상의 차주(시행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를 자기자본

(동일계열저축은행의 경우 연결자기자본 기준)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

※ PF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해당 차주(시행사 등)에 대한 여신이 공동 부실화

☞ 국회임기 종료에 따른 내용변경 없는 재추진입법사항으로 관련 지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처리

* 신설·강화규제의 내용변화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서면심사(예비심사)로 규제심사 완료

●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 강화(신설)

– 계열저축은행의 경우 母저축은행의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기준 유가증권 투자한도 적용

※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 강화를 통해 계열 동반 부실화 예방 및 개별·계열저축은행간 규제차익 해소

☞ 국회임기 종료에 따른 내용변경 없는 재추진입법사항으로 관련 지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처리

* 신설·강화규제의 내용변화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서면심사(예비심사)로 규제심사 완료

●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차단(강화)

–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 계열저축은행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 투자출자한 사모공동펀드, 저축은행이 출자투자 지분이 50% 이상인 사모공동펀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한 자산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에 대한 대출 금지

☞ 국회임기 종료에 따른 내용변경 없는 재추진입법사항으로 관련 지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처리

* 신설·강화규제의 내용변화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서면심사(예비심사)로 규제심사 완료

●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누설 금지(신설)

– 최근 영업정지된 일부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전 대주주, 임직원 등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가족, 지인, 우량고객 등에게 알려 예금이 사전 인출되어 대주주, 임직원 등이 영업정지 예정사

☞ 국회임기 종료에 따른 내용변경 없는 재추진입법사항으로 관련 지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처리

* 신설·강화규제의 내용변화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서면심사(예비심사)로 규제심사 완료

● 자체 휴업 요건 명확화(신설)

– 자체 휴업요건 신설(본지점 이전시,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 국회임기 종료에 따른 내용변경 없는 재추진입법사항으로 관련 지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처리

* 신설·강화규제의 내용변화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서면심사(예비심사)로 규제심사 완료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6)

■ 심사내용

● 한계기업의 소액공모제도 남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한도 축소, 서류 공시기간 연장 등 규제를 강화(강화)

– 소액공모한도 축소 :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거 1년을 합산하여 10억원 미만으로 한도를 조정(현행은 증권의 종류별로 1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소액 공모 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의 소액공모실적 소멸)

– 서류 공시기간 조정 : 공모개시 3일 전까지 제출토록 의무화(현행은 지체없이 제출토록 되어 있어 공모개시 전까지만 제출하면 됨)

– 청약증거금 관리 강화 : 금융회사·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의무화

☞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제공과 투자자 보호 중 기업의 편의제공에 중점을 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공시기간 조정, 청약증거금 관리 강화의 경우 제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 소액공모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현재 공모 후 단기간 내에 상장폐지되는 사례를 볼 때 투자자 피해감소

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소액공모한도가 총량기준으로 최대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선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간편한 자금조달의 기회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총량 기준 10억원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일반공모에 비해 소액공모시 투자위험을 보여주는 상장폐지율 비교치 등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이미 '09년에 1/2로 축소된 바 있는데, 금번에 다시 '09년 이전대비 1/6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지 의문임

☞ 따라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령안대로 우선 시행하되,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도개선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개선권고

- 기관간 RP 대상기관(은행, 증권회사 등)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로 하는 RP거래시 증권 - 자금의 동시결제 의무를 부과(강화)

☞ 기관투자자의 대고객 RP 가입을 금지하여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단기자금시장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도 충족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이 신용거래인 콜시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신용경색시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할 목적으로 기관간 RP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

-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 또는 변동시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강화)

☞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증시 급변기에 공매도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강화)

- 대표적인 투자은행 업무에 해당하는 PF를 “기업금융업무”로 정의하고 PF 업무 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PF업무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로 대표적인 투자은행업무에 해당되어 기업금융업무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해 PF업무에 대하여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없음

☞ PF업무가 기업금융업무가 아니고 현행처럼 고유재산운용업무로 분류되어도 사전적 규제인 정보교류 차단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후적 규제인 불건전영업행위 금지규제는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시행령 제68조 제①항 3호는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규제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강화)

-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제한기간 동안에는 자사주 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도 이를 취득·처분할 수 없도록 함

☞ 자사주 신탁이 상장기업의 운용지시에 따르는 특정금정신탁이므로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제한기간 동안에는 자사주 신탁 운용업자도 이를 취득·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외이사의 선임(강화)

-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법인이 아닌 변호사·회계사 단체(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등)라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용역 제공시 그 소속 변호사·회계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보험업법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

☞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 적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 소속 변호사 등과 법인이 아닌 단체의 변호사 등과의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은행법 등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17)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공중협박 관련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예외적 금융거래허가(신설)

- 현재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거래허가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현행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UN 알카에다-탈레반 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거래제한자인 경우에는 유엔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추가

* 우리나라가 지정한 거래제한자는 총 927명(내국인 없음)이며, 이 중 유엔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자는 454명('12년 3월)

- ☞ 유엔지정 금융거래제한대상자는 “모두 외국의 개인·법인·단체”이며 내국인은 없고 법규시행 이후 적용 사례가 없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국내기업 및 개인 등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나 테러리스트와 거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적 업무부담 또는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18)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령에서 추가로 규정한 사항*을 각자가 관리하는 계좌부에 등록 또는 기록하도록 함(신설)
 - * (발행인관리계좌부) 발행한도, 미상환 발행잔액, 그 밖에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 (고객관리계좌부·고객계좌부·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단기사채 등 금액의 증감원인
-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인별 발행현황 관리와 전자단기 사채 등의 발행·유통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변동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계좌부에 기록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초과분 발생시 발행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신설)
 - 법률의 위임내용*에 따라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이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규정
 - * 초과분 발생시 채권자의 발행인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 초과분 발생시 발행인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자와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금액의 산정방법
- ☞ 발행인이 발행총액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초과분 발생 종목을 갖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및 유통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초과분의 실제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발생 시에도 즉시 확인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 등록정보 등의 의무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신설)
 -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은 각자가 관리하는 계좌부의 등록·기록 정보를 등록·기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도록 함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정보의 보존기간,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여타 전자금융 관련 법률*과 동일한 보존기간과 보존방법을 정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정보의 보존기간을 10년, 보존방법을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토록 정하고 있음

● 전자단기사채 발행시의 의무 공개 대상 정보 추가(신설)

-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령에서 추가로 규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전자사채 등의 종류, 종목, 금액, 발행조건

** 발행한도, 미상환 발행잔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발행한도와 미상환 발행 잔액은 투자자 투자판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1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신탁 공제상품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중앙회에 대한 공제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강화)
 -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성격이 비슷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유사하게 중앙회 공제금 보호를 규정하여 그동안 보장이 되지 않던 중앙회 공제금에 대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불안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 수협(’03.10월), 새마을금고(’11.5월)는 중앙회의 공제금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 기 포함
-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강화)
 -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가계대출연착륙 종합대책(’11.6.29)에 따라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세부 기준은 향후 감독규정에서 정하게 되며 성격이 비슷한 은행의 경우도 예대율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20)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대손준비금 산정방식 변경(강화)

- (현행) 각 부문별 필요적립액 총액 - K-IFRS 기준 대손충당금 총액
- (개정안) Σ 각 부문*의 건전성 분류**별 $\max[\text{필요적립액} - \text{IFRS 기준 대손충당금}, 0]$

* 기업, 가게, 신용카드, 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별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의 충실화를 도모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 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IFRS 도입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 변경 예정

☞ 2011년 12월 행정지도로 은행들은 이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추어 대손준비금을 기적립하고 있으며 과거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대손충당금 적립의 하한선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동의

● 경영실태평가 운영방식 변경(강화)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이미 시행 중인 경영실태평가항목의 변경으로서, 동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내용도 대부분 규정, 세칙 등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내용이거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2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안(신설 2, 강화 3)

■ 심사내용

● 신용카드 발급 및 모집관련 준수사항(강화)

- 민법상 성년자, 개인신용 6등급 이내, 본인 신청시에 한해서 신용카드 발급

☞ 신용카드는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발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결제능력이 부족한 자의 카드 발급을 억제하고 직불카드 사용 등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적용하고, 대상별 카드 발급의 예외인정*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원안동의

* 민법상 성년자가 아니라도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신용 6등급 이내가 아니라도 결제능력을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또는 본인이 입증한 경우 겸용카드(직불·신용카드)

● 신용카드 이용한도 제한(강화)

- 가처분 소득으로 월평균 결제능력 평가,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감독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금감원장이 변경 요구

-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토록 권유하는 행위 금지, 이용한도 적정성 정기(최소 1년) 평가

-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의 보관의무

☞ 가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용한도를 가처분소득에 근거한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여하는 것은 결제능력 이상의 카드사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제능력 및 이용한도와 관련한 규제강화사항도 과도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신설)

- 회원의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권유행위 금지

- 부가서비스, 상품이용조건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 금지

☞ 카드사에서 회원확보 및 카드이용 유도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전화마케팅 하루 평균 48.4만건)에 따른 소비자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 금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 신용카드 해지 및 공시(신설)

- 신용카드 해지신청시 금지행위 구체화(해지신청시 다른 상품으로 전환권유 금지 등)

- 신용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 신용카드 현황 및 해지절차 등 공시
-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회원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도 해지가능)
- ☞ 신용카드 해지신청시 금지 행위는 카드 해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하며, 카드사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사항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휴면카드 감소를 위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카드사의 이용 권유행위가 과다한 현재 실정상 휴면카드에 대해 개인 동의 없는 해지도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동의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및 법무조합 등을 추가(강화)
- * 은행법 시행령('10.11.18),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10.12.2), 보험업법 시행령('11.1.24) 등 타업권에서 기 반영한 사항에 준하여 규정 개정
-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10년 국회 국정감사, '12년 감사원 제도개선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은행, 보험, 금융지주회사 등 유사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불법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

(22)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부실책임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그 부과수준을 인상(강화)
- ☞ 본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10.10.26 비중요규제) 거쳐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법안으로, 동일 내용으로 재입법 추진
- * 18대 국회 폐기법안 입법과정 효율화 방침('12.5.8 국무회의)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분류

(2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 또는 변동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신설)

- ☞ 보고대상 공매도 투자자 수가 많지 않아('12.6월 말 기준 155명) 보고부담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와 시장 규모가 유사한 호주와 동일하게 보고기준과 보고방법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증권사는 고객의 매도 주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신설)
- ☞ 현재도 금융투자업자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개정(안)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공매도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건전한 증권시장 질서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의무 기준금액 폐지(신설)
 - 보고대상 의심거래의 기준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원화의 경우 1,000만원이며, 기준금액 미만 금융거래의 경우에도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으면 의심거래로 보고할 수 있으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성은 거래금액 규모와 무관하므로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
 - ☞ 모든 의심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과 부합하며 FATA 정회원 가입시('09.10월) 의심거래 기준금액을 폐지기로 한 약속 사항을 이행하여 국제적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현행 법령하에서도 금융회사들은 1,000만원 미만의 거래라도 의심거래 징후가 있을 경우 보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전신송금의 송금인정보 제공근거 신설(신설)
 - 해외 전신송금시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제공
 - 국내 전신송금시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만 제공하고, 수취 금융회사 또는 관계 당국이 송금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 ☞ FATA 정회원 가입시 전신송금시 송금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여 국제적 신뢰를 제고할 필요(미국, EU등도 전신송금시 송금자 성명, 주소, 계좌번호 등의 송부를 의무화하고 있음)가

있고 전신송금시 송금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25)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7, 강화 4)

■ 심사내용

●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강화)

- 보험사 가계대출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보험의 사회 안전망 장치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예방적 조치로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감독규정 개정 에 따라 보험사(생명보험사 24개, 손해보험사 31개)의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는 1,945억원이나, 사실 상 보험사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안동의

● 재보험계약의 보고 등(강화)

- 감독원장에게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보험사와 재보험사간 계약상 책임제한” 기준을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명확하게 변경

☞ 재보험 거래관련 준수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에 동의하나 재보험계약 보고의무는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상위법령을 개정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부대 조건으로 동의함

● 공시이율 산출 체계 개선(신설)

-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간 가중치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회사의 조정범위 축소

- 공시이율 적용 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상품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닌 표준이율(금융당국이 제시한 이율)로 예시토록 규정

☞ 상위법 근거가 명확하며 본 규제강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결정권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공시이율의 임의적 변동성이 감소하게 되어,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등 공익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변액보험 등의 제도개선(신설)

- 변액보험 등의 상품 판매시 사업비수준, 펀드투입 금액 등 중요사항을 설명 및 확인하고, 사업 비, 납입보험료 대비 적립률을 비교 공시하도록 규정

☞ 상위법 근거가 명확하며 보험판매시 설명의무 이행여부 사후 확인 제도(해피콜 제도 운영 의무화)는 보험업계 자율규범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이던 제도를 명확하게 법규화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 은 없고 보험상품 비교·공시 자료 추가하는 것이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보험판매방송시 고가 경품제공 금지(신설)

- 일반 판매조직(설계사, 대리점 등)의 경우와 같이 보험판매방송시에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준용하여 규제형평성 제고

☞ 이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보험계약시 특별이익 제공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케이블방송 등에 의한 보험모집시에도 특별이익 제공금지가 적용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 임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지급여력금액 산정방식 변경(강화)

-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자본을 계층화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고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을 한도로 인정

☞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사(생명보험사 24개, 손해보험사 31개)의 지급여력금액은 생명보험사 1조 7,000억원, 손보사 1조 2,000억원이 감소하지만, 감독규정상 지급여력비율 기준(100%)이 사실상 지급 여력비율 기준의 하한선으로 작용하였고 실제 보험사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 책임준비금 산출식의 명확화(신설)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보험계약은 일별 적립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도록 규정(신계약 부터 적용)

☞ 기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모두 일별 적립방식을 기도입하고 있어 추가 부담이 없으며, 장기보험을 판매 하고 있는 손해보험사(10개사)의 경우 기존계약에 대한 추가적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없고 '13년 4월 이후의 신계약에 대한 추가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도 낮아 그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여 원안동의

- 보험중개사의 장부 및 서류의 비치·보존 기간 연장(강화)
 - 보험중개사의 장부 및 서류 비치·보존기간을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5년, 10년으로 규정
 - ☞ 상위법 근거가 명확하며 재보험중개사의 장부·서류 보관 의무가 강화되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명확한 권리의무 관계가 소명될 수 있어 보험중개사 역시 보호받을 수 있고 재보험거래 안정성 제고 등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보험중개계좌의 개설 및 신고(신설)
 - 보험중개사는 원보험과 재보험을 구분하여 각각 계좌개설 및 구분계리하도록 규정
 - ☞ 상위법 근거가 명확하며 원보험과 재보험계약의 경우 그 성격·내용이 달라 계좌분리 등을 의무화하여 별도 관리 필요성이 크고 해외 중개가 많은 재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보험금 지급 규정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부당한 담보 및 근저당 보증요구 금지와 근저당 설정유지 확인(신설)
 - 정당한 사유없이 포괄근담보 및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채무변제시 담보설정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
 - ☞ 보험업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정당한 사유 없는 포괄근담보 또는 보증 요구 금지」 규정을 재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거래상 편리를 위하여 대출계약자(또는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 또는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출계약자 및 담보제공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금 변제시 근저당 설정 유지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도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시 제출 서류 규정(신설)
 -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 신고시 구비서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보험회사에게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26)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신용평가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내부통제(신설)

- 동일 애널리스트가 동일 평가대상에 대해 4년 연속 평가한 경우 이후 2년간 동 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금지
-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
 - * 이해관계자 : ①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총수익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
 - ② 당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제외한 기타 용역을 제공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③ 그 밖에 다른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도 동일 애널리스트의 동일 평가대상에 대한 연속평가 기간을 4년으로 축소 한 바 있어 규제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신설)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영세한 중소 및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과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규정
 - *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
 - **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 신용카드업자의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중소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제외) 수 수수료율의 100분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 ☞ 영세한 중소 및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이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동의
- 부가서비스의 축소·변경요건 강화(강화)
 - 부가서비스 축소 요건에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 강화
 - ☞ 본 규제강화로 카드사가 높은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조건으로 카드회원을 모집 후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 변경함에 따른 카드가입자의 권익 침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카드사의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강화(신설)

-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용카드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 내부통제기준에는 모집질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방법, 준수사항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운영을 포함

☞ 본 규제강화로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관리책임이 강화되어 신용카드 발급 남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신용카드업자에게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을 강제화할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포상금제도 운영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광고규제(신설)

- 신용카드업자의 과장·허위광고 등으로 인한 카드 발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광고 관련 준수사항* 도입

- * ①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 부가서비스, 연체료율 등)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
- ② 광고관련 경고문구(예: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규정
- ③ 허위, 과장 광고(예: 보장, 즉시 등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금지 등

☞ 본 규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1222일 시행예정)에 광고행위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것을 정하는 것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관련법령에서 이미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운영 중인 점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기자본대비 총자산 규모 제한(신설)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과도한 외형확장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6배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10배

☞ 레버리지 규제는 과도한 외부차입을 억제하고 안정된 자기자본을 유지토록 하여 유사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으로 2003년 카드사태시를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2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기초서류변경에 대한 신고(강화)

-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 자기부담금 다양화 : 10% 또는 20%인 상품을 동시 판매

-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 : 현행 3~5년 주기에서 매년 주기로 보험료 변동폭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험료 변경, 특정연령까지 전 기간 동일내용을 보장하는 현행 방식에서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최대 15년 이내로 단축

☞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 변경·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보험사의 경우 위험 손해를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2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최소자본규제 개편 및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강화)

- 바젤Ⅲ에 맞추어 최소자본규제를(현행)총자본비율(8%)→(개정)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

- 바젤Ⅲ에 맞추어 2.5%의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의무 부과하고 미달시에는 이익의 사외유출을 단계적으로 제한

☞ 국제기준인 바젤Ⅲ에 맞게 자본적정성에 관한 비율을 세분화(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하고 자본보전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회원국으로 합의된 바젤Ⅲ를 준수하여 국내규정의 국제적 적합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적기시정기준, 경영실태평가 기준 등 변경(강화)

– 변경된 최소자본규제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 ☞ 변경된 자본적정성에 관한 규제에 맞추어 경영실태평가기준,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 등을 변경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0)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강화 2, 신설 2)

■ 심사내용

● 사업자 등록을 위한 인적 요건 강화(강화)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시 운용관리·전산·가입자교육 인력을 각 2인 이상 보유토록 하고 연금계리 인력은 1인 이상 보유
- 아울러 운용관리인력의 경우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펀드·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을 포함

- ☞ 퇴직연금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연금사업자에게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이 인적요건이 상향조정된다고 해서 퇴직연금제도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 제시가 부족함에 따라 철회권고

● 신탁계정의 자사 고유계정 상품 편입한도 축소(강화)

-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관리계약을 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자사 원리금지급 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투자한도를 위탁 적립금의 70%에서 50%로 축소

-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축소하여 퇴직연금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고유계정 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축소는 바람직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내부통제기준 설정 및 점검 의무화(신설)

- 퇴직연금사업자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그 점검을 의무화

- ☞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은 민원발생 가능성 축소, 사후 감독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하고 규정에서 의무화한 준법감시인도 현재 운용 중인 제도로 규제의무 이행에 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계열사간 거래규제 강화(신설)

- 적립금 운용금액 공시시 자기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을 별도로 추가 공시토록 의무화하여 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할 필요

- ☞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의무 이행에 부담이 없음

(3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세분화(강화)

- 최소자본규제를 바젤Ⅲ에 맞추어(현행) 총자본비율(8%)→(개정)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

- ☞ 국제기준인 바젤Ⅲ에 맞게 자본적정성에 관한 비율을 세분화(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하고 단계적으로 최소준수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회원국으로 합의된 바젤Ⅲ를 준수하여 국내규정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강화)

- 바젤Ⅲ에 맞추어 2.5%의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의무 부과

-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와 달리 동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미달시에는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됨

- ☞ 국제기준인 바젤Ⅲ에 맞게 자본보전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하고 미준수시에는 이익의 사외유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회원국으로 합의된 바젤Ⅲ를 준수하여 국내규정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적기시정기준, 경영실태평가 기준 등 변경(강화)

- 변경된 최소자본규제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 ☞ 변경된 자본적정성에 관한 규제에 맞추어 경영실태평가기준,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 등을 변경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2)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커버드본드의 적격 발행기관(신설)

- 금융회사는 기관 요건과 건전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 법에 따른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

- ☞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적격 발행기관과 동 기관의 건전성 요건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전통적으로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활발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및 관리(신설)

-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이 되는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행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 독일·프랑스·영국 등 대부분의 해외 입법례에서도 인정하는 안전자산인,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의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국가 및 공공기관 대출, 국공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 ☞ 투자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초집합자산을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모든 해외 입법례에서 커버 풀에 대한 감시인(monitor)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의 등록(신설)

-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 요구

- ☞ 해외 입법례에서도 커버드본드의 발행계획 및 담보자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커버드본드와 유사한 개념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위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전 자산유동화 계획 등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발행계획 등의 등록은 은행의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커버드본드 발행시 준수사항(신설)

- 발행기관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8%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즉시 발행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 커버드본드 채권자로 인해 발행기관의 무담보 선순위채권자(특히, 예금자)가 사실상의 후순위권자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해외 입법례*는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 (호주) 커버 풀에 포함되는 자산이 발행기관 총자산의 8% 초과 금지
(미국(모범규준)) 커버드본드 발행이 발행기관의 총부채의 4% 초과 금지
(영국) 커버드본드 발행금액이 총자산의 4% 초과시 감독당국에 별도 보고하고, 감독당국은 경우에 따라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

- ☞ 이 법은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금융회사는 이 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상법 및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한 담보자산을 기초로 하여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리스크관리 및 공시의무(신설)

-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상환 커버드본드의 총액·만기,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및 만기별 분류 등을 매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 ☞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커버드본드 및 기초자산집합의 상세내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대부분의 해외 입법례는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별도 리스크 관리 및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감독 및 제재(신설)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발행기관에 대한 조사 및 업무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해외 모든 입법례에서 관련법규 위반시의 과태료, 벌칙 등 제재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제재 수준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수준을 준용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기업어음(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신설)

– 기업어음은 불투명한 시장구조, 발행자의 공모 규제회피 등으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공시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CP를 발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CP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최근 LG 건설, 삼부토건 등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CP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4)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ABCP*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신설)

*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 ABCP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을 일반 투자자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ABCP 취급내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

☞ ABCP 발행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포착을 통한 ABCP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ABCP 취급내역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ABCP 발행건수가 많지 않고 매월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ABCP 취급내역을 같이 보고토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보고의무 부여(신설)

– 안정적으로 CD 금리를 산출함으로써 이에 연동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상품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CD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

☞ 시장지표금리로서 CD금리의 중요성, 금리 자율화 원칙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협회가 호가 제출 증권사를 지정토록 하고 지정된 증권사에 대하여 호가 제출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함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기업어음(CP) 편입한도 축소(신설)

– CP 과다 편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MMF의 동일인 발행 CP에 대한 운용한도를 축소

☞ CP의 경우 여타 채무증권에 비해 규제수준이 낮은 점에서 MMF의 동일인 발행 CP에 대한 운용한도를 여타 채무증권에 비해 축소할 필요성이 인정됨

☞ '12.9월 말 현재 MMF 총자산 66조 4,000억원 중 최상위 등급 CP에 3% 이상 운용 중인 금액은 8,000억원에 불과하여 규제 도입으로 인한 집합투자업자의 향후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 공정거래위원회

이화원 | 서기관(044)200-2431, ihw@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정안,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 등 18개 법령에 대해 신설 21건, 강화 22건 등 총 4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2건에 대해서는 부대권고하였으며, 4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제정안	제276회 예비심사 (2012.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	제276회 예비심사 (2012.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	제280회 예비심사 (2012.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78회 본위원회 (2012.3.9)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5.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279회 본위원회 (2012.3.22)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6.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297회 예비심사 (2012.4.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09회 예비심사 (2012.5.1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12회 예비심사 (2012.5.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44회 경제분과 (2012.6.1)	원안의결 7 부대권고 1	신설 4, 강화 4 *중요 1, 비중요 7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17회 예비심사 (2012.6.11)	원안의결 13	신설 6, 강화 7 *비중요 13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17회 예비심사 (2012.6.1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2.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제336회 예비심사 (2012.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38회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	제344회 예비심사 (2012.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제344회 예비심사 (2012.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0 개선권고 1 부대권고 2	신설 21 강화 22 *중요 3, 비중요 40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신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범위(연 40%) 내에서 은행등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등 유사입법례에서의 지연이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경쟁제한적 요소나 중소기업에 미치는 과도한 비용부담 요인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소비자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금지되는 사업자 부당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신설)

① 오인야기행위의 금지

- ㉠판매의도를 알리지 않는 행위,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유리하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공기관, 유명인 등과 관련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강권하는 행위

-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계약체결을 강권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 및 심리적 부담을 이용하는 행위, ㉢허위기재를 강권하는 행위, ㉣소비자가 대출받을 것을 강권하는 행위 등

③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

- 정당한이유없이 정상적인거래관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의내용에비해현저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

- ㉠소비자의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거부 또는 지연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성립 또는 존속을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채무이행 최고 등에 이행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⑤ 권리남용 행위

-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채권의 성립 또는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 ☞ 최근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위임에 따라 사업자 부당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동 규제로 그간 사회문제화 되었던 노인·가정주부·학생 등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입법사례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부당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규제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었고 경쟁제한적 요소나 중소기업에 미치는 과도한 비용부담 요인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내유사입법례 :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행위 지정고시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

* 해외유사입법례 : 부당한 상행위에 관한 EU 지침, 일본 동경도 소비자 생활조례 제25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영국 소비자계약에서의 부당한 조항 규칙 제8조 등 다수

(3)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신설)

- (과징금의 산정) 산정기준 →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 부과과징금의 단계적 산정방식

-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①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전가, ②배타적 거래 강요, ③경영정보 요구, ④상품권 구입요구 등, ⑤보복행위, ⑥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 (기타 과징금 부과대상) ①서면미교부, ②상품대금 감액, ③상품판매대금 지급위반, ④상품 수령 거부·지체, ⑤반품, ⑥판촉비용 부담전가, ⑦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⑧매장설비비용 보상위반 등

- (산정기준)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정액과징금은 1,000만~5억원

-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 (가중기준) ①위반기간 별로 10~50%, ②3년간 법위반 횟수가 3회 벌점 2점, 4회 3점, 5회 4점 이상인 경우 각각 20%, 40%, 50%, ③조사 거부 등 30%, ④보복행위 30%, ⑤고위임원의 위반행위 관여시 10%, ⑥이상에 준하는 사유 10%
- (감경기준) ①자진시정 20~40%, ②조사협력 15~30%, ③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 10~20%, ④이상에 준하는 사유 10%

– (부당이득과의 비교) 부당이득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초과하면 부당이득을 조정금액으로 함

– (부과과징금) 부담능력,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행위자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감액

☞ 최근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 및 산정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유사입법례*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은 상위법을 규정에 따른 것이며, 과징금 산정방식 및 기준, 가중 및 감경 조정 등 부과 절차도 전체적으로 유사입법례에 준하는 수준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성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과도한 비용부담 요인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등

(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시대상의 주요 내용에 계약체결 방식을 추가하여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도 공시하도록 함 (강화)
- ☞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달리 현행 법령 해석상 자금·자산·유가증권 등의 거래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방식의 공시항목 추가는 '상품·용역거래'에 한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현재 거의 모든 공시대상 기업들이 분기별 합산액으로 추정하여 '일괄 공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에 '개별 계약건별'로 체결방식을 공시토록 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건별로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유형별로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5)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한도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한도와 일치되도록 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는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조사방해 유형에 따라 가중한도를 차등화하며,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로 조치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으로 조치받은 경우 과징금을 20% 가중하고,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규정은 현행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되 양자 중복적용시 가중비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강화)

☞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율 한도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한 가중한도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하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고시가 아닌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속히 고시 등으로 상향입법할 것을 부대권고

(6)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강화 1)

■ 심사내용

-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부과기준율과 부과금액을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각각 50%(상), 30%(중), 10%(하) 및 2억~3억원(상), 1억~2억원(중), 500만~1억원(하)으로 정하고,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한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여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구분하여 '광고제한 매체 수', '제한한 광고의 내용', '단체주도 정도', '구성사업자 제재여부', '지역적 파급효과' 등 총 5가지 항목의 상·중·하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강화)

☞ 개정 시행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유사입법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준용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법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 및 경쟁제한성이나 중소기업에 미치는 과도한 비용부담 요인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을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현행대비 2배, 사

후신고 위반의 경우 현행대비 4배로 상향하여 각각 1,500만~4,000만원, 400만~1,200만원 수준으로 상향(강화)

- ☞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결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신고의무 불인지에 따른 의무위반이 없도록 신고 가이드라인 제작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EU,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제재수준도 아니며 기업결합의 평균금액에 비해 과태료 부과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 주요국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제재 현황 >

미국 : 1만 1,000불(한화 1,200만원), 일본·EU : 총매출액의 10% 이하, 독일 100만유로(한화 15억원) 이하, 중국 50만 위안(한화 8,800만원)

- 2개사가 가담한 담합행위에 대해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100%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배제하며, 3개사 이상 가담한 담합행위에 대해 2순위 자진신고의 인정기간도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강화)

- ☞ 2개사 담합사건시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혜택을 삭제한 것은 2개사 담합사건에서 모든 담합기업이 과징금 감면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3개사 이상 가담한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2순위자에 대한 감경혜택을 배제한 것은 공정위의 조사진행 상황을 관망하다 제재가능성이 높아진 이후 자진신고하는 기회주의적 낙장신고를 차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2순위 신고자의 경우 공정위의 조사협력시 30%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과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변형된 방문판매형 판매방식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도록 사업장 정의에 기존 요건(3개월 이상의 고정된 장소) 외에 ①고정적 판매시설, ②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출입이 가능할 것, ③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상품 선택이 가능할 것의 요건을 추가하고, 유인방법 유형에 ①동행하여 사업장으로 함께 이동, ②판매목적 은닉·무료 상술, ③다른 소비자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유인하는 방법 등을 추가(강화)
- ☞ 상위법률 제2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의 요건을 강화하고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청약 유인방법의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업태를 방문판매로 포섭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4, 강화 4)

■ 심사내용

- 다단계판매업의 취급제품 가격상한을 12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상위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취급제품 가격상한도 업계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업과 동일하게 규정(강화)

- ☞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고자 변종 다단계업체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유입되는 등 규제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도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규제 적용을 제외(법 제29조 제2항)해 주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최종소비자판매비중이 70%를 넘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의무화, 후원수당 총액규제, 취급제품 가격상한규제 적용 제외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매매·위탁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본사)와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강화)

- ☞ 법 제13조 제1항 3호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본사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으로 인정하여 인정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출자금) 하한금액을 200억원으로 규정(신설)

- ☞ 소비자 피해보상 기능을 하는 공제조합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본재산 최소 규모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에 동의하되, 기본재산 최소금액은 조합존립의 핵심적 사항으로 향후 법률 개정시 상향입법할 것을 부대권고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게 징계·해임을 요구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강화)

- ☞ 소비자피해 보상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제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상위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한 것으로, 임의적으로 운영되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 법률에서 신설된 공정위의 징계·해임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는 공제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로 보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소비자 요청시 관련 거래기록을 방문·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 하도록 하고, 특수판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거래기록을 ①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②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③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④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으로 한정(신설)

☞ 법 제36조에서 거래기록 작성대상·범위·기간 및 열람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요청할 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보존대상 거래기록을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서 특수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존을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전화권유판매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게시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의무 부과(신설)

☞ 법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월 의무 확인횟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확인의무의 횟수를 월 1회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필요 규제로 판단되므로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강화)

- (과태료)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서 과거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기간 확대
- (영업정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에서 과거 3년간으로 확대하고, 각각의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4차 기준을 삭제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
- (등록취소)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 해지시, ②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시는 바로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

☞ 법 제49조 제4항 및 제66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률의 위임입법 내에서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산정범위를 최근 3년간으로 규정한 할부거래법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영업정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최대 5,000만원)(신설)

☞ 법 제5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6, 강화 7)

■ 심사내용

- 거래당사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시에도 개인정보 및 거래기록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예외 적용(신설)

☞ 법 제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적용배제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을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시(회원탈퇴)에도 거래사실 등을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용배제될 법령이 개인정보 이용동의 철회시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한정되어 있어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전자결제업자 등이 전자적 대금 지급의 소비자 확인절차를 진행할시 소비자가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하기 전 미리 동의함을 표시하여 진행하는 행위 금지(신설)

☞ 법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적 대금 지급의 소비자 확인 절차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단순히 소비자 동의란을 미리 체크하여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추가 부담도 없으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가 분쟁해결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규정하고,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규정(신설)

☞ 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호스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제공해야 하

는 기관을 규정한 것으로 성명, 주민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는 소비자 피해 유발 대상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되며, 소비자 피해의 1차적 구제는 대부분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된 기관 모두 법률에 근거한 분쟁조정기구로서 과도한 신원정보 요청문제를 예방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의무 부과(신설)

☞ 법 제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분쟁발생시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상호, 대표자 성명 등 현행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추가 부담은 미미하고,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선지급식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강화)

☞ 법 제1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안전한 결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적용제외가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면제가 가능하므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계약서 기재사항에 교환·반품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강화)

☞ 법 제13조 제2항 11호의 위임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의 비대면 거래 특성상 교환·반품비용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품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에 교환·반품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으로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경우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통신판매신고내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의 경우는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로 구체화(강화)

☞ 법 제2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확인·제공해야 하는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 및 개인 중개의뢰자를 필터링하기 위해,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인의 경우 주민번호(생년월일로 대체)는 제외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어 규제적정성도 인정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

평가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도록 의무 부과(신설)

- (인력·설비) 거래당사자간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함

- (분쟁해결기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고지하여야 함

- (처리기한) 3영업일 이내 처리 진행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 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 분쟁해결 처리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최근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현실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하위 고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은 설비·인력의 구비 정도에 대해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처리가능한 기한을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업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강화)

☞ 법 제28조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장소 및 공개범위를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강화)

- (인력·설비) 분쟁해결,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 (환급) 환급거절 및 지연시 법 제21조의2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환급을 명하는 조치

- (교환) 재할 등의 교환을 거절한 경우 교환 조치

- ☞ 법 제3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시정조치가 부작위명령 위주로 부과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 소비자피해구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상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모두 인정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1일당 평균 관련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최대 5,000만원)(신설)
- ☞ 법 3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률의 위임입법 내에서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방문판매법상 과징금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을 최근 1년간에서 과거 3년간으로 확대하고 각각의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4차 기준을 삭제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강화)
- ☞ 법 제3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률의 위임입법 내에서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할부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상 가중처분 산정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산정기간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서 과거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확대(강화)
- ☞ 법 제4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할부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등 유사입법례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산정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사업자 및 전자결제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할 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를 포함하도록 규정(강화)
- ☞ 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가 그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문의할 수 있는 사업자의 연락처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락처를 추가 표시함에 따르는 피규제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크지 않으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본적으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①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그 첫 번째 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②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청약확인 등의 절차에서 알리도록 하며, ③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신설)
- ☞ 법 제2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거래주체로 오인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사이버몰 초기화면·광고물·계약서 등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적정한 방법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소비자의 컴퓨터에 쇼핑 관련 프로그램 설치시, 프로그램의 용량·기능, 기존 컴퓨터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및 제거방법을 프로그램 설치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 고지하도록 규정(신설)
- ☞ 법 제21조 제1항 7호의 위임에 따라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시 설명·고지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쇼핑 관련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프로그램 설치 전에 용량·기능·제거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적정한 규제수준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2)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을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판매금액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구체화(신설)
- ☞ 상위법 위임 근거에 따른 것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단체(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혼선을 방지한 것으로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중기 및 경쟁영향평가 결과 영향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품 등의 정보내용과 정보 제공방법을 설정(신설)
 -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35개 품목(의류, 식품, 가구, 영상가전 등)에 대해 제조자·원산지·안전인증, 취급시 주의사항 등
 -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청약철회·계약해제 관련사항, 교환 반품 A/S 관련 연락처 등
 - (상품 등의 정보 제공방법)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 방송사업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복적·지속적으로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
 - ☞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른 것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품 등의 정보내용'과 '정보제공방법'은 각종 소비자 피해·분쟁사례와 관련 통계 등을 참고하되, 동 규제로 직접 부담을 지게 되는 이해관계자(한국은 라인쇼핑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그 수준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도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전자상거래보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별표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시 가중·감경사유 및 비율 규정(신설)
 -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에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제 과징금 부과시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적정성을 제고하였으며,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대부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등 유사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유사사례와 비교시 불합리한 내용은 없다고 보여지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①기본산정(위반사업자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30/100×영업정지일수) → ②1차 조정(소비자피해 정도 등

에 따른 조정) → ③2차 조정(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 → ④부과과징금 결정

(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금액 한도를 표시·광고법상 한도와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조사방해 유형에 따라 가중한도를 차등화(강화)
 - ☞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낮게 책정되어 과징금 부과적정성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사회적 비판을 감안하여 상위법령의 한도에 맞게 상향 조정한 것으로, 실제 과징금 부과시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동 개정안에서 정한 사항의 대부분은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제한성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시 인도업체가 해당 소비자에게 계약이전의 내용을 설명한 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인수업체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승계하도록 규정(신설)
 - ☞ 현행법은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원칙만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계약이전 절차, 선수금 보전 의무이행 주체 등을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위예규, '12.11 제정)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인수시 준수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제한성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계약체결을 대리, 중개하는 모집인이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상품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소비자가 상품관련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의무화(강화)

☞ 모집인이 상품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동일한 회원모집 행위를 하는 모집인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으며, 상품관련 내역 설명 및 계약서 교부, 설명여부에 대한 확인 등은 상품판매를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피규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곤란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수렴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제한성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모집인에게도 기존의 금지행위를 적용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용 위반행위 금지 등 일부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법정 선수금 보전비용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조항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하고, 계약이전시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시 설명여부에 대한 소비자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강화)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동일한 회원모집 행위를 하는 모집인에 대해 동일한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하면 서도, 모집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용, 계약이전시 회원동의, 계약체결시 상품정보 설명여부에 대한 소비자 확인 등 의무의행 확보를 위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제재규정이 필수적이며, 기존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도 아니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수렴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제한성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계약체결 강요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

** 재화 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내용 등을 소비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위반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 공정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집인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모집인에게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강화)

☞ 모집인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동일한 회원모집 행위를 하는 모집인에 대해 동일한 시정권고·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수렴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제한성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1차조정, 2차조정 사유 및 가중·감경 비율 등을 구체화(신설)

☞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적정성을 제고하였으며, 대부분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등 유사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내용은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제한성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

① 기본 산정기준(1일 평균 관련매출액의 30% 또는 50만원×영업정지 일수)

→② 1차 조정(위반행위 내용·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③ 2차 조정(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고의·과실, 위반행위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

→④ 부과과징금 결정

** 본 고시의 과징금 부과시 고려기준

① 소비자피해 정도 : 재산상 손해 미발생 / 소액의 재산상 손해 발생 / 상당한 재산상 손해 발생 등

② 위반행위 기간 : 단기(1년 이내) / 중기(1~2년 or 2~3년) / 장기(3년 초과)

③ 위반횟수 : 3년간 2회 이상, 벌점 5점 이상 / 3년간 3회 이상, 벌점 7점 이상 / 3년간 4회 이상, 벌점 9점 이상

④ 가중사유 : 조사방해, 고위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방해 등

⑤ 감경사유 : 소비자피해 보상노력(전액보상 / 50% 이상 보상 / 50% 미만 보상), 과실에 의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⑥ 기타 고려사항 : 현실적 부담능력, 사업여건의 변동 등

(18)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다단계와 동일하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보험계약금액 기준을 마련하여 다단계와 동일하게 보험계약기준을 설정(신설)
- ☞ 다단계판매업과 동일하게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단계판매 관련 강한 규제를 회피하고자 후원방문판매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금액을 다단계와 동일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단계판매 업체와는 달리 중소 후원방문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본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제한성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 관세청

민희선 | 사무관(044)200-2423, heesun@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13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6건에 대하여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1건, 부대권고 1건, 원안의결 11건 등 14건을 의결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관세청에서 자진 철회하였음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300회 예비심사 (2012.4.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300회 예비심사 (2012.4.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301회 예비심사 (2012.4.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307회 예비심사 (2012.5.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321회 예비심사 (2012.6.2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326회 예비심사 (2012.7.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283회 본위원회 (2012.5.17) 287회 본위원회 (2012.7.19) 292회 본위원회 (2012.10.12)	원안의결 1 자진철회 2	신설 1 강화 2 *중요3
8.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340회 예비심사 (2012.11.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안	454회 경제분과위 (2012.11.26)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부대권고 1	강화 4 *중요 3,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1 철회권고 1 자진철회 2 개선권고 1 부대권고 1	신설 3 강화 13 *중요 6, 비중요 10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환승전용내항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운항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운항 개시 5일 전까지 세관장에 제출(강화)
 - *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 및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
- ☞ 환승전용내항기의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원인력의 사전배치, 감시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운항계획서 사전확인이 필요하고, 피규제자가 2개 업체에 불과하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으로 ‘보세화물 관리를 위하여 1인이상의 보세사 채용, 물품 관리를 위한 시스템(ERP) 구비, 특허갱신 요건으로 ‘해당 보세공장의 직전 법규수행능력 평가 B등급 이상’을 추가(강화)
- ☞ 이미 75% 이상의 보세공장에서 1인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물품관리시스템의 구축비용이 저렴하며 재고파악시간·납기·재고보유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화물관리가 가능하며, 법규수행능력 B등급 이상은 보세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 추가(강화)
- ☞ 보세공장의 보고의무 지연, 반출입 신고 위반, 보세화물 관리 소홀 등으로 경고처분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고처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보세공장 경고조치 건수 : (‘09년) 11건, (‘10년) 16건, (‘11년) 21건

(3)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세관장에게 국내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하는 수입물품에 산수유, 오미자 추가(강화)
- ☞ 원산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불법용도 전용(식품용→의약품용)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피규제자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제주국제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자에게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3항*(보세판매장 협의단체장의 교육계획수립 및 보고)을 준용하여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이수자 관리 의무 부과(강화)
- * 협의단체의 장은 제2-3조 제10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중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제주 지정면세점은 보세판매장에 준하여 외국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구역으로서, 종업원에 대한 관리 및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의무 부과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규제이행 비용이 거의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기준(별표 1,3)(신설)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적정여부 등 확인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해당 품목의 생산공정,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등 확인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비취볼 때 적정성이 인정되며, 중소기업·경쟁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2년 6월 현재 EU 수출 기업의 약 97% 인증 : 총 4,944개(업체별 418개, 품목별 4,529개)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별표 2)(신설)

-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요건 및 외부 원산지 전문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내부 원산지전담자 지정기준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
 - ①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건당 1점(최대 15점)
 - ② 관세청, 민간협회 등의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점

[FTA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인정 과목	인정 내용		인정 점수
FTA법령	• FTA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 FTA관세특례법 · 고시	시간당 2점(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최대 4점)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최대 4점)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최대 4점)
원산지 관리실무	• 증명서 · 소명자료 작성 실무 • 전산관리시스템 실무	• 업무매뉴얼 작성 · 사례 실무	시간당 2점(최대 4점)

③ 관세, 상품학, FTA 관련 자격증 소지자: 최대 5점(단, 관세사·회계사: 20점)

④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FTA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⑤ FTA관련 업무 전담 경력(1년 이내 : 2점, 2년 이내 : 3점, 3년 이내 : 4점, 3년 이상 : 5점)

3.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외부원산지 전문가 자격 인정범위 : 관세사, 회계사

☞ FTA 협정에 부합하는 원산지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내부지침의 기준을 변경없이 고시에 반영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6)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기간이 만료되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4개 품목의 지정기간 연장(강화)

- 비식용 천일염, 비식용 대두유, 복어(금밀복) : 3년(2012. 8. 1~2015. 7. 31)

- 안경테 : 1년 7월(2012. 8. 1~2014. 2. 28)

☞ 해당 물품의 원산지 둔갑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생산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필요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 규제이행 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양수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양도일자 등을 입력하고, 건당 입력 시간은 2~5분 소요

(7)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국산품 판매 촉진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내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의 설치의 무 면적 확대(강화)

- 해당 보세판매장 매장면적의 5분의 1 이상 또는 330㎡ 이상 → 매장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 이상

☞ 최근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산품매장 비율은 평균 12.9%에 불과하여 국산품 매장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최근 국산품의 경쟁력 강화, 한류 등의 영향으로 국산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05년 이후 내국인의 시내면세점 이용률이 외국인보다 많아 외국 관광객 쇼핑편의 제공 등 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함에 따라 내국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신설)

* 내국인 이용자수 : 21%('00) → 65%('06) → 66%('08) → 53%('10) → 50.1%('11)

☞ 대도시의 기존 면세점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데, 지방의 신규 면세점을 외국인 전용으로 할 경우 '지방 역차별' 논란의 우려가 있고, 외국인 쇼핑 편의 개선이 주요 목적이면서 수도권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며, 지방의 외국인 관광객 수를 고려할 때 사업성이 낮고, 특히 중소기업이 운영할 경우 향후 사업적자를 이유로 내국인 이용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예상된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자진 철회(중요규제)

● 시내면세점의 특허기간 갱신요건 변경(강화)

– 당초 : 최근 5년간 전체 이용자 중 외국인 이용자가 35% 이상, 전체 매출액 중 외국인에 의한 매출액이 50% 이상을 충족

– 변경 : 전년도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결과 80점 이상을 충족

☞ 시내면세점의 갱신요건 변경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을 전제로 추진하였으나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을 자진 철회함에 따라 동 안건도 자진 철회(중요규제)

(8)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수출입신고서의 오류가 빈번하여 무역통계가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손상됨에 따라 수출입 신고서의 중요오류에 대한 오류점수를 2배로 상향(강화)

– 수입신고 수리후 금액·중량·수량의 정정내용이 100배 이상 차이 : 25점 → 50점

– 신고의 각하 및 취하 : 25점 → 50점

☞ 수출입 신고 중요 오류 발생시 통관절차 지연뿐만 아니라 무역통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시 타당성이 인정되고, 규제이행 비용도 수반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9)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선박급유 용역제공업 등록(강화)

–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면세유 공급은 대부분 선박급유업자(약 280개)가 세관장에게 적재허가 신청 후, 선박급유업자와 용선계약한 급유선박(약 450척)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급유선박을 '선박급유 용역제공업'으로 세관에 등록하여 해상면세유 관리 강화 도모

☞ 용선계약에 의해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는 급유선박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규정의 '용역' 제공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급유선박을 '선박급유 용역제공업자'로 등록하려면 법에 해당규정의 신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요규제로 철회권고

● 선박급유업 및 선박급유 용역제공업 등록요건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여 선박이동경로 관리 강화(강화)

☞ AIS 설치의무 부과는 동의하나 선박급유 용역제공업 등록의무 규정이 철회권고되었으므로 AIS 설치의무를 등록요건에서 삭제하고 행정제재 규정에 'AIS를 장착하지 않은 급유선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조문을 개정하도록 부대권고(중요규제)

● 선박급유업자나 선박급유 용역제공업자가 해상면세유를 허가받은 양보다 부족하게 적재하거나 적재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10일간 업무정지) 부과(강화)

☞ 미적재와 부족적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차등부과(미적재 30일, 부족적재 10일)하고, '부족적재'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 명시하며, 선박급유 용역제공업 등록의무 규정이 철회권고되었으므로 행정제재 규정에 '관세청(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면세유 부정 유통로 이용금지를 통보받은 선박을 금지기간 중에 이용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조문을 개정하도록 개선권고(중요규제)

● 항만운송업자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기간 연장시 「항만운송사업법」 등에서 정한 요건충족 서류 제출을 생략하였으나, 중간에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어려우므로 등록 연장시에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무자격 영업행위 방지(강화)

☞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이행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사안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 국세청

강보람 | 사무관(044)200-2416, gelsomino@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개정안 1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총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개정안	제450회 경제분과 (2012.9.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소비자 경품률을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신설)
 -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주류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비자 경품을 주류 거래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6. 금융감독원

강보람 | 사무관(044)200-2416, gelsomino@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 10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19건으로 총 1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9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4.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4.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제448회 경제분과 (2012.8.3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9.2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8.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9.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계	-	원안의결 18 개선권고 1	강화 19 *중요 1, 비중요 18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바젤Ⅱ 기준 개정사항 반영(강화)
 - 바젤위원회(BCBS)가 금융위기로 드러난 바젤Ⅱ 제도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젤Ⅱ 개정안을 발표('09.7)함에 따라 유동화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 및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 설정
 - ☞ 우리나라는 '08.1월 바젤Ⅱ를 도입한 바젤위원회 회원국으로서 합의된 바젤Ⅱ 개정안을 준수하여 국내 규정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미국, EU 은행들에 비해 국내은행의 유동화익스포저 및 트레이딩 계정 비중이 미미함에 따라 동 규제 도입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정도도 약 △0.28%p('10.12월 말 기준) 내외에 그치는 등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고위험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강화(강화)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에 적용되는 바젤Ⅱ 기준상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35% → 50%)
 - *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을 제외한 여타 주택담보대출(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등) 및 3건 이상 다주택담보대출 보유자(임대사업자 제외)의 주택담보대출
(다만,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소액(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부동산 가격 하락시 시스템리스 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대출구조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
 - ☞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는 미적용하고 임대사업자는 제외함으로써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

치 상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동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 규제 도입에 따른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정도는 약 △0.3%p('11.6월 말 기준) 내외에 그치는 등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강화)
 - 대출채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거래상대방이 신용등급 BBB 이상 일반법인인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기존 1.0~2.4%의 위험값 적용하였으나, 이를 신용등급에 따라 1.6~8.0%로 상향 조정
 - 유동화증권 및 재유동화증권에 적용되는 금리위험값과 관련하여 해당 증권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따라 기존 0.25~32%의 위험값 적용하였으나, 이를 신용등급에 따라 1.6~18% (또는 영업용순자본 차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일부 유동화거래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 신용위험값과 금리위험값이 은행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 없고 신용등급이 같은 경우 위험값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함으로서 권역간 규제차이를 제거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강화)
 - 변액연금을 제외한 변액보험(보장성)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에 대한 최저적립기준 강화* (별표 24)
 - 최저적립기준을 현행 계약자적립금의 0.1%에서 0.3%로 상향 조정
- * 변액보험은 보험회사의 투자실적에 따라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변동되는 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최저보험금을 보증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증위험에 노출되는 바, 보험회사의 최저보험금 보증위험을 측정하여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음

- ☞ 표준적립금액(보증준비금)이 변액종신보험의 최저보증리스크 수준보다 낮아 표준적립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보증준비금은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적립토록 하는 것으로, 보증대가로 계약자에게서 받는 보증수수료* 수준(0.3%)과 유사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보험회사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최저보험금을 보증함에 따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 받는 수수료

(4)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후순위차입금 조건 명확화(항목 개선)(강화)
 - 조합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후순위차입금의 원리금 지급을 연기하는 등 후순위차입금 인정 요건을 명확화(적기시정조치 요건에 맞추어 규정)
 - 세칙 후순위차입금 인정 요건 제③항 '수지악화시 이자지급 연기가 가능할 것'을 '신협의 순자본 비율이 2% 미만인 경우 이자지급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개정
 - 동 인정 요건 제④항 '손실보전충당조건'을 '신협의 순자본비율이 △3% 미만인 경우 원리금 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개정
- * 신협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 경영개선권고(순자본비율 2%), 경영개선요구(순자본비율 △3%), 경영관리(순자본비율 △15%)
- ☞ 저축은행 및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규정하였고 개정 후순위 차입금 조건을 세칙 개정일 이후 도입되는 후순위 차입금부터 적용(부칙에 규정)토록 한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 * 제3항 이자지급 연기 가능 : 신협, 저축은행, 은행 모두 경영개선권고 요건으로 설정
- * 제4항 원리금지급 연기 가능 : 신협은 경영개선요구 요건으로, 저축은행 및 은행은 경영개선명령 요건으로 설정되어, 신협이 상대적으로 완화
- 수시공시 항목 명확화(강화)

-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조합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기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의 대상, 발생경위, 주요내용,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또는 계획 등을 공시토록 세칙에서 구체화

* 상호금융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시공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범위에 따라 공시토록 하고 있음

- ☞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세부내용을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현재 수시공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일하게 세부내용을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강화)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 사고발생시 사고내용(대응방안·결과) 등을 최초 보고, 중간보고, 종결보고로 구분하여 감독당국에 보고*
- * 현재는 사고발생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사고는 금융사고의 일종이므로 금융사고의 보고*시와 동일하게 사고보고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정보기술부문 사고발생시 사고처리과정의 체계적인 파악을 통해 전자금융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 금융사고의 경우 사고보고를 3단계(즉시보고, 중간보고, 종결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8조)

(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보험사 RBC제도 개정사항 반영(강화)
 - 보험위험액 산출 기준을 상품별에서 담보별로 변경하고, 보험위험액 산출식 등을 개선
 - 최근 투자가 증가하는 구조화 예금 등에 대하여 채권평가기관에서 부여한 듀레이션을 금리민

감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최근 가계대출 잔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계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 대출 및 소매대출의 위험계수를 강화(95%→99%)

☞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의 변경이므로 업체의 입장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업체의 준수노력을 유도하므로 재무건정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 보조인 활용 제한(강화)

- 독립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체 소속 손해사정사)에 대해 보조인 활용 제한하되 손해사정업체의 급격한 비용증가, 손해사정사 수급문제 등을 고려하여 완화(1인당 5인 이내)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 ('12.10월 이후) 10인, ('15.7월 이후) 7인, ('17.7월 이후) 5인

☞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고용손해사정사에게만 보조인(2인) 활용 제한 규정이 있어, 독립손해사정사와 규제 차이가 발생

* 일부 독립손해사정업체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을 과도하게 고용하여, 손해사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인 고용을 제한하고, 손해사정사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금감원 입법취지에는 동감

☞ 규제위 예비심사 후 금감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시행시기를 '13년(10인), '16년(7인), '18년(5인)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4종(상해·질병)손해사정사는 '15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였고 이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대로 개선권고(중요규제)

(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변액보험 등의 공시제도 개선 등(강화)

-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보험안내자료에 사업비 수준, 특별계정 투입금액 등 핵심설명 항목 추가

-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사업비 등) 및 투자위험 등이 설명되고 확인되도록 규정 신설

☞ 변액보험과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조기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관계로 사전에 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공시 자료 추가는 민원발생 소지 사전 예방,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등의 편익이 큰 점에 비추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강화)

-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외부지표금리의 기준 및 지표간의 가중치 결정방법을 규정

☞ 향후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보험금 감소에 따른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 방지를 위해 공시이율 산정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정시기에만 공시이율을 높이 설정하여 계약자를 유인할 수 있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부동산신탁사 유동비율 산정방식 변경(강화)

- 부동산신탁사 유동비율 산정방식을 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에 의한 “원화유동성비율” 산정방식으로 변경

☞ 고유계정의 유동자산과 부채로 유동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부동산신탁사의 유동성 평가목적에 부합하며 유동비율 산정방식을 상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에 따른 의무비율(원화유동성비율) 산정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규제 변경으로 부동산신탁사에 추가적인 부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9)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세칙상 보고의무 등(강화)

- 경영지도비율 미충족 예상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 등 자본계획에 대한 감독원장 승인

☞ 바젤Ⅲ 자본규제의 핵심제도 중 하나인 자본보전완충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회원국으로 합의된 바젤Ⅲ를 준수하여 국내규정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은행들은 자본비율 등에 관한 자료를 최소한 매분기별로 산출하고 있어 규제준수에 어려움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본인정요건 강화(강화)

-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보통주 자본의 규제자본 인정요건 추가,
- 은행인 연결종속회사의 외부주주지분만 보통주로 인정(기타 종속회사의 경우에는 기타기본 자본 등으로 인정)되며, 인정금액 제한
- 조건부자본요건을 충족하며, 금리상향조건(step-up)이 없는 자본증권에 대해서만 기타기본 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인정
- 은행들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시 콜옵션 행사가능기일을 발행 후 10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
- 은행들은 신종자본증권 상환 이후 총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를 상회하는 경우에만 상환 가능
- BIS자본비율 10.5% 이상이면 은행들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가능
- 보완자본 인정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시 사전신고

☞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젤Ⅲ 자본규제수준에 맞추어 국내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은행들은 자본비율 등에 관한 자료를 최소한 매분기별로 산출하고 있어 규제준수에 어려움이 없으며 자본규제수준강화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인정범위 확대 및 공제항목 축소 등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위험가중자산 산출요건 강화(강화)

- 거래상대방 신용도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하여도 추가 산출
- 유동화익스포저 담보를 별도 구분하고 표준차감률을 '기타' 대비 2배 상향 조정
- 재유동화익스포저는 적격 금융자산 담보에서 배제

☞ 바젤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위험가중자산 산출요건을 국내 규제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은행들은 자본비율 등에 관한 자료를 최소한 매분기별로 산출하고 있어 규제준수에 어려움이 없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젤Ⅲ 규제수준에 맞추어 국내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규제수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농협은행 특례 폐지(강화)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보증채권은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으로 간주(위험가중치 20%)하는 조항 삭제
- 회원조합 채권은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 간주(위험가중치 20%)하는 조항 삭제
- 타사업회계에 대한 채권은 50%의 위험가중치 적용하는 조항 삭제
- ☞ 농협은행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특례조항을 폐지한 것으로 국내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입법예고 기간중 농협은행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이견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1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경영지도비율 미충족 예상시 감독원장앞 보고의무 등(강화)

-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지도비율 미충족 예상시 감독원장 앞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보전 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계획, 자본확충계획 등에 대한 감독원장 승인

☞ 바젤Ⅲ 자본규제의 핵심제도 중 하나인 자본보전완충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회원국으로 합의된 바젤Ⅲ를 준수하여 국내규정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Ⅱ 및 바젤Ⅲ 규제 도입(강화)

- 현재 바젤Ⅰ 자본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바젤Ⅱ* 및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

*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 운영리스크를 포함하고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 등의 활용을 허용

** 규제자본 인정 요건 강화

☞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젤Ⅱ와 바젤Ⅲ 자본규제수준에 맞추어 국내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고 국내 은행들에 대한 규제내용을 준용하여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와 일관된 규제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추가(강화)

－ 경영실태평가 ‘잠재적 충격’ 부문의 금융지주회사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항목을 신설

☞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계량평가항목에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가 포함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비계량평가항목의 추가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3절 | 산업·에너지 분야

1. 지식경제부

석진영 | 사무관(044)200-2415, sjinyoung@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4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82건, 강화 31건, 내용심사 3건, 존속기한연장 1건 등 총 11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7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9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하였으며, 10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272회 예비심사 (2012.1.2)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279회 예비심사 (2012.1.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279회 예비심사 (2012.1.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제282회 예비심사 (2012.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제282회 예비심사 (2012.2.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1회 예비심사 (2012.3.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1회 예비심사 (2012.3.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41회 분과위 (2012.3.1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293회 예비심사 (2012.3.2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80회 분위원회 (2012.4.10)	원안의결 2 개선권고 3	강화 4 존속기한연장 1 *중요 4, 비중요 1
1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제정안	제300회 예비심사 (2012.4.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제301회 예비심사 (2012.4.17)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1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제301회 예비심사 (2012.4.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안	제303회 예비심사 (2012.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11회 예비심사 (2012.5.21)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6.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정안	제445회 분과위 (2012.6.15)	원안의결 3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17.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제285회 분위원회 (2012.6.15)	원안의결 9 개선권고 3 철회권고 1	신설 13 *중요 8, 비중요 5
1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323회 예비심사 (2012.7.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324회 예비심사 (2012.7.1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1.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4	신설 4 내용심사 1 *비중요 4
2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90회 분위원회 (2012.9.1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24.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제335회 예비심사 (2012.9.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35회 예비심사 (2012.9.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제335회 예비심사 (2012.10.2)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27.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37회 예비심사 (2012.10.12)	원안의결 9	강화 9 *비중요 9
28.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제338회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339회 예비심사 (2012.10.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대외무역법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32.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41회 예비심사 (2012.1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우편법 개정안	제341회 예비심사 (2012.11.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1회 예비심사 (2012.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정안	제343회 예비심사 (2012.1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295회 본위원회 (2012.11.2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중요 2, 비중요 1
40.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제346회 예비심사 (2012.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1.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제346회 예비심사 (2012.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제346회 예비심사 (2012.12.17)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43.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안	제346회 예비심사 (2012.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4.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제346회 예비심사 (2012.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5.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제347회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06 개선권고 9 철회권고 2	신설 82 강화 31 내용심사 3 존속기한연장 1 * 중요 17, 비중요 100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뿌리산업으로의 인력공급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교육과정, 시설 및 장비,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히 보유하고, 재원마련 및 활용계획이 타당해야 할 것을 규정하면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이후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추진실적과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지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 또한, 우수 숙련기술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생산 업무에서 7년 종사한 자로서 숙련기술의 숙련도, 보호가치성 등이 우수한 자일 것을 규정

☞ 상위법에서 위임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선정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고, 유사사례*를 참고할 경우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숙련기술장려법상의 대한민국 명장제도

- 핵심 뿌리기술 지정요건으로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으로는 총매출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으로서 업력,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연구개발 투자, 경영역량 등을 고려하고,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은 뿌리산업 분야에서 기업 업력이 20년 이상인 기업일 것을 규정

☞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 뿌리기술 지정시 고려사항,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및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고, 유사입법례를 참고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으로서 산업단지나 협동화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에 위치하고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지역 주요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및 뿌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을 규정하고,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추고, 진흥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을 규정

☞ 상위법에서 위임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및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세부적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고, 유사입법례*를 참고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선정받은 경우와 지원 자금의 20% 이상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적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으며, 유사입법례를 고려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상위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쟁 및 중기 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의 신청시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핵심 뿌리기술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 상위법 위임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세부적인 서류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각종 기관 등의 지정업무수행을 위해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기·경쟁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외사항 중에서 시범사업을 삭제
 - ☞ 대기업에 편법적으로 발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시범사업을 참여제한 예외사유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기·경쟁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을 '12~'16년 의무공급(1,200MW)범위 내에서 연도별 조정하여, '12년 200MW → 220MW, '13년 220MW → 230MW로 변경
 - ☞ 최근 태양광 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지원을 위해 태양광 의무공급량 총량의 변화는 없이 연도별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초기의 의무공급량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총 의무공급량의 변화가 없고, 중기·경쟁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4)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의 원자재인 페타이어의 선별시 원자재 검사항목에 재생용 타이어 스틸코

드검사를 추가하고 제조공장 의무보유 검사설비로 스틸코드검사기* 추가

* 스틸코드검사기 : 페타이어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장비

☞ 재생타이어 원자재 검사항목 및 제조업체의 의무보유 검사설비를 강화함으로써 불량원단 재생으로 인한 타이어 파열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험장비 추가에 따른 비용보다 안전사고 방지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5)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재생타이어의 원자재인 페타이어의 선별요건을 강화하여 여객용 타이어 재생연한을 신품 제조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원단 선별 시 내부검사 및 주요 표시사항(재생표시, 재생 횟수, 제조자명 및 제조주차연도) 각인 의무화
 - ☞ 재생타이어의 원단 선별, 검사기준을 개선하여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할것으로 예상되며, 규제강화로 인한 비용보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저장탱크의 재검사주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1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주기(3년) 유지
 - ☞ 저장탱크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용접수리를 한 경우에는 용접 부위에 열응력이 발생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재검사에 불합격하여 용접수리를 한 저장탱크의 재검사주기를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 생활화학가정용품, 접착제, 물티슈에 한하여 제품의 성분 및 배

합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추가제출토록 의무화

- ☞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전기공사업의 등록 없이 전기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축소
 - ☞ 전력량계는 일반인이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 전력량계는 일정 자격자가 시공토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전기기계·기구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는 전기기계·기구(2,400여종) 및 전선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경미한 전기공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토록 개선권고
- 전기공사기술자가 명의 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6개월에서 3년까지 업무정지처분기간을 규정
 - ☞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3년)에서 세부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하도급 미통보, 전기공사 표지 미게시, 실태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의 횟수별 세부기준을 규정
 - ☞ 상위법의 위임범위(300만원 이하) 내에서 위반횟수별 차등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시·군·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대규모 점포*중에서 대형마트로 규정
 - * 대규모점포의 종류(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 ☞ 국회에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규제 대상을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로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동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에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을 규정
 - ☞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대형마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3,000만원 이하) 내에서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존속기한연장 1)

■ 심사내용

- 용제소비자 중 구매·사용 상황에 관한 보고대상의 범위를 전년도 용제구매실적이 연간 100km 이상 또는 전월 용제구매실적이 10km 이상의 용제구매자로 설정하여 매월 보고토록 하고, 용제사업자는 월에서 주간단위 보고로 강화
 - * 용제 : 솔벤트, 시너 등으로 불리며 페인트 희석제 등으로 사용
 - ☞ 용제에 대한 정기적인 소비상황 파악이 필요하고, 동 조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석유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 중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의 금지대상 시설 및 행위에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저장소 및 취급소에 석유제품 등을 공급·저장·취급하는 탱크를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허가된 저장시설의 탱크 내부에 별도의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저장탱크 및 배관 등의 시설을 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1회 적발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 ☞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가짜석유를 취급할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와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불법 시설설치·개조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강화 필요성에는 동의. 다만 각 금지행위에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를 명시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주유소의 일정사항*에 대한 별도의 등록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일몰 연장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의 이격거리,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시설물과 주유소간 거리기준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와 주유소간 거리기준
3.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법령에 근거한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위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는 등록요건 4가지가 설정된 것이 불과 1년 2개월전('10.12.9)으로 동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재검토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데 동의. 다만, 제도운영상 실익이 없는 그 밖의 사항 1호 및 4호는 삭제토록 개선권고

- 주유소, 용제판매소 등의 수급상황 미보고, 거짓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전후 대비표]

위반행위	개정 전			개정 후		
	1회	2회	3회 이상	1회	2회	3회 이상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 판매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신고대상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주유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바. 주유 석유소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석유제품 소비자		〈 신설 〉		300만원	450만원	600만원

☞ 미보고·허위보고자 모두가 가짜석유 관련자로 전제하는 것은 통계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추정이며, 가짜 석유 관련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과징금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개정안은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합리적 근거 부족,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수준을 하향조정토록 개선권고

-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여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장에 위반행위와 행정처분내용을 게시할 경우, 진입로에 위반내용과 처분내용을 담은 500cm×90cm 이상의 게시문을 설치하도록 규정

☞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게시문의 내용, 크기 및 설치장소를 규정한 것으로, 위반한 사업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경쟁 및 중기영향 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에스컬레이터 주브레이크의 고장 등 역주행 발생시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역주행방지 장치가 작동하여 안전하게 정지시켜야 하며, 정지 감속도는 0.1~1㎥ 이내, 작동시 구성부품의 안전율 3.5 이상 확보, 전부하 하중 시험 등 역주행방지장치의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규정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는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은 품목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제정안의 안전기준은 유럽제품기준(EN115)과 중국제품기준(GB7588)의 수준으로 설정된 국제기준으로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고시 개정안(강화 2, 신설 4)

■ 심사내용

- 세정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에 대해 적용 중인 첨가물 성분표시를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표백제에도 확대 적용하고,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명시 의무화 및 독성주의 표시를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도 확대 적용. 또한 락스류 제품의 경우 내용물을 따를 때 액체가 눈에 튀지 않도록 용기 토출부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

☞ 생활화학가정용품에는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반면, 표시사항변경에 따른 비용은 크지 않으며(모델별 100만원 내외, 문구수정시 20만원 내외)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해성 제거 성분에 알려지를 유발할 수 있는 방부제 성분을* 추가하고, 물티슈의 액체부분에 대한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

* 벤즈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페녹시에탄올 등 9종

☞ 물티슈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므로 알려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표시하는 것은 필요.

또한 액체성분표시는 「화장법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유패드의 유해물질(포름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등) 안전요건 규정

* 수유패드 : 모유 수유기간 동안 모유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모가 착용하는 패드로 직물이나 부직포로 된 제품

☞ 수유패드에서 포름알데하이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경우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유사제품(일회용 기저귀)의 안전요건을 근거하여 안전기준이 설정되었고,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온열팩 최고온도(70℃ 이하)를 설정하고, 접촉 가능부위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 규정

☞ 기존 핫팩(완구용품) 온도가 90℃ 이상으로 상승하여 화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온열팩의 안전기준은 KS, JIS에 준하는 기준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실내용 바닥재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3종(DEHP, DBP, BBP)의 함유량을 제한하고, 표면코팅층 두께를 온돌용 15μm 이상으로 규정

☞ 발암물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미국, 일본)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을 제한하고 있고,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승강기 부품 중에서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스위치, 립처밸브, 스텝, 스텝체인,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관에 대한 내구성 시험 등 안전요건 및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규정 마련

☞ 불량부품으로 인한 승강기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주요 승강기 부품의 안전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럽, 북미, 중국은 이미 8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속눈썹 열성형기 제품의 이상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온도조절기 또는 온도와승방

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최고온도 표시, 피부나 안구 화상 주의, 콘택트렌즈 착용자에 대한 주의 안내 등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 속눈썹 열성형기로 인한 사고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유사품목*의 안전요건에 근거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모발관리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중

● 창문 블라인드의 U자형 줄이 일정 하중(98 N 이상)에서 분리, 줄의 탈락, 연결부품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U자형 줄 사이로 아이가 머리를 끼울 수 없는 구조이거나, 하나 또는 2개의 줄로 분리된 구조일 것을 규정. 또한 유아·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

☞ 창문 블라인드 줄에 의해 목 졸림 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기준과 경고문구 표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과도하지 않고, (업체당 비용 : 8만원)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1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20억 미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유시장 침해는 크지 않으며,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중견기업 수주현황 : 5% 미만 ('10~'11.6, 조달청 나라장터)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정기검사(제품시험+공장검사) 처리기간을 신규 안전인증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45일로 규정

- ☞ 정기검사는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가 계속해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증기관의 정기검사 처리지연 사례를 방지하여 제조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현행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대상범위에 일정 소비전력 이하의 가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소비전력과 상관없이 모든 가전제품으로 확대**
 - ☞ 동일한 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대상범위를 일정 소비전력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소비전력이 큰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던 전화기·팩시밀리 등 위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송통신기자재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이관·지정
 - * 전화기,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단말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노트북컴퓨터
 - ☞ 부처별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지경부는 전기안전규제를 방통위는 전자파규제를 각각 담당하기로 합의('11.8.23, 국무총리실 주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던 휴대전화, 생활무전기 등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방송통신기자재 8종***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이관, 지정
 - *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A/D 및 D/A신호변환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휴대형 통신기기
 - ☞ 부처별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지경부는 전기안전규제를 방통위는 전자파규제를 각각 담당하기로 합의('11.8.23, 국무총리실 주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지능형전력망 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보안 관리를 수행할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관

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하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및 암호화 등 시행

- ☞ 정보통신기능이 부가된 지능형전력망은 해킹을 통한 전력망 파괴와 전기요금 상승이 오가는 계좌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타 법률 및 지침*에서도 시스템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7호), 정보보호관리지침(방송통신위원회 훈령 77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등

● 지능형전력망 정보에 대한 물리적 보호조치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운영실과 정보통신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운영실과 정보통신실의 출입구와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등의 규정 마련

- ☞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비인가자의 출입, 무단침입 등으로 인해 광역정전 등 장애 발생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유발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동 개정사항은 전력망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능형전력망 정보에 대한 관리적 보호조치

-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등의 규제를 신설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등의 지능형전력망 정보에 대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위한 규정 마련

- ☞ 동 개정안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조치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도 부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17)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신설 13)

■ 심사내용

- **일반상품시장(거래소 시장)에서 일반상품매매업 또는 일반상품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일반상품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일반상품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반상품업의 영위를 금지(장외거래는 현행 유지)하는 한편, 지정받은 일반상품업자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의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일반상품업자 중 실물사업자에게는 지정 사업자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

☞ 일반적으로 '지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형태(예 : 수질보전구역 지정)와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형태(예 : 우수업체 지정)가 있는데, 일반상품시장은 자율참여 시장이므로 이 법의 '지정'은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는 후자의 형태로 추정되므로, 혼선의 여지가 없도록 이 내용을 법률조문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일반상품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함을 명시하도록 개선권고함과 동시에 일반상품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정 기준'이 시행령에 백지위임되어 법률만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지정기준의 핵심요소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 일반상품시장에서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상품업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행위 규칙 준수 의무를 신설

- 일반상품업자가 자기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일반상품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

- 일반상품업자의 자기매매와 위탁매매간,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간 이행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매매정보 등의 제공,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 및 임직원의 겸직 근무 등을 금지함으로써 정보교류를 차단

☞ 거래자 보호, 일반상품시장의 신뢰 확보 및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일반상품업자 영업행위 규제 및 불건전영업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타 법률에도 거래자 보호 및 불건전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유사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거래투자권유시 일반상품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준칙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일반상품업의 영위와 관련 약관의 제정·변경시 사전신고 의무

- 매매거래 체결시 일반상품중개업자의 매매명세 통지 의무와 일반상품업자의 일반상품업 영위 관련 자료의 기록·유지 및 자료의 멸실, 위·변조에 대한 대책 마련

- 일반상품중개업자는 거래투자자로부터 예약받은 거래투자예약금을 외부의 예치기관에 고유

재산과 분리·예치

☞ 거래투자권유준칙 규정 및 공시, 약관 신고 및 공시, 매매명세 통지, 자료의 기록 유지 등은 사후 분쟁발생 예방 및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며, 투자자예약금의 별도예치와 일반상품의 예약결제기관 예약은 일반상품업자가 부실화되더라도 거래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도 유사 규정이 있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정 시장의 신뢰성 확보와 공신력 훼손 방지 및 거래투자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법정 거래소의 명칭으로 혼동될 수 있는 '일반명사' 또는 '지리적표시' 등을 이용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

- 다만, 일반상품거래법 시행 이전 사용되던 명칭 또는 상호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조치를 통하여 명칭사용을 허용하되, "사설"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토록 하고 일반상품시장의 질서를 유지코자 함

☞ 법정 시장의 신뢰 확보, 거래투자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서는 법정 거래소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유사명칭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사설"이라는 문구를 병기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점 여타 법률*에도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입법례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회원의 자격은 일반상품업자 중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함

- 거래소 회원이 상장일반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시장을 이용하여야 함

- 결제이행책임을 부담하는 회원은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 거래소의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거래소는 회원으로부터 거래증거금을 각각 예약받을 수 있으며, 거래소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이 거래소에 예약한 거래증거금 등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검증된 자격과 자격부여에 따른 일정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이 거래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회원이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래에 거래소 이용의무를 부과하는 것 역시 거래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필요한 회원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 상장일반상품의 신뢰 확보 및 공정거래의 실현을 위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인증기관은 품질인증한 상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은 인증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 예탁결제기관에 예탁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만 예탁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수거요구 등 일정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함
 - ☞ 표준화, 규격화된 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반상품은 일반상품시장의 신뢰 확보 및 유통 원활화를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이 인증한 상품이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일반상품시장에서는 다수 시장참여자의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므로 민법상 일반상품의 현실인도방식을 따를 경우 신속한 결제처리가 곤란하여 계좌간 대체 기재방식 사용
 - 예탁자가 거래투자자계좌부를관리하므로 거래투자자소유예탁일반상품의유용가능성차단을 위하여 예탁자의 파산·영업의 정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탁자의 반환 및 계좌대체를 금지
 - 증권과 달리 실물이 제품 생산 또는 최종 소비에 사용되는 일반상품은 관련산업 및 장외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실물 이동과정에서 세금탈루 등 목적의 인출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한 경우 실물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 실물사업자 보호를 위해 거래투자자에 대해서만 실물반환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규제로 거래투자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탁결제기관으로 하여금 반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실물사업자 보호 규정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 예탁대상일반상품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새로 예탁대상 일반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그 일반상품의 종류 등 일정사항을 예탁결제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 ☞ 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상품만 예탁결제기관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어 생산이나 수입단계부터 예탁대상 일반상품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예탁대상일반상품의 생산·수입 업체가 소수*이고, 현재도 금의 경우 제조반출내역 및 수입신고내역 제출의무**가 있어 규제에 따른 생산·수입업체의 부담은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금의 경우 고순도 생산업자는 6개사(제련업자 2, 정련업자 4), 지금형태의 수입업자는 2개사에 불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시세조종행위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부정행위 및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는 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금지
 - 상장일반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얻은 자나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상장 일반상품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해당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함
 - ☞ 불공정행위를 금지하여 일반상품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꾀하고 거래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며, 규제로 인한 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일반상품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일반상품시장에서 매점매석, 부당가격형성 기타 필요한 경우에 지경부장관이 해당 일반상품업자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거래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수량 이상의 일반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지경부장관 및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 ☞ 일반상품의 성격상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거래가 빈발한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특정 투자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일반상품을 보유할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영업규모가 크고 매매수요가 많은 실물사업자 등 대량거래자를 중심으로 상장일반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상품시장에 참여하도록 규정
 - ☞ 규모가 일정이상이라는 이유로 일반상품업자 또는 거래소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일반상품 거래소(장내시장)를 이용하게 강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철회권고
- 거래소와 예탁결제기관으로 하여금 매매내역과 예탁보관 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일반상품업자에게는 장외 매매내역을 보고토록 하여 일반상품의 거래정보를 관리
 - ☞ 일반상품시장에서 거래한 내역이 아닌 매매내역까지 모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일반상품업자의 일반상품시장 밖에서의 영업 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일반상품시장 밖에서 행한 매매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일반상품업자 중 일부로 한정
- 일반상품 거래와 관련 위반행위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법에서 정한 의무 또는 금지사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일반상품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1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요건으로 총매출액 중 로봇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연간 총매출액이 5억 이상, 로봇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지정신청 시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로봇매출액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 연간 총매출액 5억원 기준은 로봇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설정한 것으로, 업계에서 충족하기에 부담 없는 수준이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 '11년 로봇산업실태조사(385개) 중 총매출액 5억 이상 기업은 292개(75.8%)로 나타남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1항 :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 1항 : 부품 ·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4)

■ 심사 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를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
 - ☞ 상위법 근거가 명확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 및 경쟁 · 중기영향 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특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일정기간을 2년으로 규정
 - ☞ 2년 동안 특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류되고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 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위임된 재투자자의 범위를 개발이익의 25~50%로 규정

- ☞ 특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개발이익의 적정한 배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사업시행자는 시 · 도지사와의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4항」 :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 및 경쟁 ·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함에 따른 인체 및 환경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기준 등 신설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

- ☞ 유전자변형미생물체의 개발 이후 사업자들의 사업화 추진에 따른 생산시설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허가, 신고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18대 국회 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종전 법안(폐기법안) 규제심사('11.9.27)시에도 비중요규제로 분류

- 허가받은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유전자변형생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이용 승인을 받도록 규정

- ☞ 연구 및 생산공정 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중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위해성 등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18대 국회 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종전 법안(폐기법안) 규제심사(‘11.9.27)시에도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수입 신고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

☞ 국제협약에서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해 수입하기 전 위해성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이 검증되지 아니한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해 통관하기 전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고, 18대 국회 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종전 법안(폐기법안) 규제심사(‘11.9.27)시에도 비중요규제로 분류

- 허가받거나 신고한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

☞ 허가 승인 후라도 설비노후, 장비불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18대 국회 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종전 법안(폐기법안) 규제심사(‘11.9.27)시에도 비중요규제로 분류

(21)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신설 3,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기업이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및 비용절감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18대 국회 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종전 법안(폐기법안) 규제심사(‘11.9.27)시에도 비중요규제로 분류

-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안전점검 부실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기록부 작성 및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18대 국회 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종전 법안(폐기법안) 규제심사(‘11.9.27)시에도 비중요규제로 분류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

☞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규정은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기준으로 판단되며, 18대 국회 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종전 법안(폐기법안) 규제심사(‘11.9.27)시에도 비중요규제로 분류

-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안전점검기록을 작성·보존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기준(500만원 이하) 마련

☞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스안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18대 국회 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종전 법안(폐기법안) 규제심사(‘11.9.27)시에도 비중요규제로 분류

(2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7)

■ 심사내용

- 우수전자거래사업자임을 표시하는 인증표시 기준 마련

☞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인증마크를 사용하므로, 사업자 홈페이지 변경비용 등 신규 비용발생이 미미하고,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의 결격 사유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지정취소된 법인에서 지정 신청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지정취소된 법인에서 그 업무정지기간 중의 임원이었던 자 등으로 규정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는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고, 개정안은 현행규정보다 완화*된 것으로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현행(임원인 전체) → 개선(책임 있는 자)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독립성 기준 중 인적기준으로 ‘이용자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하고, 물적기준으로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

☞ 임원은 법인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독립성 취지에 맞추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사회 의결을 좌우할 수 없는 1/4 이하에 한해 겸임 허용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력 기준으로 전문인력 5인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재정능력의 경우 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은 자본금 또는 국유재산 20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 이상일 것 등을 규정

☞ 현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준비하고 있어 향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본금 20억은 시설 및 장비구입(10억), 운영비(인건비 포함) 10억으로 최소기준임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규정

* 구비서류: ①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②정관, ③인력·시설 및 장비·재정능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 ④사업계획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요건을 확인받기 위한 필요 제출서류로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절차)

－ 공인전자문서센터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임원 및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②정관, ③인력·시설 및 장비·재정능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 ④사업계획서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②정관, ③인력·시설 및 장비·재정능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 ④사업계획서

-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허위표시 등 의도적 법률 위반 행위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장비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등 단순 의무 불이행은 위반 횟수에 따라 300~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1차/2차/3차 위반횟수별 과태료는 1/1.5/2를 유지하도록 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합리화 방안”(09.8.28, 법제처) 방침을 준수하였고,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시설·장비 변경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과다한 자료 요구를 방지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면서 사전심사제의 신청요건, 가점요인, 서전심사 적합통보 후 허가 처리절차 등을 규정

☞ 민원법에 근거한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제를 경자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유치 업종 변경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외국인 투자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계획 중 유치업종 계획은 본질적인 부분이며, 타 부분계획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므로 그 변경에 관하여는 경자유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4)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통한 토지 등의 공급시 최저외국인투자지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

☞ 외형만 외국인투자인 기업이 부동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를 취득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외국인투자지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심의를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도 함께 마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수의계약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경부 장관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일

정 사유* 발생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국내복귀계획서 내용 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 U턴 기업으로의 등록은 국내복귀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선택에 의한 등록 의무이며, 일부 지원내용*의 경우 복귀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등록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복귀 후 폐업 또는 장기간(2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말소를 통한 지원 중단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산업단지 우선입주권, 해외 생산시설 국내 도입시 관세혜택 등

- 등록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국내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등록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제도의 부정수급 기업을 가려낼 필요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수준은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신설 2)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전기용품에 직류형 전기제품을 추가

☞ 최근 직류형 전기제품*들이 다량 출시됨에 따라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품 관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전기모기채의 경우 철망에 4,000V 이상의 고압이 인가되어 접촉시 심장마비 등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조업자에 OEM 제품생산업자를 추가

☞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OEM제조자(하청을 주는 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비자, 하청업체, OEM

제조자 모두 규제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소비자) 인증대상 제품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 안전문제의 변화는 없음 / (하청업체) OEM제조자가 직접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업무 수행에 따르는 부담 완화 / (OEM제조자) 자신들을 인증업체로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제품신뢰도 제고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근거 마련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추가지정으로 자율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체의 선택권 및 접근성 향상이 예상되고,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유사입법례(전파법)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 중고 수입전자제품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5년간 매 수입시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었으나, 매 수입시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강화

☞ 중고품의 경우 제품마다 품질상태가 균일하지 않아 매 수입시마다 안전검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중고수입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도 도입('09년) 이후 전무*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해서는 제품회로도, 부품명세서 등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나 중고품의 경우 자료 확보가 불가능

(27)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9)

■ 심사내용

- 정량표시대상 상품의 종류에 면적, 개수단위를 추가하고, 정량표시 개선처분을 받은자에게 개선결과를 보고토록 의무 부과 등

☞ 방수포, 벽지(이상 면적), 커피믹스, 일회용품(이상 개수) 등의 상품에 대한 정량부족 소비자 피해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정량표시 위반자에게 개선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개선결과 보고 의무가 없어 발생하는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결과 보고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신고대상업에 수입업자와 자체수리자를 추가하고, 등록업자 등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등) 및 등록업자의 관련서류의 기록보관의무 등 신설

☞ 계량기는 상거래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기로 계량기 제조업자 등(수입업자 포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요건으로 형식승인업무규정을 갱출 것을 추가하고, 형식승인기관의 변경 사항 신고 대상에 사업범위의 변경을 추가
 - － 형식승인기관의 금지행위(형식승인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금지 등) 및 관련서류의 기록관리 의무 신설 등
- ☞ 국가위탁업무(형식승인제도)*를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일반적 준수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형식승인제도 : 계량기의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제조자가 시장진입 전에 계량기의 설계 등에 관해 승인을 받도록 의무 부과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간 재지정을 제한하고, 검정기관의 금지행위(검정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금품 수수금지 등) 등을 신설
 - ☞ 현행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기본적 관리수단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를 신설하면서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요건 · 지정 취소 기준 등을 규정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 계량기 정기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관리감독상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설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계량기 소유자가 직접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심사안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기준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시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형식승인기관 · 검정기관 · 자체검정사업자 등에게 반기별 관련업무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계량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수리업자 등에게 계량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 국가업무위탁기관(형식승인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일정주기(반기별)로 관련 업무에 관해 보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령위반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의무규정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기를 불법 변조하는 등의 법령위반 업소에 대한 명단을 공개 할 필요가 있으며,

과태료는 신설 · 강화되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정임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리 후 검정을 받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계량기의 제조업자 등은 제품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의무 부과
 - ☞ 현행 계량기 수리 후 검정 및 정기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의 사용제한은 재확인 규정에 불과하며, 계량기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결함 발생시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토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형식승인기관 · 자체검정사업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 ☞ 계량법상 규정된 각종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수익자부담원칙상 수수료 납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8)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열연강판/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형강 추가
 - ☞ 국내 원자재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국내 제조업체 및 최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제 재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번 추가되는 철강류의 경우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이익금의 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
 - ☞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비율을 상향조정(이익금의 20%→이익금의 25%)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폐특법 적용시한의 연장('15년→'25년) 및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고려시 추가되는 규제비용*은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 예상 감소액은 153억원이며, 그에 따른 배당금 예상 감소액은 72억원

(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에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실적을 추가
 - ☞ 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실적 등 관련 보고의무 근거 마련 필요하며, 그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지원해오던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또한 피규제자*의견 조희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GS칼텍스

(31) 대외무역법 개정안(신설 3, 강화 2)

■ 심사내용

-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경유·환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규정
 - 또한, 경유·환적·중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경유·환적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유·환적·중개허가를 받은 자에게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통제원칙 및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개정 사항이며,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교육명령을 통해 전략물자 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국내 수출기업들의 불의의 피해 예방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무역거래자 등의 금지행위에 원산지표시규정에 위반되는 물품을 거래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원산지표시제 위반 업체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거래 질서 유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상습·고의적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한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 등 원산지표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32)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으로 기술수준, 경영역량, 품질관리수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 ☞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의 지정은 시설자금 융자 등 정부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개별 기업의 선택에 따른 사항이며, 고시 전반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있어, 제도 도입 초기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3) 우편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서신송달업의 국가독점영역에 대한 사업독점권 침해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독점권 침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 서신송달업은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부분 국가독점사업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독점사업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독점영역 침해여부에 대한 조사권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 * (미국) 우편법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수색, 압류, 처분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미국 연방 법전 제39편 우편업무)
(일본) 민간사업자의 서신송달에 관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입회검사, 사업에 대한 보고의무 등 부과(민간 사업자에 의한 신서 송달에 관한 법률)
- 민간 서신송달업자의 법 위반시 사업개선명령,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권대여의 금지 및 휴·폐업신고 의무를 부과
 - ☞ 국가독점영역 침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및 우편서비스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정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3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산업단지 조성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력에서 설치해야 하는 전기

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현행유지)

- ☞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등의 비용을 한전이 부담토록 한 것은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절감하여 입주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한전에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함(범위의 확대)과 동시에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범위의 축소)할 필요가 있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5)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준수해야 할 업무준칙으로 기록관리업무, 이용자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규정
 - ☞ 전자문서 중계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시스템 복구 매뉴얼 등)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정으로 판단되며, 유사 규정인 공인전자문서센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전자문서 보관등 표준업무준칙」(지경부고시 제2012-67호)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3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전문학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기술자격 등급별(기사와 산업기사) 및 학력별(학사와 석사)로 요구하는 경력기간이 동일한 현행 기준을 개정하여 경력요구기간 차등화
 - ☞ 예비심사를 상정하기 전 경쟁영향평가 진행과정에서 학력기준(석사, 학사)과 기술자격기준(기사, 산업기사)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의견을 지경부에서 모두 수용하여 현행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마련하였기에 비중요규제로 분류

(37)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상위법 위임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 인력, 시설 기준 등을 규정

- ☞ 유사제도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비교시 유사(인력기준)하거나 완화된 수준(시설기준)이며, 동 고시 전반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6조)하고 있어, 제도 도입 초기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 중 인력기술능력/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지경부고시 제2012-67호)

**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2-39호)

(38)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12~'13년 동절기에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시설(6,000여개)은 전기사용량을 최대 10%까지 의무 감축하고,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 공공기관(1만 9,000개)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는 등 에너지사용을 제한
 - ☞ 겨울철 한파로 급격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한 국가적 전력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필요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 (참고)연도별 동계 예비력(만kW, 수요관리 전) : ('08년) 610 → ('09년) 429 → ('10년) 251 → ('11년) 226 → (금년 예상) 127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태양광에너지 최종 목표총량(1,577GWh)을 달성하기 위한 ① 연도별 공급계획을 1년 단축('16년→'15년)하고, ②차기연도로 이행연기 가능한 비율을 축소(30%→20%)
 - * 6개 한전 발전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K-water, 포스코에너지, SK-E&S, GS EPS, GS파워, MPC 울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 ☞ 태양광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단기적 신규수요창출이라는 정책목표는 연도별 의무공급량 변경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올해가 RPS 시행의 첫해인 점,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예기치 못한 시장

변화에 대비한 RPS 제도의 유연성 확보차원에서 차기연도 이행연기가 가능한 비율은 현행 30%을 유지하도록 개선권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산정시 일부 신재생에너지(예 : 부생가스, IGCC)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에서 차등 인정하여, 의무공급량이 추가되도록 변경
 - ☞ 기준발전량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량 증가시 의무공급량도 함께 늘어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방법을 제한하는 중요한 규제로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철회권고
- 태양, 풍력, 지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기준을 신설하고, 전문기업 기술인력 자격기준 중 신재생설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술 분야는 제외
 - ☞ 예비심사를 상정하기 전 중기영향평가*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수정의견을 지경부에서 모두 수용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참고 : 규제심사(중기영향평가) 진행 경과 】

- (‘12.9.10) 중기영향평가 요청(총리실→중기청)
- (‘12.9.13) 중소기업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중기청)
- (‘12.9.21)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지경부/중기청)
 - * 중소기업(퓨어셀파워 등), 신재생협회,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청 등 14명
- (‘12.9.25) 지경부/ 간담회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 마련 → 중소기업청 의견 없음

[수정 내용]

간담회 의견		비고
에너지원	내용(기술자격확대)	
모든 에너지원	품질관리기사 추가	반영
연료전지	재료 · 화학 분야 추가	반영
석탄액화가스화,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화학 분야 추가	반영

(40)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비비탄총 날개의 표면에 제품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대상연령 이하는 사용할 수 없음”을 표기 하고,
 - * (참고) 어린이용 : 만 8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용 :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
- 단위 포장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보안경 의무 착용 관련 문구는 여타 문구보다 최소 50% 이상 더 크게 표기
 - ☞ 비비탄총으로 인한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 강화되는 안전기준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용연령제한 및 보안경 의무착용 문구의 표기방법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규제비용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 ‘10년 총 87건의 위해사례 중 51건(58.6%)이 7세 이하에서 발생하였으며, 탄환이 눈에 맞는 사고는 25건(28.7%)으로 단순 이물질 제거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국소비자원)

(41)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유아용 의자) 추락 위험요소 관리를 위한 성능시험방법 강화 및 신규 응용제품(부스터, 테이블 부착식 의자)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적용 대상연령 확대(48개월 미만→ 14세 미만) 및 일부품목(노리개젓꼭지 등)의 안전요건 강화
 - (실내용 바닥재)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실내용 바닥재에 목질 바닥재를 추가하고 안전기준 신설
 - ☞ 시중 판매 중인 유아용 의자 및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조사결과*, 현행 안전기준에 적용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건축 마감재로 주로 사용되는 목질(마루)바닥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관리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 국내 유통 중인 유아보호용품 22종에 대한 안전성 조사 (‘11.11월 기술표준원)

(4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가짜석유제품 취급으로 인한 처분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가짜석유제품 제조목적의 원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행위로 추가
 - ☞ 명의변경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편법행위가 다수 발생하여 가짜석유취급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효과의 승계기간을 연장(1년→3년)할 필요가 있으며, 가짜석유제품 제조목적의 원료공급행위는 이미 금지행위로 규정(법 제29조)되어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석유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금지행위에 면세유(농어업용, 외국항행 용도 등)의 부정유통 행위 추가
 - ☞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인한 조세탈루 방지 및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유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가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단순히 이관해 오는 개정사항이며,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 (1,000만원)에서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43)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이 법령상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실태조사)주기를 단축(2년→1년)
 - *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성능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성능검사기관 지정 현황 : 에너지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등 11개 기관
 - ☞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미흡점이 다수 발견되어 시장형성단계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분야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후관리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령상 지정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의 신인도 제고 등의 편익을 함께 고려시 피규제자

(11개 성능검사기관)의 부담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12년 상반기 성능검사기관 실태조사('12.3.26~4.6/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발전효율 등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

(44)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가죽제품에 연령별·신체접촉별로 유해물질 허용치를 세분화하고, 안전관리 유해물질 추가 (유기주석화합물, 아릴아민)하고, 침대 매트리스에 제품정보 표시사항에 재생 내장재(스프링, 펠트, 라텍스 등) 사용여부 추가하는 등 품질표시기준 강화
 - ☞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가죽제품의 연령별·신체접촉별로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세분화하고,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추가관리 할 필요가 있으며, 침대 매트리스 재생 내장재는 유해한 물질을 방출할 수 있으며, 신품으로의 오인구매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5)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김치냉장고 등 8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하고, 김치냉장고 등 3개 품목의 효율관리 대상 용량을 확대
 -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의 에너지절약형 제품개발 촉진을 위한 효율기준의 상향 조정 시기가 도래하였고, 각 품목별로 전문가회의 및 피규제자(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협의가 완료된 사안임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 김치냉장고 등 6개 품목 : 위니아만도, 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밀레코리아 등 국내외 제조업체 및 에너지관리공단('12.5.23_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텔레비전수상기 등 2개 품목 :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귀뚜라미 등 국내외 제조업체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8.22_에너지관리공단)
 - *** 가정용가스보일러 :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대우가스보일러, 린나이코리아 등 국내외 제조업체 및 에너지관리공단('11.3.3, '11.5.25, '12.6.8_한국가스안전공사)

2. 중소기업청

김동욱 | 사무관(044)200-2407, tangouniform@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1건 등 총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07회 예비심사 (2012.5.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 해당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신설)

☞ 국가 자격시험은 엄정·공정한 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시험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제재수준이 유사한 타 자격시험의 응시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의 강화(강화)
 - ①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해당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제조업소'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공장등록으로 같음
 -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에 '제조업소'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공장등록으로 같음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 ② 생산·검사설비 설치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신하되 필요시 시설의 작동여부를 확인
 - ☞ 설치 이후 시간 경과로 자가시설 및 작동 여부를 증빙서류나 현장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시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③ 자격증 보유인력이 필요한 제품은 국내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
 - ☞ 국내 자격을 인정하는 다른 국가가 없는 점을 감안,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 발급 자격증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적정
 - ④ 납품실적 확인시 전기 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기타 인증사항 등을 확인
 - ☞ 납품실적만으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력, 원부자재 등은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요소로 그 사용량 및 구입내역 확인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 필요

3. 특허청

민희선 | 사무관(044)200-2423, heesun@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2년도에는 발명진흥법, 변리사법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된 총 1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7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하고, 15건은 원안의결하였음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07회 예비심사 (2012.5.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334회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 변리사법 개정안	454회 경제분과위 (2012.11.26)	원안의결 11 철회권고 2	신설 13 *중요 2, 비중요 11
계	-	원안의결 15 철회권고 2	신설 17 *중요 2, 비중요 15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정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반 기간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신설)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 타 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에서 정한 상한액의 1/2 수준에서 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규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신설)
 - 영업비밀 침해 소송시 보유사실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원본증명기관의 결격사유 및 의무위반 발생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지정취소시 업무를 타 증명기관에 인계하도록 명시하여 원본증명제도의 업무신뢰성 및 공공성 확보
 - * 원본증명 등록현황 : 129개 기업 1만 2,282건('12. 8. 한국특허정보원 운영)
 - 등록료 1만원/건·년, 유지료 3,000원/건·년
-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실체자료가 아닌 전자지문으로 등록하는 등 원본등록제도는 비밀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원본증명기관에 부과된 의무는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 및 관련정보의 멸실 및 훼손 방지 규정 마련(신설)
 - ☞ 영업비밀 보유사실 입증을 위해 등록된 전자지문 및 관련정보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전자거래 기본법 등 유사입법례도 존재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원본증명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정취소시 원본자료의 인계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신설)
 - ☞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본자료 인계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는 적절하며, 전자서명법, 전자거래 기본법 등 유사입법례도 존재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변리사법 개정안(신설 13)

■ 심사내용

- 특허법인에 대한 징계(신설)

– 특허법인이 변리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인설립인가 취소 외의 제재가 없어 사안의 경중에 따른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특허법인에 변리사 징계 기준을 준용함

☞ 특허법인에 대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변호사법 등 유사입법례를 감안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변리사·특허법인의 광고제한(신설)

– 변리사 업무에 대하여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공정한 수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 심의를 위해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 설치

☞ 민사·형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과대 광고 우려가 많으나 특허출원 등 대리업무를 주로 하는 변리사는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지 않고, 변리사회에서 변리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실질적 가격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중요규제로 철회권고

● 변리사의 변리사회 회칙 준수(신설)

– 변리서비스업의 과대 광고 등 부정한 경쟁으로 시장 거래질서 혼탁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변리업계 스스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내부규율을 정하고 변리사가 변리사회칙을 준수하도록 규정

☞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이 강제되고, 회칙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되는 점, 변리사회 회칙은 규제심사 과정없이 규제내용이 확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변리사에 대한 부당한 권리 제한 및 과도한 의무 부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철회권고

●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신설)

–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정직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리사로서도 같은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유사명칭 사용금지 강화(신설)

– 변리사법에서 인가받은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외에는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변호사법에 유사입법례도 존재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인(유한)의 설립 요건 및 절차(신설)

– 특허법인 설립 규정 조항과 별도로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유한회사*의 설립상 필요한 출자금액 및 이사 관련 조항** 을 추가

* 유한회사 : 50명 이하의 사원으로 조직되고 1,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 각 사원이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 이사의 성명과 출자 1좌의 금액,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및 자본금 총액을 정관에 명시

☞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동법 및 변호사법에 유사입법례가 존재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인(유한)의 구성원·이사·소속변리사 규정(신설)

–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요건을 기존 특허법인의 조항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유한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사 3명 이상을 두도록 함

☞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동법 및 변호사법에 유사입법례도 존재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인(유한)의 분사무소 설치, 구성원의 다른 법인 소속 금지(신설)

–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요건을 기존 특허법인의 조항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유한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사무소에 이사가 상근하도록 규정

☞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변리사법에 유사입법례가 존재하므로 원안의결

● 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신설)

– 법인(유한)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담당변리사를 지정하고 이사를 포함시켜야 하며, 법인(유한)의 업무문서에는 법인(유한)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리사가 기명날인

☞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요건을 기존 특허법인의 조항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유한회사의 성격을 반영

하여 구성원 → 이사로 수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인(유한)의 자본금, 손해배상준비금 및 출자제한(신설)
 - 특허법인에 비해 특허법인(유한)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므로 출원인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를 금지하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부과
 - ☞ 특허법인(유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자본금 규정은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출자 금지, 손해배상준비금 등은 변호사법에도 유사입법례가 존재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인설립 관련 자본금 규정

구분	특허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 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취소(신설)
 - 특허법인(유한)의 취소 요건을 기존 특허법인의 조항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이사 관련규정 등 유한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위반 사항 추가
 - ☞ 동법 및 변호사법 등에 유사입법례가 존재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인(유한)의 해산신고(신설)
 -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요건을 기존 특허법인의 조항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유한회사의 성격을 반영하여 ‘구성원 전원의 동의’ → ‘구성원 총회의 결의’로 수정
 - ☞ 유한회사의 성격을 반영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인(유한)의 변리사법상 의무규정 준용(신설)
 - 기존 합명회사 형태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유한)을 도입하면서 변리사법의 의무사항 준용규정을 신설
 - ☞ 기존 특허법인의 준용규정을 특허법인(유한)에 별도로 규정하면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절 | 국토·해양 분야

1. 국토해양부

장용희	사무관(044)200-2419, yh36@pmo.go.kr
이영근	사무관(044)200-2421, metelnine@pmo.go.kr
최원철	사무관(044)200-2420, chjm0524@pmo.go.kr
최동규	사무관(044)200-2420, tjchdk@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 15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78건, 강화 165건, 내용심사 5건, 일몰연장 2건 등 총 35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50건 중 9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10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였으며, 33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제4절 국토·해양 분야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개정안	제274회 예비심사 (2012.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274회 예비심사 (2012.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제278회 예비심사 (2012.1.25)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4.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78회 예비심사 (2012.1.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278회 예비심사 (2012.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278회 예비심사 (2012.1.25)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 비중요 4
7.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안	제280회 예비심사 (20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82회 예비심사 (2012.2.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2회 예비심사 (2012.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정	제284회 예비심사 (2012.2.15)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11.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286회 예비심사 (2012.2.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286회 예비심사 (2011.2.22)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3.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6회 예비심사 (2012.2.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제277회 본위원회 (2012.2.23)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287회 예비심사 (2012.2.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제287회 예비심사 (2012.2.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289회 예비심사 (2012.3.5)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제291회 예비심사 (2012.3.12)	원안의결 9	신설 7, 강화 2 *비중요 9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9.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3회 예비심사 (2012.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294회 예비심사 (2012.3.2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2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4회 예비심사 (2012.3.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442회 경제분과위 (2012.3.22)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1, 존속기한연장 1 *비중요 3, 중요 1
23.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제442회 경제분과위 (2012.3.22)	원안의결 7 개선권고 2	강화 8, 신설 1 *중요 2, 비중요 7
24.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개정안	제295회 예비심사 (2012.3.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5.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제295회 예비심사 (2012.3.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5회 예비심사 (2012.3.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7.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295회 예비심사 (2012.3.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5회 예비심사 (2012.3.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295회 예비심사 (2012.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	제295회 예비심사 (2012.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95회 예비심사 (2012.3.26)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3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296회 예비심사 (2012.3.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3.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8회 예비심사 (2012.4.4)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6
34. 항로표지 장비용품 표준규격서 개정안	제298회 예비심사 (2012.4.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카드제 시행 규정	제298회 예비심사 (2012.4.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300회 예비심사 (2012.4.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제4절 국토·해양 분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7.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04회 예비심사 (2012.4.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08회 예비심사 (2012.5.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9.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 제정안	제308회 예비심사 (2012.5.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규정 개정안	제310회 예비심사 (2012.5.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1. 지하수법 개정안	제312회 예비심사 (2012.5.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2.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	제316회 예비심사 (2012.6.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3.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정안	제316회 예비심사 (2012.6.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4.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제317회 예비심사 (2012.6.1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45.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445회 경제분과위 (2012.6.14)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46.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 개정안	제445회 경제분과위 (2012.6.14)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47. 건설관련 공제조항 감독기준 제정안	제319회 예비심사 (2012.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19회 예비심사 (2012.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제320회 예비심사 (2012.6.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0.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322회 예비심사 (2012.7.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제322회 예비심사 (2012.7.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322회 예비심사 (2012.7.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5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22회 예비심사 (2012.7.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	제322회 예비심사 (2012.7.2)	원안의결 2	신설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5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제322회 예비심사 (2012.7.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446회 경제분과위 (2012.7.2)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24회 예비심사 (2012.7.13)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4회 예비심사 (2012.7.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447회 경제분과위 (2012.7.19)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60.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4 *비중요 6
6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6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3.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4.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65.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시행지침 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6.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 운영지침 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7.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8.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제326회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326회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0.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26회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1. 철도안전법 개정안	제326회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비중요 5
7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26회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비중요 5
73. 항만법 개정안	제327회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4.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제327회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제4절 국토·해양 분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75.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제327회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8	신설 6, 강화 2 *비중요 8
76.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제327회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7.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정안	제327회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8.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	제327회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27회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0.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1.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2.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3.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1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85.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6. 도시철도법 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7. 사도법 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17)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88.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9. 경관법 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0.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제448회 경제분과위 (2012.8.30)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91. 2015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 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2. 항공법 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7	신설 3, 강화 4 *비중요 7
93.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4.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5	신설 1 *비중요 5
95.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3 *비중요 1
98.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9.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4 *비중요 6
10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1.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3회 예비심사 (2012.9.07)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02.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	제333회 예비심사 (2012.9.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3. 차수설비 설치기준 제정안	제333회 예비심사 (2012.9.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4. 건축학 교육인증기준 제정안	제333회 예비심사 (2012.9.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5.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정안	제333회 예비심사 (2012.9.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6. 개항질서법 시행령 개정안	제333회 예비심사 (2012.9.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7.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33회 예비심사 (2012.9.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08.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개정안	제334회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9.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34회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10.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업무 시행예규 제정안	제334회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334회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34회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제4절 국토·해양 분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3.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제335회 예비심사 (2012.9.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4. 항공기 기술기준 개정안	제335회 예비심사 (2012.9.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5.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	제335회 예비심사 (2012.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6. 선체보호도장기준 개정안	제335회 예비심사 (2012.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7.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335회 예비심사 (2012.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450회 경제분과위 (2012.9.27)	원안의결 6 철회권고 1	강화 6, 존속기한연장 1 *중요 2, 비중요 5
119.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50회 경제분과위 (2012.9.27)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120.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안	제336회 예비심사 (2012.9.2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21. 자동차안전법 (추가)제정안	제339회 예비심사 (2012.10.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39회 예비심사 (2012.10.24)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5
1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제339회 예비심사 (2012.10.24)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24.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339회 예비심사 (2012.10.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3회 본위원회 (2012.10.25)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강화 4 *중요 4
126. 건축법 개정안	제452회 경제분과위 (2012.10.25)	원안의결 5 철회권고 2	신설 2, 강화 5 *중요 4, 비중요 3
12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29.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0	신설 10 *비중요 10
1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3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4.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 설치지침 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6. 주택법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비중요 5
13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38.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정안	제341회 예비심사 (2012.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9.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제341회 예비심사 (2012.11.9)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140.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41.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4)	원안의결 10	신설 9, 강화 1 *비중요 10
14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43.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43회 예비심사 (2012.11.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43회 예비심사 (2012.11.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5. 선박설비기준 개정안	제343회 예비심사 (2012.11.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54회 경제분과 (2012.11.22)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147. 운항기술기준 개정안	제344회 예비심사 (2012.11.30)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48.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55회 경제분과위 (2012.12.7)	개선권고 1 철회권고 3	신설 3, 강화 1 *중요 4
149.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정안	제455회 경제분과 (2012.12.7)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15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5회 예비심사 (2012.12.7)	원안의결 6	신설 5, 강화 1 *비중요 6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5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45회 예비심사 (2012.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제346회 예비심사 (2012.12.17)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153.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개정안	제347회 예비심사 (2012.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47회 예비심사 (2012.12.21)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155.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347회 예비심사 (2012.12.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56.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정안	제347회 예비심사 (2012.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331 개선권고 10 철회권고 9	신설 178 강화 165 내용심사 5 일몰연장 2 *중요 26, 비중요 324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립등대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장은 위반 관람객에 대한 퇴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물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 유물에 대한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상유물이 복제로 인해 훼손될 경우 수리·복원·변상 등을 하도록 규정(신설)
- ☞ 전시품 보호, 관람객 안전확보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규칙위반자에 대한 시정 및 퇴장 조치는 필요한 규제이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의 보호를 위해 복제제한과 훼손된 유물에 대한 수리·복원·변상 조치는 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 부과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 및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공자를 제한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가정보육시설 등을 비롯하여 단독주택 형태의 건축물과 고시원·업무시설 포함시키는 한편,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삭제(신설)
-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형태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공관을 포함하고,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고시원’과 ‘업무시설’을 추가
-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서 조립식 단층공장 및 창고용도 건축물을 제외하여 제한 대상을 확대
- * (현행) ①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 등, ②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 공장 또는 창고 용도 건축물, ③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개정) 상기 제2호 규정 삭제

☞ 개정안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및 조립식 건축물의 경우 안전사고·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설업자로 시공자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근거법률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면적, 용도, 형태를 기준으로 시공자 제한여부를 결정하나,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설기술자 미배치, 품질·안전 관리 미수행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정도가 크기 때문에 시공자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립식 단층 공장 및 창고 건축물 시공시, 일정 면적(495㎡)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공자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3)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근거 법률인 선원법에서는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에 대한 송환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가입대상 보험·공제의 유형을 명시(신설)

〈선원에 대한 송환보험〉

- (현행) 송환보험의 가입대상자인 선박소유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대상 보험 및 공제 규정은 없음
- (개정) 송환보험 가입대상자에 '원양어획물운반업 등록을 받은 자'를 추가하고, 가입대상 보험·공제를 아래와 같이 규정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송환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송환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송환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 (현행) 선박소유주는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되, 보험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한국해운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한다고 규정
 - (개정) 피보험자는 선원으로 하고, 가입대상 재해보상보험·공제의 종류를 상기 송환보험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 ☞ 2006 해사노동협약*에 의하면 외국에 있는 모든 자국 선원의 송환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고, 우리 선원법에서도 이러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위 법령을 통해 가입대상 보험 및 공제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 「2006 해사노동협약 기준 제A25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원이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상위 법률인 선원법에 의하면 일정 사유가 발생하여 선원이 임금지급일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금번 개정안을 통해 기일 전 임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신설)
 - (현행) 별도의 규정 없음

- (개정) ①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②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

☞ 근거 법률인 선원법에서 임금 지급일 전 선원의 청구에 의한 임금지급을 명문화하고, 그 사유를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전 선원법 규정에 의할 경우, 출산·질병·재해 및 '그 밖에 부득이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불분명한 표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개정안은 불분명한 청구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선박소유자와 선원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어선원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은 근거법률인 선원법 제57조에 의하면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 비율을 개정안을 통해 상향(강화)

* 통상임금: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都給金額)

* 승선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간주

(현행)

- 통상임금의 산정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 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20%
2. 제1호 외의 경우 월고정급의 125%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월고정급의 130%

- 승선평균임금의 산정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 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50%
2. 제1호 외의 경우 월고정급의 155%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월고정급의 160%

(개정)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각각 15%p 인상

- 통상임금의 산정

1. 월고정급의 135%
2. 월고정급의 140%
3. 월고정급의 145%

- 승선평균임금의 산정

1. 월고정급의 165%
2. 월고정급의 170%
3. 월고정급의 175%

☞ 어선원의 각종 보상 및 수당 지급의 근거로 활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상향하여 어선원의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어선원의 재해보상,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개정안에 제시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은 노·사·정 회의로 개최된 ‘어선원근로개선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통상임금 : 유급휴가, 송환·실업수당, 상병·행방불명·유실물 보상의 기준
승선평균임금 : 퇴직금, 장제비, 장해 및 유족 보상의 기준

** 회의참여주체 : 노조측으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사용자측으로 한국원양산업협회, 국토해양부

- 선원법 개정을 통해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의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기준을 수용(신설)

– 인증검사의 기준

1.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사항
3. 선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선원의 선내안전에 관한 사항
5. 선원의 건강 및 급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원의 노동과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에 비추어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06 해사노동협약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20년 이후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채택한 총 68개의 협약과 권고를 통합한 것으로 본 협약은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며, 세계총선복량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후 12개월 후에 발효.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여건이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증검사한 후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게 됨

☞ 2006해사노동협약 비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제기준의 인증검사를 국내법령에 수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2006해사노동협약은 비차별조항이 도입되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의 선박에 대해서도 항만국 통제의 개입이 가능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사노동협약의 검사항목*과 시행령 인증검사 기준 간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총 14개 검사항목 : 최저연령, 건강진단서, 선원의 자격, 선원근로계약,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근로 또는 휴식시간,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거주설비, 선내 오락시설, 식량 및 급식,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선내 의료관리, 선내불만 처리 절차, 임금의 지급

- 상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신설)

– 아래의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법 제8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구호조치 등을 위해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법 제8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법 제1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업무의 위탁 사실과 내용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선원관리사업자

☞ 근거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와 권한규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개정안을 통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와 동일한 과태료 금액을 책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수면비행선박의 개발·도입에 따라 일반선박과 수면비행선박의 최대이수중량과 속도 비교를 통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여객선 보유량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신설)

– (현행) 일반선박은 여객선 총톤수의 합계 100톤 이상

– (개정) 일반선박 기준은 유지하고, 단서조항으로 수면비행선박의 경우 총톤수 합계가 30톤 이상 또는 승선정원의 합계가 30명 이상

* 수면비행선박 : 위그선(Wig Ship)이라고도 하며, 날개 및 선체와 수면사이의 유체동력학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압력의 공기쿠션효과를 이용하여 수면과 접촉없이 수면으로부터 가까운 높이에서 운항하는 선박

☞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구조 및 운행방법 등에 있어 일반선박과는 다른 유형이므로 별도의 면허기준이 필요하고, 일반선박과의 최대이수중량 및 속도 비교*를 통해 수립된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수면비행선박의 최대이수중량은 일반선박의 3배, 속도의 경우 3~5배, 수면비행선박의 속도를 고려시 약 30명 정원의 경우 총톤수 100톤급 일반선박의 여객운송능력(100~150명)과 유사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중 정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밀성능 및 결로방지성능기준을 정량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현행 “적절한 기밀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것을 “압력차 50Pa를 기준으로 시간당 1.5회의 기밀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로 변경하고, 현행 “접합부위 등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아야 한다”로 규정된 것을 “접합부위의 표면온도와 실내·외 온도사이의 온도차이비율이 0.20 이하이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임(강화)

☞ 개정안은 「주택법」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업화주택 생산 및 보급이 점차 활성화할 것을 고려한 조치로서 현행 기준이 정성적으로 설정됨에 따라 이를 개량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업화주택의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기밀성능은 종전의 재량적 기준을 과학적으로 실내 일정압력의 누압 차수를 시간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기밀성능을 1.5회로 설정하고, 접합부 이슬점 온도차는 건축물의 단열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종전 기준이 역시 정성적으로 이를 다른 유사한 기준(KS)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임. 동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현행 모호하게 재량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공업화주택의 기준을 과학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선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는 당첨자명단 등의 개인정보를 당첨자 서류는 5년간(사업주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보관하는 정보는 10년) 보관하고 당첨자 명단은 영구 보관(신설)
- ☞ 전산관리지정기관(현 금융결제원)이 당첨자 명단을 재당첨 제한기간까지만 보관하고 삭제시, 1회만 사용 가능한 입주자 저축 재사용이 가능하고 평생 1회만 공급이 가능한 특별공급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함에 따라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일반국민에 대해 주택공급의 형평성 및 편법 방

를 제고하려는 필요성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10년 범위에서 청약 제한을 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개정(2011.9.16)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 10년으로 하고 이 경우를 제외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으로, 그 밖의 지역의 경우를 3년으로 규정(신설)

☞ 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수·양도 및 알선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동 개정안의 내용은 상위 법률인 「주택법」 개정(11.9.16)에 따른 것으로, 법률 위반자가 벌금형 등 형벌에도 불구하고 재차 주택공급 청약을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할 우려를 위함. 동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일반국민에 대해 주택공급의 형평성 및 편법 방지를 제고하려는 필요성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수분양자에게 분양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음으로써 선의의 수분양자가 분양보증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수분양자에게 분양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날인받도록 사업주체에게 의무 부과(강화)

☞ 사업주체의 정상계약이 아닌 분양보증약관에 대해 부도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공급계약 사전에 수분양자에게 고지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치로서 개정 취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업자는 약관에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이해토록 설명하는 유사사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기준을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강화)

☞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소득이 초과하는 자는 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 등을 편입시키고 당첨 후 전출하는 편법이 상존하고 소득 초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시 세대주의 부모 중 한 명을 전입시켜 4인가족이 되어 소득요건에 적합 청약이 가능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편법 상존 등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국민임대주택 노후보 우선공급시 1년 이상 거주무의 유사사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7)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건설기술자는 모든 도면을 작성할 때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용역감독자는 용역업자의 제출도면이 전자도면으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도록 함(신설)

* 건설CALS/EC 표준 : 건설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업체 등이 정하여 운용하는 지침·요령·기준 등의 준칙이나 기술규격

- ☞ 건설기술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표준화를 위해 전자설계도서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용역감독자의 확인임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는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규정인 본 고시의 개정을 통해 관련규정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 판단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일정 비용·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건설자재·부재의 범위에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을 추가(강화)

* 고층빌딩, 장대 교량 등의 골조로 사용되는 구조용 강판

- ☞ 건축물의 고층화 및 교량의 장대화 추세에 따라 건설용 강판의 품질관리 강화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건설용 강판은 용접 등 접합형태로 사용되어 균열·수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는 한국산업표준(산업표준화법 의거)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부과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용 강판의 국내 수요량 중 수입량은 약 27%(2007~2009년 평균) 수준이며 중국, 일본 등에서 비KS 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

- 근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책임감리 등의 계약체결시 하자책임을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규정은 가입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의 규정만 존재하고, '하자담보 책임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어 개정안을 통해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담보책임범위를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공법검토와 이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수

행'으로 명시(신설)

- ☞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입법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책임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려는 내용으로, 미비된 하자담보책임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근거 법률인 건설기술관리법에 별점공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개정안을 통해 공개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을 규정(강화)

- (현행) 별점공개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개정)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동안 업체가 받은 별점을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등과 함께 게시

- ☞ 건설공사 관련업체에 부과된 별점을 공개하여 건설산업의 질서유지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별점공개를 통해 건설업체의 책임·건설 시공을 유도할 수 있고, 별점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0)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부터 택지비 비중에 따라 최장 12개월까지 기간이자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택지비가 40%를 넘는 경우 현재 인정기간(12개월)보다 택지비 회수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14개월로 확대하여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임(강화)

☞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관련 최근 주택시장 위축 등 주택건설·공급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한 조치로서 공공택지에서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택지비용으로 분양가격에 인정받는 택지비 선납 대금의 기간이자를 현실화하여 택지비 비중이 총 분양가격의 40% 이상인 경우만 인정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실제 소요비용이 분양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1)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근거 법률의 개정 및 위임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기준을 마련(강화)
- (현행) 별도의 규정 없음
- (개정)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 관련 위반행위(조타기 조작·지시, 음주 측정요구 거부 및 조타기 조작 금지 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징수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 음주 중 조타·도선 위반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1% 미만		50	
2) 혈중알코올농도 0.11% 이상 0.26% 미만		100	
3) 혈중알코올농도 0.26% 이상		200	
• 음주측정 요구 거부시	50	100	200
• 조타·도선 금지명령 등 위반시	50		

☞ 근거 법률 개정전 음주관련 벌칙 적용이 제외되었던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운항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음주관련 벌칙에서 제외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반면, 해상교통질서의 확보는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1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당해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기구(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가 구성되거나,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인계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여 관리업무를 신속하게 인계토록 함으로써 관리업무의 안착을 유도(강화)
- ☞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해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조속히 인계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 거래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양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누구냐(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져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주택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강화)
- 공동주택 관리업무 미인계시 과태료 기준(1,000만원)
- 주택거래 미신고 또는 해태시 과태료 기준(500만원 이하)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허위제출 과태료 기준(공인중개사법 준용)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 자료 미·허위제출 과태료 기준(공인중개사법 준용)
- ☞ 동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 것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미인계 등 과태료가 배가된 것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배가 적용을 준용하고 주택거래 미신고 또는 해태의 경우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500만원 이하로 적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공정이 진행되어 정상입주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공정을 80%*(감리자 확인) 이상인 사업장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강화)

☞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의 보증사고시라도 단기간 기본성능이 갖춰지고 정상적으로 입주가능한 공정을 80%*이상의 주택에 대해 분양대금 환급(계약금 및 중도금) 이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완성단계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여 주택시장 안정, 보증재원 건전화 등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정을 80%란 철골, 콘크리트 및 전기·수도설비 등 주택의 기본성능이 완비된 수준으로 내부 인테리어만 남은 상태로 간주

(13)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시설 및 설비 등을 주기적으로 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 교체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수선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주택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부 시설·설비에 대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을 사용토록 의무화(강화)

☞ 지구온난화 등 이산화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주택 공동구역의 설비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등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장기수선을 위해 총당금을 적립, 수선주기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동구역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시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500세대 기준 세대당 추가 설치비용 부담은 연간 1만원, 에너지 절감에 따른 관리비 절감은 3만 3,000원(NH 연구원 분석)

(14)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시공사 선정은 총회의 고유 권한이나,

대의위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업체(3개 이상) 선정 및 총회시 서면결의 인정에 따른 부조리 발생 및 시공시간 과당경쟁 개선을 위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대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총회 상정 업체수를 확대(3개→6개)하고, 총회 의결시 서면결의 행사방법 보완 및 시공사 개별 홍보 금지 대상 구체화, 시공사 합동설명회시 조합이 시공능력·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함(강화)

☞ 국토부는 당초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서면투표 관련 금품수수 비리(KBS 보도, '11.7)”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면투표를 금지토록 개정안을 마련한 바, 이는 서면투표하려는 조합원이 별도 장소에서 서면투표지에 날인시 예비 시공사가 동석하여 현장에서 결탁할 수 있는 문제점에서 발단된 것이나 이는 일부 조합원과 시공사간 비리로 인해 다수의 선의적 피해자를 간과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결국, 서면투표 금지는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훼손할 것이 우려됨. 따라서 금번 수정안은 서면투표의 제한적 허용을 통해 조합원의 자유 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면투표를 하려는 조합원과 후보 시공사간 접촉을 최대한 배제토록 개선함으로써 비리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하여 개선권고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의 허가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의 확인을 위해 개인의 범죄경력,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신설)

☞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취급시 법령에 근거토록 규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 업무는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처리로서 개인에 대한 범죄경력,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가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6)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법(11.9.30 시행)」 개정에 따른 개인 민간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에 따라 그 발기인, 이사, 준법감시인, 감사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등 결격

사유 조회를 위해 주민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신설)

- ☞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취급시 법령에 근거토록 규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발기인, 이사 등에 대해 범죄경력 등의 신원조회가 필요함에 따라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위한 법령의 근거 마련이 불가피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
- ☞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단절토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선형시설인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고 도시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증가로서 건축연면적 3,000㎡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만㎡ 이하인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던 것을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합한 면적이 건축연면적 3,000㎡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만㎡ 이하인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으로 이미 승인받은 부지에서 건축연면적의 증가(건축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함)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1항의 경미한 사항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동 규정을 삭제. 또한, 같은 읍·면·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위치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강화)
- ☞ 동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시 국토부의 승인이 불필요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는 현행 규정이 모호하므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정부의 승인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 하려는 것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업종변경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서 입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실외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로 규정한 현행 규정 중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은 삭제하여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에 한함)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속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가능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안전·침수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 및 종교시설은 취락지구 밖으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11.9.16)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입지기준 마련(강화)

-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정한 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용도변경 행위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공해의 정도가 낮은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레미콘공장은 소음,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결코 공해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기존 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업종변경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입지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재해예방,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고사항인 경미한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하고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시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고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12가지)별 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30~100만원)하고, 위반횟수(3회)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가중비율 1:2:4)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가중 또는 경감하여 부과(2분의 1 범위 내)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강화)

- ☞ 동 개정안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09.8.26 국경위)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를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 고려한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및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인 바,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7, 강화 2)

■ 심사내용

-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주택의 공급 목적에 맞게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임대용 순환용 주택에 입주자 자격요건을 「임대주택법」에 따르도록 함(신설)
 - ☞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시, 관련사항의 일반법인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등을 따르도록 하여 타 사업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정 도시개발법(11.9.30 공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임대주택법」과 달리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구역 내 세입자 등에게 해당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신설)
 - ☞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 입주의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는 입법 취지로서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정 도시개발법(11.9.30 공포)에 따라 원형지 공급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원형지 공급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원형지 공급 승인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원형지 공급시 매매제한 기간을 공사완료공고일로부터 5년 또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며 기반시설용지 등에 대해 매매 허용, 원형지 개발자 선정기준을 수의계약 원칙으로 하고 학교용지 등에 한하여 경쟁입찰로 규정(신설)
 - ☞ 동 개정안은 원형지 공급 승인시 제출서류, 원형지 매매 제한기간 및 예외대상, 원형지 공급방법 등을 마련한 규정으로 원형지 공급으로 인해 난개발 및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업시행자가 민간일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 및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공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조성토지 공급계획 제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지정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 이를 조성토지 공급계획 제출시 포함하

도록 하는 내용임(신설)

- ☞ 동 개정안은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서류)을 확대한 규정으로 개정을 통해 토지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며,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공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 작성 이전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공급목적 및 필요성, 공급토지 목록, 공급대상자 선정방법을 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임(신설)
 - ☞ 본 조항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혜소지에 따른 분쟁 예방 및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행정처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리 절차를 명확히(행정청의 검토나 확인 등) 하는 사항임(신설)
 - ☞ 동 개정안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정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본 조항의 개정을 통해 행정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며,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입체환지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 기준, 종전토지·건축물의 용도·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정당한 사업시행을 담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법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신설)
 - ☞ 동 개정안은 입체환지신청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할 사항을 마련한 규정으로 본 조항의 개정을 통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규정으로 본 조항의 개정을 통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사업을 담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개발업자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인 사업시행 및 부실개발 방지 등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자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시행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의 영업정지·시정조치 등 이력 및 사업실적, 경영건전성 등을 시행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법에서 단독시행을 허용하면서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운용실적, 자본금 등을 시행자 요건으로 규정(강화)

☞ 법 개정에 따라 시행자 범위가 확대되었고, 안정적인 사업시행 및 부실개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규정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크며,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기존 규정에는 시행자가 사업 관계서류를 열람시키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공개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잦은 마찰이 발생하므로 개별서류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을 개정한 바 대통령령에서 서류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정함(강화)

☞ 동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 조항의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행자와 이해관계자간 정보공개 청구 등 분쟁 예방을 기대되며,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19)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축사법 개정(법률 제10756호 2011.5.30)으로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새로 도입되는 실무수련, 건축사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수료 기준을 정함(신설)

– 실무수련 신고 : 10만원, 자격등록 : 20만원, 갱신등록 : 10만원

☞ 변리사 등 국가가 부여하는 전문자격자에 대해 등록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20)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현재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위반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일률적으로 과태료 상한(5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부과하는 실정임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내용심사)

☞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만 규정하던 사항을 위반행위의 회차별로 차등 적용하여 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적용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2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현황을 매년 지자체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자들을 양성화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도모(신설)

☞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오피스텔 임대주택사업자의 임차인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임대주택의 경우 세제혜택 등 사무용이 아닌 실제 거주용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임차인 신고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22)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강화 1, 존속기한연장 1)

■ 심사내용

-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학위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실무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부여하여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련의 과목 및 수련일을 정함(신설)

– 실무기간 : 3년, 실무수련 과목 및 수련일 : 설계 365일 이상, 공사관리 80일 이상, 기타 20일 이상

- ☞ 현행 규정에 자의적으로 5년간 건축 관련 경력을 쌓는 것만으로는 실효성과 FTA 등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제고에 미흡한 실정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실무과정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는 등 세계적 추세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축사법」 개정(법률 제10756호 2011.5.30)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법 제18조 제5항) 갱신기간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건축사가 5년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도록 함(신설)
 - ☞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사 자격의 등록 및 갱신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자격의 갱신 등록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동 시행령에서는 유사한 자격인 세무사 및 감정평가사 등이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을 준용한 것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축사에게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자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등록한 건축사가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갱신미등록으로 실효된 건축사,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난 경우,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시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12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강화)
 - ☞ 국내의 유사한 자격인 변호사, 변리사 등에 대해서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당초 건축설계업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설계업을 하려는 법인의 경우도 그 대표자는 건축사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 건축설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요구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진입을 허용(건축사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후단 신설, '09.6.30)하고, 그 개선 내용이 적절한지를 '11.12.31일까지 재검토하도록 본조(영 제37조) 신설('09.7.7)함에 따라 재검토(존속기한연장)
 - ☞ 법인의 건축사 업무 신고시 대표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은 건축설계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의 건

설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건축사협회의 이견이 일부 있으나, 동 시행령상 법인 대표자의 건축사 요건은 공공발주 또는 대규모 건축공사로 한정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일몰삭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 원안동의

(23)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강화 8, 신설 1)

■ 심사내용

- 리츠 제도가 2007년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예비인가-설립인가 제도에서 자율설립 후 영업인가 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설립 후 영업인가 전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으로 불법·부당 행위를 할 가능성 있음에 따라 리츠 설립시 설립 후 신고 및 영업인가 전 현황보고 의무 등을 부여(강화)
 - ☞ 위원회는 “설립 후 인가 전 3개월의 범위에서 회사현황 보고”에 대한 당초 개정안에 대해 비중요규제로 의결(제214회 예비심사, '11.5.2)한 바 있으며, 자기관리 리츠사가 설립후 6개월 내 영업인가를 득해야 하므로 단기간 중의 회사현황보고는 3개월의 범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영업인가 전 사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우려는 현행 규정상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관리상 제재가 가능하므로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한 영업인가 전 회사 현황의 보고의무는 당초 개정안과 같은 수준의 “설립 후 3개월의 범위에서 보고”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안에 대해 개선권고
- 자기관리 리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기관리 리츠의 난립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자본금을 상향(5억원→10억원)함(강화)
 - ☞ '10.4.15일 법 개정을 통해 5억원 하향조정된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자본금을 개정전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상근임직원이 없는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자본금이 5억원인 것에 비해 적절한 규제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법인이사제, 금전대여 일부허용에 따라 법인이사제의 선택 여부, 금전대여 비율 관련사항 중 일부를 주주(투자자)의 선택에 맡기고 주주의 결정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규율을 정하는 사항임(강화)
 - ☞ 제214회 예비심사('11.5.2)시 “비중요규제”로 결정된 바 있으며, 당초 개정안의 내용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능 여부 및 투자한도’를 삭제함에 따라 투자회사의 정관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제외하는 완화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리츠 제도가 2007년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예비인가-설립인가 제도에서 자율설립 후 영업인

가 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설립 후 영업인가 전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의 상호로 불법·부당행위를 할 가능성 있고, 설립 후 영업인가 신청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설립자본금의 잠식 등 향후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인 발생 우려가 있음에 따라 설립 후 영업인가 신청까지의 기간을 규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호로 불법·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나친 자본잠식을 막는 사항임(강화)

☞ 리츠 설립 후 영업인가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4개월인 점, 리츠설립은 영업인가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설립 후 6개월 이내 영업인가 신청의무 부여는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실시 관련 자율성 강화와 주주(투자자)의 보호간의 균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도록 하는 사항임(강화)

☞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해 불법 평가를 예방하려는 조치로서 당초 현물출자를 제한하던 규제를 풀어줌과 병행하여 투자회사의 불법적인 현물 평가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타당한 조치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①신설합병시 영업인가의 효력 상실 문제, ②다른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 합병시 합병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결정 문제, ③상장 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함에 따라 합병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시 흡수합병, 같은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상장-비상장)간의 합병만 허용(강화)

☞ 향후 부동산투자회사 합병 사례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합병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율하여 합병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사례가 없는 점과 그 취지 및 효과를 감안할 때 규제수준이 적정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금전적 벌칙 조항이 벌금(최대 1억원)과 과태료(최대 1,000만원)로만 이루어져 있어 위법행위로 발생한 막대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벌칙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를 지시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투자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현행 규정상 불가하여 업무정지에 따라 선의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임(신설)

☞ 일반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중복하여 제재하지는 않으며, 리츠사의 영업인가 전 영업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등 중대한 형벌로 처벌하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는 부적절함에 따라 “영업이익의 20% 범위의 과징금 부과(안 제55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행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 과징금 부과는 중복적 처벌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과 같이 판별이 곤란하므로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부과기준 및 절차 등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투자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근임원의 겸업·겸직 금지 및 주식 발행조건 등을 부동산투자회사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해당 법률상 의무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이 미비함에 따라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상근임원의 겸직 허용 금지 및 회계처리 규정·주식발행 규정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함(강화)

☞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법률 위반이 없을 경우 추가 발생 비용은 없으며, 법률상 의무 준수를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가증권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바, 이때 주주로 포함되지 못하고 이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자는 배당의 권리는 없고, 대규모 배당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하락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으로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 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통상 주주명부 폐쇄 등이 이루어지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당여부 및 배당예정금액을 결정토록 의무 부과(강화)

☞ 향후 상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당과 관련된 정책을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시 규제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24)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등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록의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평가하는 평가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에게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유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강화)

*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행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

- ☞ 동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려는 취지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의 생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보관·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5)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특수건설기계로 신규지정된 트럭지게차의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 등록번호표부착 및 새김 위치, 작업장치의 기종별 표시방법을 정함(강화)
- ☞ 특수건설기계로 지정된 트럭지게차의 상용화를 위해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등 관리업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트럭지게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일반규정인 동 훈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건설기계의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등록번호표부착 및 새김 위치 지정, 작업장치 기종별 표시방법 규정은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으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2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특수건설기계로 신규지정된 트럭지게차의 장거리·고속주행에 따른 장비내구성 검사 등을 위해 1년 주기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설정(강화)
- ☞ 트럭지게차가 특수건설기계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안전성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트럭지게차에 대한 정기적 검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유사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 정기검사 유효기간
 - 굴삭기,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 1년
 - 사업용 화물자동차 : 1년 (대형은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
- 장거리 도로주행 및 고속주행이 가능한 트럭지게차로 하여금 지정된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수행하도록 함(강화)

- ☞ 트럭지게차가 특수건설기계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기계에 대한 정기검사장소규정을 신설하여 건설공사 안전도를 향상하려는 취지로 트럭지게차는 화물자동차기능(도로 고속주행기능)을 가지므로 지정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전국 18개 검사소(16개 광역시도 위치, 경기도의 경우 경기북부/남부, 강원도의 경우 강원영동/영서)에서 정기검사 시행예정

(27)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화물자동차와 지게차 기능이 결합된 트럭지게차의 안전기준은 주행차대와 작업장치로 구분하여 설정(강화)
- (지게차 안전기준 준용) 들어올림장치를 갖춘 작업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은 기능적으로 동일한 지게차의 안전기준을 준용
- (주행기능 안전기준) 주행차대 운전석 및 작업장치 조종석에 동일기능의 조향장치 및 제동페달이 있는 경우 동시작동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작업장치의 쇄스랑을 접거나 탈거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주행차대 운전석에서 시동이 불가능한 구조
- (표시의무) 트럭지게차 좌우에 최대들어올림용량(kg)과 자체중량(kg)을 각각 표시
- (제동거리 기준) 작업장치 조종석에서 주행할 경우 ‘지게차 기준’ 적용, 주행차대 운전석에서 주행할 경우 ‘그 밖의 건설기계의 제동거리’ 기준을 적용
- ☞ 특수건설기계로 지정된 트럭지게차의 구조와 성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여 건설현장 및 도로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최근 개발된 트럭지게차의 안전기준은 규율 법령이 미비한 실정이고,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건설현장 및 도로에서 작업·주행하는 트럭지게차의 경우 사고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필요하며, 트럭지게차는 화물자동차와 지게차의 기능이 결합된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신규기준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신규교육대상으로 지정된 소형건설기계(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점검권한을 규정(강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의 내용]

교육내용	시간
1. 건설기계기관, 전기, 유압 및 작업장치	2(이론)
2.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작업안전	4(이론)
3. 장비취급 및 관리요령	2(이론)
4. 조종실습	12(실습)
〈 교육방법 〉	
－ 이론교육은 해당 건설기계관련 자격소지자가 1일 8시간 이하 시행	
－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조종면허를 가진 강사가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교육생을 1일 4시간 이하만 실습	
－ 교육시간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비 및 지문인식 등으로 본인여부 확인	

[소형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기관 시설기준]

- ① 강의실 : 면적 30㎡ 이상 100㎡ 이하, 1.2㎡당 수용인원 1인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실습장 : 장비 2대까지 900㎡ 이상 확보, 1대 추가시 250㎡ 추가 확보
- ③ 장비 : 2대 이상
- ④ 기재실 : 20㎡ 이상
- ⑤ 기자재 보유 : 엔진체 1대 이상, 축전기, 충전기, 그리스주입기, 유압잭 등
 - － 위와 같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시·도지사에게 시설기준의 준수여부 등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매년 1회 이상) 권한 부여

☞ 국가자격시험에서 제외된 소형건설기계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점검권한 규정의 신설은 건설기계조종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소형건설기계 면허의 부정취득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부실한 교육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시설기준은 건설기계조종과 관련된 법령을 준용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9)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양식장에 대해 양식장 설치지역 부근 해상교통량, 항만 근접성, 위험도, 조석 등을 고려하여 항로표지의 설치·배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세부기준을 권고

[양식장 표지 설치 세부기준]

- 1. 특수 표지로 설치
- 2. 양식장 사이에 선박 교통로가 있을 경우 측방표지로 설치
- 3. 방위표지만 설치하여도 양식장을 피해 항행이 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방위표지만을 설치
- 4. 배후광이 있을 경우 여러 종류 등질을 동기점멸하는 등광을 효율적으로 개선
- 5. 양식장의 시인효과 증가를 위해 레이다반사기 등 반사 재질 사용과 레이콘*이나 항로표지용 AIS**와 같은 전자표지 사용고려
- 6. 양식장 크기·넓이·위치에 따라 양식장의 둘레 또는 중앙에 표지 설치

* 레이콘(Radar Beacon) : 레이더에서 발사하는 전파신호를 받을 때 자동으로 응답하여 식별 가능한 신호를 발사하는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장치로 안개 등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광파표지 식별이 불가능할 때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AIS : 자동선박인식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으로 선박의 특성, 화물, 운항 등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자체송신하여 해역관리효율 및 안전도 제고에 활용하는 장치

☞ 양식장에 관한 항로표지 설치기준 및 규격을 정하는 내용으로 어장시설물 충돌에 의한 해양교통사고의 예방과 양식장 시설보호를 위한 취지가 인정되며,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 제시한 해양교통시설 세계통일기준 권고사항을 따른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제항로표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IALA) :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국제적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주관하는 관청 및 기관으로 구성된 비정부간 국제기구

(30)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시공자의 경쟁 입찰을 촉진하고, 시공자 선정에 따른 부조리 방지 및 투명성 제고로 원활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및 합동홍보설명회, 총회의결 기준을 정한 것임(신설)
- ☞ 동 내용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안”의 규개위(제277차 본회의 '12.2.23) 의결 내용과 동일(서면의 결방법 등)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해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과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의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여 부동산 투기나 토지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선의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오히려 분할을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 조례에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강화)
- ☞ 동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존지역 등의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여 투지 및 분양사기 등을 위한 불법 악용의 소지를 방지코자 하려는 취지로 지자체의 조례로서 기획부동산의 횡포 등 편법을 예방하려는 근거법령으로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토지매수를 유도하고, 극소수의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가 있더라도 원활하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강화)
- ☞ 동 규제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토지매수를 유도하고 극소수의 사업을 반대하려는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보상 등 사업추진의 애로를 개선코자 하려는 것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 식품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식품공장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용도지역

의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개별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예방(강화)

- ☞ 동 개정안은 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입주해야 할 공장 중 식품공장처럼 오염배출이 미약한 업종에 대해 자연녹지 등 다른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입지를 허용하되, 식품공장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이를 입법취지에 맞도록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개정 취지가 인정됨. 규제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3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등의 출입구 등에 차수설비를 설치하고 낙뢰의 우려가 큰 철탑 등 공작물도 높이 20m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를 설치하며,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음식점·제조업소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인근 거주자 또는 보행자에게 배기장치의 열기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강화)
- ☞ 차수설비는 빗물유입시건축물의침수를 일시차단토록 건축물 전체가 아닌 출입구 등에 소규모 설치하므로 비용부담(60만원/㎡)이 재해시 경제적·인적 손실에 비해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차수설비 의무 대상을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국한하여 적정하며, 피뢰설비 설치를 20m 이상의 건축물 외에 위험도가 유사한 골프연습장 등 공작물도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차원에서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시 필요. 또한 식당 등 상업지역의 환기 및 냉방시설 등으로 인한 불편으로 생활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근 거주자 및 보행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배기구 설치의 위치를 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주민의 분재 해소 등 사회적 편익에 비해 규제수준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33)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선원이 거주지 또는 계약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선원송환비용의 항목을 현행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선원 개인휴대품 30kg에 대한 수하물 운임, 상병으로 인한 의료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신설)

☞ 2006 해사노동협약을 수용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선원송환비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원의 안정적 귀국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선원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하선한 경우, 신변보호 및 안정적 귀국을 위한 송환비용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2006 해사노동협약의 선원송환비용 지급기준*에 따르면 개정내용은 선박소유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부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2006 해사노동협약 선원송환비용 지급기준 제A2.1조 – 선원근로계약
3. 기준 제A2.5조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송환비용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a)여비, (b)숙박 및 급식, (c)도착지까지 급여 및 수당, (d)30kg에 해당하는 선원개인휴대물의 운송, (e)치료비용

-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갑판부 유능부원, 기관부 유능부원, 전자기관부원 등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및 위험화물적재선박 선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에 의하면 유효기간 규정이 없는 구명정조종사, 고속구조정조종사의 자격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신설)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갑판부 유능부원	18세 이상으로 자격증을 갖춘 자 중 – 18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 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기관부 유능부원	18세 이상으로 자격증을 갖춘 자 중 – 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자기관부원	18세 이상으로서 – 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위험화물적재선박 선원의 자격요건]

유조선 또는 케미컬탱커 선장 등	① 기초승무자격증을 갖추고 – 3개월 이상 승무경력 갖춘 자 – 3회 이상 적양하 하역작업 경력을 포함한 1개월 이상 승무경력 갖춘 자 ② 유조선 또는 케미컬탱커 직무교육과정 이수자 ③ 국토부 장관승인 유조선 또는 케미컬탱커 상급승무자격증시험 합격자
액화가스탱커 선장 등	① 기초승무자격증을 갖추고 – 3개월 이상 승무경력 갖춘 자 – 3회 이상의 적양하 하역작업 경력을 포함한 1개월 이상 승무경력 갖춘 자 ② 직무교육과정 이수자 ③ 국토부 장관승인 상급승무자격증시험 합격자
유조선 또는 케미컬탱커 선원 등* 갑판부·기관부 부원, 운항당직부원	①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국토부 장관 승인 기초승무자격증시험 합격자

☞ 금번 개정안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로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개정에 따른 선원자격제도를 국내 규정에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국적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외국 항만의 항만국통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STCW 협약: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간 협의를 통해 1978년 제정·체결, 1984년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일반상선의 갑판부·기관부·통신부의 사관과 부원, 유조선·케미컬탱커 및 액화가스운반선에 승무할 사관과 선원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최저승무 및 훈련기준과 당직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

- 1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서 계속 승무한 어선원*의 유급휴가일수를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강화)

☞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현행 유급휴가일수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원양어업 및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내항·외항 상선원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확대가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개정내용은 합리적인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어선원과 상선원의 유급휴가일수 비교(1년 계속 승선 시): 어선원 15일 내, 항상선원 60일, 외항상선원: 72일

** '09년도 일본 동일 업종의 유급휴가 규정에 의하면, 연속 승무기간 10개월에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1개월당 2일)

- 선박에 승무하는 의료관리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금번 개정안을 통해 시험과목을 변경(시행 후 1년 경과기간 부여)(내용심사)

시험유형	현행	개정안
필기시험	1. 의료관계법규 2. 식품관리(폐지) 3. 공중보건학 4. 환경위생학(폐지)	1. 응급처치법(신설) 2. 환자관리(신설) 3. 공중보건 4. 선박의료관계법규
실기시험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현행과 동일)

☞ STCW 협약의 개정에 따라 선박에 승무하는 의료관리자의 최소자격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국내법령에 수용하기 위한 취지로 STCW 협약 가입국으로서 협약의 개정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하고 이행할 의무가 존재하며, 1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또는 다른 나

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해사노동적합 증서를 발급받아 선내비치해야 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해사노동적합증서 인증검사 및 발급 업무를 수탁·처리하는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를 정함(신설)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

- 1. 인증검사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법 제139조에 따른 인증검사관의 자격이 있는 기술인력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4.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확보할 것(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및 서류 〉

- (신청절차) 신청서류 첨부·지정신청→국토부 검토 및 지정서 발급→국토부와 지정기관 간 협정 체결
- (신청서류)
 - 1.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2. 정관
 - 3. 해사노동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4. 해사노동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규정
 - 5. 해사노동검사 기준
 - 6. 그 밖에 대행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선내비치가 의무화되었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국제협약에 부합하도록 정하는 내용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 인증검사 및 발급 대행제도 시행에 따라 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신청절차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신청절차는 국제협약 개정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4) 항로표지 장비용품 표준규격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항로표지용품의 구매 또는 취득시 기준으로 활용하는 항로표지용품 표준규격서*를 제·개정하는 내용으로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규격서를 개정하는 한편, 표준규격 지정전 잠정규격으로 지정·활용하였던 규격서를 표준규격으로 제정·공고(강화)

* 해상용 등명기(250mm, 400mm 회전식, 750mm 회전, 300mm 점멸식, LED-200, 일체형-LED, LED-200H) 표준규격서와 총방전조절기 표준규격서

☞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확보를 위해 항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반영·개정하고, 안전성 및 기능성이 검증된 잠정규격을 표준규격서로 제정하는 내용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카드제 시행 규정(신설 2)

■ 심사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가보조금지급 관련법령을 통합·제정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156호)과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167호) 중 화물자동차에 관한 부분 중 운송사업자와 주유업자의 유가보조금 부담수령과 관련한 행위금지 규정을 통합(신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를 규율하는 기존 지침(훈령)을 통합·제정하는 사항으로 그간 분리운용하였던 기존 지침을 통합한 형식변경(지침·훈령→고시) 사항이므로 규제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어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운송사업자·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카드제 시행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상제재 조항을 통합(신설)
- ☞ 동 제정내용은 행위금지조항과 동일하게, 분리운용하였던 기존 지침을 통합한 형식변경(지침·훈령→고시) 사항이므로 규제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어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3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정당한 이유없이 토지의 조사·측량을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과태료 금액을 규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1 신설, 내용심사)
- ☞ 공유토지분할을 위한 토지의 조사·측량을 방해한 위반행위에 대해 상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차등적

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과태료 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과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입법례 :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 지적재조사를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1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37)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선박의 말소등록 처리에 관하여 선박의 등록·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권리보호 강화하는 내용으로 매매 또는 양도로 인해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말소등록 신청시 승낙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필요한 제3자의 범위 확대(강화)

현행	개정안
압류권자·공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	압류권자·가압류권자·저당권자·근저당권자·가처분권자·공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

☞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선박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는 현행 압류권자·공유자 외에 개정안 가압류권자·저당권자·근저당권자·가처분권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입법사례로 항공기, 자동차 등의 말소등록신청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판결문의 등본을 요구하는 바 과도한 규제수준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건설기술인력(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훈련(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대상에 ‘수리기술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를 포함(강화)

* 수리기술자 : 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을 행하는 건설기술인력

☞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

술력 확보와 전문성의 유지를 위해 수리기술자에 대한 교육의무부과는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동일한 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측량기술자는 이미 의무적 교육훈련 이수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강화)

* 기초공사용 건설기계로 말뚝 또는 널말뚝을 박는 기계 및 그 부속장치를 항타기(driving pile machine)라고 하고, 반대로 가설용에 사용된 널말뚝, 파일 등을 뽑는 데 사용되는 기계 및 그 부속장치를 항발기(extract pile machine)라고 함

☞ 최근 일부 건설공사현장에서 항타·항발기와 관련된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소규모 건설공사도 사고 발생이 빈번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수립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9)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해양교통시설의 상태정보 및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표준규격서를 제정하여 각 지방해양항만청의 해양교통시설관리시스템간 호환성 및 범용성을 갖춘 통일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본 표준규격서는 항로표지시설의 설치·관리주체(국토부 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가 항로표지용품을 조달할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신설)

*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 각 지방청(권역)에 설치된 해양교통관리운영시스템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전국망 시스템

☞ 해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항해자에게 해양교통시설 및 해양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의 해양교통시설관리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및 시스템 중복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고, 관련 주체들로 구성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 TF회의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0)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을 확대(강화)
 - 점검·진단 실시결과 안전등급이 급격히 변화한 경우
 - 점검·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기존보다 2단계 이상 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 기존 점검·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이었으나 새로 시행한 진단·점검결과 등급이 상향된 경우
 -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점검·진단용역의 저가도급 기준을 상향
 - 저가도급으로 인해 부실한 점검·진단이 우려되어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도급기준을 대가 대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1·2종 시설물은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큰 대규모 안전사고의 특징을 가지는 바 부실 점검 및 진단을 예방할 필요성이 크고, 개정안에 의한 평가대상 확대로 증가되는 건수*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평가비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인 경비로 진행되어 시설물 관리주체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요인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06~'11년(5년) 통계로 추산한 평가대상 증가 건수는 연간 약 369건(연간 총 평가대상은 약 3,000건)
• 안전등급 2단계 이상 상·하향의 경우 약 322건
• 저가도급 기준 상향의 경우 약 47건

** 평가대상의 확대에 의해 약 1억 5,000만원의 비용증가 예상

(41) 지하수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로 인해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추가적 의무를 부여(신설)

☞ 지하시설물 설치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은 지반침하 및 지상구조물의 안전성 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유출지하수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시행의무가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미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신고의무만 부과한 개정안은 최소한의 의무부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위 개정안의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강화)

☞ 법률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2)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낙찰률 기준을 고시하는 내용으로, 포괄대금 지급보증의 적용대상 건설공사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공사로서 '전년도 낙찰률 하위 5%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년도(2011년) 최저가 공사를 '건축·토목·기타공사'로 구분하여 '하위 5% 낙찰률'로 설정(신설)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일정 기준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비롯해 부품제작·납품 대금 및 장비대여 대금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토목	건축	기타공사
하위 5% 낙찰률	65.553%	69.103%	67.198%

☞ 포괄대금 지급보증을 적용받는 건설공사의 낙찰률은 구체적 수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주한 건설공사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낙찰률이므로 이를 고시하기 위한 내용으로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 낙찰률을 '하위 5%'로 정한 것은 근거법령의 위임범위를 준수하였고, 2011년도 최저가공사 발주 실적을 토대로 정해진 낙찰률은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통계적·기술적으로 도출한 단순 수치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43)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일반선박과 달리 특수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수면비행선박*의 도입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방식 및 측정요령을 새로이 마련(신설)

* 위그선(Wig craft)이라고 하며 수면부근에서 극대화된 부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선박으로 고도 150m 미만의 경우 선박으로 취급

☞ 일반적으로 선박·해사 관련법령에 의한 선박등록은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수면비행선박은 국제적으로 '선박'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수면에서 고도 150m 미만을 비행하는 선박으로 취급하기로 협의

(44)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해 기존 서귀포항 해상구역에 강정지구 추가(내용심사)

☞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되어야 민간과 해군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고 제주 관광미항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국방부에서 실시한 보상구역(접안시설, 선화장 등)을 반영하여 해상구역 항계를 최소화하여 어민 피해를 절감하도록 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5)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규정에 의하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자기소유의 선박, 대여선박(용선선박) 또는 취득 예정인 외국선박으로 선박보유량이 500톤 이상일 경우 사업등록 가능하고 자사선 확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개정안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신청시 다른 사업자나 선박 대여업자로부터 용선한 선박은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500톤 이상)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강화)

☞ 개정안의 강화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은 페이퍼 컴퍼니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한 정책목표에는 부합하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규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여 개정안과 같이 용선선박 보유량을 제한하는 것보다 자사선 '최소' 보유량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사선 보유량은 등록기준상 최소 선박보유량(총톤수 500톤)의 절반(250톤)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46)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개정안은 용선신청시기의 조정 등 총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절차(강화)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1. 용선신청 시기 조정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려면 선박사용 20일 전까지 신청	선박사용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려
2. 조건부 허가 규정 신설	신 설	심의위원회가 용선적합성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용선기간·횟수·운항구간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심사기준 추가	운송희망선사유무, 운송기간·운송선박규모의 적정성, 기존 사업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 용선횟수·기간·빈도	현행 기준에 '용선사유의 긴급성, 국가경제적 필요성, 내항선 확보노력의 정도'를 추가
4. 심의기준 제정 근거 신설	신 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얻어 상기 심사기준을 포함한 심의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 카보타지 원칙*에 의해 동 고시를 통해 우리나라는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운항에 대해 국가간 상호 주의의 적용, 국내선박 중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 해양사고 회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기는 유사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타당성은 인정되나, 세부적으로 개정안의 용선신청시기의 조정은 이용 가능한 국내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40일로 연장하도록 개선권고하고, 그 외 조건부 허가규정 및 위원회의 심의기준 제정 근거 신설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권고

* 개별 국가가 자국 영해 내의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유상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부여하지 않고, 자국선이 독점하는 국제관례

(47)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전경영지도 및 건설보증 리스크를 관리·체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중심의 감독기준을 마련(신설)
 - ☞ 건설보증사업의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할 수 있는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로 보증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조합을 통해 보증이용자의 위험을 절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건설산업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미 은행권과 보험권의 경우, 리스크에 기반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동 고시안의 감독대상인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자신들의 건전성 확보와 부실 예방을 위해 감독기준의 신설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반대이견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 리스크중심감독제도(Risk Based Supervision) : 은행권에 대한 감독기준으로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한 체계적·상시적 평가 실시로 고위험 분야에 감독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선별적, 차등적 감독 방식
- ** 리스크평가제도(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손해의 규모 및 관리능력을 계량화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취약회사와 취약 부문을 발굴하여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하는 손해 중심의 건전성 평가

(4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특별공급을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택 특별공급은 평생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신설)
 - ☞ 개정안은 현재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다른 사유로 인한 특별공급을 재차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1인이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공급 관련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여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4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인증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수수료 외에 인증심사원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인증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도록 함(신설)
 - * 선박관리사업 :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등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산업적인 선박관리와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사업
 - ☞ 인증신청 수수료는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증의 수익을 받는 주체로 하여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취지로 인증신청 수수료는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의 무분별한 신청과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입법례로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도 동 수수료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선박관리산업협회, 선박관리사업자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신설)
 - 국토부 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우수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서 또는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이수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 적법하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별로 부과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0)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조선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밀폐구역을 진입 또는 작업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스검지장치를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함(강화)

- ☞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국제액체화학품운송선규칙」의 액체화학품운송선박 통기장치, 계측장치 등 안전운송요건을 반영 현행 규정에 의해 이미 휴대용 가스검지장치의 비치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위험구역에서 작업하는 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해양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수립하는 기구로 1958년에 출범하였고, 총169개 회원국으로 구성(우리나라는 1961년 가입)

(5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심의참여업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감점조치를 할 수 있는 별점기준을 마련(강화)
- ☞ 터키입찰 설계심의회에 대한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터키 등 설계심의의 공정성 확보방안」(국토부, '11.12.)의 일환으로, 개정안은 터키 입찰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기술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된 규제대상은 비리업체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전체 및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가 가능하도록 주택법이 개정(12.1.26 공포) 주택단지의 분할 가능한 공구별 세대수를 300세대로 하고 공구간에는 6m 이상의 폭을 확보하도록 함(신설)
- ☞ 주택 건설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입주민의 생활 동선을 최소한으로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분할 건설시의 최소공구 규모를 정한 것으로 입주자 안전을 위해 공사가 별개로 진행되는 공구간의 경계 폭(6m) 및 시설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최근 3년('09~'11)간 민간에서 공급된 단지의 평균 세대수가 300세대 내외임을 고려하여 공구별 최소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단지를 선호하는 입주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택을 분할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함(신설)

- ☞ 무분별한 분할 건설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주택법상 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분할 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주택단지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주택법상 제기준을 준용하여 분할 공급이 가능한 주택단지 최소 세대수를 1,000세대로 정하고, 900~1,000세대의 평균 대지면적이 5만 2,000㎡임을 감안하여 대지면적은 5만㎡로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

-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공구별 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착공기간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정함(신설)

- ☞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을 확보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을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입주자 피해방지를 위해 규정한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정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대한주택보증의 효율적 업무처리 및 입주예정자·주택 사업자의 동의서 작성·징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신설)

- ☞ 입주예정자·주택사업자의 동의서 작성·징구 등에 따른 업무불편 해소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사사례를 감안하여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

(5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감정평가 절차의 하나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을 규정하면서도 확정해야 할 기본적 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감정평가 진행 중 및 완료 후 의뢰인 등과 분쟁의 소지 상존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 대상물건, 감정평가의 목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하도록 함(신설)
- ☞ 감정평가시에 의뢰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할 기본적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연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평가 관련 사후 분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과도한 규제는 아닌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감정평가는 전문성을 가지므로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을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의 일반원칙과 다르게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사실과 이유를 감정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감정평가 결과를 오해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정평

가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신설)

- ☞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령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타당한 사항으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신설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기존 가로(도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실시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 도입을 위한 법령이 개정(12.2.1)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구역의 범위*, 가로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신설)

*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해당 지역 면적이 1만㎡ 이하인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

- ☞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유사한 관련사례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대상 지역 면적(1만㎡)의 경우, 현재 주택재건축사업 부지면적 기준이 1만㎡ 이상 이므로 이보다 작은 지역으로 설정하고 노후·불량건축물비율(2/3 이상)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설정, 건축물 층수(7층 이하)의 경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 층수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등과 위탁이나 자문에 대한 계약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10.4.15)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처분 범위를 정함(* 1차 위반시 :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 업무정지 1년)

*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없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2)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는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주택법)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1차 적발시 등록 취소

(5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침수 및 산사태) 발생을 계기로 대규모 개발이 전제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의 재해영향 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검토시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서 제외하되, 다만 개발제한구역 정형화, 적합한 대체지역 부존재 등 부득이한 경우 그 포함면적을 최소화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강구를 조건으로 해제대상지로 포함 가능하도록 함(강화)

- ☞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해제된 집단취락이 당초의 해제 취지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해제면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제취락의 추가 해제면적 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집행혼란을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타당한 비중요규제로 판단

(5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1.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2. 집합건축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조) :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이용상 독립되어 별개의 소유권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건축물로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용도와 종류를 불문
3. 다중이용업 영위 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 대중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건축물로서 음식점, 제과점, 영화관, 학원 등(참고1 참조)

- 다중이용시설, 집합건축물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공동주택 등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정 주기마다 점검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유지·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①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②(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축물, ③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정기점검 주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지자체장이 선정한 건축사에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수시점검의 경우 화재, 침수 등 재난, 재해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함. 또한 지자체장은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반되거나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 공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항목은 대지안전, 조경,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 23개 항목에 열손실방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설계·시공·감리의 유지관리 기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을 추가하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지자체장)에게 보고토록 함(강화)

☞ 6개 중요규제 사항에 대해 개선권고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동시행령 적용결과를 감안하여 향후 확대적용 필요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충분한 준비를 통해 재개정할 것을 권고(규제일몰제 3년 적용)

[개선권고 내용]

구분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규개위 개선권고(안)
①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①다중이용 건축물 ②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③다중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축물 등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① <삭제> ②연면적 3,000㎡ 이상 3만㎡ 미만인 집합건축물(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③ 개정안 유지
② 정기점검 주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경과 후 2년 이내에 한 번
③ 점검유형별 구분	• 정기점검, 수시점검, 실태점검	• 실태점검 <삭제> * 법제처 축소심의시 반영
④ 점검주체	• 정기점검 :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건축사 • 수시점검 :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사 • 실태점검 : 건축지도원	• 건축사, 「시특법」상 안전진단관리업체, 「건산법」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등
⑤ 부칙 (점검주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 공포 후 1년 이내 실시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공포 후 2년 이내 •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 공포 후 3년 이내	•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포 후 2년 이내에 실시 • <삭제> • <삭제>
⑥ 점검기준 및 표준계약서 고시	—	• 세부 점검기준 및 표준계약서 마련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종전 택시에서 버스까지 운전자격제를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2.8.1 시행)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안에 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종사자의 범위를 구체화

☞ 택시운전과 버스운전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여객운전 종사자 전 반으로 운전자격제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취지를 보더라도 버스(장의승합차 포함)운전자에 대해 '운전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는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성범죄, 살인, 마약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에 대해 운전자격 취득제한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해당 운전종사자를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으로 구체화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운전자격 취득 제한대상 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대인밀착성이 강하고, 그간의 사고사례** 등에 비춰 택시운송사업을 제한대상으로 한 것은 타당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택시(일반, 개인) 운송사업

** '05년 분당 여승무원 살인사건, '07년 홍대앞 여회사원 납치·살인사건, '09년, '10년 여승객 성폭행 및 강도 사건 등

● 천연가스 차량 연료용기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 가입행위 등에 대해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

☞ 천연가스 차량 운송업자의 연료용기 점검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용기 폭발시의 치명성이나 일상적인 정비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처분기준*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하거나 운송가맹점에 가입 후 상호변경을 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한 사업일부정지 처분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천연가스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사업정지처분에 같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 가맹가입자가 상호를 변경하지 않는 행위 등

※ 과징금은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법 제8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제재수단으로 부과액은 사업정지기간에 상응하여 결정되어, 동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행위 및 과징금액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기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결정

(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는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세부사항 마련
 - ☞ 버스 운전자격제의 시행에 따라 시험방법 및 과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택시 운전 자격시험과 유사하게 시행하며, 오히려 면접시험이 없는 점에서는 택시에 비해 규제수준이 더 낮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천연가스 차량 연료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점검의무를 부과
 - ☞ 천연가스 차량 운송사업자에 대해 연료용기 등의 점검주기, 점검사항 등의 점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점검사항이 연료계통의 손상이나 부식 등 외관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어렵지 않게 점검이 가능하고, 차량관리는 운송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운송사업자(개인택시)인 경우에도 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4시간) 이수를 통해 점검자격을 부여받으면 점검 가능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우수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인증신청의 요건으로서 선박관리업무의 실적기준*을 정함(신설)
 - * 선박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제3자 관리선박)의 비중이 1년 이상 전체 관리선박 척수의 30% 이상 또는 10척 이상

☞ 선박관리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여, 경쟁력 있는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제정안의 자격요건을 적용할 경우 신청 가능한 업체는 총 470여개 중 50여개에 불과하여 상당수 업체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아울러 동제정(안) 적용시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여 철회권고

[예 시]

	A 기업	B 기업
전체관리선박	3	50
제3자 관리선박	1	8
인증신청 가능여부	○	×
비 고	제3자 관리선박의 비중이 33%이므로 인증신청 가능	제3자 관리선박 비중이 16%이고, 10척 미만이므로 인증신청 불가

-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우수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신설)
 - ☞ 금번 신설되는 인증기준의 유지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우수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①기업역량, ②서비스 및 품질을 심사항목으로 하고, 각 심사항목별 점수가 만점의 80% (150점 만점 기준 120점) 이상이고, 세부항목별 점수가 50% 이상인 자에 대해 인증 부여(신설)
 - ☞ 인증제 도입에 따른 심사지표와 배점을 정한 것으로 선박관리업협회 및 선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이견도 없으며, 심사항목과 세부항목을 명확히 하여 인증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 규정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유지점검을 거부한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등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따른 취소절차(청문·이의신청 등)를 마련(신설)
 - ☞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취소절차로서 청문·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아니며, 선박관리업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60)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4)

■ 심사내용

- 국제해사기구(IMO)의「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의 부속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기사에 대한 보수교육 과목을 추가(신설)
 - ☞ 개정안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원의 자격요건을 국내규정에 수용한 것으로 우리 국적 선원의 자질향상을 꾀하는 한편, 국제법적으로 부적격 선원이 선박에 승무하여 외국의 항만국통제를 받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 항만국이 자국 관할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 시설, 선원자격·근로 기준 등의 미달여부를 점검하여 출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
- 국제해사기구(IMO)의「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의 부속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신설)
 - ☞ 개정안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원의 자격요건을 국내규정에 수용한 것으로 우리 국적 선원의 자질향상을 꾀하는 한편, 국제법적으로 부적격 선원이 선박에 승무하여 외국의 항만국통제를 받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교육기관 지정시 시설기준의 충족여부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함(강화)
 - ☞ 현행과 같이 서류검토만으로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부적합한 기관이 지정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인 통한 검토 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장기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해기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임시시험 공고기간을 단축(15일 → 7일)(강화)
 - ☞ 임시시험은 양성교육 또는 필기시험면제교육(1차 시험)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2차 시험)으로서, 시험시행기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해기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임시시험 대상자는 사전에 시험실시여부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시험공고기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권리침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기사 면허의 갱신 신청을 면허 만료일 6월 이내(현행은 1년 전)에 하도록 규정(강화)
 - ☞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협약 체결국의 당연한 의무 이행으로 판단되고,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갱신신청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규제강화에 해당하나, 갱신면허의 유효기간은 기존 면허 만료일부터 기산(현행은 갱신면허의 발급일)하게 되어 규제완화의 효과도 존재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1998년에 결정된 해기사 면허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수수료를 5,000원 인상(강화)
 - ☞ 해기사 면허시험 수수료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수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현재 수수료 요율은 1998년에 정한 이후 동결된 상태이며, 금번 개정안은 시험수수료 인상(5,000원)과 함께 각종 증명서 신청수수료는 면제하여 해기사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6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상위법에서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골재채취업등록증)를 규정(내용심사)
 - ☞ 골재채취업자의 폐업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6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동차정비업자와 보험사간의 정비요금 청구 및 지급절차에 관한 제도마련을 위해 양 당사자간 거래기준을 정함(신설)
 - ☞ 정비업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거래기준을 책정한 것으로 그 취지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투명한 정비요금 지급 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비업자) 허위·과잉 수리비 청구 ↔ (보험사) 정비요금 임의삭감 등

(63)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12.1.26)에 따른 후속조치로 평가의 세부지표, 점수산정방법, 공개방법(A~F등급) 등 세부사항을 정(신설)
- ☞ 상위규정인 항공법 등에서 평가대상, 평가항목, 결과 공표 등을 이미 규정하고, 동 지침에서는 세부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부처 자체 「규제개선감시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결과 공표를 순위제가 아닌 등급제로 하는 등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및 점수 계산방법, 공표방법 등에서도 크게 불합리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64)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 제동력지원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등에 대한 세부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강화)
-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대한 세부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신설)
- ☞ 상위법령 개정(안전기준 국제 조화 및 부품 안전기준 도입)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세부 시험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 고시를 개정하였고, 자동차 제작사(부품업체 포함)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이 없는 등 자동차 운행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결정

(65)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시행지침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보금자리 지구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이 민간참여자를 모집할 때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공모방식)

으로 하되, 민간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에 대해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공모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 충족되는 경우 민간에서 사업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타인 토지 수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입법례에 비교할 때 제정안의 2/3 비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사업규모를 30만㎡ 미만의 규모로 제한하는 것도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66)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 운영지침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과다보상, 부실평가 등 감정평가 관련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국회('08 국감), 감사원, 권익위, 언론 등에서 수차례 문제제기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수탁기관 장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서 발송 후 7일 이내에 선례정보를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통해 입력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사 등 정보이용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례정보 제공 해태, 목적 외 정보사용 등의 경우 정보이용을 제한(신설)
- ☞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입력정보 제공 및 정보이용자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이해관계자인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등과 협의결과 이견이 없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67)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2.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으로, 주거약자용 건설임대주택과 임대목적의 주거약자용 개조주택에 대해 의무설치항목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임대사업자가 장애유형, 휠체어 사용여부 등 입주자 유형을 고려하여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시행 중인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안전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1호)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 등에게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개조비용 지원이 가능한 바,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주택을 주거약자 등에게 공급토록 규정(법 제16조)함에 따라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에게 4년간 주거약자 등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토록 기준 마련(신설)

☞ 현재 일반 임차가구에 대하여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을 임대차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활동력이 떨어지고 임대인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주거보장을 위해 임차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주거약자 등 또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거주 또는 주거약자 등에게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개조비용 지원 가능한 바, 주거지원센터는 비용지원을 위한 대상주택의 확인 및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법 제17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21조)하고 있음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가중·감경처분기준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규정(신설)

☞ 주거지원센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유사행위와 동일한 수준이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사행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68) 자동차등록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차량의 초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아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을 연(강화)

※ 차량초과 말소등록제도는 환가가치 없는 차량을 둘러싼 여러 권리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02년 도입

☞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현재 자동차 기술 발달 등으로 내구연한이 크게 연장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차량연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실행 기회확대 및 자원낭비 최소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6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사업초기 부담을 완화하고자 납부기한을 1년으로 하고 있던 것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며, 사업종료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징수라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부기한 내 사업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과된 부담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강화)

☞ 부담금 납부기한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즉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며, 이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알 수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0)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내압용기 제조 세부기준(재료 인증시험 기준, 파열시험 기준, 제조자 검사 기준 등), 내압용기 장착검사 세부기준(가스설비 기준, 배관설비 기준, 부대설비 기준 등), 자동차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재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절차 등을 정함(신설)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단순절차적 성격이 강하며, 내용 또한 내압용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1) 철도안전법 개정안(신설 1, 강화 4)

■ 심사내용

- 현행법상 정부가 철도차량 제작의 전 과정에 관여(성능시험, 제작검사)하고 있음에도 품질관리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에 따라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제도를 도입(강화)

* 차량의 기술기준 등에 대한 형식(Type)을 갖추어 국가의 승인을 받음

**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인력, 장비, 설비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 그동안의 철도차량 결함 사고*로 볼 때, 동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가피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결정

* KTX-산천은 개통('10. 3) 이후 54건의 고장 중 52건이 제작결함으로 판명되었고, '11.8월 현재 KTX-산천의 고장율(0.46)은 KTX-1(0.07)의 6.6배

※ (유사사례) 항공기 형식증명/제작자 증명제도, 선박 건조검사제도

- 선로전환기 등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고 용품의 표준화가 되지 않아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주요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작자 승인제도 도입(강화)

* 선로전환기, 레일체결장치, 궤도구조체(레일, 침목, 체결장치) 등

☞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을 선로전환기 등 주요 용품에도 적용하고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용품의 경우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성에 견주어 과도한 규제수준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사례)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증명, 제작자증명

- 철도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도차량의 정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도노선 증가, 민자노선의 확대, 경전철 도입 활성화 등에 따라 향후 다수의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의 출현에 대비하여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의 수립·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강화)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함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철도운영자와 시설관리자의 시설, 인력 등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사례) 항공 분야 운항증명, 공항운영증명제도 등 유사제도 운영 중

- 철도시설관리자·운영자가 종합시험운행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도 자체 판단하여 개통함에 따라, 개통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적합성 여부는 정부(전문기관)가 판단하도록 개정(강화)

☞ 철도개통 후의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부가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기능인 철도관제권한과 관제지시 준수 의무 등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경전철 등 철도운영자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철도관제지시 준수 의무와 지시 위반시 제재근거를 마련(신설)

☞ 철도관제는 철도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운행을 강제적으로 조정·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사례) 항공법은 관제권의 범위·내용, 항공기의 관제준수 의무 등을 명시

(7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1, 강화 4)

■ 심사내용

-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에 착수한 이후에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사업부지 내 지역주민 등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행위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따라 기존 시행자 취소요건 외에 “지역개발사업의 진행의 정도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를 추가(강화)

☞ 지역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 등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 등을 예방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민법」상 구분지상권 존속기간이 30년임에 따라 해당시설이 30년 이상 존속되는 경우 구분지상권이 만료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상 또는 지하부분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시설운행을 위해 지하공간 등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해당시설 존속기간까지로 확대(신설)

☞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한 협의 등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토지의 입체적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하고 시행자의 재산권 보호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확대되어 그 편익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시행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선수금을 받고 운영하게 될 경우 납부자의 재산피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납부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감독기능을 강화(강화)

☞ 선수금 납부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법」 등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법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사업자나 지역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강화)

☞ 관련법률을 통합함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기업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유사하게 규정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기존 과태료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적용상 혼란 소지가 있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부과 상한 금액을 달리 설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등을 구체화하고 상한 금액을 조정하여 위법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에 맞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강화)

☞ 관련 법률이 통합됨에 따라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기준을 일원화한 것으로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사례와 유사하게 규정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73) 항만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강화)
 - ☞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4)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은 시설·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기준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강화)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등록변경신고 항목의 불일치*로 인해, 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등록기준은 시설·장비, 기술인력, 자본금으로 구성된 반면, 등록변경신고 대상항목은 대표자, 자본금, 일부 시설(접안시설·야적장)의 변경으로 규정

-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골재를 공급하거나, 골재의 선별·세척·파쇄시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제재처분 부과기준을 정함(강화)

위반행위 유형	행정처분의 기준			
	1차	2차	3차	4차
품질인증 및 품질시험을 받지 않은 골재를 공급한 경우(신설)	경고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골재의 선별·세척·파쇄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강화)	영업정지 3개월 (경고)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 ()은 현행 기준

☞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골재를 공급할 경우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는 대신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골재의 선별·파쇄신고는 채취허가에 준하는 사항인데 허가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처분보다 완화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법률에서 부과된 각종 신고, 자료제출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신설)

☞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시 골재채취등록업체(약 1,500개)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5)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신설 6, 강화 2)

■ 심사내용

- 현행 설계업, 감리업, 품질검사업, 건설사업관리, 안전진단업 등으로 나누어진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등록절차를 일원화(신설)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설계·감리 등으로 업역을 세분화하고 등록·실적 등을 별도 관리하

고 있는 실정이고, 금번 업역 통합으로 인하여 신설·변경되는 구체적 등록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하위법령 규제심사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시 결격사유로 '등록취소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신설)

☞ 개정안의 결격사유는 타 법률과 유사한 수준이며, 등록취소 후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규정도 유사 업종(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의 등록제한기간(2년)보다 완화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신설)

☞ 근거규정의 미흡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용역대금 수령, 실적관리 등에 불이익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지질조사·측량탐사업협동조합 등 하도급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유사입법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하도급 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철강구조물 제작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현행은 취소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당연취소(신설)

☞ 철강구조물 공장인증제도는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적격업체에 대한 당연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기술용역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한 경영유도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및 회계상황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 및 보증사업에 대한 감독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신설)

☞ 상호협동조직인 공제조합의 부실은 조합 구성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전적 조사·검사 규정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로 건설 분야 공제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감독기준도 수립·시행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품질관리계획은 시험·검사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하위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이므로, 전체계획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건설공사의 종합적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현행 규정은 품질시험·검사 미이행에 한해서만 시정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하위계획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관리계획 전체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그 목적에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신설)

☞ 품질관리비 계상 의무는 현행 법률에서도 규정되어 있고, 개정안에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5개 업역(엔지니어링설계업, 감리업, 품질검사업, 건설사업관리업, 안전진단업)으로 구분된 건설기술용역업을 단일체제로 통합함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업역별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통합·정리(강화)

☞ 통합된 제재처분은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한 것이며, 하도급승인 등 의무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6)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연안항*(26개소) 외에 3개 연안항(상왕등도항, 가거향리항, 국도항)을 추가지정(강화)

☞ 연안항 추가지정은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항만지정으로 인해 어로·양식 등의 제한이 가져오는 비용은 적은 반면 항만개발로 얻을 수 있는 편익(영해수호,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은 클 것으로 보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77)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한 검사대상 장비용품 중 검사기준이 없는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신설)

☞ 상위법 근거가 명확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검사기준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경쟁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8)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등을 추가(강화)

* 경유·LPG를 사용하는 버스·택시를 대상으로 '01년 대비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

☞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거의 같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시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가변동률 및 표준지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어 개발이익의 배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정함(강화)

☞ 그동안 사업자단체의 내부지침에서 세부기준을 마련·운용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안에 동 기준을 반영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사업의 규모를 (현행) 모든 사업에서 (개정) 대규모 사업(20만㎡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20만㎡ 이하 소규모 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규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사업에 대한 지가변동률 기준을 확대(5%→3%)한 것은 지난 3년간('08~'11) 전국의 지가변동률(1.767%)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유사사례(보금자리특별법 제15조)를 참고하여 해당 시·군·구와 시·도의 지가변동률 폭을 30%로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80)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시설물 건설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의 특성상 공사계획,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시공이 중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함(강화)

☞ 건설업자는 근거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감리원 입회 의무 없음)을 실시하고 있

나, 공사가 중지된 건설현장은 향후 공사재개시 붕괴, 낙반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으므로, 감리원 입회 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81)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총 공사비 200억원 미만의 도로, 철도 등 시설물 건설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의 특성상 중간에 시공이 중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함(강화)

☞ 건설업자는 근거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감리원 입회 의무 없음)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지된 건설현장은 향후 공사재개시 붕괴, 낙반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으므로, 감리원 입회 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82)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 심사결과 계약내용 및 하도급자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현행 85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하고, 발주기관이 기준점수 이하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예외사유를 구체화(강화)

☞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제도가 현실적으로 하도급자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심사기준 점수를 상향(85→90점)하여 저가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불분명하게 규정된 예외사유(객관적 자료의 제출)를 구체화한 개정안(신기술·특허 보유로 한정)은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 및 건설업계 건의를 수용한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83)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도급하한제* 적용대상을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에서 1,200억원 이상인 업체로 상향하고, 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의 상한액('12년 말까지 200억원 이하)의 적용시한을 삭제(강화)

*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소규모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 ☞ 개정안은 도급하한제 적용업체를 현실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하여 규제대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기준(1,000억원→1,200억원 이상)을 적용할 경우, 대상업체수가 감소(182개→153개)하여 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1,200억원인 건설업체는 소규모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의 효과도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8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민간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2.9.2 시행)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안에 사업시행자의 재무적요건을 구체화(강화)
 - ☞ 역세권개발의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로 인한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요건을 규정하고,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구역 지정시 토지주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등 사업이 부실화,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므로 일정한 요건의 재무건전성을 갖춘 사업자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주민 의견청취시 개발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성 악화 방지로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취득가격 평가기준일 변경 가능범위를 설정(신설)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가격변동시 토지가격평가 기준시점을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기대감으로 인한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가격 변동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 내 조사·측량이 필요한 기초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공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강화)
 - ☞ 기초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85)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시 적용하는 중상 및 경상사고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여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신설)
 - ☞ 사전 규제인 '일반교통안전진단'을 폐지하면서 사후 규제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 (유사사례) 개정안의 가중치(중·경상사고)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교통사고지수산정시의 가중치와 동일

(86) 도시철도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권자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신설)
 - ☞ 도시철도사업 면허권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철도운영자로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철도사업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87) 사도법 개정안(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사도법은 사도 개설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어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도의 허가 기준*을 제시함(강화)
 - * 도로의 구조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토지의 소유·사용 권리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허가를 하도록 규정
 - ☞ '도로의 구조기준에 맞을 것' 등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며, 개설절차 또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도는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는 시설로 안전확보가 필수적이나 사용검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도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 등에게 사용검사를 받도록 함(신설)

* 실제적으로는 허가조건에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 사용하기 전에 사용검사라는 확인절차를 두어 사도가 적정하게 개설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고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안전 등을 위해 사용 전에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규정상 사도의 관리소홀 등으로 통행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수·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사용 중인 사도가 도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행정청이 보수·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허가최소로 인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도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를 미리 규정(신설)
 - ☞ 사도 개설허가에 문제가 있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취소 후 공사중지 및 사도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당연한 절차라 할 수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도를 사용하거나 보수·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신설)
 - ☞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88)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최근 급증한 KTX-산천의 잦은 고장, '11년 광명역 탈선사고(2.11)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동 업무규정은 현행 철도안전 관련 개별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감독업무를 체계화하여 철도안전감독관의 직무로 하고, 감독관의 업무범위, 감독대상기관, 점검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신설)
 - ☞ 현행 개별규정에 의해 소속 공무원이 실시하던 감독업무를 철도안전감독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감독업무 범위를 철도안전법이 정한 개별 사업자별 안전관리의무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사례) 현재 항공안전에 대해 항공안전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감독관 업무규정'에 의해 감독관의 업무범위 등을 정함

(89) 경관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SOC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에 대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관심의제도 도입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공간구조, 경관축, 조망점, 스카이라인 등에 관한 기본구상을 포함한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신설)
 - ☞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따라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용대상 등이 제각기 다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법령에 경관심의 대상, 관련절차, 사전계획수립 기준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일선의 혼란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

(90)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현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행위허가로 제한하고 있고 다만, 주민공람공고일 이전에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 지정 때까지 착공한 경우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공사가 가능하나, 보상투기 예방을 위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임(강화)
 - ☞ 보상투기 차단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생활에 필요한 건축을 위해 허가받은 주민의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되므로 위험소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된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경우, 동일한 보상범위 등의 적용을 위해 모든 유사한 법령에 대하여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권고
- 현행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행위허가 대상에 '토지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공공보상비의 부당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허가 대상에 '토지합병' 추가(강화)
 -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주민공람공고 이후 행위제한 대상에 토지합병을 포함하여 공공보상비의 부당한

증액방지가 기대되며, 현행 법률에서 유사한 행위허가 대상으로 '토지분할'이 규정되어 있고, 유사 개발 사업 법률인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도 '토지합병'이 행위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91) 2015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회장·마스코트 등 세계물포럼을 상징하는 것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신설)
 - ☞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행사의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국제행사 관련법령에서도 유사사례를 찾을 수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신설)
 - ☞ 국제행사의 고유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규정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국제행사 관련법령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세계물포럼과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신설)
 - ☞ 제정안의 과태료 부과규정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유사사례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92) 항공법 개정안(신설 3, 강화 4)

■ 심사내용

- 항공기 등에 대해 정비(개조, 수리 포함)를 하는 경우 항공정비사로부터 부품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만으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은 장기간 정비경험이 없는 자나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정비경험이 없는 자도 정비가 가능하여, 결국 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비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감항성(堪航性)*을 확인받도록 개정함(강화)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제민간항공협약은 항공정비사는 정비 대상 항공기에 대해 능숙, 최근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갖추도록 하고, 정부가 승인한 정비조직 등으로부터 정비사항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으로 국외를 운항하는 비사업용 항공기에 종사하는 승무원도 피로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외 운항 비사업용 항공기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시간 등을 제한

* 현재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만 피로관리 대상

- ☞ 개정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외 운항 비사업용 항공기에 종사하는 승무원도 피로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예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항공법은 항공에 대해서는 항공기 정비 및 급유 등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현재 자유업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서비스업 등록기준 등을 마련함(신설)

- ☞ 개정안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등록기준 등은 시행규칙 개정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가 급증하고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의 기장도 항공기운송사업 및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등에 대해 인정받도록 하고 있는 '운항자격' 인정을 받도록 함(강화)

* 비료·농약살포, 자재운반, 사진촬영, 응급구호, 항공순찰 등

-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사고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간의 사고현황 및 업무위험도, 사고예방적 측면 등에 비추어 자격인정 대상으로 하는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농약살포, 건설자재 운반 조종사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 운영 중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농약살포, 건설자재 운반 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항공권 예매시 항공사 등이 이용자에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세금 등을 제외한 기본운임만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당초 안내받은 요금과 최종 부담액과의 차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고의적으로 중요정보를 누락한 채 광고행위 등을 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많음에 따라 항공권 조회·예약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제공하도록 하는 총액운임표시제 도입(신설)

☞ 현재 항공사 등은 자율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이며,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추가적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결정

- 모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선호도가 높은 날짜·시간대에 운항을 희망하므로 특정시각대에 운항이 집중되므로 공항 내 원활한 교통 소통과 공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공기 출발·도착시각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여 정부가 항공기 운항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현재 훈령(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시행 중*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이며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 기상악화등이유(실제로는예약승객 부족)로 한항공사의 자의적, 의도적인 결항등에 대비하여 결항 등 사업계획(운항스케줄 등) 변경시 신고토록 하고, 동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동 개정안의 신고의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법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으로 그 취지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결항신고는 '신고행위'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성에 대한 조사부분은 항공사의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결항에 대비한 최소한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항공사가 유선으로 해당 공항 항공정보실에 결항을 신고하면 정보실 담당자가 이를 운항정보시스템에 입력 처리

(93)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종류 확대(1종→4종) 및 인증 종류별 운용범위를 설정(신설)

* 자체중량 11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2인승 이하 항공기

☞ 종전 단일기준에 의해 운용하던 경량항공기 안전인증을 제작형태 등에 따라 인증기준을 다양화하고,

인증종류에 따라 그 운용범위(탑승인원, 비행거리 등)를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적 성격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94)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제원표 작성 및 제원관리번호 부여 등에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신설)

☞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을 위해 필요한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원표 작성방법, 자기인증 표시방법 등 단순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95)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방법으로 대상물건의 가액에 일정요율을 곱하는 종가제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수와 업무량 불일치, 과다감정평가의 유인 및 감정평가사가 고액물건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현행 종가제에 따른 수수료의 70%에 신규 도입되는 종량제에 따른 수수료의 30%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임(강화)

☞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를 물건의 종류별 업무량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종량제를 일부 도입하여 현행 종가제 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적평가의 경우 업무유형이 다양하여 표준화가 곤란하고 소액평가 수수료 증가 등이 우려됨에 따라 유형화가 용이한 공익사업 보상평가 등 공적평가부터 적용하고, 종량제 전면 도입시 혼란이 우려되므로 30%만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타 물건에 비해 업무량이 균일하고, 지역간 편차가 크지 않은 토지, 건물에만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정평가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였으며, 경쟁제한성은 없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9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고층 건축물(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의 외벽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사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고층건축물 외벽에 난연재료를 사용할 경우 화재 확산 방지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 요건을 규정(강화)

고층건축물 외벽의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다음 중 하나의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워야 함

1. 한국산업표준 KS F 305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焰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 고층 건축물의 외벽을 통한 화재확산을 차단하여 대형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 확산 방지구조 사양은 IBC의 규정을 따르되 국내 생산 자재규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KS자재를 사용토록 한 것으로 관련업체(한국발포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경쟁제한성은 없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9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현행 지침에서 입찰참가가 부적절한 자(세금 미납, 등록기준 미달, 금품제공 등)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입주자, 관리주체 등 입찰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입주자, 사용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 포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등을 추가(강화)
- ☞ 건전하고 공정한 입찰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 관련자 등에 대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것으로 당연한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제한경쟁·지명경쟁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경우 과도한 제한조건 등을 설정하여 의도적으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하는 부작용 등이 우려되므로 경쟁입찰 중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일반경쟁입찰로 한정(강화)
- ☞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요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편법이 통하지 않는 건전

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결과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찰시 전문가(기술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필요시에 신뢰성 있는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상한가를 공고하여 발주자·입찰자간 분쟁소지를 개선하고,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으며 상한가 아래선에서 낙찰되므로 발주자(입주자대표회의) 재정부담 해소 등 순기능이 예상
- 제한경쟁입찰시 열거한 조건 외에 조건을 무제한으로 추가할 경우 비상식적인 입찰참가조건을 제시하는 등 분쟁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등’을 삭제하여 제한가능한 대상을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으로 명확하게 함(강화)
- ☞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조건의 모호성을 개선하여 분쟁소지를 없앤 것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고 제도 명확화로 민원 해소 등 편익이 발생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98)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수탁자는 재산권 보호와 휴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산권에 중요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함(신설)
- ☞ 위탁재산의 보호와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규정으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은 점과 유사입법사례(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5조)를 감안시 규제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99)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신설 2, 강화 4)

■ 심사내용

- 이산화탄소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 및 11개 선종* 선박의 건조 및 개조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허용값을 초과하여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서는 안 됨(강화)

*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가스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냉동화물운반선, 경용선, 여객선, 로로 화물선(차량운반선),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닛), 로로여객선

☞ 국제협약의 체결국으로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보호위원회(MEPC)”의 국제협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규제대상이 소수(연간 약 18척)로 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국제항해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 11개 선종의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신설)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보호위원회(MEPC)”의 의결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세부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소수(약 650척)로 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를 받는 선박과 선박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를 비치해야 하는 선박은 에너지효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에너지효율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에너지효율증서를 발급함(신설)

☞ 법 제41조의2(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 및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규제이행 비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에너지효율검사 수수료는 연간 약 4억 4,000만원으로 추정
(현존선 1척당 76만 8,000천원, 신조선 1척당 1,535만 1,000원 추정)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방법, 계산시의 최소 추진출력, 허용값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의 비치요건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 및 교체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음(강화)

☞ 법 제41조의2(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 및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명령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종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선박의 해양오염 방지설비 및 방오시스템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교체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국제협약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에너지효율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강화)

☞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개정된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선박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강화)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부과기준(100만원 이하)은 유사사례(동법 제132조 제4항)를 감안시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0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남방큰돌고래를 해양포유동물*로 지정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강화)

*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함

☞ 해양생태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보호대상 해양포유동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남방큰돌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IUCN)에서 포획이 금지된 종이며, 2009년 기준으로 114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해양동물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

-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 등 특정 해양생물 8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무단포획, 가공, 유통 등을 금지하도록 함(강화)

* 남방큰돌고래, 기수갈고둥,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바다거북, 가시해마, 복해마

☞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생물종의 보전 및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8종은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멸종 위기종으로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

(101)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시 설계, 구조안전, 허가, 감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해체시 신고서 제출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 따라 건축물 철거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와 함께 해체공사계획서(해체작업 방법 및 순서, 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현장안전 조치방안 등)를 함께 제출토록 함(강화)

- ☞ 건축물의 안전한 철거와 건물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현재 표준시방서에 따라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임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석축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홍수나 기타 재해로 붕괴될 경우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손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시 사람의 키 높이에 해당되는 2m 이상의 옹벽은 콘크리트 구조를 의무화(강화)
 - ☞ 사람 키 높이 이상에서 석축 붕괴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키 높이 이상의 옹벽은 콘크리트로 할 필요가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 설치비와 석축의 설치비가 비슷하므로 추가비용은 거의 없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나, 과도한 규모·색채 및 획일적 디자인 등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므로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간판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입면 도상에 광고물 설치계획을 명시하도록 함(강화)
 - ☞ 건축설계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물 설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표기 비용이 미미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도로명 주소법」 시행(11.8.4)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 도로명 주소란을 추가하는 것임(강화)
 - ☞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식'을 보완하는 것으로 서식 보완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02)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도시개발사업지역 환지를 위한 환지단가, 환지면적, 권리면적, 청산금 등에 대한 정의에 대해 규정(강화)
 - ☞ 환지설계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도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관련 정의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현재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정의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 및 권리관계 영향 등은 없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103) 차수설비 설치기준 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개정된 시행규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4.30)에서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구체적인 차수설비 설치기준 규정(강화)
 -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침수가 될 수 있는 높이'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규정하였고, 적용대상이 미미(전국 3개동**)하며 신축 건물에만 적용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3조(예상침수높이의 결정)①예상침수높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피해나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높이
2. 침수흔적도에 의한 침수높이
3.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 ** '11년 말 현재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1만㎡ 이상인 건축물은 3개동(4만 8,504㎡)에 불과(전체는 945동(47만 1,654㎡))

(104) 건축학 교육인증기준 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개정 건축사법(제13조)에서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실무수련(3년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외 건축학 학위 등을 이수한 경우 국내 건축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하게 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강화)
 - ☞ 국외에서 건축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국내 인증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증심사를 하려는 것으로 규제완화 효과, 법, 의학 등 전문학위과정의 경우 기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자국외의 학위(건축학 교육과정)에 대해 자국의 교육과정과 동등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105)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건축사가 건축사자격 등록기간(5년) 중에 이수하여야 할 실무교육시간(60시간)의 교육종류별 이수시간을 정함(신설)

* 건축사법 개정('12.5.31 시행)에 따라 건축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등록기간(5년) 중에 총 60시간의 실무 교육을 실시(영 제30조1항)

- 윤리교육 5시간, 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자기계발 15시간 이상
- 계속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간 이수시간은 최대 20시간으로 제한

☞ 시행령에서 정해진 60시간에서 건축사의 직업윤리, 전문성, 자기계발을 고려하여 교육종류별 이수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한 것으로 관련 단체(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106) 개항질서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60일 이내에 우리나라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은 허가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80일 이내에 입항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허가대상기간을 확대함(강화)
- ☞ 동 사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12.4.13, 광명호)에 따른 국가안보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규제대상이 연간 500여척으로 한정되고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억제 유도 효과, 미국과의 공조체계 유지 등을 위한 정책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07)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 정박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여야 함(신설)

* 선박을 탐지하거나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좌초·충돌 등의 위험 관찰, 사고 예방 정보 제공 등)

☞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것으로 규제대상 선박이 19만 3,000여척으로 한정되고, 「선박안전법」 등에 의한 무선통신장비 설치의 기의무화되어 추가비용의 발생이 없으며, 유사 입법사례(해사안전법 제36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에 대한 청취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청취의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과태료 유사사례(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 제15호)를 감안시 부과수준(300만원 이하)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108)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순환골재 생산비율'을 추가(강화)

* 순환골재 생산비율(%) = 순환골재 생산량 / 건설폐기물 처리량

☞ 현행 규정에서도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시 순환골재 생산비율(건설폐기물처리능력, 순환골재생산능력)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인증심사는 생산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품질인증을 받게 되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시 평가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현행은 시설기준만으로 품질인증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109)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현행 규정에 의하면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순환골재 처리시설'이 변경될 경우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을 통해 재심사기간(1개월) 동안 품질인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강화)

☞ 품질인증의 재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과거에 받았던 품질인증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례에서도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사용을 중지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규정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에 대하여 사후관리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인증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순환골재의 공급을 중지하도록 함 (강화)

- ☞ 현행 규정에 의하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정요구를 받더라도 순환골재의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고, 유사입법례에서도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10)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업무 시행예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국가표준 및 인증기준의 제정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신설)
- ☞ 상위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한 단순절차이며,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도 관련 제품의 성능(품질) 확인을 위해서는 교통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 수준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1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현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각종 공사 및 용역의 계약의 방법은 경쟁입찰에 따라야 하나, 그러나 성격상 유사한 물품의 구입과 매각 및 잡수입 등의 취득 등과 관련된 계약방법이 누락되어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등 사업자 선정시 주민운동시설 외부 위탁, 물품구입 및 매각, 잡수입 취득, 보험계약 등도 경쟁입찰 대상항목에 추가하는 것임(강화)
- ☞ 하위 지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규정·운용하는 사항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비리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추가 비용부담은 없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 업무상의 위법행위 이외에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에 정하는 사유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관리규약 제·개정시 형식적으로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쳐 주민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게시판 공고 및 입주인 개별 통지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임(강화)

- ☞ 입주인의 편의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개정시 공고절차를 강화하여 입주인의 관심과 참여 유도로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현행 규정상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외에는 해임이 불가함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준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임납발 등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해임요건을 명시한 것임(강화)

- ☞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준칙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임납발 방지 등 주택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해임요건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동별 대표자는 선출직으로서 해임요건은 선출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최소한의 규제라 판단됨

(1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 개정('12.6.1)으로 산업단지의 실수요시행자 개발 토지 등에 대한 의무사용 기간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을 정하는 것임(신설)

- ☞ 법률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사항에 대한 부과절차 및 납부기한 등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납부기한을 30일로 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7조(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의3(30일)

(113)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항공기 정비업자가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이 정비조직기준에 적합함을 인증받아야 하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정은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갱신신청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신설)

- ☞ 정비조직인증의 갱신 신청의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하여야 하고, 종전 규정에서도 '기타' 신청 수수료로 징수하던 것을 갱신시로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14) 항공기 기술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배기가스 배출증명 면제대상 엔진이라도 엔진의 일련번호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엔진의 배기배출물 검사시 시험연료에 매연감소를 위한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며, 엔진의 소음 측정시 소음측정을 위해 적정한 항공기 이륙속도를 정함(신설)
- ☞ 항공기 엔진 등의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물 기준에 관한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항공기 기술기준에 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15)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 등 향후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60㎡ 이상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현행 20% 이상 절감(60㎡ 이하 15% 이상) → 30% 이상(60㎡ 이하 25% 이상) 절감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창호와 벽체 등에 대한 단열 설계기준을 강화하며 사업계획 승인시 평가프로그램(열관류율 측정)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강화)
-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25년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없이 보급하려는 것으로 단계적인 감축전략에 따라 '16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시행 중인 사항임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116) 선체보호도장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의 원유운반선은 화물탱크 상부 갑판구역과 화물탱크 내저판 등에 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도장기준을 준수해야 함(강화)
- ☞ IMO의 규정을 국내규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 및 기준은 IMO의 권고사항을 적용하였고, 규제 대상은 소수('09년 6척 이후 없음)로 한정되며, 규제비용도 크지 않은 점(척당 약 9,000만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17)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IMO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도선사*용 사다리의 구조, 모양 검사 및 발판의 크기 측정 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변경하고, 강화플라스틱(FRP) 선박에 사용되는 난연성 수지 액**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정함(강화)
- * 항만·운하·강 등의 일정한 도선(導船)구역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자 (국토해양부 장관 면허)
- ** 불이 붙어도 잘 번지지 않는 성질의 점액
-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규제대상은 소수(14개사)로 한정되며,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가 크지 않은 점(건당 약 70만원 ~ 500만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1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6, 존속기한연장 1)

■ 심사내용

-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대상으로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어 건축 관계자 기록관리가 부실함에 따라 건축주 외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함(강화)
- ☞ 부실공사 방지와 건축관계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시공자 및 감리자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 정비를 위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에 대상시설이 면적규모로 정하는 시설이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제2종시설을 제1종시설 중에서 면적 규모에 따라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강화)
- ☞ 「건축법 시행령」 개정('11.6.29)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누락된 용도변경 절차를 규정하여 불법 건축물의 양산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나 구조안전 확인 대상을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임(강화)
 -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현황 및 피해상황을 고려할 경우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경우 내진설계 비용만 약 1,500억원에 달하여 건축주의 추가 비용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철회권고(중요규제)
- 현재 단독주택, 공동주택, 조산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도 고시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함(강화)
 - ☞ 화재안전에 취약한 고시원과 산모, 신생아가 이용하는 시설인 산후조리원을 복합 건축할 수 없도록 용도를 지정하는 것으로, 당연한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비용절감 등 건축 편의 도모를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오히려 노출 설치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비용도 과다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강화)
 - ☞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준공 후 개별로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비가 적고, 소규모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방송수신환경이 개선되고, 무질서한 안테나를 없애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수의 목적으로 단독주택 내부를 불법 개조하여 가구수를 늘리는 사례가 많아 무단으로 가구수 변경시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11.12.30「건축법 시행령」 개정) 신고대상 대수선 위반시 시가표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 허가대상 대수선 위반시는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허가대상 대수선 위반시 불법 개조 건물주에게 건물 시가 표준액의 10/100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로 신고대상 대수선 위반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강화)
 - ☞ 대수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허가대상 주택의 대수선 등 위반시에도 신고대상 대수선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 건축물의 양산을 방지함이 타당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존속기한연장으로서 현행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100㎡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1.12.31까지 검토하여 포함 또는 유지 조치(재검토 일몰)
 - ☞ 건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설계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빈발할 우려가 있고, 건축물

의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원안동의(중요규제)

- 현행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너비 6m(2차선)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1.12.31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조치
 - ☞ 교통수요가 많은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물 내 차량 출입, 소방차 진입 등을 위한 기본 요건을 정한 것으로 교통흐름 및 안전에 필요하고, 그간의 제도 운영 및 관계기관의 의견 결과에 따라 현행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동의

(119)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안전 및 시설관리를 총괄하고 입주민의 각종 이해관계 등에 대한 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관련 교육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후 단 1회만 이수토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 숙지 등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곤란함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3년마다 교육(4일)을 받도록 함(강화)
 - ☞ 개정안은 “근무 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철회권고

(120)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유탱커(유조선)의 밀폐구역에 출입하기 전에 그 밀폐구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밀폐구역 출입시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강화)
 - ☞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의안을 국내 규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농도기준은 IMO의 권고사항을 적용하였고, 규제대상이 소수(연간 약 723척)로 한정되는 점과 「산적 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가스검지장치의 비치기 기의무화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컨테이너 점검대상 범위를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모든 컨테이너로 확대 적용함(강화)
 - ☞ 국제해사기구(IMO)의 권고사항을 국내규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은 연간 약 68만TEU*이나 선

박별 표본검사를 시행(약 1.96%)하여 검사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고 선박의 점검은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추가비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1 TEU : 길이 20ft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의미

- 위험물운송적합증서*의 발급을 위한 선박시설의 조사·확인 기간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즉시→3일)을 연장함(강화)

* 선박 건조 후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최초로 1회에 한하여 위험물운송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발급하는 증서

☞ 위험물운송적합증서 처리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사항목과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처리기간을 3일로 연장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규제대상이 소수(연간 약 8척)로 한정되고 피규제자의 추가비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21)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부품의 제작자 등(제작, 조립, 수입)은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기인증 표시 없이 판매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표시없이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신설)
- ☞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량부품의 판매금지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기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규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안전장치는 불법 조작하여 운행시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함(신설)
- ☞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동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가피한 규제라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결정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1, 강화 3)

■ 심사내용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해일·폭우·태풍 등 대규모 재해발생 빈도증가에 따라 사전 예방

대책 필요함에 따라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신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내 건축행위 등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당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경우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용과 절차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 등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 계획적 개발 도모하려는 것임(강화)

☞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과다한 비용·절차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간소한 방식으로 수립되는 성장관리방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동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하는 등 완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사업중단시 원상회복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적용규정 또는 준용규정이 없음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강화)

☞ 현재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타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임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규정 이전에는 제재대상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로 규정하였으나, 포괄적 조항에 의한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09.2 법률 개정시 제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제재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처분의 법적 근거가 결여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보완(강화)

☞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안정성 확보 및 법치주의 원칙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률 개정시 누락된 부분을 복구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1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당초 계획대로 개발되지 않고 해제된 상태로 방치될 경우 해제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특혜소지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3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이 실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서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제외시 동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강화)

☞ 개발사업 미시행 등 해제목적 상실한 경우에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유사사례*인 도시개발법을 참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 없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시장·군수)에서 관리계획이 미수립된 대규모시설에 대한 행위허가 처분을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행위의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함(강화)

☞ 법에서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행위허가를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입지 억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과 밖의 지가차이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지가가 구역 밖의 지가보다 높은 경우 부담금 부과가 불가함에 따라 당초 부담금 제도 도입 취지인 구역관리와 무분별한 시설입지 방지 및 개발제한구역 필지간 형평성 확보 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가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강화)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부담금 확보를 위해서는 지가차이가 없거나 역전현상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금액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통령령에서 일정금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 개정시 규제수준의 과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 이행강제금의 상한규정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도 이익이 있을 정도의 대규모 불법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실정임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1억원 한도를 폐지(강화)

☞ 이행강제금 상한제도가 오히려 대규모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상한을 폐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건축법」, 「농지법」 등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 예고시 이견이 없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124)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선교에서 차량구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차량구역 개폐상태 확인용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활어 운반차량 등에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난연성(難燃性) 전선을 비치토록 함(강화)

☞ 카페리선박의 화재사고에 대비한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약 32척)로 한정되고, 규제비용(약 6,800만원)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택배 분야 중 집화·배송 분야만을 담당(택배전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서류 이외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택배 전반을 운영하는 택배사업자의 인정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함(강화)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제도에 택배전용 분야를 신설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현행 금지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며,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택배 분야의 부족 차량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적절하므로 원안의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택배 분야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을 하여서는 안 됨(강화)

☞ 택배전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른 분야의 화물운송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차량의 공급과잉 상태인 화물운송시장을 보호하고 택배 분야에 한정하여 차량을 공급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원안의결

- 택배목적 운송사업 허가자는 3년이 지나야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만 한정하며, 택배에 참여하는 자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양도를 하여야 함(강화)

☞ 택배 전용 화물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

은 인정되나, 화물운송사업에서 양도·양수기간의 제한이 최고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일반화물자동차와 같이 2년으로 하고, 지역간 수급 불균형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관할관청 이외 지역으로 양도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둘 것을 개선권고

- 택배 분야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택배 분야 이외의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1차 위반 :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위반 : 허가취소)을 할 수 있도록(강화)

☞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 금지”규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단계를 2단계(1차 : 사업정지, 2차 : 허가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규정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유사사례를 감안시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3단계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126) 건축법 개정안(신설 2, 강화 5)

■ 심사내용

- 현재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및 청소년 탈선 등 우범지대화가 우려되고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발생원인이 대부분 소송, 부도, 소유권 분쟁 등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로서 행정대집행, 철거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대상을 연면적이 5,000㎡ 이상 건축물에서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강화)

☞ 현지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에서도 부도·방치된 건물의 경우 예치금 외에 다른 지원수단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예치대상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현지 담당자들은 재정여력이 많은 5,000㎡ 이상 건축물보다 오히려 그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예치금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1,000~5,000㎡의 건축물 허가건수, 방치건축물 증가 추세 및 건축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에치금 예치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원안동의

-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붕괴와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에서는 소규모 건축물도 허가를 받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인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함(신설)

☞ 재해취약지역은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붕괴 사고가 높은 지역으로, 동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현재 도시지역에서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이고, 대상 지역이 한정(전국 168개소)되어 허가 건수가 미미(연평균 3~4건)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공사규모에 무관하게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공품질 저하 및 건축물 붕괴 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시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강화)

☞ 대수선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경우 건축주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건축주가 꼭 필요한 경우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우려되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대수선시 감리적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시 공사의 특성, 위험도, 기술수준에 따라 계약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철회권고

- 현재 건축물 철거 신고 외에는 관리기준 절차가 없어 시공자 단독으로 철거함에 따른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철거공사시 감리자를 두도록 함(강화)

☞ 현재 해체공사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12.3.7, 국토해양부 발표)을 마련하여 해체공사시 동 요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 표준시방서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토록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 추진 중이며, 외국(미국, 영국 등)의 경우 철거시 감리적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시 검증된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도입의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철회권고

-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미관지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고, 도로와 연접한 건축물이 가로시설물 및 광고물과 잘 어울리도록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신설)

☞ 특별가로구역 설정 대상이 “미관지구” 내 도로변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어 해당 주민의 건축편의가 증대되고,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원안동의

-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장기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산 부과하는 근거 마련(신설)

☞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 도모가 기대되고 주거용 건축물은 가산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서민 주택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특별가로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계획과 건축협정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

별가로구역 내 건축물등의 형태관리계획이나 건축협정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형태관리계획과 인접 대지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허가권자에게 인가받은 건축협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2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규정은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에 대비하여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사유를 축소(강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현행	개정안
①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상호협력평가 95점 이상, 회사채 BBB+ 이상)	삭 제
② 회사채 신용평가 A 이상	유 지
③ 하도급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	'1,000만원 미만'으로 변경
④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	유 지

☞ 개정안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대·중소 건설업체간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예외사유①과 관련하여 원도급자가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라는 이유로 인센티브(보증의무면제)를 부여할 경우, 오히려 하도급자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외사유③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건설공사일수록 하도급자는 영세한 건설업체이므로 오히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1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산정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시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도급자 변경을 요구하는

데, 금번 개정안은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 하도급률이 82% 이상이라도 심사대상에 포함(강화)

☞ 개정안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합의한 사항이며, 신설된 적정성 심사대상(하도급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은 최근 3년간 최저가공사 낙찰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치이므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최근 3년간 최저가공사 평균낙찰률(72.56%)×적정성심사하도급률(82%)=59.5%

- 개정 법률에서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당초 5,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수준을 조정(2배)하고, 내부행정규칙으로 운영 중인 처분유형 결정기준(영업정지, 과징금)과 가중·감경기준을 상향입법(강화)

☞ 개정안의 처분유형 결정기준과 가중·감경기준은 실질적인 규제내용의 변경없이 행정내부규칙을 상향입법하는 것이고, 과징금 부과수준의 상향 정도는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강화)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사실을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미통보한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 1년 내 2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부과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미통보한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1년 내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400만원 부과

☞ 상위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법률에서 정한 상한액(500만원)을 준수하였으며, 그 밖에 이해관계자(8만 5,000여개 건설업체)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29)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0)

■ 심사내용

- 도로구역 예정 공고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함

☞ 도로 예정지역 공고후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에서 정한 행위를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다수의 개발사업 관련법령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체계적 도로관리 위해서는 점용물 관리의 전자화가 필요(현재 운용 중)하고, 이를 위해 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도면 등)를 제출토록 함
 - ☞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의 취지가 인정되고, 특별한 규제부담이 없으며, 전자문서는 일반적인 문서형태로서 그동안 도로점용 허가신청시 관행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공사장’ 진출입로의 점용행위가 점용허가 대상에 없어 다른 사유인 ‘공사용 판자벽 등’의 일시점용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에 ‘공사장’을 포함시킴
 - ☞ 현재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행위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할 마땅한 항목이 없어 다른 항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도로구역을 진출입로로 점용한다는 점에서 주유소 등의 점용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행위를 점용 허가대상으로 하고 점용료율을 부과하는 것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고가도로 노면 아래에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물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 해당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대상 제외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결정
 - ※ 서울 외곽선 중동나들목 교각하부의 유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 공사비 900억원, 물류비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 도로 점용 공사시 신호수 배치, 공사안내시설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결정
- 준공후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도로관리청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에 열수송관을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함
 - ☞ 관로시설 및 열수송관은 파열사고시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요지하매설물’로 분류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은 점용료 증가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가를 반영·현실화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산식은 도표형태로 단순화시키는 등 점용료 조정산식을 변경함
 - ☞ 점용료 증가율이 높은 구간에 대한 조정률을 개선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도로구역에서 사설안내표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임의로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의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상의 문제로 다수 민원 발생됨에 따라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도로점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함
 - ☞ 현재 전주나 수도관, 가스관 등 주요 공공 점용물의 ‘점용장소’에 대한 점용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도로의 미관이나 안전 등을 위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장소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은 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전자도면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청서 및 준공도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관련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취소사유가 도로점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하여야 하는 여객의 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신설)
 - ☞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승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안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한 것으로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집행사항에 불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일반택시사업자에게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규정함(강화)

☞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의 취지를 감안할 때, 소속 운수종사자의 차량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 시설면적을 확대하고 해체재활용업에 대해 유류유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함(강화)

☞ 중고자동차의 노상주차, 노천에서의 해체작업, 해체부품의 노천보관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매매업과 해체재활용업의 사업장 면적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존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시설확보의 부담이 없는 점, 매매업의 경우 5개 이상 사업자가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0%의 면적 감면혜택을 주는 점, 해체재활용업의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의 면적 확보의 경우에도 유예기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최근 종전 매매업소에서 퇴직 등을 한 중고차딜러가 매매사원증을 반납하지 않고 종전 업소의 사원증으로 거래를 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종전 업소에서 퇴직한 매매사원이 사원증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상사 명의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사원증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매매사원증 발급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신설)

☞ 그간의 매매사원증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사원증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분실신고나 연합회가 조치한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대상 여객자동차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중 광역급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강화)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좌석안전띠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여객자동차를 착용의무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 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사항에 택시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신설)

☞ 법령의 취지상 무자격자의 운전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어 지도·감독 소홀로 무자격자에게 자동차가 제공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수준이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3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책임점검자 자격, 사전교육 및 교육기관, 관리주체의 건축물 도면 준비, 관리주체와 점검자간 점검비용에 대한 대가기준 및 계약조건을 정함(신설)

☞ 법상 점검업체의 경우 책임점검자 자격자를 기보유하고 있으며, 사전교육의 경우 사이버 교육과정 이용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점검에 필요한 도면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실측을 통하여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건축주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134)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 설치지침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미관을 증진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1개 업소당 1개 간판 설치 원칙, 입간판 및 네온류, 점멸등을 이용한 간판 설치 제한, 건축물 사용자의 성명, 주소, 영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항 불표시, 가로형·세로형·돌출형 간판 사용원칙 등을 규정함(신설)

☞ 기존의 옥외광고물 관련법령 및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위치한 지자체의 관련 조례 등을 추출·반영한 것으로, 동 지구에서 일관성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1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청을 한 경우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천대상(pool)을 정하며, 평가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형, 과태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추천을 제외함(강화)
- ☞ 선출직인 시·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도, 감정평가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136) 주택법 개정안(신설 1, 강화 4)

■ 심사내용

-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고시하여 '10.12.1일부터 운영 중인 바, 법률에 근거없이 고시로 운영 중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신설)
-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기준 및 절차, 인정 유효기간, 수수료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강화)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인정제도의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비용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공사 및 입주자간의 분쟁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건설 하자 조사 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관련업계(주택협회)에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에 따라 필요한 규제로 판단

-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관리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만족도의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강화)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r.go.kr)을 통해 입주자 만족도를 조사·공개함에 따라 추가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소송비용 및 성공사례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입주민과 분쟁 발생 우려가 있음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임(강화)

☞ 보증금의 사용 용도 명확화 및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분쟁 예방 및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협회 등 관련업계에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에 따라 타당한 규제로 판단

(13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해역이용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절차를 규정함(신설)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

☞ 해역이용 평가대행자의 원활한 등록관리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약 42개 업체)로 한정되고, 유사사례(환경영향평가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평가대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협의 등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계약체결을 포함)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강화)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을 규정하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약 42

개 업체)로 한정되고, 유사사례(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38)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해외수주 건설공사의 실적확인(재확인)을 위해 해외건설협회는 실적신청기업에게 추가적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의 재확인시 사실관계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및 수사기관에 의해 실적조작, 허위신고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협회는 발급된 실적증명을 취소(신설)
- ☞ 시공능력평가제도하에서 건설업체는 기성실적을 허위로 신고할 유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 자료는 최초 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원본 및 보완자료에 해당하므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해외건설공사실적의 사실관계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 허위신고로 판명된 경우 해당 공사의 실적증명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규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39)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시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법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강화)
- * 타인의 요청으로 수출입화물의 운송설계 및 계약, 운송관계 서류 작성, 통관 수속, 화물추적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물류 주선사업 즉, 포워딩(forwarding)업
- ☞ 외국인·외국법인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약 130개 업체)로 한정되고, 유사 입법사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정기준 유지여부의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시행하고,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신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정책 실천을 위하여 우수 녹색물류기업을 육성·발전시키려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세부 지정 절차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유사 입법 사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급하는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강화)

☞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행정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 입법사례(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종합물류기업 인증 및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취소 이후에 증서 반납과 사용 중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강화)

☞ 인증·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사용을 중지하도록 규정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200만원 이하)이 같은 조항의 유사사례를 감안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

(140)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06년부터 행정규칙(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으로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운영해 왔으나,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상향입법하도록 하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기존 지침의 내용(기준, 절차)을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시행규칙에서 그 세부사항을 정함

* 철도안전법 개정('12.6.1)으로 법률에 근거조문을 마련

☞ 현행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이관한 것으로 규제의 내용에 변화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41)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9, 강화 1)

■ 심사내용

-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운영하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조건(공제 또는 시중보험 가입,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상향하여 정함(신설)

☞ 상위법에서 위임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시행 중인 국토해양부 훈령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사항이며,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약 67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해소를 위한 운송약관 신고의무를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운송약관의 내용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신고한 운송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약 89개 사업자)되고, 유사입법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될 때에는 사업 승계인의 신고의무가 법제화(상위법 개정)됨에 따라 정해진 승계신고서에 양도·양수계약서, 합병계약서 또는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승계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약 89개 사업자)되고, 유사입법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신고만 하면 됐으나, 해운법이 개정되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함(강화)
 - ☞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허가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약 64개 사업자)되고, 유사입법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감안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여객선사는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운항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시행 중인 국토해양부령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약 67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항관리자를 선임하고, 내항여객사업자가 운항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운항관리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시행 중인 국토해양부령의 내용을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반영하는 사항이며,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약 67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여객선의 해상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신분을 즉시 파악하여 신분확인 및 피해보상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승선신고서의 작성·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기재사항 등을 정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해상여객의 승선신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시행 중인 국토해양부 훈령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항해 중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쾌적한 여객환경을 위해 정원초과 승선요구,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여객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상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 입법사례(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감안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
- 해운중개업 등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갱신되는 날부터 3년으로 정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약 2,962개 사업자)되고, 유사 입법사례(관세법 시행령 제231조)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류세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유류세 보조금의 중복청구, 관련 서류를 보존기간 이내에 임의 파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신설)
 - ☞ 유류세 보조금 지급관련 문서의 보존과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연간 약 300개 사업자)되고, 유사 입법사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4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저장설비 등의 시설 장비 기준과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자본금 기준(2억 이상) 등을 정함(강화)
 - ☞ 상위법에서 위임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약 6,800여개 IT기업)되며, 유사

입법례(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4) 등을 감안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상위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물류정보망 개념이 폐지되고, 이를 확대·개편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개념이 도입되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의 기준(관련분야 기술자 5인 이상 보유)을 정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약 6,800여개 IT기업)되며, 유사입법례(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4)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
-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으로 하향 반영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보증보험의 가입기준(1억원 이상) 등을 규정하고, 등록기준 준수여부의 주기적 신고,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사유 등을 정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은 상위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주기적 신고제도는 유사입법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2)가 있으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같은 조항의 사례와 유사한 점 등을 감안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

(143)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타워크레인의 제작시 건설기계로 등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형식승인 및 제작검사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이원화된 관리주체*로 인하여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고용부)를 수용하여 타워크레인의 안정도, 제동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감전장치 방호기준, 사다리 추락방지, 경고표지 부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강화)
- *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 : 국토부 소관 (건설기계 등록) 3톤 미만 타워크레인 : 고용부 소관 (건설기계 미등록)
- ☞ 타워크레인에 대한 현행 국내규정 및 국제기준*을 수용하여 관련법령의 통일성을 꾀하는 내용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현재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제작할 경우 업체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제작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영농손실 보상을 실제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하며, 비자경농지의 경우 영농손실 보상액 배분율을 조정하는 등 농업손실 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강화)
- ☞ 실제소득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사실상 곤란하고, 손실보상이 미래의 예상소득에 대한 간접보상으로서 현행 법률에서도 원칙적으로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에 부합하고, 버섯 등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영업보상과 동일한 수준인 3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하도록 개선하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영농보상금의 실경작자 지급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

(145) 선박설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현측 사다리*가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경사각 및 너비요건, 고박수단, 하부 플랫폼 위치 요건, 핸드레일 요건 등을 강화하고, 도선사용 사다리**는 핸드레일 및 불워크에 설치하는 출입구의 손잡이 요건, 사이드로프 강도 요건, 윈치 릴의 설치 및 작동요건 등을 강화하며, 선박 기관실에서 사용되는 수밀조인트 및 단열장치 등 선박용 부품의 석면사용을 금지함(강화)

* 현측 사다리란? 선박이 항만에 들어와서 육상에 접안시 선원이나 여객이 육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사다리

** 도선사용 사다리란? 항만 등의 일정한 도선(導船)구역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가 배에 승선하기 위한 사다리

- ☞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규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설비요건은 IMO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였고, 규제대상은 소수(약 462척)로 한정되며, 규제비용도 크지 않은 점(적당 약 500만원 추가), 인체에 유해한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14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대상을 축소하고 전격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및 경과조치를 적용함(강화)

－ 해양배출 금지대상 육상 폐기물

- 2013. 1. 1부터 해양배출 금지 대상
 - ☑ 육상에서 발생한 분뇨, 분뇨오니*
- 2014. 1. 1부터 해양배출 금지 대상
 - ☑ 폐수배출시설 중 식품 가공시설 폐수* 및 폐수오니
 - *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
 - ☑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생화학적처리시설 발생 폐수 및 폐수오니
 - *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

* “오니”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로 수분함량 95% 미만 또는 고형물 함량 5% 이상 인 것

－ 특례규정 및 경과조치

- 폐기물위탁자에 관한 특례
 - ☑ 해양배출 이외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폐기물해양배출 위탁업체는 심사 절차를 거쳐 2년 내에서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 ☑ 폐기물 저장시설의 바닥에 침적되어 있는 잔류 폐기물은 6개월, “폐기물위탁자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 3개월의 경과조치 적용

☞ 해양환경 보호와 런던의정서 가입국으로서 의무사항 준수를 위하여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타 회원국들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13년 금지대상 폐기물이 소량인 점, 원활한 시행을 위한 특례규정과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 대상은 약 779개 업체로 규제이행을 위한 비용부담(약 600억원 추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양환경 보호와 국가 위상 제고 측면의 편익이 크므로 원안의결

* 회원국 중 하수오니(분뇨오니, 폐수오니 등)를 해양에 배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147) 운항기술기준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오차발생 확률이 높은 구형 비행기록 장치의 사용 제한, 항공사 등의 객실승무원 감독관에 대해 정기적인 지식과 기량에 대한 심사 실시, 수명한계를 초과한 부품이 항공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처리하는 방법 규정, 항공기의 정비기록을 위조·복제·변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종사자의 자격증명 또는 운항증명 등을 정지·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함

☞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항공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48)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품질조사업무를 위탁받은 골재협회는 조사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품질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신설)

* 공표내용 :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 시료채취 일자 및 입회자,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조사결과

☞ 골재의 품질조사 결과 공표는 그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근거가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의 경우 상위법에서 품질조사의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과의 공표에 관한 법적근거는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또한 이미 현행법에 등록 취소(법 제19조)·벌칙(법 제49조)·과태료(법 제52조) 등의 품질확보를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공표 규정을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 골재채취업자 등이 공급·판매하는 골재에 대해 골재용도(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에 따라 육상, 하천, 바다, 산림, 선별·파쇄 등 골재원별로 품질시험방법(한국산업표준)과 주기(4~6개월)를 규정(신설)

☞ 골재채취법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거친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품질시험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골재의 원료에 따라 ‘매년 2회 이상’으로 정한 품질시험의 주기를 ‘매년 1회 이상’으로 개선권고

- 골재채취업 등록(3만원) 및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1만원)의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골재채취 능력평가 수수료는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골재협회가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신설)
- ☞ 골재채취업 등록 및 신고 수수료는 원안동의하되, 골재채취능력평가신청 수수료는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의 의무화로 인한 사업자 부담의 가중 정도가 크고, 동 규정이 협회의 수익창출 수단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평가업무의 수탁기관인 골재협회의 실질적 평가역량이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골재채취능력평가신청 수수료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시 야적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면적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1만㎡ 이상 야적장 보유를 의무화함(강화)
- ☞ 상위법에서는 연간 처리 골재량이 일정 규모(1,000㎥)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신고 절차와 방법에 한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동 개정안은 신고시 제출서류를 정하면서 기준면적 이상의 야적장을 보유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149)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택배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는 화물운송사업자의 허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택배물류 사업을 총괄하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인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신설)
- 시설 및 장비기준

- 영업소는 5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출 것
- 화물분류시설은 화물분류 및 일시보관이 가능한 시설을 3개소 이상(면적 3,000㎡ 이상의 시설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 화물 취급소는 화물의 상·하차 및 보관에 필요한 수만큼 설치하되 영업소 수 이상 설치할 것
- 전산망 시설은 화물추적 및 운송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주사무소와 영업소, 화물 분류시설, 화물취급소간을 연결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
-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의 집화·배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할 것

- ☞ 택배 집배송 사업자 허가제도 운영을 위해 택배물류 사업자의 인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대상이 소수(약 20개 사업자)로 한정되며, 유사 입법사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7)와 대상 사업자가 이미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택배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의 우선순위 산정에 필요한 “장래 운송물량 확보 증명” 등의 추가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공(空)번호판에 자가용 운전자를 총당하는 확인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추가제출 서류의 경우, 허가대상자의 자격 확인과 선정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추가제출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허가신청시 택배물류 사업자와의 “장래 운송물량 확보 증명” 계약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면서 허가대상자 선정 평가시 큰 배점(총점의 20%)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택배물류 사업자와 추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 이는 허가신청자가 허가를 득한 후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택배물류 사업자와 계약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제출이 가능한 신청자만 자율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평가시에 제출자에게 소규모의 가산점(총점의 약 6%)을 부여하여 허가신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허가제도 시행초기에 택배 집배송 사업자들의 이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정책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고,

- ☞ 공(空)허가번호판에 대한 “자가용 운전자 총당 확인증명”의 경우, 허가제도의 시행으로 위·수탁차주가 운행하던 화물자동차의 택배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택배물류 사업자의 확인증명 없이는 위·수탁차주가 허가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위·수탁차주의 허가신청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크므로 위·수탁차주의 허가신청 권리를 보장하면서 화물자동차의 택배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택배사업의 주체인 택배물류 사업자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며,

- ☞ 보조금 지급제한의 경우, 신설된 허가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방지를 위한 정책목적과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원안인결

(15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5, 강화 1)

■ 심사내용

- 현재 시행 중인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제도는 판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서만제작자가무상지원하는 것에 그치나, 개정안은제작·조립시결함으로인해고장등이발생한

경우해당사고를조사하여제작자스스로시정조치하도록시정절차· 권고, 정보수집, 조사계획· 시행 등의 규정을 마련(신설)

☞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집행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적근거가 확실하고 주요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자동차의 리콜제도를 준용하였으며, 특히 현행 법령상 해외에서 리콜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건설기계가 국내에 수입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타워크레인의 이동설치시 정기(구조변경)검사의 신청은 ‘이동설치 후’ 30일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 ‘사용 전’ 30일 (20일) 이내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신설)

☞ 정기· 구조변경검사는 이동설치한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 전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은 당연규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 영치 증 발급, 의무이행시 등록번호표 반환 및 임시운행 관련사항을 규정(신설)

☞ 개정 법률에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영치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으로서 유사 입법례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반환 절차를 준용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기계 정비업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점검·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 발급, 사후관리사항(무상점검· 정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잘못된 점검· 정비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점검· 정비하도록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신설)

구분	무상점검· 정비기간(점검· 정비일로부터)
1.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가동시간 2,000시간 이내)	90일
2.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가동시간 6,000시간 이내)	60일
3.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가동시간 6,000시간 이상)	30일

☞ 개정 법률에 의해 건설기계 점검· 정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점검· 정비 관련조문을 동일하게 수용하면서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조문과 같이 ‘차령· 주행거리’ 기준을 차용하고, 도로주행이 불가한 건설기계는 ‘가동시간’ 기준을 마련한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은 매매업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매수인에게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구조 등에 관한 사항 외에 건설기계에 설정된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도 추가로 고지하도록 의무 부과(강화)

☞ 개정 법률의 매매업자 고지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 집행규정으로서 현행 규제수준보다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정신 질환자, 뇌전증환자, 마약· 알콜중독자 등은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신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된 각종 면허의 결격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인권위는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 마약, 알콜중독자 등은 그 정도에 따라 안전운전에 장애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격 대상자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하여 금번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수용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5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강화)

☞ 과태료 부과시 가중· 감경규정(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을 두어 부과권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는 유사입법례는 다수 존재하고, 유사행위*의 위반시 과태료 수준도 개정안과 동일(100만원)하여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등록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5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7)

■ 심사내용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적 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서 제출대상을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로 정함(신설)

☞ 500㎡ 이상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충족(60점 이상)을 위해 초기 건축비 상승이 수반

- 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제출대상 건축물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향후 고시 제정시 세부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유일한 인증 제도로써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은 평가가 불가능한 한계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을 기존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인증대상을 공동주택, 업무시설, 인증기준을 고시하는 건축물로 규정(신설)
 - ☞ 동 인증 제도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에서 평가한 후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정수준 이상 인증등급을 획득한 건축물에 대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건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건물의 가치 제고 등에 따라 소유자·사용자 모두에게 편익이 발생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에너지성능 개선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건축물 거래시 에너지소비증명서 제출대상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로 규정함(신설)
 - ☞ 기구축된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서를 발급·제출함에 따라 수수료 등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첨부 대상 건축물의 적정성 등에 대해 향후 고시 제정시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녹색 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물 관련기관·단체 등을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신청 절차 및 취소 요건 등을 규정(신설)
 - ☞ 법에서 위임한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기존 건축인력에 대한 녹색건축 관련 전문교육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
 - 건축물 성능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국토부 장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로 정하고, 수행업무는 설계·표준화기술지원,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시범사업 추진·운영, 재원 및 자금 등 운영·관리로 규정(신설)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고, 수행업무 및 관련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전담조직 및 업무추진체계 등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음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판단

-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적용 기술, 사업비, 효과 등에 대한 시범사업 검증 후 본격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범위를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수선 및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함(신설)
 - ☞ 시범사업의 대상 범위를 리모델링, 증·개축 등 건축법에 따른 각종 건축행위를 포괄하여 설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
- 녹색 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시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에너지 소비증명에 대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신설)
 - ☞ 위임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주택법 등 일반적입법례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

(153)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허용중량 초과로 하기수하물*이 발생한 경우, 승객에게 이를 알려 다른 운송수단으로 수송하거나 승객의 탑승 및 화물 탑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하기수하물을 기내반입수하물로 전환하거나 편법으로 탑재하는 것을 금지함

* 위탁수하물의 중량이 운송허용중량(승무원, 연료 등을 제외한 승객과 화물의 무게)을 초과할 경우 기체(機體)에 탑재할 수 없는 수하물

(15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폭을 6m에서 7m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지 내 도로의 주행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설계토록 하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시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신설)
 - ☞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시 보도를 설치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보도 설치비용이나 도로 폭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도 크지 않은 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의 경우에도 통학버스의 정차에 필요한 공간이면 되므로 주차장 1~2면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의 구조를 두께기준과 소음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던 것을 양자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함(강화)

☞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입주자의 기준 강화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인정되며, 콘크리트나 흡음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두께기준(210mm) 충족으로도 소음기준(중량충격음 50dB, 경량 58dB 충족)을 충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관련 사업자에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결정

* 환경분쟁위에 접수된 상담민원 : '06년 199건에서 '11년 350건으로 증가했고,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같은 기간 24건에서 31건으로 증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발코니 창호와 외기(外氣)에 접하는 벽체는 일정 정도 이상(국토해양부 장관 고시)의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 등 결로에 매우 취약한 부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결로방지 상세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부위에 대한 건축표준상세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신설)

☞ 결로 발생으로 인한 분쟁의 심각성이 크고, 하자보수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로 방지를 위한 최소기준(고시)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고, 선진국에서도 표면에 결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의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결로를 방지하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결로하자 보수비용 : 외기에 면한 창호는 결로 하자 보수를 위해 세대당 500만원(덧창설치 등)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친환경 건축자재 및 환기설비 등을 적용하여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그 건강주택의 세부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신설)

☞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해 주택건설시 친환경 자재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재 고시('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로 운영 중 인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55)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운항관리비용은 한국해운조합이 여객 운임액을 기준으로 선박별로 부과하고, 입항분은 익월

15일까지 납부고지하고 25일까지 징수하며, 출항분은 당일 징수함. 또한 조합은 부담금 징수 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법적근거, 부담금액, 산출근거 등을 통지해야 하며, 부담금 체납 시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최대 5년 동안 가산금을 징수하고, 부담금이나 가산금 중 과오 납한 금액은 지체없이 환급해야 함(신설)

☞ 여객선 운항관리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시행하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의 내규를 대부분 적용하였고, 가산금의 기준은 유사사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를 감안 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대상이 소수(67개 내항여객선사)로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면 최대 90일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과금, 가산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담금, 가산금 징수 등 운항관리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신설)

☞ 여객선 운항관리비용의 징수유예, 결손처분, 징수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납부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징수유예 신청시 담보의 제공은 유사사례(국세징수법 제18조)를 감안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대상이 소수(67개 내항여객선사)로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56)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화물운송실적 신고를 위해 신고자의 기본정보,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배차 현황, 화물정보, 운임 또는 수수료 등의 신고 항목을 규정하고, 신고 방법은 직접입력·전자전송·입력의뢰 등의 방법을 통해 실적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에 실적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신설)

☞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송실적의 확인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입력방법(직접입력·전자적 전송·입력의뢰)과 충분한 입력기간(실적 발생일로부터 40일) 등을 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고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규제대상이 18만 6,102개 사업자로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2. 해양경찰청

현정주 | 사무관(044)200-2447, jj0435@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해양경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수난구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1건 등 총 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중 6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해양경비법 시행령 개정안	제324회 예비심사 (2012.7.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4회 예비심사 (2012.7.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수난구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324회 예비심사 (2012.7.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4회 예비심사 (2012.7.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6	신설 5 강화 1 *비중요 6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해양경비법(’12.2.22 공포, ’12.8.23 시행) 제22조 제2항에서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함(신설)
 -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해상사고나 범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①행위중단 경고 ②이동·해산명령 ③이동·해산 실행 순으로 함(신설)
 - ☞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선박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충돌과 해상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해상질서 유지와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별도의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수난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해양경찰청장이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해양분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협회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원의 자격을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개정 수난구호법에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상한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2배 조정·변경함에 따라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2배 상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의견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강화)

☞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200만원) 내에서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달리 정한 것으로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4)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일부 어선, 선박이 기상악화 등 조난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 및 항해를 강행하고 있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난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태풍 등 해상기상 악화 및 선박 구난작업에 방해가 될시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신설)

☞ 이동 및 대피명령시 사유, 해역,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은 해양 조난사고 및 선박구난 현장에서 인명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긴급피난을 하려는 선박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명시한 신청서(유선 또는 무선통신 이용)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내용에 대해 긴급피난 허가 사유를 검토해서 구조본부의 장이 허가하도록 함(신설)

☞ 긴급피난 신청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난선박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박의 좌초·침몰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절 | 농림·수산 분야

1. 농림수산식품부

최문건 | 사무관(044)200-2424, choimg@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지법, 종자산업법, 축산법,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료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4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98건, 강화 64건 등 총 16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62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15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2.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9)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비심사 (2012.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2)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7.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3.2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8.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2.3.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2.3.2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2.4.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4.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2.4.26)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1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5.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2.5.17)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6
1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본위원회 (2012.5.2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2
16.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2.6.04)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1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6.18)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2.6.18)	원안의결 15	신설 15 *비중요 1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9.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6.29)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21.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7.06)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7.16)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23.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8.26)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8.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어장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9.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9.03)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2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9.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9.24)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02)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3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2.10.04)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2, 강화 2 *중요 2, 비중요 2
33.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2)	원안의결 18	신설 13, 강화 5 *비중요 18
3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35.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2.10.26)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36.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2.11.12)	원안의결 11	신설 11 *비중요 1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3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40.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03)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5 *비중요 6
41.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17)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5 *비중요 6
43.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8)	원안의결 10	신설 6, 강화 4 *비중요 10
계	—	원안의결 158 철회권고 2 개선권고 2	신설 98 강화 64 *중요6, 비중요 156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품목에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한 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강화)
 - － (현행)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않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 백삼, 태극삼을 판매한 자
 - － (개정)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않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밖의 인삼을 판매한 자
- ☞ 홍삼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삼종류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삼의 안전기준 관리가 필요(홍삼의 시장규모는 약 200억원이며, 홈쇼핑 및 방문판매 등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24개소)가 적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인삼류제조업(홍삼, 태극삼, 백삼)의 범위에 흑삼을 추가하여, 흑삼제조시 인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인삼류제조업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흑삼제조에 적합한 제조기준 및 기준규격을 정함(강화)
 - － (시설기준) 증삼기, 가습, 압착기 등을 갖추어야 함
 - － (제조기준) 흑삼본삼, 원형흑삼, 흑미삼류 등으로 구분하여 크기별로 분류 후에 찌서 익히고 건조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도록 함
- ☞ 흑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흑삼제조업자는 증삼기 등 관련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규제의 비용이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피규제자 수(24개업소)가 적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인삼류의 검사기준 중 공통기준을 일부 강화하고, 흑삼에 대한 검사기준 및 인삼류의 품질인증기간 설정(강화)
 - － 중금속의 기준 일부 강화 : (현행) 중금속 10mg/kg 이하 → (개정) 벤조피렌 및 중금속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삼의 중금속 기준에 의할 것
 - － 흑삼의 검사기준 신설 : (현행) 없음 → (개정) 직삼의 경우 길이 3.5cm 이상, 수분 15%이하 등
 - － 품질인증기간:진공포장하지아니한홍삼·태극삼·흑삼은2년이내, 진공포장한홍삼,태극삼,흑삼은 10년 이내
- ☞ 인삼은 수삼외에 인삼가공식품(인삼음료, 엑기스)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게 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중금속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식약청과 협의완료 사안)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반영하여 벤조피렌의 기준규격이 신설되도록 수정 반영하였고, 피규제자 수(24개업소)가 적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률개정으로 수의사의 취업실태 등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신고절차 및 방법을 정함(신설)
 - － 수의사회의 장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일 60일 전까지 공고

- * 대한수의사회의 장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기타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의 뜻과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한함
-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의료법 제25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법률 17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거주자, 근무자, 모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출입기록부 보존기간을 1년으로 정함(신설)
 - * 가축의 소유자, 도축장·집유장의 영업자, 사료제조업자, 비료제조업자, 가축이 모이는 시설(부화장, 계란집하장 등)의 운영자
- ☞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신설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강화하는 내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소독 설비기준 및 방법을 정함(강화)
 - (소독설비)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300㎡ 이하는 제외)는 가축사육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외부 및 흙반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소독방법) 차량의 외부, 흙반이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소독을 하도록 의무화
 - ☞ 차량의 외부 및 흙반이의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리적 접촉으로 인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규정에 의해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는 이미 차량소독기(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설치 비용은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구제역파동('10년)으로 인해 약 348만두의 가축이 매몰되고 매몰보상금 등 약 3조원의 예산이 소요
- 국제기준에 따라 개, 고양이의 검역신청(수출은 제외, 수입에 한함)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대신 광견병 예방접종 및 개체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 이식을 의무화하고, 수입검역증명서에 관련정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강화)

- ☞ 수입동물의 검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검역과정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및 개체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광견병 등 동물 방역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동물에만 적용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해외 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각국의 국내 동물관리체계와는 별도로 국가간 동물 수출입의 검역시 대부분은 국가에서 마이크로칩 이식을 의무화(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인디아, EU의 국가(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함(강화)
 - 법 제38조의 2에 따른 출하제한에 위반하여 출하한 자 : 과태료 100만원
 - ☞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동일 법령 내 유사사례(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설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수의사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함(강화)
 - 법률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30만원
 - ☞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약사법 시행령 제39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강화)

–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2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2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자 :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최대 30만원)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100만원)에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유사입법례(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2조)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개정으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어선 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어선의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함(신설)

* 단,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은 제외

1. 「수산업법」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 법률개정으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그 설치 대상어선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비용은 전액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므로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규제비용이 거의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전액지원

● 기관설비 안전검사 항목 강화 및 노후어선의 선체두께 측정범위 확대 및 측정주기 단축(강화)

– 검사항목 중 기관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안전장치(센서, 경보장치 등) 작동시험 점검을 신설

– 검사항목 중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시험의 주기단축

* 24m 이상의 어선에 한해 25년에 한 번 실시하던 검사를 매년 검사

– (조사협조) 수협위판장에 위판을 의뢰한 관계자 및 수협장은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수행하는 표본조사 및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회피해서는 안 됨

– (현행) 선령 20년 이상의 어선은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앙부 3단면에 대해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 → (개정) 선수부, 기관구역, 선체중앙부 3단면 외에도 기관실의 전·후단 격벽 및 해수흡입구를 추가하여 판두께를 측정하도록 함

– 선령 30년 이상의 어선은 선체두께 측정주기(5년→2.5년)를 단축

☞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 예방 및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성 검사항목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어선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간(정기)검사에서 검사항목이 일부 추가된 것에 불과하여 20년 이상 노후어선에 경우에 한해 연간 6~7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규제의 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법률개정으로 부령에서 정하는 안전성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안전성 기준을 정함(강화)

– 안전성 기준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말함

* 인체내에 유입되는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의 일종

☞ 수입축산물 위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위해요소 중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및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균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중국 우유 멜라민 사태 및 이탈리아산 치즈 다이옥신 검출('08년), 오스트리아 돼지고기에서 항생제 검출('04년) 등

● 축산물수입업자가 안전성기준을 위반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강화)

-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을 수입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시) → 허가취소(2차 위반시)

☞ 법률개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수입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유해화학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현행 기준)와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적용하여 정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8)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 고시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보호 조치(강화)
 - (취약생태계의 범위)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범위는 1회 인망시 산호 60kg 또는 해면 800kg 이상 혼획된 경우로 규정
 - (조업범위)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최소 2마일(현행 1마일) 이상 이동하여 조업하도록
- 읍서버 승선의무(강화)
 - 공해상 저층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조업기간 동안 조업일수의 50% 이상 읍서버**를 승선시켜야 함
 - * 공해상 저층어업이란 공해영역에서 저층트롤, 저인망, 저층자망 등 저층어구를 사용하여 어업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 ** 읍서버란 어선의 국제수산물규범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뜻함
 - ☞ 국제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국제규약*을 준수하고 그 내용을 어업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읍서버 승선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이므로 파규제자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각국이 유엔결의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업허가 중단할 것을 규정

(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법률제정으로 도시농업인이 임대받은 공영도시농업 농장의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함(신설)
 - 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 10만원(1차 위반시) 40만원(2차 위반시) 100만원(3차 위반시)
 -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 5만원(1차 위반시) 10만원(2차 위반시) 20만원(3차 위반시)
 -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300만원)에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여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률위반 행위(거짓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를 하는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취소 절차를 정함(신설)
 -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등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 제4항 제2호·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함
 - ☞ 법률에서 위임한 취소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취소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유사입법례(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취소 절차를 정함(신설)
 -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등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법 제11조 제3항 제2호·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함

- ☞ 법률에서 위임한 취소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취소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유사입법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대상에 부화장을 추가(강화)
 - (지정대상 확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자율신청 대상에 부화장**을 추가
 - (평가기준) 신설된 부화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평가표)을 신설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 ** 현재 농식품부 소관 HACCP은 도축장에 한해 의무적용이며 가축사육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관련 9개 업종은 자율적용 대상임
 - ☞ 부화장의 위생 및 위해요소관리 강화를 위해 HACCP 자율적용 대상에 부화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부화장에 한해 자율적으로 HACCP를 적용하기 위해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부화장의 haccp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축산농가의 선택사항

(11)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률개정으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정함(신설)
 - (지정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식생활교육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법률 제25조의 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 등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 것

- (지정취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

- ☞ 적절한 조직, 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을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교육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2) 쌀가공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법률제정으로 가공용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해 가공용쌀 재배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정함(신설)
 - (지정요건) 가공용쌀 재배면적이 10ha 이상 집단을 이루고 있을 것, 재배면적에서 생산한 벼를 건조·저장 및 도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지정절차) 재배단지를 지정받으려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지정신청서 및 재배단지 조성내역, 건조·저장 및 도정시설 보유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 재배단지를 지정하여 가공용쌀 원료비 매입자금 및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농업인 또는 농업인들 집단이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자율적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쌀가공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보고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함(신설)

1. 쌀가공품 원료 쌀 구매량 및 재고량
2. 쌀가공품 생산량
3. 쌀가공품 판매량
4. 쌀가공품 재고량

☞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쌀가공업자가 적정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가공용쌀의 부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정부관리양곡 중 가공용쌀은 밥쌀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

● 쌀가공업 신고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신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가. 법 제11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쌀가공업을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쌀가공업을 한 경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다. 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20만원	50만원	200만원
라. 법 제12조2 제3항에 따른 쌀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쌀가공업을 한 경우	50만원	150만원	200만원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200만원) 내에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여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정부관리양곡을 쌀가공업자에게 가공용으로 공급할 수 있음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함(신설)

－ 쌀가공업을 신고한 자 또는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유시설의 쌀 가공처리능력이 월간 10톤 이상인 자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조시설의 면적이 16.5㎡ 이상인 자

☞ 쌀가공품 품질관련 소비자 신뢰확보 및 정부양곡 수급관리를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해 정부양곡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기준과 동일하게 매입자격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쌀가공업자를 하려는 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 등을 정함(신설)

－ (신고절차) 쌀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쌀가공업 신고서 및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를 제출하도록 함

－ (시설기준) 쌀가공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정함

－ 주류제조업은 주세법상 주류제조장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제분업의 경우 양곡관리법상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함

☞ 법률제정으로 쌀가공업자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신고자의 범위 및 시설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쌀가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신고(관련 시설 포함)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규제의 정도가 매우 작으며, 다른 법률에 적용되어 신고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행정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영업소 폐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경우 : 경고(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2회 위반시) 영업정지3개월(3회 위반시)

－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 경고(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3회 위반시) 등등

☞ 쌀가공업 신고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반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유사입법례(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도축업의 영업자가 HACCP 평가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신설)

- 법률 제9조 11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평가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영업정지 7일(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5일(2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시)
- ☞ 법률개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도축장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도축장의 출입, 검사시 방해, 기피의 경우와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적용하여 정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 제정안(신설 8)

■ 심사내용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수거·조사대상을 확대(강화)
 - (현행) 농식품부 장관이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 농산물의 정기적인 수거·조사를 매년 1회 실시
 - (개정) 농산물의 수산물도 정기수거 및 조사대상에 포함
 - ☞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수입 등으로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산물과 동일한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거의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유전자변형 어류는 미국·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만 관상용으로 개발, 판매 중
- 법률개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점검 및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음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강화)
 -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인증표시정지 1개월(1차 위반시) → 표시정지 3개월(2차 위반시) → 인증취소(3차 위반시)
 -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인증표시정지 1개월(1차 위반시) → 표시정지 3개월(2차 위반시) → 인증취소(3차 위반시)
 -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표시를 한 경우 : 인증취소(1차 위반시)
 - ☞ 법률개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하여 정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개정으로 농식품부 장관은 인증기준 미달 등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행정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강화)
 - 법 제31조 3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1차 위반시) → 업무정지 6개월(2차 위반시) → 지정취소(3차 위반시)
 - ☞ 법률개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 수(49개소)가 적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직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강화)
 - 농산물우수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등 임원·직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지정취소
 - ☞ 법률개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현행규정으로 지정 취소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행정처분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하여 정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개정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표시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강화)
 -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1차 위반시) → 표시정지 1개월(2차 위반시) → 표시정지 3개월(3차 위반시)
 - 이력추적관리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표시정지 1개월(1차 위반시) → 표시정지 3개월(2차 위반시) → 등록취소(3차 위반시)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표시정지 1개월(1차 위반시) → 표시정지 3개월(2차 위반시) → 표시정지 6개월(3차 위반시)
 - ☞ 법이력추적제도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표시금지 처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유사사례(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행정처분기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개정으로 수산물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변경등록의 절차를 정함(신설)
 - 지리적표시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1. 등록자
 2.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3. 자체품질기준 중 제품생산기준, 원료생산기준, 가공기준
 - 수산물의 생산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반영하여 수산물의 품질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요사항 변경시에만 등록변경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대상을 확대(신설)
 - 대한민국과 외국간 체결되는 '민간부분의 양해각서'에 의한 경우 수산물의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추가
(현행)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국산패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협정 및 동 양해각서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한국산 생식용 굴취급에 관한 구상서
 3. 유럽연합이 결정한 한국산활이매패류(活二枚貝類)·극피류(棘皮類)·피낭류(被囊類)·해양복족동물(海洋腹足動物)의 수입을 위한 특별조건
 4. 유럽연합이 결정한 한국산 수산물 및 수산양식제품의 수입을관리하는 특정수입조건
 5.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 감독 검험검역 총국간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6. 그 밖에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체결되는 협약, 국제기구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위생조건
(개 정)
 7. 대한민국과 외국간 체결되는 민간부분의 양해각서 등에 의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
 - ☞ '대만'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이 아닌, 민간부분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물의 위생여건 등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

(27개업체)가 적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개정에 따라 거짓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검사를 행한 검사관의 자격취소를 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신설(신설)

위반행위	제재처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 검사나 재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자격취소	-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3. 고의적으로 위격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4. 1등급 착오 20% 이상, 2등급 착오 5% 이상에 해당하는 위격검사를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자격취소	-
5. 1등급 착오 10% 이상 20% 미만, 2등급 착오 3% 이상 5% 미만에 해당하는 위격검사를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자격취소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농수산물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장치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법률제정으로 정부직권에 의해 어선감척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정부감척의 세부기준을 정함(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업종별 대상척수를 선정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업종별 대상척수를 선정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1. 어선의 선령이 오래된 어선
 2.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가 큰 어선
 3. 조업일수가 많거나 조업실적이 높은 어선

- 4.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횡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선
- 5. 그 밖의 면세유 사용량이 많거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등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어선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 타당성이 인정되나, 감척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개별어업인의 감척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제되도록, 어업종류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기준 및 점수표등은 고시 등으로 구체화 할 것을 개선권고

- 어선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신규용자 제한 및 면세유 공급량을 제한할 수 있음에 따라,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신설)

제한사항	제한 기준의 상한선 (%)		
	1년차	2년차	3년차
용자금	20	30	50
면세유류	20	30	50

☞ 정부가 공급하는 면세유 및 용자금을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어선감척 사업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목표인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감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안)에 원안의결

(16)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법률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당한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정함
 1. 질병, 징집(소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으로 취임하는 경우
 2.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 질병, 징집,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대계약기간의 예외로 정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임대인이 일정기간 동안 직접 농사에 경영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만을 정하였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1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법률제정으로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질병관리사·관리원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도 및 명령의 내용을 정함(신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다음 각 호의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1. 관리사 또는 관리원의 시설·장비 등의 대(對) 국민 지원지도와 동원명령
 2.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및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 및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와 명령
 -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감경·가중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화로 부과기준을 변경(강화)
 - 진료·검안부를 비치·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진료사항 미기록자 : (현행) 50만원 → (개정) 25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진료업을 한 자 : (현행) 300만원 → (개정) 100만원(1차), 300만원(2차), 400만원(3차)
 - 법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현행) 20만원 → (개정) 25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 * 신고 등 경미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통일(25→50→100)
 -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였으므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수출입시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에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냉장한 전복류 및 굴을 추(신설)
 -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수출입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및 물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음
 1. 이식용 수산생물
 2.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3.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診斷液類) 등을 포함한다]

(신설)

- 4.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냉장한 전복류 및 굴

☞ 바이러스 사전차단을 통한 국내 양식산업의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5)

■ 심사내용

- 법률제정으로 시행령에서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기준을 정함(신설)
 - (낚시제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체중 및 종류별 낚시제한 구역·시기를 설정
 - (유해물질허용기준) 낚시도구에 함유되지 말아야 할 유해물질 기준 설정
- ☞ 유해 낚시도구 사용을 금지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수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없고, 선진국 유사사례*와 비교시 적정하며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미국, 일본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낚시제한 기준 설정 및 운용
- 법률제정으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명령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신설)
 - *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위험지역의 출입금지 등
 -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 해일·태풍·강풍·풍랑·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이 내려지는 등으로 인하여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안전조치 및 출입항제한 등의 조치명령관련 세부기준을 정하여 낚시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시 강제 대피명령을 할 수 있음

- 법률제정으로 낚시터업 허가의 제반사항을 설정(신설)

- (변경허가) 낚시터업자가 명칭변경 등 낚시터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를 명시

* 낚시터명칭 변경, 낚시터 위치·구역 변경, 낚시터업자 변경, 낚시터 관리선·수상시설물 변경 등

- (우선순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수면·내수면 낚시터업의 허가시 우선순위를 설정(영 제8조)

* (1순위) 허가의 연장을 신청한 자, (2순위) 어촌계 등 법인과 그 밖의 단체, (3순위) 낚시터업 5년 이상 경영·종사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4순위)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유경험자

- (신청절차) 낚시터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설명

* 낚시터업 신청서, 낚시터 관리선 관련 검사증서, 보험·공제가입증서, 안전검사 서류, 수면 위치도, 전문교육 이수증 등

- (안전검사) 낚시터 안전검사 해당 사유 및 유효기간, 절차, 방법 등을 규정

* 허가·등록 전 시설·장비 변경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안전관리를 통한 낚시인의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체계적인 낚시터업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낚시터 시설·장비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기준을 구체화(신설)

- 1. 낚시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 (낙시터) 구명부환, 구명줄, 소화기, 구급약품, 위생설비,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시설, 방송·통신 시설, 낙시터 관리선 등
- (수상시설물) 선체, 배수설비, 계선 및 계류설비, 전기설비, 안전설비, 위생설비, 폐기물 보관시설 등

2. 낙시터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및 장비

-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사행성게임물,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 안전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여 낙시터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특정시설 및 장비 설치를 금지하여 사행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 불법행위 차단,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낙시터업 허가·등록의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사유를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사유를 설정(신설)

1.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신설

- ① 낙시대상 수산동물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의 보호를 위한 경우
- ② 낙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수질 및 수생태계가 악화되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필요시 낙시터업 허가·등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또는 공익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수산업법」의 면허, 어업허가,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 법률제정으로 낙시터업 관련 특정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부과되며, 의무이행확보를 위해 시행령에서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신설)

* 무허가자, 허가 취소자, 폐업자, 제한 시설·장비 설치자

** 낙시터의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 원상회복 의무자가 해당업무 미이행시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절차 및 방법

● 법률에서 위임한 낙시터업의 변경등록 사유 및 등록·변경등록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규정(신설)

1. (변경등록) 낙시터업자가 명칭변경 등 낙시터업 변경등록을 받아야하는 사유를 명시

- 낙시터명칭 변경, 낙시터 위치·구역 변경, 낙시터업자 변경, 낙시터 관리선·수상시설물 변경 등

2. (신청절차) 낙시터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설명

- 낙시터업 신청서, 낙시터 관리선 관련 검사증서, 보험·공제가입증서, 안전검사 서류, 수면 위치도, 전문교육 이수증 등

☞ 사유수면의 무분별한 이용, 음성적인 불법영업, 안전사고 방지를 달성하여 환경보전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낙시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등록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위임 범위 내에서 낙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이하 '낙시터업자 등')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신설)

1. 다음 각 호와 같이 방류금지어종을 지정

- ①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중 어류(블루길, 큰입배스)
- ②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어종
- ③ 「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2. 다음 각 호와 같이 낙시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 ① 해수면 낙시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해역의 생활환경기준 중 “Ⅱ” 등급(수산동식물의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질) 이상 유지
- ② 내수면 낙시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 나쁨” 등급

3. 기타 낙시터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① 수산생물의 서식지·산란지 파괴·훼손 금지

- ②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된 의약품 등을 사용 금지
- ③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외래어종의무분별한 방류 금지, 수질관리를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양식업자의 준수사항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며, 유사해외사례가 존재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토종 어종자원의 고갈방지를 위해 불법방류 등 통제

- 낚시어선업의 신고절차, 신고요건(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및 신고사항(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을 강화(신설)
 - (신고요건) 휴대용 소화기, 조명 등 전기설비, 자기점화등, 핸드레일, 어린이용 구명조끼 등 추가
 - (신고사항) 영업시간,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낚시어선업자의 인적사항 등 추가
 - (신고절차) 안전검사서류 제출 추가

☞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인명구조용 장비 등을 현행보다 추가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존재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필요시 미끼기준 및 부적합 미끼의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규정(신설)

- 1. 미끼의 종류 및 구성성분의 함량기준 신설
 - 가공미끼의 금지원료 및 특성성분 허용기준
 - ① (금지원료) 생배설물·소변·장내용물, 비닐 등 농·어업용 포장재, 하수슬러지, 약품처리한 나무·톱밥 등
 - ② (허용기준) 비소 10PPM 이하, 크롬 100PPM 이하, 카드뮴 2.5PPM 이하
 - 인조미끼의 경우 낚시도구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준용

- 2. 부적합 미끼의 압류 또는 폐기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압류증 발급, 폐기조치시 서면 통보사항, 폐기 이행계획서 제출, 폐기후 제출서류, 이행기간 연장 사유 등

☞ 부적합한 미끼사용을 금지하여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식업자의 준수사

항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며, 유사해외사례가 존재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해외사례) 미끼기준 설정 및 운용(미국, 캐나다), 집어제 사용 금지(일본)

- 법률제정으로 보험·공제(이하 ‘보험 등’) 의무가입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보험 등의 가입기준을 구체화(신설)

- 1. 보험 등의 가입대상
 - (낚시터 업자) 연평균 이용객 수 또는 낚시터 면적, 관리선을 두는 경우 각각의 최대승선인원 합을 추가
 - (낚시어선업자)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 2. 보험 등의 가입금액
 - (낚시터 업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
 - (낚시어선업자) 낚시터업자와 동일하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어선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

☞ 보험 등 가입 의무화를 통해 낚시인 및 관계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해외사례*와 유사입법례**가 존재하며 보험료수준은 적정(연간 매출액 대비 0.3%)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낚시터별로 보험가입 의무화(일본)

** 관광진흥법, 도시가스사업법의 보험가입 등

- 법률제정으로 법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과 세부기준을 설정(신설)

- 1. (일반기준)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준, 감경사유 등
- 2. (개별기준)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별 차등액 부과
 - 낚시인과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추가되고,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변경됨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설정하고 위반횟수별로 차등액을 부과하여 피규제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 방지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법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처분 세부기준을 설정 (신설)
 - 1. (일반기준)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준, 감경사유 등
 - 2. (개별기준)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증가에 따라 처분수위 가중
 - 낚시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및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추가
- ☞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처분한도를 설정하고 위반횟수별로 처분수위를 가중하여 피규제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신설)
 - 1. (교육기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장관이 지정한 기관
 - 2. (교육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 ①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 ②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 ③ 낚시터 수질관리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
 - ⑤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교육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찬, 강사수당 등 전문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4. (기타) 교육시간, 교육교재 편찬, 교육실시 결과보고, 전문교육 이수증 등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 낚시관련 종사자의 전문지식 습득 및 활용을 바탕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해외사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독일) 안전교육 이수 후 낚시면허 발급
- 법률제정으로 낚시터, 낚시어선 등에 출입·검사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규칙에서에서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신설)
 -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은 낚시관련 사업의 지도·감독과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

-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실시
 - 1. 법 제5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낚시터(허가·등록 영업 중인 낚시터)
 - 2. 법 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낚시어선(신고 영업 중인 낚시어선)

-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 낚시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낚시사업의 지도·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의무준수 여부확인 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9)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농림수산물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신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 2. 농식품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농식품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 인증취소의 최소한의 기준설정을 통해 인증제도의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 부처사례*와 비교시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중대한 결함 발생 등시 취소 가능

(20)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외국인 등의 수산생물자원 취득시 허가절차, 의무사항, 제한행위를 정함(신설)
 - (허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동취득시 참여 당사자간의 합

의서*를 추가 첨부

1. 일반, 2.조사사업, 3.조사방법 및 수단 ,4.설비 및 장비 5. 조사해역, 6.항해
7.조사결과 8. 대한민국의 참여

*취득 자료의 배분 및 취득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의무) 취득 결과보고서 등 및 시설·장비의 철거 기한 명시

1. 결과보고서 등 : 취득을 종료하고 입항 후 30일 이내
2. 철거 : 허가 등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한) 부표 또는 갯대의 설치기준 및 방류자원 기준 설정

1. 설치 :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갯대를 설치
2. 방류 : 취득허가를 받지 않은 수산생물자원 방류

☞ 수산생물자원의 철저한 보존과 관리를 통하여 국외 무단 유출을 방지하고, 수산생물자원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제2장)의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 농수산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및 기준을 정함(신설)

- (절차)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

1. 농수산생명자원의 인력, 시설 현황, 2. 농수산생명자원의 기탁(보존)현황,
3. 관리기관 운영실적 현황, 4. 관리기관 운영 사업계획서, 5. 관리기관 지정서

- (기준) 기설정된 지정기준(보존, 관리 현황 등)에 갱신기준(지정기준 충족, 운영실적)을 추가적으로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간의 갱신기준 및 절차·방법을 정한 것으로, 갱신 지정여부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법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부과 세부기준을 설정(강화)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 시료 및 유전물질 등 자료, 조사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은 경우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설정하고 위반횟수별로 차등액을 부과하여 피규제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다음과 같이 취득중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설정(신설)

- 1. 법 제8조 제2항의 조사계획서에 따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2월

- 2. 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12월

- 3.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6월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작전 수행이나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3월

-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 3월

☞ 법률에서 위임한 취득중지 처분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농수산생명자원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경중에 따라 중지기간을 설정하여, 피규제인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1)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전통식품 인증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심사를 받도록 의무 부과(신설)

☞ 그간 동 인증제에 대한 정기심사제도 미비로 인증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 동 인증은 임의적 사항이며 농업인 등에게는 정기심사 비용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정기심사 1회 비용 : 농업인 등(106만원) / 일반업체 (162만원) 「한국식품연구원 수수료 규정」

** 산업표준인증 3년(산업표준화법 제19조), 유기가공식품인증 1년(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 공산품 안전인증 2년(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기 위해 유효기간(5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고, 재지정 기본 수수료(약 52만원)를 납부하도록 규정(신설)

－ 재지정 심사는 최초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준용

☞ 법률개정으로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도입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관련 기준 및 절차,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재지정기준을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수수료(약 52만원)도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산업표준인증(KS) 정기심사 수수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4」 : 50만원

-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증심사에 관해 보존해야 할 자료 및 기간을 규정(신설)

－ (보존자료) ①인증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②우수식품인증기준 적합성 조사결과, ③인증 식품 시료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결과

－ (보존기간) 5년

☞ 법률에서 위임한 인증업무 관련 자료의 종류 및 보존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종류는 인증업무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이며, 보존기간은 유사입법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8조)와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 신고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규정(신설)

－ (제출서류) : 1.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기관지정서,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공

백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승계사실 증명자료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자료는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자료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 위반행위에 따른 영업정지·지정취소 처분을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부 규정(신설)

－ (예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 정지(1차)→6개월 정지(2차)→지정취소(3차)

☞ 법률에서 위임한 취득정지 처분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우수식품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별로 처분수위를 가중하여, 피규제인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유사입법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7)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대금정산조직*이 징수하는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함(강화)

－ (정률)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 (정액) 70만원/월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거래 대금 정산을 위하여 설립된조합, 회사 등

☞ 법률에서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유지를 위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부령에서 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출하자 신뢰 확보와 안정적 대금결제, 도매법인 경쟁촉진 등을 위해 설립된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의 수수료 금액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의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강화)

－ (현행) 중앙평가 결과가 지정기간(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 최근5년) 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개정) 중앙평가 결과가 지정기간(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 최근5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 중앙평가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가 부진(2회 연속)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경영개선기회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경영 유도를 위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 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상위법에 근거하여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강화)

위반행위	처분기준		
10-1.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정지 3개월	취소	-

☞ 일부 중도매인은 전대를 통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상품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처분수위를 상향시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별로 처분수위를 가중하여, 피규제인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상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강화)

- (예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 250만원(1차 위반시)→500만원(2차 위반시)→1000만원(3차 위반시)

☞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설정하고,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하여 피규제인의 부담이 과하지 않으며, 농협중앙회와 유통인중 앙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3)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제출 시기를 변경(강화)
 - (자료범위) 국제수산물기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북류, 바다새류 등)
 - (제출시기) 매항차 종료 후 30~60일 이내 → 매월 15일
- ☞ 국제수산물기구에서 어획실적의 월보고 및 추가자료(부수어획종)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대부분의 보고가 e-mail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피규제자의 부담수준도 미미하며, 원양어업자 등 이해관계

자의 반대이견이 없으므로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상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신설)

위반행위	과태료금액(만원)
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0
나.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000
다.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500
라.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000
마.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청산인이 제7조 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500
바.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00

☞ 법률에서 정한 조합, 조합장, 상임이사, 관리인, 청산인의 준수사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여 피규제인의 부담이 과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5) 가축전염병예방방법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등록 절차 및 차량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등록 대상 차량의 범위를 정함(신설)
 - (절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등록대상차량) 1. 가축운반, 2. 원유운반, 3. 동물용(의) 약품운반, 4. 사료운반, 5. 가축분뇨운반, 6. 왕겨운반, 7. 퇴비운반, 8. 인공수정, 9진료, 10. 컨설팅, 11. 사료채취·방역, 12. 기계수리

- ☞ 법률에서 규정한 등록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도입 따른 추가비용(서류제출)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앞면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운영토록 함(신설)
 - ☞ 법률개정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무선인식장치의 장착·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무선인식장치(GPS 사용)의 장착위치를 차량 전면부로 구체화한 것으로 제도의 취지(이동경로 확인) 및 단속 등의 사후관리 감안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등의 교육시기 및 시간을 정함(신설)
 - (최초교육)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 전까지, 기타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 등은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의 소유차량
 - ** 주기적 방문차량 이외 차량
 - (보수교육) 최초 등록 후에는 4년마다 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시간 및 시기를 정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전액 국비지원)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와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의 이동승인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을 정함(신설)
 - (절차)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
 - (기준) 1. 이동승인을 신청한 사람과 차량 등이 축산관계시설 등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2. 이동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축산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는 경우
 - ☞ 법률개정으로 역학조사결과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동이 제한된 자가 필요시 이동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해 이동승인 신청절차와 승인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동제한에 따른 피규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규제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의 종류 및 이동중지명령 대상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의 이동승인 신청 절차, 승인 기준을 정함(신설)
 - (대상 전염병) 구제역(백신접종 미 실시 유형의 발생시에 한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절차)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
 - (기준) 1. 원유 및 사료의 보관·공급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 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방역 목적상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법률에서 위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의 범위, 이동승인 신청절차 및 승인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동중지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의 범위를 전염성이 매우 높고 전국적 확산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구제역, 고병원성인플루엔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동중지에 따른 피규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에 제조, 수입 또는 수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을 추가(강화)
 - ☞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현행 검사기관은 신규요건을 충족시키며 유사입법례(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7) 어장관리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관계 공무원이 필요시 어장에 출입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어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시료 채취나 시설물 사용·제거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함(강화)
 - ☞ 어장환경 조사 또는 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유사입법례(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8)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등록된 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경우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토록 함(강화)
- 열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는 1.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지 말 것, 2. 소독처리 마크는 반드시 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한 이후에 사용할 것, 5. 등록된 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처리 마크를 등록한 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신고할 것
- ☞ 소독처리 마크의 부정사용(폐기마크 재사용, 마크 불법제작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준수사항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비용(단순 사실관계 통보)이 미미한 수준이며 관련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강화)

위반행위	처분기준		
5) 등록된 소독처리 마크를 신고없이 임의로 폐기한 경우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경고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 ☞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처분상한을 설정하고, 위반횟수별로 처분 수위를 가중시켜 피규제인의 과도한 부담 방지하며, 유사입법례와(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마늘·생강 채소 등의 구근류 현장검역 수량을 증가(강화)
- (현행) 100kg 미만 : 20% 이상(최대 20kg 미만), 0.1~1톤 미만: 20kg, 1~20톤 : 25kg, 20톤 이상: 30kg
- (개정) 20톤 미만 : 5% 이상(최대 1,000kg 미만), 20~100톤 미만 : 1,000kg, 100~500톤 미만 : 1,200kg, 500톤 이상 : 1,400kg

☞ 외국병해충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식용(종자용도) 채소의 구근류의 검역수량을 늘린 것으로, 병해충 유입가능성이 더 낮은 비재식용 식물의 검역수량과 비교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고, 추가적인 경비(수수료 없음)는 소요되지 않으며, 현재 비재식용에 준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시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재식용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에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강화)

☞ 원활한 현장검역과 검역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자의 신규 채용이 불필요하여 추가 경비가 미발생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현행 재식용 식물만 반입하는 창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재식용도 함께 보관하므로 관리책임자를 기 지정하여 운영 중

(2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상향(강화)
- 도축업의 영업자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현행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도축업의 영업자가 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700만원(현행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참고 사항〉

- ◎ 위생관리기준(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축산물 영업장에서 매일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이행하여야 하는 청소, 소독, 개인위생관리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제품의 직접적 오염이나 불량을 예방하는 기본절차를 의미함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위생관리기준(SSOP)을 기본으로 이행한 이후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해요소를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점검하여 사전에 위해를 관리하는 제도임

☞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사항 위반횟수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재수위를 상향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0)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 적용 대상 영업의 범위를 확대(강화)

– (현행) 도축업 ⇒ (개정) 집유업 및 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

☞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다소비하는 유가공품(아이스크림, 조 제분유 등) 및 그 원료인 원유의 식품안전 상을 위해 사전예방이 필요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 의무적용 업종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냉동식품과 빙과류에 현재 동일기준이 적용되는 점, 낙농선진국(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기시행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가축 또는 축산물 출하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위임(부령) 근거를 신설하고 시정명령 도입(신설)

☞ 축산위생상 위해발생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사항을 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도입한 것으로, 규제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증가가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신설된 법률조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신설)

–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

☞ 법률개정(안)에서 신규 도입하는 시정명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에서 기설정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안시 적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제3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물 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동법 제47조 제3항 제1호, 300만원 미만)

● 검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위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작업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신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도축과정 중 식품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작업중지에 따른 생산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빈도수가 작고 중지시간이 짧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규제대상수가 소수(140여개소)이며, 미국과 EU사례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배달용 족발·보쌈용 돼지고기, 양고기, 일부 수산물, 김치류에 배합된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강화)

☞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공정경쟁·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행 중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이므로 추가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신규 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표기순서 등의 표시방법 변경(강화)

– (글자크기)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이상에서 같거나 그 이상으로 확대

– (표시위치)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 (표기순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그 사실을 표시

– (보관표시)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

☞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현행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산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음식명과 같은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게시판·메뉴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하여 피규제인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의견수렴 및 반영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원산지 표시 대상에 신규 편입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규정(강화)
 - 양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1차 위반시)→60만원(2차 위반시)→100만원(3차 위반시)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양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1차 위반시)→30만원(2차 위반시)→50만원(3차 위반시)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2.5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에서 기설정된 유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부과기준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 등’)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가축 전염병 발생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신설)
 - * 도축·매매·위탁·경진대회·품평회·소싸움 참여·고시로 정하는 사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동을 제외한 모든 경우
- ☞ 과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제도를 보강하는 일환으로 본 규제를 도입하였으나, 현행 규제만으로 규제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오히려 가축 소유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철회권고
- 상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강화)
 -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이동허가 대상 가축을 이동시키는 자 : 3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없이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차량등록 여부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00만원 이하
- ☞ 가축 이동허가제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등록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것으로,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차량등록 여부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적절하나 ‘가축 이동허가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가축 이동허가제의 철회권고에 따라 동 규정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알’ 운반차량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에 추가(강화)
 - ☞ 기도입된 축산관계시설 차량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2,500대)이며 규제비용(GPS 운영비 월 1만원)이 낮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관계공무원이 시설출입차량 등록 여부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작동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신설)
 - ☞ 가축전염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입한 차량등록제 및 의무적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제의 조기 정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차량등록·무선장치 장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유사입법례(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6)와 비교하여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3)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신설 13, 강화 5)

■ 심사내용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소금 생산·제조업의 범위를 정함(신설)
 - 염전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정한 식품의 원재료 중 식물성 원료를 함수에 첨가하여 결정지에서 소금을 생산·제조하는 자
 - ☞ 현재 염전에서 생산·제조되어 판매 중인 소금을 제도에 수용하여 해당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소금에 기타 재료를 첨가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함
- 소금 생산·제조업 허가의 요건, 시설기준, 절차 등(강화)
 - 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비서류(사업계획서, 염전개발 준공 증빙서류 등)를 갖추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주 및 소금창고 슬레이트(석면)를 사용하지 않을 것
 - ☞ 천일염의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변경하고, 폐업·폐전 허가 절차 신설 및 변경허가 대

상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유예기간(2년 6개월)을 부여하여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적정수준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소금제조업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신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률개정으로 소금 생산·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설정한 것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며,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에 한정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비식용소금의 신고 절차 및 범위를 정함(신설)

－ (신고절차) 비식용 소금 제조업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범위) 공업용, 과학용, 의학용, 미용 소금

☞ 법률개정으로 비식용 소금을 생산·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비식용 소금 신고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고대상 비식용 소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규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에서 위임한 품질검사기준·방법·절차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관·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강화)

－ (검사방법)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 (검사기록)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 분기별·연도별 보고

☞ 기한을 설정하여 보고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존 축적된 자료를 단순 송부하는 것으로 의무자의 부담

수준은 미미하며, 현행 품질검사 방법·기준을 단순 이관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품질검사기관의 인력 및 시설 지정기준을 정함(강화)

－ (인력) 현행 : 5명 ⇒ 개정 : 6명(관능검사 2명, 분석검사 4명)

－ (면적기준 신설) 총면적 250㎡ 이상, 일반실험실, 전처리시설, 기기분실, 미생물검사실 등은 분리되어 있을 것

－ (시설추가) 자동수은분석기,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전기로, 초순수제조기, 화학천평, 무균작업대, 전자현미경, 배양기, 건조기, 균질기

☞ 소금품질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고품질의 소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강화된 인력·시설 기준은 현행 품질검사기관이 보유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미발생하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보강이 필요한 인력 및 기기를 지정기준에 반영하여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인력, 시설) 및 신청 절차·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신설)

－ (시설) 1. 사무실, 2. 교육장(수용인원 20명 이상), 3. 염전, 4. 가공시설

－ (장비) 1. 프레젠테이션 1식, 2. 염도 측정기 1대 이상, 3. 수분 측정기 1대 이상, 4. 기타 미네랄 성분 등의 분석 장비 4종 이상

－ (시설기준) 실무경력자, 관련전공자, 해당 분야 공무원 경력자 등 5명 이상

☞ 소금 제조기술 등의 보급·훈련 및 올바른 소금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인력 기준을 지정요건에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기관 지정 신청을 위하여 수반되는 절차·방법을 설정한 것으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인력, 시설) 및 신청 절차·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신설)

－ (시설) 1. 사무실, 2. 교육장(수용인원 20명 이상), 3. 염전, 4. 가공시설

－ (장비) 1. 프레젠테이션 1식, 2. 염도 측정기 1대 이상, 3. 수분 측정기 1대 이상, 4. 기타 미네랄 성분 등의 분석 장비 4종 이상

- (시설기준) 실무경력자, 관련전공자, 해당 분야 공무원 경력자 등 5명 이상
- ☞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소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설·인력 기준을 지정요건에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기관 지정 신청을 위하여 수반되는 절차·방법을 규정하여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요건(인력, 시설) 및 신청 절차·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신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2명과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그 밖의 요건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설·인력 기준을 지정요건에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기관 지정 신청을 위하여 수반되는 절차·방법을 설정한 것으로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천일염인증 신청절차·방법 및 인증품 표시의 규격·방법,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강화)
 -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를 천일염인증기관(이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은 우수천일염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우수천일염 인증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천일염 인증제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천일염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를 정한 것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판단되며, 인증 관련 교육훈련을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교육 대상자의 자율권 보장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천일염인증 갱신 및 연장 절차를 정함(신설)
 - 천일염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만료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신청기한 및 절차를 마련한 것이며, 인증기간의 연장 및 갱신에 따른 별도의 비용(수수료)은 미발생하므로 비중요규

제로 원안의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인력, 시설) 및 신청 절차·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신설)
 - (지정기준) 조직, 인력, 시설기준
 - (절차)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천일염인증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시설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시설·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대규모의 비용이 불필요하므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강화)

위반행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지정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지정 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허가 취소			
다.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정 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취소
라.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대항하게 된 경우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허가 취소			
마.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한 경우	시정 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취소
바.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사. 제43조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위반행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아. 제45조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조사·점검·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시정 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취소

☞ 천일염인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처분상한을 설정하고, 위반횟수별로 처분 수위를 가중시켜 피규제인의 과도한 부담 방지하며, 유사입법례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천일염 인증을 받은 자는 관련문서를 3년 동안 비치·보존하도록 함(신설)

☞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인증업체에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토록 하여 책임감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 중인 소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료 조화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보존기간(3년)이며, 보관에 따른 비용수준은 미미하고 유사입법례(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함(신설)

위반행위	제재처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판매금지 6개월
나.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판매금지 6개월
다.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판매금지 3개월
라. 정당한 사유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조사·점검·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 3개월	판매금지 6개월

☞ 천일염인증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수위를 가중시켜 피규제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며, 유사입법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천일염인증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함(신설)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하여야 하는 중요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2. 경영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3. 인증품이 아닌 천일염을 인증품에 혼합하거나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는 경우
4. 천일염의 원료로 취수해역의 바닷물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
5. 염전에서 방충, 방서 등의 목적으로 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6.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7. 의도적으로 인증품이 아닌 천일염을 혼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법류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법 집행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천일염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천일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신설)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천일염 인증서

☞ 법률개정으로 천일염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설정한 것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며,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에 한정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수수료를 정함(강화)

1. 염전원부 등본의 발급 신청 : 1,000원
2. 품질검사를 받는자

가격	소금 종류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부산물염	가공염	함수	수입염
기준가격 (톤/원)		840	520	520	520	870	160	120

3. 천일염인증 신청 : 80만원

☞ 법률개정으로 염전원부 등록 발급 및 품질검사, 천일염인증심사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현행과 동일한 기준이거나 여타 식품 관련 인증 수수료와 비교시 저렴하므로 법률

개정으로 천일염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설정한 것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며,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에 한정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술 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KS)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 150만~311만원

(3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신고 절차를 강화(강화)
 - (품목허가) 수입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 허가 신청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함
 - *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동물용의약품, 세포배양동물용의약품
 - **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품목신고) 제조 품목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변경
 - ☞ 수입 동물용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신고제도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며, 유사입법례(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수의사 처방제*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률위임 사항을 규정(신설)
 - *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 (예외적용*) 판매 가능 도서지역의 범위, 판매 방법, 구입자의 범위, 분량(1두 기준 5일), 관련 자료 작성·비치(수량, 용도 등, 3년)
 - * 처방전 없이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구입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
 - (준수사항) 처방전 및 판매기록을 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3년간 보관

☞ 원활한 수의사 처방제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준수사항 설정에 따른 추가비용 수준이 낮으며, 이행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동물용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하여 접종하거나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가 접종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신설)

☞ 개봉판매 금지 예외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모든 동물용의약품은 개봉판매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규제완화에 해당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위원회, 불만처리 및 회수, 자율점검 항목을 추가(강화)

☞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현행보다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동물용의약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행 설비 및 인력으로 신규 강화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준용하여 의약품관리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5) 내수면어업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신고제인 육상양식어업*을 허가제로 전환(강화)
 - * 사유수면인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으로서 주요어종은 “뱀장어, 송어, 메기 등”이 있음
 - ☞ 육상양식어업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신규진입으로 인한 가격폭락 및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내수면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은 도입 타당성이 부족하며, 허가제 도입시 시장 기능 왜곡에 따른 가격상승 및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철회권고

(36)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11)

■ 심사내용

- 사업시행자(민간기업) 지정 요건*을 설정(신설)

– 농업법인 중 자본금이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 제외) 이상인 자

☞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의 자격제한 필요가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를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간척지 활용사업 실시계획 내용 및 승인 신청 절차를 정함(신설)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해야 함

1.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3.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간척지활용사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촉진하며 실시계획 수립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되며, 척지활용실시계획의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유사입법례(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감안시 합리적 수준 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허가대상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사업구역 지정 당시 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고사항 및 절차를 정함(신설)

* 건축물의 건축, 공박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등

☞ 간척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일부 행위의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해복구 등 허가 제외 대상행위를 규정하여 일반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간척지활용사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시기 및 범위를 정함(신설)

– (신고절차) 비식용 소금 제조업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범위) 공업용, 과학용, 의학용, 미용 소금

☞ 간척지활용사업에 필수적인 전기·통신·가스 등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간척지활용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도하여 사업의 차질을 방지하며, 각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설치시 혼란을 차단하고, 유사입법례(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신설)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 실시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로 한정하였으며, 유사입법례(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매각·임대해야 함에 따라, 조성 토지 등의 용도 및 매각·임대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신설)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활한 임대·매각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유사입법례(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매각 대상자를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시 임대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징수 방법, 변경계약 또는 해지 사유를 규정(신설)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등을 사업취지에 부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자격자로 판단되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였고,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합의를 인정하여 임대료 부과·징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변경·해지사유에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조성토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제정으로 간척지 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하여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 따라 공동시설의 범위, 공동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시기를 설정(신설)

* 도로·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가도등,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 (산정기준) 용자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이용자의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

－ (산정시기) 간척지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

- － (시설범위)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안의 도로, 2. 가로등, 3. 상하수도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5. 조경시설, 6. 안전시설, 7. 공공복지후생 시설, 8. 그 밖에 관리기관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간척지 입주자가 공동시설로부터 얻는 편익 또는 사용규모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징수·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시설의 범위는 개별적인 설치가 난해하여 공동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시설로 판단되고, 유사입법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와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간척지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함(신설)

☞ 법률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적합하며, 유사입법례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상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신설(신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나.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다.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라.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사업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정한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을 가중시켜 피규제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며, 유사입법례(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재처분 부과 세부기준 신설(신설)

위반행위	제재처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사의 중지·변경 또는 실시계획 변경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중지·변경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 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정한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수위를 가중시켜 피규제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며, 유사입법례(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연체사실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함(신설)
 - * 해당 기관에서 채무의 연체 등은 지역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계열 금융사 포함), 새마을금고(연합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16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 ☞ 법률에서 위임한 연체사실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률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임원의 적격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2)와 비교시 형평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8)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병원 개설을 할 수 없도록 함(강화)
 1. 동물약품판매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동물약품판매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3. 동물약품판매시설과의 전용 연결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 ☞ 법률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수의사 처방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동물약품판매시설과 동물병원을 독립적으로 개설하기 위한 것으로, 수의사 처방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한 사안이며, 동물병원* 개설 현황 고려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현행 동물약품판매시설 안에 개설된 동물병원은 없음
- 법률개정으로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해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시고용수의사의 범위, 신고 방법, 준수 사항을 신설(강화)
- (처방전발급 내용) (현행) 동물 명칭, 약 성분 등 단순 기재 사항 ⇒ (개정) 처방전 유효기간 및 처방 일수 산정 기준, 발급 대상 동물 범위, 성분명 등

- (상시고용수의사) 개설수의사와 동일하게 적용

☞ 수의사처방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처방전에 기재될 사항을 정하여 별도의 비용은 수반되지 않으며, 상시고용수의사의 준수사항은 개설수의사에게 적용되는 수준과 동일하여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상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강화)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2.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20	40	80
2의 2.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투약한 자	20	40	80
2의 3. 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20	40	80
2의 4. 법 제1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	20	40	80
2의 5. 법 제1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20	40	80
2의 6. 법 제1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	40	80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수의사 처방제를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위임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설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가중시켜 피규제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처방전 발급 수수료의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정함(강화)

☞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 기준은 국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규제비용 감안시 적정수준이며 의약분업과 달리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 없이 약품처방이 가능하여 반려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9) 농업기계회 촉진법 개정안(신설 2, 강화 3)

■ 심사내용

- 농업기계 검정 신청시 제출서류 및 처리 사유 확대(강화)
 - (제출서류) 현행 제출서류에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배출가스인증서(농업용 트랙터, 콤팩트)와 사용 설명서 1부 추가
 - (부적합처리 사유) 현행 사유에 신청인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검정을 받은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을 구매하여 신청한 경우 및 검정기간 중 검정용도의 제품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검정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추가
 - ☞ 원활한 검정 업무 수행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것으로, 추가 제출서류에 따른 신규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반려 또는 중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재검정 사유 발생시 혼선 방지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규제대상이 소수(250여개)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점검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정함(신설)
 - (종합점검) 트랙터, 콤팩트, 농산물저온저장고 등 15종
 - (안전점검) 동력이앙기, 동력탈곡기, 사료배합기 등 28종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 ☞ 법률개정으로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는 의무적으로 검정을 받도록 함에 따라, 의무적 검정 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현행 농림사업지침서(훈령)에 의한 행정지도 사항을 제도권에 편입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추가비용은 미발생하며, 규제대상(수입·제조 업체 : 250여개)이 소수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검정결과 유효기간(5~8년) 및 의무적 검정 필증 부착제를 도입(강화)
 - ☞ 검정결과 유효기간 및 의무적 검정 필증 부착제 도입에 후속 조치로서 지침에서 기설정된 내용연수를 유효기간으로 설정하여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변동사항 미발생하며, 의무적 검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증 부착에 따른 추가비용은 미미한 수준이고 규제대상(수입·제조 업체 : 250여개)이 소수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농업기계 검정 수수료 납부방법 및 반환절차를 규정(신설)
 - (납부방법)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 (반환절차) 검정 전 취소 또는 검정 중 검정용도의 제품 파손 등으로 검정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음
 - ☞ 의무적 농업기계 검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검정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결재, 전자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검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수수료의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권리 보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에는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현행 임의적 사항)을 부착하도록 함(강화)
 - ☞ 안전장치 부착확인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것으로, 농업기계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필증 부착에 따른 추가비용은 미미한 수준이고 규제대상(수입·제조 업체 : 250여개)이 소수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0)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5)

■ 심사내용

-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시설, 탕박시설·내장 세척용 수조의 물 및 폐기처리 대상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신설(강화)
 - ☞ 도축과정 중 발생가능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현행 위생관리기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별도의 시설을 구비할 필요 없이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대상이 추가되는 것이며 규제대상이 소수(140개소)이고 추가비용이 미미한 수준인 점, 이해관계인의 별도이견 없는 점 등을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이 통관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 반드시 수거하도록 하고, 재수입되는 경우 부적합 처분을 부과(강화)
 - ☞ 수입 축산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하는 것으로 규제도입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동일한 축산물의 범위가 명확하여 피규제자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점, 유사입법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 등을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포유류·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시설기준을 변경(강화)

- (전체 포유류) 계류장⇒110lux 이상의 조명장치·안개분무시설, 생체검사장⇒조명장치 조도 기준 상향(110lux→220lux)
- (소·돼지) 작업 라인⇒오염원 비산 방지를 위한 공기흐름 조절 시설, 도살실⇒피 위생처리설비(식용 및 식품·의약품 원료), 내장처리실⇒폐기용 저장용기, 냉장·냉동실⇒실시간 온도변화 기록 장치
- (전체 가금류) 생체검사장⇒조명장치 조도 기준 상향(110lux→220lux)
- (닭) 냉장·냉동실⇒실시간 온도변화 기록 장치
- (전체 도축업) 도축업영업자가 자신이 도살·처리한 식육을 운반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영업자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함

☞ 도축장 시설기준 강화를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약 10억원 (도축장(140여개) 평균 약 700만원)이 과도하지 않으며, 규제강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예기간(1년) 적용으로 이행에 따른 부담도 완화하여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강화)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계류장⇒110lux 이상의 조명장치·안개분무시설, 생체검사장⇒조명장치 조도 기준 상향(110lux→220lux)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 작업 라인⇒오염원 비산 방지를 위한 공기흐름 조절 시설, 도살실⇒피 위생처리설비(식용 및 식품·의약품 원료), 내장처리실⇒폐기용 저장용기, 냉장·냉동실⇒실시간 온도변화 기록 장치
- (도축업) 생체검사장⇒조명장치 조도 기준 상향(110lux→220lux)

☞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과도하지 않으며, 규제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도축업·집유업의 보존 및 유통 기준 또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강화)

☞ 축산물 위생 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다른 영업* 또는 동법 부령에서 기설정된 유사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부과기준 감안시 적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도축업·집유업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제재처분 기준은 축산물 가공업 등과 동일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세부사항 위반 제재처분 기준은 기타 자체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위반 제재처분 기준과 동일

● 상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신설)

-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자(현행 100만원) 및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현행 5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였으며, 유사입법례(식품 위생법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1)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근해어업 허가정수를 조정(강화)

【허가정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어업의 종류별로 신규허가 신청시 최대 허가할 수 있는 상한(上限). 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수산업법 제63조 제1항)

- 허가건수가 정수보다 작고 초과어획강도가 낮은 업종 : 현 허가 건수를 정수로 설정

* 대상업종(5개) : 대형쌍끌이기저(38→37,△1), 대형선망(29→25,△4), 근해 봉수망(55→38,△17), 자리돔들망(6→3,△3), 문어단지(40→32,△8)

- 주변국 수역에 입어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업종* 및 대상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기반유지 필요 업종 : 최소 조정

* 한일, 한중간에 매년 협정을 통해 상대수역에 들어 가 조업할 수 있는 업종(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일부 조업수역을 손실한 어선에 대한 피해 보전)

** 자원확보 대상업종(2개) : 근해채낚기(618→588, △30) 근해연승(479→456,△23)수급안정 대상업종(2개) : 대형트롤(37→34,△3), 장어통발(40→36,△4)

-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12.5.7)을 거쳐 수산자원평가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여 허가정수를 설정하였으며, 지자체 및 업종별 수협을 통해 의견을 수렴('12.4.7~5.7)하여 정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2)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신설 1, 강화 5)

■ 심사내용

-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강화)
 - (현행)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추가) 합작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하는 원양어업('11년 말 18개사)
- ☞ 해외수산자원확보 현황 및 수입수산물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것으로, 현행 폐지신고 대상 및 비용(등기발송)을 감안시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현행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7개)을 중대한 위반행위(8개)와 경미한 위반행위(3개)로 구분 및 구체화(강화)
 - ☞ IUU어업 근절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와 경미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제재 처분 수위 상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양어업자가 해외수역에 조업할 경우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되며, 해외사례(EU의 IUU어업 통제법 제3조) 감안시 적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IUU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강화)
 - (현행)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제수산기구 또는 다른 나라가 IUU어업 선박으로 통보하거나 의심되는 선박으로 검색을 요청한 경우
 - (추가)
 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IUU어업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거나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선박으로서 항만국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원양어업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IUU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항만국 검색 강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협정 비준(FAO(국제식량기구)의 항만국조치협정)을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이며 검색대상 기준이 명확하여 권리침해 소지가 낮으므로 적정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어선위치추적장치*(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설치 대상 확대(강화)

* GPS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이동경로를 자동으로 농식품부에 송신

- (현행)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연안국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포함)

- (개정)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IUU어업 또는 합법어업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원양어선에 VMS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IUU어업 적발 또는 합법어업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외사례* 및 규제비용** 감안시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EU의 경우 원양어업뿐만 아니라 근해어업까지 VMS적용 의무화

** 척당 300만원×90척(미설치 어선) = 2억 7,000만원

- 국제옵서버의 직무 범위, 선발 기준·절차, 준수사항을 신설(신설)

- (직무범위 등) 과학조사 및 조업 감시·감독, 국제수산기구 지정사항, 제도운영 관련사항

- (선발기준)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 관련 필요사항

- (준수사항) 직무 관련 지식 습득 및 행동규범 준수, 획득자료 보고, 안전 보장장치 확인 및 안전보장 절차 통보, 자격증 휴대 및 대여 금지

- ☞ 국제수산기구에서 의무화한 국제옵서버 승선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국 등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옵서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 요건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준수사항 위반자(IUU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강화)

- (현행)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하
- (개정) 중대한 위반행위 : 2,000만원 이하, 경미한 위반행위 : 500만원 이하
- 양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1차 위반시)→30만원(2차 위반시)→50만원(3차 위반시)
- 살아 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합법적으로 조업 중인 원양어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따른 불법 생산액의 최소 규모가 2,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모가 아니며 방지 필요성이 높은 중대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만 제재수위를 상향시키는 점, 해외사례* 감안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일본), 7,400만원 벌금(호주), 1억 1,500만원 벌금(미국), 수산물가치의 최소 5배 벌금(EU)

(43) 축산업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6, 강화 4)

■ 심사내용

- 가축사육업의 허가 대상 및 기준을 정함(강화)
 - (허가대상)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13~'16년까지 4년간)로 걸쳐 지정
 - * 현행 300㎡ 초과 소 사육업, 50㎡ 초과 돼지·닭·오리 사육업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운영 중이며 법률 개정('12.2월 기개정)을 통하여 허가제로 전환
 - (허가기준) 현행 축산업 등록제를 축산업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을 강화
 - * (현행) 축산업 등록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함 ⇒ (개정) 축산업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강화된 시설·장비 및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 법률개정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대상 및 허가 기준(시설·장비, 적정사육 두수, 위치)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기발표('11.3.24,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한 「가축질병 방역 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반영하였으며, 축산업 개정 당시 규제위(본 위원회, '11.8.11)에서

기검토한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사항(허가 대상 및 세부기준)보다 일부 완화하였고, 사육규모별 순차적 도입 및 유예기간 부여(해당시기로부터 1년), 예산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호당 비용이 11.8 ~ 1.6백만원으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가축사육업 변경허가 사항 및 등록제외 대상을 정함(강화)

- (변경허가 대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신설

* 사업장 승계, 대표자, 품목, 부화능력 증가, 사육가축, 축사면적의 증가 등

- (등록제외) 등록제외 대상 가축의 종류 및 시설면적 신설

* 법률개정으로 가축사육업 허가 제외 대상가축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은 제외

☞ 법률에서 위임한 변경허가 사항 및 등록제외 대상 가축의 종류 및 사육 시설 면적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허가에 따른 규제비용 수준이 낮으며 구제역, 고병원성 A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가축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부담 방지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축산업 허가 등을 받은자(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강화)

- (종축업) 종란혈통증명서 발급, 종돈·종계·종오리 관리 및 판매기록관리대장 구비

- (부화업) 병아리·새끼오리게통보증서 발급, 종란 수불대장 구비, 부화기 이후 미부화된 알·매물 등 폐기·처분

- (정액등처리업) 정액증명서 발급, 인동수정용 사용 제한, 생산·판매 기록관리대장 구비

☞ 법률개정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축 질병예방,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 계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사항으로 판단되며 추가비용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축산업 허가자·가축사육업 등록자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 설정(신설)

* 허가제 도입에 따른 영업정지·허가취소 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법률개정으로 신설된 축산업 허가제 및 기타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법률 위임범위 내

[교육시간]

구 분			교육시간	보수교육
축 산 농 가	신규 농가		24	6 (2년 1회)
	허가제 대상 (50㎡ 이상)	사육경력 3년 미만	12	
		사육경력 3년 이상	8	
	가축사육업 등록제 대상(50㎡ 이하)		6	6 (4년 1회)
축산관련 종 사 자	가축거래상인		6	4 (4년 1회)

에서 위반횟수별로 제재처분 수위를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여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변경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변경 신고 사항을 규정(신설)
 - (신청 절차) 가축거래상인등록 신청서에 교육이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변경신고 사항) 주소지, 거래축종
 - ☞ 가축거래상인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신청 절차 및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가축거래상인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서 규제비용 수준이 미미하며 병 매개체로 작용 가능한 가축거래상인의 업무특성 고려시 관리가 필요한 수준의 정보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신설(신설)
 - 1.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제시, 2. 가축거래내역관리대장 기록 및 1년 이상 보관
 - ☞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가축거래상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추가비용 수준이 미미하여 적정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부과 세부 기준 설정(신설)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년 이내 3번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2년 이내 영업 미재개자, 휴업 지속자 => 등록 취소
 - 명의 대여자, 준수사항 미이행자 => 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자 => 1차 : 영업정지 6개월, 2차 : 등록 취소
 - ☞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별로 제재처분 수위를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므로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사전 및 보수 교육과정(시간, 과목)을 신설(신설)

☞ 법률개정으로 축산업 허가자 등은 지정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대상자별 교육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육경력 및 교육대상별로 중요도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규제비용 수준이 낮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교육 비용 : 국비(연간 22억) + 자부담(4시간 기준 1만원)

-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절차, 교육운영 기준을 신설(신설)

* 사업장 승계, 대표자, 품목, 부화능력 증가, 사육가축, 축사면적의 증가 등

- (교육총괄기관 지정기준) 전국적인 조직망 구비, 온·오프라인 시스템 운용 가능, 지자체 연계 및 운영기관 관리 가능

-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 교육장 시설(40점), 교육인력(25점), 축산교육실적 (15점), 교육실행능력(20점)

☞ 축산 방역·위생·환경 등의 관리를 위한 교육 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축산 방역·위생·환경 교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설·인력 기준을 지정요건에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기관 지정 신청을 위하여 수반되는 절차·방법을 설정한 것으로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설정(강화)

☞ 법률개정으로 신설된 축산업 허가제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므로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농촌진흥청

최문건 | 사무관(044)200-2424, choimg@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등 총 3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2.3.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비료생산업(지렁이분)의 시설기준 신설(강화)

– 지렁이분*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지렁이분 비료생산시 지렁이 사육시설 및 선별시설을 갖추도록 함

*지렁이분이란 지렁이 분뇨를 말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에 활용

☞ 비료의 원료에 지렁이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렁이분 비료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육시설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등 격리된 장소만 갖추면 되며, 선별시설의 경우에는 지렁이 분뇨를 선별가능한 수동식 장치(체) 등을 갖추면 되는 등 지렁이분 생산을 위한 최소의 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200만원 내외)이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퇴비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이하 ‘폐수처리오니류 등의 퇴비원료’)의 지정기준 강화(강화)

* 식품, 담배, 종이, 화장품 등 제조업 및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농어촌 생활하수오니 등(별표 5의 2호)

– 중금속검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퇴비에 적용되는 허용기준(별표 3)과 동일하도록 변경

성분명	현행	개정(안)
유기물	60% 이상	(현행과 같음)
비소	50mg/kg 이하	45mg/kg 이하
수은	2mg/kg 이하	(현행과 같음)
납	150mg/kg 이하	130mg/kg 이하
카드뮴	5mg/kg 이하	(현행과 같음)
크롬	300mg/kg 이하	250mg/kg 이하
구리	500mg/kg 이하	400mg/kg 이하
아연	900mg/kg 이하	(현행과 같음)
니켈	50mg/kg 이하	45mg/kg 이하

☞ 농업환경 오염방지 및 유해 농산물 사전차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폐수처리오니류 등의 퇴비원료에 포함

된 중금속성분의 허용기준을 퇴비의 허용기준 수준으로 강화시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상토 및 유기질비료 시설기준 신설(강화)
 - (상토) 원료 투입시설, 동력 배합기, 동력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
 - (유기질비료) 100㎡ 이상의 보관창고, 동력분쇄기 (증제 피혁분(蒸製皮革粉)의 경우 찌는 장치)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에서 상토의 공정규격이 신설('12.1.2)되어 상토가 비료관리법상 보통 비료로 신규편입 되고, 보통비료로 분류되던 유기질비료가 부산물비료로 분류가 변경('12.7.3)됨에 따라, 상토 생산업 시설기준을 신규로 마련하고, 비료구분이 변경된 유기질비료의 생산업 시설기준을현행 시행령에서 고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유기질비료의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유기질 비료의 시설기준을 고시 개정(안)에 이관한 것으로 추가비용이 미발생하며, 비료생산업(16개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토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산림청

최동규 | 사무관(044)200-2425, tjchdk@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7건, 강화 4건 등 총 3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1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제286회 예비심사 (2012.2.2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292회 예비심사 (2012.3.15)	원안의결 11	신설 11 *비중요 11
3.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방법 제정안	제316회 예비심사 (2012.6.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16회 예비심사 (2012.6.07)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5.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7회 예비심사 (2012.8.0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7회 예비심사 (2012.8.03)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41회 예비심사 (2012.11.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31	신설 27 강화 4 *비중요 31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산림조합법상 임업인의 자격요소 중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강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인 범위와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규정을 통일하는 것으로, 임업인의 범위에서 임업인의 자격요소를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 외에도 여러 요소를 두고 있어 연간 판매액의 상향으로 임업인의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인가기준을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둘이상 이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 총액이 3억원 이상으로 규정(신설)

* 지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2개 이상의 산림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법인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자격은 둘 이상의 조합 또는 중앙회이므로 출자금납입확약금 총액 3억원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유사입법례에 비추어도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1)

■ 심사내용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산지이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에 신청하여야 함(신설)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를 3만㎡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됨

**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현행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상의 유사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20조의3)인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에서도 동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신설)

–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지역이 아닐 것,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이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부합될 것

– 기반시설을 포함하거나 또는 기존의 기반 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 경관 및 환경보전, 재해예방 등에 지장이 없을 것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독특한 생태·경관 등 산지특성을 고려한 생태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 취지가 인정되고, '지정기준'들을 보더라도 상위법상의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이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제한지역이아닐 것등을 지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민북지역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이나 기준의 내용에 비취볼 때 과도하지 않은 규제수준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민북지역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0호의 '기타 공익적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아래와 같이 규정(신설)

– 산림문화자산으로지정된산지,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또는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산지특별보호지역·산지특별관리지역의 산지

☞ 동 시행령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지정제한 산지인 산림문화휴양법상의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산지, 산림자원조성법상의 채종림, 시험림의 산지 등을 보면 민북지역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 적시한 지정제한 산지들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지정 목적이 있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산지관리법(제9조)에서도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명승지·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산지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함(신설)

–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성토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 할 것

- 산지의 토양이 보전되도록 오염 방지 및 산사태·토사유출 등 재해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지의 식생이 보호되도록 입목·초본류 등의 생태축을 확보할 것
- 산지의 경관이 유지되도록 시설의 높이·넓이 등 규모와 밀도·배치 및 디자인·색채를 적정하게 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것
-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와 공법 사용 등

☞ 동 제정안은 현행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기준'과 대동소이하며, 일부 전용기준이 강화*된 면도 있으나 오히려 완화**된 면도 있으며, 이는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생태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민복지역의 지역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준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강화사항: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2m(산지법 15m)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는 16m 초과하지 않도록(산지법은 주변 수목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 단독주택 신축목적의 산지전용시 1가구 1주택만 건축(산지법은 1가구 19세대 허용), 산지의 원형존치율 60% 이상(산지법 20% 이상)

* 완화사항: 시설의 설치가능지역을 산지표고의 100분의 70 미만(산지법 50 미만), 전용산지의 입목축적률 기준을 두지 않은 점(산지법 150% 이하), 전용산지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두지 않은 점(산지법 25도 이하)

- 생태적 산지전용 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의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의 복구설계서승인기준(별표)에 생태복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신설)

☞ 동 제정안의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기준'은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상의 복구기준과 산지복구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생태복원에 관한 부분도 나무심기의 경우에는 복원지의 전체면적을 1m×1m 간격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틀 안에 한 수종씩 교목의 경우 1주, 관목의 경우 2~4주씩 식재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행 산지관리법상의 복구기준에 비해 동 '복구·복원기준'의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생태적 산지전용 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에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맞게 복구·복원설계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설계서 변경 포함), 복구·복원설계서에는 축척 2만 5,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복구·복원설계서 대상지의 전경사진, 공사예정 공정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일반·특별), 공사표준도, 복구·복원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

된 산지내역서,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 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등을 포함하여야 함(신설)

☞ 동 제정안은 상위법률에서 규정한 준공검사 및 승인에 대한 세부절차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상의 유사규제인 산지전용지에 대한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에서도 동일한 절차와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산지 및 생태에 대한 복구·복원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복원준공검사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신설)

☞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상의 유사규제인 산지전용지에 대한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 및 생태의 복구·복원 준공검사에 형질변경, 입목벌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신청서에 형질변경, 변경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000분의 1 내지 1,200분의 1의 용도변경 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제6조 제4호에 의한 산림조사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 관련 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도록 (신설)

☞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시 동일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산지관리법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시행규칙 제23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민복지역 산지 중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축척 2만 5,000분의 1 이상의 임상도에서 2영급* 이상의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1천㎡ 이상의 토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봄(신설)

* 나무의 나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1영급(수령이 1~9년), 2영급(10~19년), 3영급(20~29년)을 말함

☞ 산지관리법상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로 보고 있으므로(제2조) 2영급 이상의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는 당연히 산지가 됨에도 규모를 한정된 점, 보전산지중 행위제한이 공익용산지에 비해 다소 약한 임업용산지로 보는 점에서 볼 때, 현행 산지관리법에 비해 규제완화적 측면이 있으며, 민복지역 산지의 역사적, 생태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민복지역 산지에 대해서는 산리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정함(신설)

- ☞ 현행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기준'과 대동소이하며, 일부 전용기준이 강화*된 면도 있으나 오히려 완화**된 면도 있으며, 이는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생태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민북 지역의 지역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준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강화사항 :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2m(산지법 15m)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는 16m 초과하지 않도록(산지법은 주변 수목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 단독주택 신축목적의 산지전용시 1가구 1주택만 건축(산지법은 1가구 19세대 허용), 산지의 원형존치율 60% 이상(산지법 20% 이상)

** 완화사항 : 시설의 설치가능지역을 산지표고의 100분의 70 미만(산지법 50 미만), 전용산지의 입목축적률 기준을 두지 않은 점(산지법 150% 이하), 전용산지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두지 않은 점(산지법 25도 이하)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전용 후 복구·복원비는 생태적 산지전용 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이며, 이를 미리 예치하여 함(신설)

- ☞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및 제39조)에서도 전용산지에 대한 복구비 예치에 대해 동일한 산정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3)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방법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1급, 2급)별로 시험과목을 정하고, 시험유형을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구분하도록 규정(신설)

*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이러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산림치유지도사라 함

-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유형을 정하는 것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시험방법 등이 적절한 규제수준으로 판단

* 농산물관질관리사(농산물관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

- 양성과정별 합격기준으로 선택형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고, 논문형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으로 정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함(신설)

- ☞ 평가 합격결정 기준은 일반적인 자격시험에서 정하고 있는 합격기준으로 산림치유지도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규제내용도 농산물관질관리사, 공인노무사 등 유사사례*에 비추어 적절한 규제수준으로 판단

* 농산물관질관리사(농산물관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4항) : 해당시험 무효 및 2년간 응시자격 정지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8)

■ 심사내용

- 다음 사유의 경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양성하는 산림 및 유아교육 분야 대학 또는 민간단체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 이외에서 운영하거나 당초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로 운영하는 경우 등

-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교육생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 피교육생의 피해방지를 위한 규정의 취지가 인정되고, 유사입법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9조)에 비추어 규제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양성기관 지정자격, 전문가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시설, 전문인력의 구성, 평가방법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신설)

- 지정자격 : 산림 분야 대학 및 유아교육 분야 대학,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교육과정 및 시간 : 숲해설가 17개 교과목 140시간, 유아숲지도사 25개 교과목 180시간, 숲길체험지도사 11개 교과목 100시간

- 교육시설 : 강의실(100㎡), 실습장, 사무실, 교재, 사무용 기기, 소방시설 등을 구비
- 각 교과목별 전문 강사 등 확보
- 기타 교과목 이수에 대한 평가(70점 이상) 사항 등
- ☞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숲해설가·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인증기준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시킨 것으로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육과정 인증기준 등 삭제조항을 이관시킨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입지조건, 시설규모 등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정함(신설)

- 입지조건 :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300m 이내
- 규모와 시설의 종류 : 2ha, 화장실,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휴게시설
- 운영 교육프로그램, 교구, 응급약품 및 의료기구, 소화기 배치
- 유아숲지도사 1인 이상 배치

- ☞ 유아숲체험원이 유아들의 활동공간임을 감안하여 입지, 시설규모, 운영프로그램, 인력 등 일정한 등록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오감으로 체험하게 하고, 지도·교육하는 시설로서 유아들의 활동공간임을 고려할 때, 별도의 등록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등록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규제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규정」별표의 교사, 운동장 등의 시설요건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분야대학,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등록한 법인 등으로 정함(신설)

- ☞ 산림교육센터는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과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원에 대한 산림 분야의 연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정목적에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 자원, 전담인력의 확보와 함께 공신력이 요구되므로 센터 지정대상을 한정된 규정의 취지가 인정되며, 유사입법례(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비추어 규제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을 규정함(신설)

- 일반기준 :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지정한 산림으로 10ha 이상 소유 또는 임대
- 기본시설 : 강의실, 실내실습장, 도서실, 관리실 등 기본시설 확보
- 전문인력 : 상근 관리자 2명 이상 확보, 산림교육 담당 전문인력 1명 이상 상근, 기타 전문강사 확보 계획 마련
- 프로그램 : 학교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 연수 프로그램 확보, 산림교육을 위한 연중 교육계획 마련

- ☞ 산림교육센터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산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정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되며, 유사입법례(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비추어 지정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법 제2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사항 및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법률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할 수 있도록 규정함(신설)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관련 부분을 삭제 후 동 제정안으로 이관시킨 것으로서 감경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 규제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산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등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규정함(신설)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기준'의 내용을 삭제 후 동 제정안으로 이관시킨 것으로 규제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유아숲체험원 등록자 또는 산림교육센터 지정자에 대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신설)

- ☞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비해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

(5)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의 방법, 안전조치의 실시기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관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함께 알리도록 함(신설)
 - ☞ 동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조치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등'은 안전조치명령을 위한 당연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내린 안전조치 명령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신설)
 - ☞ 이행결과 통보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행결과의 통보는 안전조치명령의 이행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립공원 내에 지정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훼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휴식기를 정한 경우와 산림유전자원 보호, 연구 등의 목적으로 출입 제한구역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신설)
 - ☞ 동 개정안은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 및 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출입제한사유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

(6)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산사태 위험지에서의 산지전용, 비탈면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현행 산지전용지의 평균경사도를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10m×10m셀의 면적을 전체의 4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수련시설·숙박

시설·공장을 비탈면에 설치하는 경우 산지전용지 상부의 경사도를 25° 이하로 제한함(강화)

- ☞ 재해발생 우려가 큰 지역에서의 건축물 설치 등의 산지전용행위는 인명이나 재산피해, 산사태 등과 직결될 수 있어 기준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크게 기준이 강화되거나 위험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관상산림식물의 경우 현재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통해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 미만에서 3만㎡ 미만인 면적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입목의 벌채·굴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 경사도 및 면적제한을 없애 규제를 완화하고, 입목의 벌채·굴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도록 함(강화)
 - ☞ 입목을 벌채·굴취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비해 요건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정상적으로 산나물, 약초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면적 등의 제한을 없애 오히려 규제 완화적 측면이 있으며, 평균경사도를 25° 미만으로 한 부분은 산지의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조건이 평균경사도 25° 이하*이므로 과도한 규제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
 - *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제2호 :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 이하일 것
-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의 경우 현재에는 1만㎡에서 3만㎡까지의 면적 구분에 따라 시추공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토석채취허가 기준이 5만㎡ 이상인 현실을 감안하여 허가신청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한 면적 3만㎡마다 최소 시추공수 1개공 이상, 시추총연심도* 50m 이상을 추가로 시추하도록 함(강화)
 - * 각 시추공 깊이의 합
 - ☞ 허가신청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시추공수 및 총연심도가 현행 기준과 동일하고, 10만㎡ 이상인 경우에도 3만㎡ 미만을 채석하는 경우의 시추공 증가수 및 깊이 증가폭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국유림영림단의 종류와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국유림영림단으로 선발된 경우 등록 및 변경 등록 절차와 등록 후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신설)

기능인 영림단 등록요건	기계화 영림단 등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전체 구성원의 60% 이상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능인영림단의 등록요건 충족임업기계장비 기술교육 이수한 자가 전체의 30% 이상

- ☞ 상위법에서 위임한 국유림영림단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약 141개 단체, 1,600여명)되고, 유사입법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감안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정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절차 및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약 41개 기업, 58천ha)되고, 유사입법례(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를 감안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

6절 방송통신 분야

1. 방송통신위원회

김동욱 | 사무관(044)200-2407, tangouniform@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3건, 강화 9건 등 총 7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2건 중 1건에 대해 철회권고, 4건에 대해 개선권고 4, 2건에 대해 부대권고, 1건에 대해 부처위임하였으며, 6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제278차 예비심사 (2012.1.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제283차 예비심사 (2012.2.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284차 예비심사 (2012.2.15)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1
4.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85차 예비심사 (2012.2.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291차 예비심사 (2012.3.1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281회 본회의 (2012.4.19)	원안의결 5 개선권고 2	신설 7 *중요 4, 비중요 3
7.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	제282회 본회의 (2012.5.3)	원안의결 4 철회권고 1 부대권고 1	신설 6 *중요 6
8.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	제283회 본회의 (2012.5.17)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신설 3 *중요 3
9.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316차 예비심사 (2012.6.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0.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정안	316차 예비심사 (2012.6.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제445차 경제분과위 (2012.6.14)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319차 예비심사 (2012.6.15)	원안의결 10	신설 10 *비중요 10
1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446차 경제분과위 (2012.7.5)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제정안	324차 예비심사 (2012.7.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325차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방송법 개정안	326차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7.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26차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7	신설 4, 강화 3 *비중요 7
18.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326차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안	제289회 본회의 (2012.8. 0)	원안의결 1 부처위임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20.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334차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1. 전파법 개정안	334차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2.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334차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정안	334차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335차 예비심사 (2012.9.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	340차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340차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340차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8.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343차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64 철회권고 1 개선권고 4 부대권고 2 부처위임 1	신설 63, 강화 9 *중요 16, 비중요 56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4세대 LTE 상용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기준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LTE 서비스 도입 관련 가입자 및 단말기 관리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 인증 및 불법 복제된 단말기 검출 등을 위한 추가 기능을 구비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신설)

☞ 상위법령에(방송통신발전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근거규정이 있으며, 새로 도입되는 LTE서비스에 대해 상호인증 및 보안 기능을 갖추도록 한 규정은 불법 복제 단말기로 인한 소비자피

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2)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방송사에 제작협찬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11.8.19)하면서 수도권 지상파방송 3사에 대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허용범위를 방통위 규칙에 위임토록 한 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지상파방송 3사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회당 제작비 2억원 이상이거나 편성횟수 110회 이상인 드라마 또는 4부작 이하의 단막극 또는 회당 제작비 7,000만원 이상의 예능프로그램 및 회당 제작비 5,000만원 이상의 교양프로그램의 협찬 허용범위 설정(신설)
- ☞ 상위법(방송법 제60조)에서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제작협찬을 받을 수 있는 자사 프로그램 기준을 하위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본 고시는 형식상 규제이나 실질적으로 지상파방송 3사가 제작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확인에 필요한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인정 절차와 관련,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가 만점(22점)의 60% 이상(14점)인 방송프로그램을 국내 제작프로그램으로 인정(신설)
- ☞ 상위법(방송법 제57조)에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구체적 기준(자본비율 및 인정기준 점수)에 대해 하위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자본 비율 기준에 대해 국내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였고, 해외의 인정기준 점수 사례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 구조 변화(하청제작 → 창작제작)을 반영하여 국내제작 인정 애니메이션을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합계가 16점(30점 만점) 이상인 애니메이션으로 하되 사전 기획단계의 점수를 상향하고 제작단계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신설)

- ☞ 상위법(방송법 제57조)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구체적 기준(자본 비율 및 인정기준 점수)에 대해 하위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자본 비율 기준에 대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하였고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외국제작물의 국적 구별 기준과 관련해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캐릭터(1점) 등 총 5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인 국가의 제작물로 분류하되 2개 국가 이상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제작사 기준으로 분류(신설)

- ☞ 상위법(방송법 제57조)에 외국제작 영화·애니메이션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 하위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와 제작사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하였고, 규정된 기준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방송사의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적인 가상외주를 퇴출시켜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①작가 계약체결 ②출연자 계약체결 ③주요 스태프 계약체결 ④제작비의 30% 이상 조달 ⑤제작비 집행 및 관리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경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신설)

- ☞ 상위법(방송법 제58조)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 하위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하였고, 규정된 기준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4)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권고사항 수용 및 농림수산부 요청에 따라 선박(어선)에 의무 설치된 초단파 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VHF-DSC)와 위성항법장치를 항상 연결하여 운용토록 규정(신설)
- ☞ 이미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의해 위성항법장치(GPS)와 초단파 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VHF-DSC)의 설치 의무가 있어 본 고시에 의해 별도로 기계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양 기계의 연결이 간단하여(케이블선 연결) 실제 부담이 크지 않고 이에 비해 해난구조 대비를 위한 필요성은 매우 높다는 점에 비추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을 받아야 하는 기자재에 개정('12.1월) 「전자파 강도 및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에 신규로 지정된 휴대용 무선설비(13종) 등을 확대 적용(신설)

※ 전자파흡수율 시험 대상은「전자파강도 및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시험 내용 및 항목은 본「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 본 규정은 형식상 규제 신설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타 부처 소관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자파적합성 검사 대상 품목을 본 고시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은 기표원에서 전자파적합성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각각 받게 됨에 따라 업체의 초기 인증비용(5만원 정도)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장심사 비용 및 재인증비용 등이 절감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스마트TV, 각종 복합기(팩시밀리, 복사기, 프린터 등) 등은 전기용품과 정보기기 모두에 해당되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지경부)과 전파법(방통위)에 따른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전기안전규제 시행근거를 삭제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지경부)에 따라 전자파규제를 받는 전기용품을 전자파적합성평가 대상(적합등록)으로 이관 · 지정(신설)

※ 전기안전과 전자파적합성 규제분리 결정('11.8.23, 국무총리실 조정)의 후속조치

☞ 전자파흡수율 시험 대상에 대한 관련 고시(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규정에 의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판매를 하거나 적합성평가 결과를 부적절하게 표시하여 소비자 등을 현혹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 대여 목적의 인터넷 게시 제품에 대하여,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식별부호를 문자(Text) 형태로 표시를 하도록 규정(신설)

☞ 상위법률(전파법)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가 있으며 본 고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규정고 있으며, 본 규정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측면과 적합성평가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적합성평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통관 후 장기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사전통관 제품을 불법유통 하는 등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인 사전통관 제도」를 이용하여 통관한 기자재는 통관 후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정함(신설)

☞ 본 고시에 사전통관 후 적합성평가 기간 규정이 없었던 것을 입법적 불비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본래 적합성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며,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간이 10~15일 이내이고 적합성평가 인증처리 법정 소요기간이 5일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신설 7)

■ 심사내용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12.5.23 시행)으로 광고판매대행자 허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령에 허가요건, 신청서류 등 허가 · 변경허가 · 재허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별 처분기준 등 규정(신설)

☞ 본 시행령이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변경승인 및 허가 취소 등은 그 핵심적 내용으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최단액 출자자가 되기 위한 승인신청 기한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 또는 합의를 하기 30일 이전”의 기산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의 정의 관련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공동으로 100분의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미디어랩 회사의 지분 소유를 100분의 40까지만 허용하는 모법과 상충하며 방송법령에서 공동으로 의결권 30% 이상을 행사하는 경우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로 규정한 것과도 상이하므로 30%로 수정이 필요(개선권고)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광고판매대행자 소유제한이 규정되어 시행령으로 이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이 필요한 바, 법에서 위임한 특수관계자 및 기업집단의 범위를 구체화(신설)

☞ 특수관계자 범위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과 변경승인 대상을 규정하는 핵심적 사안으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방송 및 방송광고의 공공성과 공익성, 방송광고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필요성을 고려할 때, 동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범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유사한 규정이 있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도 본 시행령과 그 범위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통위 원안에 동의하며, 소유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도 방송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자산총

액 10조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함(원안의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금지행위가 도입되어 시행령으로 이에 대한 세부 절차 등 규정이 필요한 바, 광고판매대행자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거래거절, 차별취급,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방송사업자 관련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의 세부유형을 규정(신설)

☞ 상위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부 유형화하는 것과 관련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본 시행령의 금지행위와 공정거래법(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는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나 미디어랩법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 위반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중복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부처간 협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법 시행일까지 협의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MOU 체결이 필요(개선권고)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방송광고 수수료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와 관련,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판매액의 13~16%로, 지상파방송광고의 대행수수료를 수탁수수료의 70~86%로 정함(신설)

☞ 본 수탁수수료와 대행수수료 규정은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준수하여 한정하고 있으나 당해 수수료 규정이 광고 영업활동에 핵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이해관계자(방송사업자, 광고대행사, 광고판매대행사 등)간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며, 방송광고판매시장을 경쟁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제정법도 수수료를 고정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시행령안은 법 제정의 취지와 그동안의 방송광고판매 관행, 시장상황,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에서 수수료가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했다고 판단(원안의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12.5.23 시행)으로 중소지상파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령으로 이에 대한 세부절차 등 규정이 필요한 바, 지정을 요청한 중소방송사의 성격·광고매출 규모,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신설)

☞ 본 규정은 중소방송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원하는 경우 이를 방통위에서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해 주도록 한 상위법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시행령에서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등을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소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12.5.23 시행)되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바 사업실적서, 결산보고서 등 협회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방송광고판매대행사협회 설립은 법률상 인가 사항으로 방통위의 감독권한이 상위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협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위임입법 내에서 감독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요구 자료범위가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2.5.23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과징금,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대성을 감안하여 기준 과징금·과태료를 정하고, 위반기간·주도여부 등을 고려 가중·감경 기준을 규정(신설)

☞ 본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수준을 세분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률의 위임입법 내에서 위반 행위별로 위반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2.5.23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과징금,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대성을 감안하여 기준 과징금·과태료를 정하고, 위반기간·주도여부 등을 고려 가중·감경 기준 규정(신설)

☞ 본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수준을 세분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률의 위임입법 내에서 위반 행위별로 위반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필수적인 설비를 이용자가 설비제공 요청을 거절당할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이 증가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어 그 지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설비로, 관로를 외관, 내관, 인상분선관로 등 내부에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규정(신설)

☞ 본 고시의 상위법 근거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서는 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등을 정하라고 위임하고 있는 바, 설비제공 사업자를 정하고 있는 본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고 있

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요규제로 판단하며, 필수적인 설비의 개념은 경쟁촉진, 설비이용의 효율화라는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법에 규정될 사안이며,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1항)의 관로란 상하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차후에 이를 통신관로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철화권고)

- 광케이블 개방범위를 2004년 이전에 구축한 설비에서 2006년 이전에 구축한 설비로 확대하며, 관로 및 광케이블 중 의무제공사업자가 자신의 예비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범위(예비율)를 명확히 규정(신설)

☞ 의무제공대상 설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제공사업자(현재 KT)의 피해 규모와 제공설비 확대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엄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광케이블의 경우 기존의 제공대상 설비가 아니었던 것과 비교하여 제공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제공사업자의 부담 정도를 결정짓는 내용으로 설비제공 고시의 핵심적 사안이나 현재 개정안(광케이블과 관로의 예비율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기술검증과 현장분석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이해관계자 협의도 완료된 만큼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원안의결)

- 제공사업자가 스스로도 준수하지 않는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은 설비제공 거부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하며, 제공사업자가 자체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규정(신설)

☞ 본 고시는 설비제공사업자(현재 KT)의 재산인 설비를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대여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규제강화로 인해 설비제공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제공사업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은 설비제공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개정안 단서 조문은 KT가 고의적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설비를 빌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체기준을 핑계삼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해당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부대권고)

- 제공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부정확한 설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대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비정보 제공, 제공대가 및 부과방식 변경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본 고시는 설비제공사업자(현재 KT)의 재산인 설비를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대여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규제강화로 인해 설비제공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제공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료 업데이트를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높은 자료제공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설비제공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견없음(원안의결)

- 설비제공업무처리 기간을 관로는 7~14일을 7~12일로, 광케이블은 20일에서 13일로 단축하며, 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 중 공동현장실사요청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자는 7일 이내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방통위는 일방의 참여 없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신설)

☞ 본 고시는 설비제공사업자(현재 KT)의 재산인 설비를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대여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규제강화로 인해 설비제공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현장조사 협조 요청시 제공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 개정내용에 대한 제공사업자(KT) 등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방통위 개정안이 타당하게 마련되었다고 판단됨(원안의결)

- 광케이블의 경우 최소 이용대가 산정구간을 인입구간은 100m, 비인입구간은 200m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고객에게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 산정구간을 인입구간 50m, 비인입구간 100m로 축소(신설)

☞ 본 고시는 설비제공사업자(현재 KT)의 재산인 설비를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대여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제공설비에 대한 이용대가 산정은 설비제공사업자의 손해 정도를 측정하는 핵심적 사항으로 본 규정의 최소산정구간 축소에 따른 설비제공사업자의 피해 규모를 분석을 통해 과도한 손해를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본 규정은 광케이블 제공시 의무제공사업자가 투자비용 회수를 위하여 설정한 최소이용대가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미 제공사업자(KT) 등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있었고 본 조항의 취지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방통위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원안의결)

(8)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허가신청법인이 사업계획서상 제시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심사사항별 심사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최대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을 부여(신설)

☞ 심사항목 내용에서 최소한의 자본금 규모가 얼마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과 방통위가 최

소자본금 규모를 허가신청 접수 전에 확정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시점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있어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신청예정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허가신청 접수전'에 공표한다는 것은 방통위의 공표시점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자본금 확보 등을 위한 사전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방통위가 기존 자본금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을 먼저 공표하고, 일정기간 후 적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금 규모는 현재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의 하부사항이므로 굳이 신설하기보다 재정적 능력의 세부항목으로 포함시키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3점을 감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개선권고)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기한의 기산일을 허가신청일에서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종료일로 변경(신설)

☞ 수시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허가 심사기한을 별도 공고 후 진행되는 주파수 할당 심사와 연계하는 것은 자칫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 결과 회신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해칠 수 있어 중요규제로 판단하며, 기산일이 변경(허가신청일 →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 종료일)될 경우 허가신청법인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개선권고)

- 허가신청법인의 구성주주와 관련된 신청서류(구성주주 현황, 출자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보완(신설)

☞ 본 규정은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 법인의 구성 주주 및 출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구비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허가 신청법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시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으며 허가신청 법인의 안정적 기간통신역무 제공 능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적정(원안의결)

(9)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방송법 개정('12.1.17일 개정, 7.18일 시행예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복지 채널 송출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송출하도록 규정(신설)

☞ 본 규정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 채널 의무 송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은 「복지TV」1개만이 운영되고 있어, 의무 송출 채널을 1개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시행령(안)이 합리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방송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의무가 종편사업자와 일정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적용하되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한 바,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함(신설)

☞ 본 규정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의무가 적용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범위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연간 방송시간 중 50% 이상을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는 채널사용사업자(12개 채널, 10개 방송사업자)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들 12개 채널 사업자에게 국산 애니메이션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음과 동시에 국내애니메이션 제작 수요 증진이라는 상위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10)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2.1.17)으로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주체 · 대상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신설)

－ 주 체 :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 2년 유예)

－ 상대방 :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 대상 서비스 :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 방 법 :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별표에 구체적 규정)

☞ 본 규정은 과도한 통신요금 청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지의무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고시에 정한 것으로, 본 고시의 통지의무는 갑작스러운 과도한 요금부과에 대한 통신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목적이며 이미 자율적으로 통신사업자(SKT, KT, LGU+)들이 일부 서비스(데이터, 음성서비스 등)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이행해오고

있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11)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관련, 통신중계서비스 의무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비용을 부담시키고, 센터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에 협조 의무를 규정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 고시안과 같이 통신중계센터에 대한 비용부담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 조항(고시 제정 위임규정 등)이 미비하므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의 필요성 및 그 내용에 동의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상위법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부대권고)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0)

■ 심사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시(이하 “누출 등”) 지체없이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하되, 이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게재 또는 전국적 일반일간신문 광고로 갈음토록 함(신설)

☞ 본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구체적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이용자의 알권리 보호 및 추가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누출사실 확인 즉시 이메일 등 방법으로 누출 사실 및 대응조치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홈페이지 게재 또는 일간신문 광고)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은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 망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함(신설)

☞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천적인 예방책으로 망분리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시행령의 의무부담대상 범위도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기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자 범위 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1조)을 준용하여 기준을 마련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구체적인 망차단조치 범위 등은 하위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고시(안) 규제심사시 검토 예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와 계약으로 정한 기간(3년 이내의 범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미이용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별도 저장되는 사실을 기간 도래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신설)

☞ 휴면계정의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누출시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별도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사업자의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도 있으며 개인정보의 삭제, 별도저장과 이에 대한 이용자 통지(이메일 등) 의무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볼 수는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신설)

☞ 본 시행령의 의무부담대상 범위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기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자 범위 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1조)을 준용하여 기준을 마련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연 1회 이상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한 조치로써 개인의 알권리 보호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신설)

☞ 상위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객관적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증심사 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내 인증위원회(외부 전문가로 구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방통위에서 인증심사 업무를 위임위탁할 때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인터넷진흥원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증심사원(인증심사요원)의 수, 인증심사 일수 등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신설)

☞ 상위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인증 수수료 부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현재 시행령(안)만으로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기준은 추후 고시(안) 규제심사시 검토 예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시행령에 위임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신설)

☞ 상위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인증대상 사업자의 세부 기준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 제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국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의무인증 대상사업자를 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무부담대상 범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기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자 범위 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1조)을 준용하여 기준을 마련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7항에서 인증의 표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표시·홍보하는 경우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표지를 사용토록 함(신설)

☞ 정부공인인증 마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유사 또는 허위 인증마크와의 오인가능성을 없애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지정기준 변경사항 및 인증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공익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1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 매출액 규모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종편 PP에 대해서는 시행 당해연도에는 0.3% 기준을 적용하되 연간재산상황 공표시 편성비율 및 매출액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함(신설)

[종편PP]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적용비율
500억 미만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500억 이상 600억 미만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5 이상
600억 이상 700억 미만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7 이상
700억 이상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 다만, 시행 당해년도에는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최초 연간(1~12월) 재산상황 공표 시 위 편성비율 및 매출액기준 재조정)

[전문PP]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적용비율
50억 이상 100억 미만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100억 이상 150억 미만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
150억 이상 200억 미만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
200억 이상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 매출액 규모가 다른 종편PP와 전문PP에게 동일한 편성비율(0.3~1%)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종편PP에 0.3% 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합의된 신규 수요(29편)의 달성이 어려워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취지가 무색해지며 종편PP에 0.3% 적용하더라도 애니메이션 시장구조를 감안하여 지상파와 종편PP의 매출액 대비 구매비용을 계산해 보면, 지상파의 1/3 수준으로 종편PP가 불리하지 않으므로 적정(원안의결)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에 신규업체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관련 세부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을 구체화(신설)
 - ☞ 독점으로 인한 시장왜곡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실질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고시안의 세부 심사기준에 있는 심사항목과 세부 심사사항은 모두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배점비율 역시 특정항목에 치우침이 없으며 심사방법도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과징금 부과할 경우 가중·감경할 수 있는 근거·사유(횡수, 행위상황등)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신설)
 - ☞ 동 고시의 가중·감경 사유는 유사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내용은 없으며, 가중·감경정도도 횡수별·위반정도 등에 따라 상위법 위임범위(50/100) 내에서 10/100단위로 가중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6) 방송법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일반국민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신설)
 - ☞ 금지행위를 통해 보호하려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고려할 때 규제의 수준은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민관심행사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불필요한 방송커버리지 논란을 불식하고, 방송사의 편의 제고 및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방통위가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한 방송사업자를 확인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신설)

- ☞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 요건(가시청가구비율 등)을 사전적으로 고시함으로써 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일반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적정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 대상자에 외주제작사를 포함(신설)

- ☞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정책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라는 점에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법 제33조의 심의규정 또는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신설)

- ☞ 외주제작사도 기존 과징금 부과 대상과 같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간접광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만큼 동일하게 권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외국인·미성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함(신설)

-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는 그 위치·권한 등을 고려시 임용 등에 있어 결격사유가 필요하며 그 수준이 타당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7)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신설 7)

■ 심사내용

- 경영상 이유 등으로 사실상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퇴출 수단으로서 직권취소를 두고 이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 조치 위반시 벌칙 규정을 따르도록 함(신설)

- ☞ 기간통신사업은 희소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번호 등의 자원을 할당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의 지속성 유지가 중요한 바, 사실상 사업운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퇴출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방통위가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하고, 이를 위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시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신설)
 - ☞ 이용자보호 업무는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로 평가를 위한 사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진작 효과가 매우 크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선정 기준」(고시)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는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 등에 부여된 설비제공 의무에 대한 설비제공 및 이용실태 감독 및 현장조사를 법률로 상향입법(신설)
 - ☞ 현행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를 상향입법하여 사업자의 추가적 비용부담은 없는 반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간 중복적 설비투자 방지 등 설비제공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업규모(매출액, 가입자, 설비규모 등)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동구축 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신설)
 - ☞ 기존에 사업자에 자율적으로 부여되던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나, 그로 인한 추가적 비용부담이 거의 없고 피규제자인 사업자가 얻는 혜택이 매우 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업자에게 변작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과 이용자에게 수신된 전화가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신설)
 - ☞ 보이스 피싱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피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수법은 피해 방지 예방을 위한 법령의 틈새를 이용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예방을 위한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바, 비중요규제로 판단
-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금지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강화)
 - ☞ 과태료 부과 입법 취지 및 조사 방해 근절을 위한 과태료 상향 금액이 전파법 등 형사처벌 규정을 둔 유사입법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폐지하려는 경우 승인받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승인 거부 사유로 적시하였으나,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사업자들이 승인 거부의 경우를 예측하기 어려운 바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신설)

- ☞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승인 거부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노력을 촉구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폐지 승인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자 한 것이며 추가적인 비용부담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8)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세부심사기준 및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신설)
 - ☞ 심사항목 등은 상위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세부심사항목은 기존에 운영하던 내부지침(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능력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며, 시행령상 규정된 제출 서류의 작성요령, 부수 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본인확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적정하며, 시행령상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규제자에게 다양한 통보방식(전자우편·서면·전화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의 제공과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부담을 조화시킨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9)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사업자(미디어랩 - 공영랩, 민영랩)들이 방송광고 결합판매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 중소방송사들(40개)을 지정(신설)
 - 공영랩(KBS·MBC 광고판매)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 MBC) 및 EBS, 극동, 평화, 경인방송 등의 결합판매를 지원
 - 민영랩(SBS 광고판매) 방송사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 민방) 및 불교·원음·경기방송 결합판매를 지원

－ OBS는 공·민영법에 7:3으로 분리해서 결합판매 지원

- ☞ 결합판매사업자(코바코, SBS 랩), 지상파방송사업자(KBS 등),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 MBC 등),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OBS, 종교방송 등)간의 결합판매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지원규모를 지침에 따라, 결합판매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사간 이견도 존재하고 있어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고시(안)에 대해 방송사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방통위에서도 행정예고 이후 제기된 불교방송·OBS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 중으로 규개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방통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시(안)를 확정(부처위임)
- 중소방송사 중 5년 미만 신생 방송사(5개)에 대한 별도 지원 가중치(17.3%)를 부여(신설)
 - ☞ 신생방송사에 대한 추가적 지원으로 미디어랩의 광고결합판매 의무가 가중(43억원)되나, 신생 방송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총 방송광고결합판매액('11년 2,600억원) 대비 소액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0)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현행 손실1보상 절차는 시설자 등이 손실보상금 청구시에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방통위가 전문기관 평가 등을 통해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나 현실적으로 시설자 등이 적정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방통위가 지정한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최종금액이 결정되므로 시설자 등이 손실내용을 제출하고 방통위가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변경하여 제도 효율성을 기함(강화)
 - ☞ 분배·할당된 주파수는 사업자 등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할당·재분배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개정안은 시설자 등에서 방송위로 보상금액 산정 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보상금액 산정의 절차적·내용적 효율성이 개선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기술자격검정 수수료 반환일을 종전 시행일 전일에서 시행일 5일 전으로 변경(강화)
 - ☞ 기준일을 검정 시행일 전일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검정 관리의 효율을 증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6조 제5항)은 검정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자격 검정 관리의 통일성 증진을 위해 기준일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1) 전파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신설)
 - ☞ 인체유해성여부(적합성평가)가 확인되지 않은 기자재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법 취지를 감안할 때 판매대행 또는 구매대행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며 유사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기간통신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전송망사업자 등이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주파수를 할당·재할당·추가할당을 신청할 경우에도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신설)
 - ☞ 부과되는 수수료는 주파수 할당이라는 특별한 이익을 받게 되는 자가 부담하는 행위로 사용자부담 원칙에 충실하고, 상세한 수수료 규정은 시행령에서 통제가능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2)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이동전화사업자는 자사의 선불가입자번호에 대한 등록·변경 처리결과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은 번호DB를 구축하도록 함(신설)
 - ☞ 원활한 번호이동성을 위해 선불전화 DB를 구축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관계사간의 협의에 의한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은 미디어랩에 대해 광고판매 대행사업과 다른 사업간 회계구분 및 관련자료 보관,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방송위에 자료제출명령·검사권을 부여한 바, 미디어랩의 회계 관련 의무와 방송위의 자료제출명령·검사권의 범위 특정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회계정리 기준 및 제출 의무 자료를 구체화(신설)

- ☞ 회계정리로 미디어랩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결합판매를 통한 중소방송사 지원계획 이행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회계 분리 및 부속명세서 작성 관련 요구되는 부속명세서가 허가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되며, 5년간 자료보관 의무 부과 관련 상위법 제20조 결합판매 지원규모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통신사업자들이 해당역무에 사용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신설)
- ☞ 전파법(제58조의3)과 동법 시행령(제77조의3), 고시(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적합성평가를 시험·연구, 전시 등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용도에 한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해당 규정은 면제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으로 이의 삭제를 통해 법령의 체계성 확립이 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5)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결합판매 가이드라인(내부지침)」의 내용을 보완하여 「결합판매 금지행위 고시」에 담아 이용자 보호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강화)
- ☞ 기존 개괄적으로 규정된 결합판매 금지행위 내역을 세분화하여, 사업자는 이용자 불만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통위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게 되어 이용자의 권익 증가가 기대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6)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2G(셀룰러·PCS)와 3G(IMT2000)로만 구분된 회계에 LTE서비스 분리 및 영업수익 세부항목에 도매제공수익을 추가(신설)
- ☞ 규제대상이 LTE 또는 도매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매출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로 한정되며, 영업보고서 작성과 관련 사업자의 부담은 경미한 데 반해 도매대가 및 접속료 산정 등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7)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케 함으로써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토록 함(신설)
- ☞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는 공사 관련 당사자간 계약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 등 다른 대안과 비교 최소한의 규제이며, 적정성 심사 관련 규정은 기업환경 개선과제와 관련 법률 개정 소요를 반영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사용 전 검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강화)
- ☞ 검사권자에게 검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원 부여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제고하며, 공사 발주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8)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요금 청구 등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0.5~2.5%)을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1~3%)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며, 중대성 여부 판단에 있어 시장질서의 왜곡 범위·정도·기간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매우 중대·중대·중대성 악함을 구분하여 예시(강화)
- ☞ 이용자인 피해행위를 공정경쟁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시장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지않은 당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며, 상위법령 기준 내에서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주요 위반자인 통신 3사(SKT·KT·LGU+)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매출액과 비교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절 노동·환경 분야

1. 고용노동부

김하나 | 사무관(044)200-2446, hana88@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1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7건, 강화 14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제299회 예비심사 (2012.4.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463회 분과위 (2012.4.19)	원안의결 7	신설 1, 강화 6 *중요 1, 비중요 6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05회 예비심사 (2012.4.3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05회 예비심사 (2012.4.3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제307회 예비심사 (2012.5.0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309회 예비심사 (2012.5.15)	원안의결 12	신설 9, 강화 3 *비중요 12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24회 예비심사 (2012.7.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제329회 분과위 (2012.8.2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9.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33회 예비심사 (2012.9.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제336회 예비심사 (2012.10.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38회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40회 분과위 (2012.11.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3	신설 17 강화 14 내용심사 2 *비중요 33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36조의3 등)(신설)

- 학생정원 : 연도별 총 학생정원은 해당 연도 산업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학과 또는 계열)별 학생정원은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업연한 : 2년
- 이수학점 : 산업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 인가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교원 · 교사 확보기준을 정함

☞ 법률에서 위임*한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고, 학위전공심화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서 제출, 입학정원 제한, 학점 인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에서도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설치, 운영계획서 제출, 모집정원, 이수학점 등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자격 등 규정(시행령 제36조의 4)(신설)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해당 대학 입학 후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에서 위임*한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 운영 취지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 촉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므로 일정 기간 산업현장 경험을 갖추도록 입학자격을 제한할 필요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④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요구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신설 1, 강화 6)

■ 심사내용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조치(법률 제29조,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 강화)

- 유해 · 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 개조,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을 대상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 · 위험성,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함

☞ 도급사업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등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수급업체가 화학설비 정비 · 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급사업시 수급인에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 사업주는 유해 ·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내에 게시 · 비치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므로 사업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도급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정보전달이 잘 이루어질 경우 연간 12.1명~18.2명의 암 유병 감소 예상(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년)

** 일본사례 :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등 정보전달이 잘 이루어질 경우 화학물질로 인한 암 발생이 63%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의무(법률 제29조의3 / 신설)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관계전문기술자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기준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함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자체사업을 하는 자, 설계를 포함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 최근 초고층 건축물 공사 등 대형 공사현장에서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검토 미흡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

* 「건축법」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구조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설계단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설계검인, 설계감리 등 목적물의 설계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의무 부과(법률 제30조 제7항 / 강화)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공개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기술지도제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법 제30조 제4항)

☞ 중소기업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지도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감소를 위해 전문지도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와 평가결과 의 공개를 통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역량 제고하고자 함. 피규제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74개소 로 한정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11년 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자수는 2만 109명으로 전체 2만 2,779명의 88.3%에 달함

** '10년 건설업 재해율

구분	3억원~120억원	120억원 이상	건설업 평균
재해율	0.91%	0.11%	0.7%

●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법률 제40조 / 강화)

-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 해서 제조·수입자 또는 사용사업주가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거 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유해성·위험성 조 사를 실시한 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 관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자·수입자·사용자 등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것임.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이미 유통·사용 중인 기존화학물 질에 의해서 새로운 직업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 근거를 마

련할 필요. 해외사례**와 비교시에도 규제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 해관계자의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 유해·위험성 조사가 필요한 기존 화학물질 사례: '95년 2-브로모프로판, '05년 노말헥산(n-Hexane), '06년 디 엠에프(DMF),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일본의 경우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에게 유해성 조사를 지시할 수 있음

●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지도사 등록(법률 제52조의10~제52조의15 / 강화)

- 지도사 등록하기전 1년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 지도사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규정

- 자격대여 금지 등 지도사의 금지행위 규정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규정

- 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ii)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 iii)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iv) 등록받을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v)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등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의 교육·의무사항, 등록취소요건 등을 마련함. 산업안전지도사·산 업위생지도사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책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무사항, 등록취소요건 등 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입법예고시 이 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인노무사: 1년의 범위에서 연수교육 실시(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제2조), 공인 노무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제20조)

● 과태료 부과 기준(법률 제72조 / 강화)

- (1,000만원 이하) 발주자의 설계단계 안전성 검토의무 위반 및 안전성 검토 결과 개선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작업환경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공단에 위탁된 업무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검사)기관이 안전인증(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필요, 산업법 상의 다른 위반행위와 형평성을 맞추어 부과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서류보존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된 에너지사용 기자재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및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및 시정(시행령 별표 제2호 서식 제2호 라 및 마란 / 내용심사)
 - 근로자 “차별시정제도”의 운영과 관련, 종래 근로자에 한정되었던 차별시정 신청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직권시정요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규정함
 - ※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 i)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금전보상 명령액
 - ii)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위반시 2,000만원
 - iii)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 ☞ 법률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절차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부과기준을 정함.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설정되었고, 위반횟수에 따라 그 금액의 정도를 달리하여 과태료 부과시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사사례 : 근로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차별시정 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과 동일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차별적 처우금지 및 이에 대한 시정(시행령 별표 제3호서식 가 및 나란 / 내용심사)
 - 근로자 “차별시정제도”의 운영과 관련, 종래 근로자에 한정되었던 차별시정 신청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직권시정요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규정함
 -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 1)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금전보상 명령액
 - 2)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위반시 2,000만원
 -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 ※ 종전의 근로자 신청 차별시정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규정
 - ☞ 법률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절차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부과기준을 정함.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설정되었고, 위반횟수에 따라 그 금액의 정도를 달리하여 과태료 부과시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유사사례 : 근로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차별시정 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과 동일

(5)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내용,기간 등(신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내용 : 체불사업주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대표자), 나이 및 주소, 명단공개 기준일부터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액

– 명단공개 기간 : 명단 공개일부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 게시판,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

☞ 법률에서 위임한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내용, 기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명단공개 내용(체불사업주의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은 유사사례의 명단공개 내용과 동일. 명단공개 기간(3년)은 임금체불을 억제하고 체불된 임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판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산 사산휴가의 청구 등(시행령 제43조 / 강화)

–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유산·사산휴가를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부여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법률에서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 부여해야 하는 휴가 기간을 정함. 현재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임신 16주 전의 유산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과 동일.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9, 강화 3)

■ 심사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신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무주택자 전세자금 부담, 임금피크제 도입

– 사용자는 중간정산 증빙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존

☞ 법률에서 위임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특정한 제한 없이 허용되던 중간정산을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임. 외국의 경우에도 주택구입, 질병치료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 허용. 증빙자료 보관에 따른 사용자 부담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간정산금 사용자 조사(보험연구원) 결과 자녀교육비 26.7%, 부동산 및 주식투자 23.3%로 나타나 노후대비에 역행

* 미국, 호주, 일본 등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허용

● 급여지급능력 확보(강화)

– 최소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 2014~2015년 : 70%, 2016~2017년 : 80%, 2018년 이후 : 고용노동부령에서 따로 정하는 비율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법률에서 위임한 최소적립금 비율(100분의 60 이상)을 규정함*. 퇴직급여 지급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적립금 비율을 인상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적립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최소적립금 비율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63.6%만 현행 적립비율인 60%를 준수('12.2월, 감사원)

** 선진국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최소적립금 비율이 100~110% 수준임

● 재정검증결과의 통보(신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부족 여부, 그간 적립금 및 납부현황,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사내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내에 적립금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 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

☞ 법률에서 위임한 재정검증결과 통보방법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수준에 미달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지금까지 최소적립금 수준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확인 및 적립금 부족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미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규제인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용자가 법정 적립금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 발생(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63.6%만 현행 적립비율인 60%를 준수('12.2월, 감사원)

* 미국 : 적립률 90% 이하인 경우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되, 3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하도록 함

●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신설)

– 납입예정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대해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 납입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법률에서 위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비율에 대해 규정함. 부담금의 적기 납부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임.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지연이자 이율을 설정하였고,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령 제13조).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신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추가 부담금 납입 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정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A) :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IRA에 퇴직급여를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받으며 적립금을 운용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추가 부담금 납입한도를 규정함. 개인이 과도한 부담금을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불입할 경우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개인의 추가납입한

도를 제한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사례 :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분기당 300만원으로 제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신설)

–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법률에서 등록취소·등록말소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보호조치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고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파규제자는 퇴직연금사업자 57개사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해외사례 : 일본의 경우 가입자 보호조치 관련 제도이행 및 종료(폐지) 절차, 계약이전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신설)

– 모집인의 요건 :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계약에 의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을 것

– 모집인의 준수사항 :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집행위의 금지,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 체결 금지,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등

☞ 법률에서 위임한 퇴직연금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퇴직연금 모집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임. 모집인의 준수사항은 모집인의 불공정 모집행위를 예방하여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해외사례 : 홍콩의 퇴직연금제도 중개인의 경우 중개인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중개회사와 연계하여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음

●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신설)

–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책무 : 퇴직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급여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가입자에게 고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사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공 등

–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항 : 제도일반에 관한 사항(급여 종류, 급여 지급절차 등) 과 퇴직연금제도 종류별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사항 규정

– 사용자에 대한 금지행위 :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금지,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

☞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자의 책무, 가입자 교육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영미권, 일본 등)에서 기업(사용자)의 책임을 강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규제인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일본의 경우 사용자는 공정한 절차 및 근거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책무, 금지행위 등(신설)

– 금지행위 : 특정 운용방법을 강요하는 행위, 통상의 조건을 벗어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가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 운용현황의 통지 : 1개월 이상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크게 변동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지

– 취급실적의 제출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상황,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매 사업연도 말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 법률에서 위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취급실적의 제출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등을 강화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퇴직연금제도 폐지, 중단시 조치사항(신설)

– 제도 폐지시 사용자의 조치사항 : 제도 폐지 사유, 해당 사업장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해당 사업장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급여내역 및 지급절차 등을 가입 근로자에게 통지,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

– 제도 중단시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할 업무 : (사용자)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재개시 일정 공지 등,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 지급, 가입자 교육 등

☞ 법률에서 퇴직연금제도 폐지 · 중단시 사용자의 조치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행 법령에는 제도폐지 · 중단에 대한 조항이 미흡하여 행정지도 등으로 가입자 보호 등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이를 보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퇴직연금제도 규약의 신고(강화)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변경신고)하려는 사용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퇴직연금규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첨부서류를 규정함.

☞ 퇴직연금규약의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시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임. 동 사안은 기존 고용노동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던 사항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등록취소(강화)

– 등록요건 또는 등록유지요건 흠결시 : 재무건전성 요건 · 인적 요건 · 물적 요건 흠결시 시정명령

– 시정명령 후 등록요건 미충족 : 3개월내 미충족시 등록취소

–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시 : (시정명령 위배시) 2년 내 2회 위배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명령 위배시) 등록취소, (동일법규 위반으로 시정명령) 3년 내 3회 시정명령시 등록취소, (동일법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명령) 5년 내 2회 영업정지 명령시 등록취소,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로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시정명령 위배시 등록취소

- ☞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의 흠결 또는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등록취소 기준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등록요건 흠결 및 시정명령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하여 행정처분시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근로시간 단축청구 및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7조)
 - 고용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근로자(50~65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고 근로조건을 보호
 - ☞ 한국경총 등 기업 측의 반대여견이 있고 파규제 사업장의 수가 120만여개 이상으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노사정합의가 있었고,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기확정('11.12.27)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퇴직 예정자 등의 전직 지원(법 제21조의3, 제27조)
 - 현행법상 사업주에게 퇴직 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할 노력 의무가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해, 일정 고용 규모 이상(30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부과
 - 그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 한국경총 등 기업 측의 반대여견이 있으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노사정합의가 있었고,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기확정('11.12.27)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휴업급여의 지급 제한 근거 마련(법 제52조의2)

- 업무상 재해를 입어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교도소, 소년원, 그 밖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기간에는 휴업급여 지급 금지

- ☞ 재해 근로자가 교도소 등에 수용되면 '요양'이 아닌, 본인의 형사적 귀책사유로 인한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 동안 휴업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규정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관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보험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보험급여 지급 전용계좌 도입 및 이에 대한 압류 금지(법 제88조)

- 수급자격자가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금지

- ☞ 기존 제도로는 법으로 보장된 수급권 보호가 불완전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수급자의 최소한 생활안정보호를 위해 위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 유사사례로서 「고용보험법」에서도 보험급여 전용계좌의 예금 채권 압류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한달 생계비(150만원)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며, 수급계좌를 가족명의계좌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

(9)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류제출, 등록말소신청 및 수수료부담(안 제4조, 제10조, 제12조)

- 퇴직연금사업자는 모집인 등록시 등록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모집업무 폐지 등의 사유 발생시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모집인 등록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 모집인은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에서 퇴직연금 상품의 정확한 설명·판매와 근로자의 개인정보 등을 취급하므로 자격 없는 자를 등록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함. 동 규제는 등록 관련서류 제출 및 등록 말소 신청을 의무화하여 등록부터 말소까지 자격 관리를 체계화하여 가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등록기관에 모집인 자격 확인,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 부담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우리사주 취득의 제한(안 제42조의2)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수급관계회사 포함)의 사용자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또는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주식(발행주식의 20%이하)에 대하여 강제할당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음. 또한 취득을 강요한 사실을 신고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도 금지됨
 - ☞ 우리사주 취득 강요시 목돈이 없는 임직원들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추후 주가가 하락하면 재산도 감소하게 되므로 우리사주 취득 여부는 근로자의 자율판단에 맡겨야 함.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 또는 강제 할당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비중요규제임
 - ※ 일부기업들은 우리사주 우선배정 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외면한다는 인식이 생겨 일 반공모 청약율도 감소하고 주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

(1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퇴직연금 모집업무의 위탁 관련 교육정원과 강사의 자격 (안 제16조, 제17조)
 -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집체교육의 학급당 정원을 60명이내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할 수 있음. 집체교육의 강사는 퇴직급여제도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3년 이상 종사한 컨설팅 임직원, 대학교수·부교수·조교수·겸임교원, 공인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함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가 신설(법 제31조)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정원 및 강사의 자격을 동 고시를 통해 규제하는 내용임. 근로자퇴직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직결되므로 퇴직연금상품 모집인에 대한 교육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학급당 교육정원과 강사의 자격을 정하는 것은 필요함. 교육정원 제한의 경우, 더 큰 강의장이나 수업 전달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면 300명까지 완화해 줄 수 있으므로 과도하지 않으며, 강사 자격은 퇴직

연금제도 관련한 업무 경력 및 세부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정하였으므로 교육 과목의 수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고용보험료 징수대상 확대(안 제13조)
 -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나이와 관계없이 고용상태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 다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음
 - *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 실업급여의 보험료
 - ** 추가 징수 대상 근로자는 약 27만 6,000명임
 - ☞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실업 급여의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로 최근 고령자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 추세. 개정안은 보험료가 추가되는 대상을 i) 보험 혜택은 있었으나 보험료 징수가 없었던 경우와 ii) 혜택도 없고 보험료 징수도 없었던 경우로 구분하고 있음. i)은 64세 실업급여와 64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로 종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혜택을 받았으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ii)는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6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 환경부

우세윤

사무관(044)200-2445, woosey@pmo.go.kr

현정주

사무관(044)200-2447, jj0435@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8건, 강화 77건, 내용심사 11건 등 총 15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56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1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4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평가서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 제정안	제275회 예비심사 (2012.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안	제279회 예비심사 (2012.1.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83회 예비심사 (2012.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285회 예비심사 (2012.2.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개정안	제287회 예비심사 (2012.2.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460회 사회분과 (2012.3.8)	원안의결 13 개선권고 1	신설 14 *중요 2, 비중요 12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4회 예비심사 (2012.3.2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8.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제정안	제302회 예비심사 (2012.4.1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제정안	제304회 예비심사 (2012.4.25)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05회 예비심사 (2012.4.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05회 예비심사 (2012.4.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08회 예비심사 (2012.5.9)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13.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09회 예비심사 (2012.5.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16회 예비심사 (2012.6.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1회 예비심사 (2012.6.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21회 예비심사 (2012.6.2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7.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1회 예비심사 (2012.6.2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65회 사회분과 (2012.6.28)	원안의결 8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신설 5, 강화 6 *중요 3, 비중요 8
19.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22회 예비심사 (2012.7.2)	원안의결 7	강화 7 *비중요 7
20.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21회 예비심사 (2012.7.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1.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3회 예비심사 (2012.7.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6회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26회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5.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제326회 예비심사 (2012.7.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제327회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제327회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제7절 노동·환경 분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8.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68회 사회분과 (2012.8.16)	원안의결 6 개선권고 2	신설 8 *중요 2, 비중요 6
29. 환경보건법 개정안	제468회 사회분과 (2012.8.1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32회 예비심사 (2012.8.3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70회 사회분과 (2012.9.1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화 4 *중요 2, 비중요 2
3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70회 사회분과 (2012.9.1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화 4 *중요 2, 비중요 2
3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70회 사회분과 (2012.9.1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화 4 *중요 2, 비중요 2
3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70회 사회분과 (2012.9.1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화 4 *중요 2, 비중요 2
37.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470회 사회분과 (2012.9.13)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34회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335회 예비심사 (2012.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36회 예비심사 (2012.9.2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개정안	제336회 예비심사 (2012.9.2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4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8회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3. 수도법 개정안	제338회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39회 예비심사 (2012.10.2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6.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4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74회 사회분과 (2012.11.8)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48.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1회 예비심사 (2012.11.9)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49.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제341회 예비심사 (2012.11.9)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5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4)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51. 하수도법 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343회 예비심사 (2012.11.2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476회 사회분과 (2012.12.7)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5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76회 사회분과 (2012.12.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중요 1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76회 사회분과 (2012.12.7)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중요 1
5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476회 사회분과 (2012.12.7)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5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76회 사회분과 (2012.12.7)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58.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제476회 사회분과 (2012.12.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중요 1
59.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 심사안	제476회 사회분과 (2012.12.7)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내용심사 5 *중요 5
6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46회 예비심사 (2012.12.17)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6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47회 예비심사 (2012.12.2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6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348회 예비심사 (2012.12.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40 개선권고 15 철회권고 1	신설 68 강화 77 내용심사 11 *중요 29, 비중요 127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평가서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환경현황 분야: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저질), 토양, 소음·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
 - 생태계 분야: 동·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기초자료 종류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실·거짓 작성을 예방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자료 내용은 관련 업체에서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자에게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시키지 않으며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2)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 반출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종을 확대(강화)
 - * (현행) 1,534종 → (개정) 1,971종(437종 확대)
-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은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고유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여 산업적·학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국내 생명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며, 관련부처 및 이해관려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환경범죄 가중처벌 대상지역인 환경보호지역을 추가지정(강화)
 -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개정)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포함
- ☞ 상수원이 오염될 경우 먹는 물 사용자에게 대한 생명과 신체위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보호지역으로 규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시 가중처벌 등으로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시정 및 부품결함 현황보고 요건 강화(강화)
 - 부품결함 시정현황 보고: 결함시정요구 50건 이상 및 판매대수의 4% 이상에서 25건 이상 및 1% 이상으로 강화
 - 부품결함 현황 보고: 결함시정요구 100건 이상 및 판매대수의 10% 이상에서 50건 이상 및 4% 이상으로 강화
- ☞ 현행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완화되어 있고 판매대수가 매우 많거나 극히 적은 경우와 부품보증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태파악이 곤란하므로 보고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피규제자에게 별도 추가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5)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시험기준 추가마련(강화)

- (현행) 대기오염물질 61종 중 암모니아 등 25종에 대한 측정기준 규정
- (개정)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12종의 측정기준 추가
- ☞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정확한 농도수준을 파악하여 배출업소에서의 배출량 감소 유도 및 효율적 오염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이해관계자의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4)

■ 심사내용

-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신설)
 1. 「환경정책기본법」상 보전 필요 지역의 개발사업(토석채취·지형변화 미수반 제외)
 2.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토석채취·지형변화 미수반 제외)
 3. 「광업법」에 따른 광업 중에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 채굴사업(면적 1만㎡ 이상)
 4.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면적 1만㎡ 이상)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석재 채취사업(면적 1만㎡ 이상)
- ☞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된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설정하여 사전 방지조치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및 질병 예방 등 사회적 편익과 비교형량할 때 석면 관리대상 개발사업 및 면적기준 등에 대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석면 등에 대한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수거조사 대상 및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결과 보고의무를 규정함(신설)
 - ☞ 상위법률(제8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부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수거조사의 대상은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8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석면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석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회수 또는 판매금지 이행결과 확인을 위한 보고의무 부과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직접적인 규제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자가 승인(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서식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신설)

- (승인기한) 수입 통관일, 광물채굴계획인가일, 토석채취허가일까지
- (승인신청서 내용) 수입·생산 예정량, 사용용도, 석면조사·분석결과서, 국내유통계획 등을 포함
- (기타) 승인조건 부가 가능, 수입 또는 생산 누적량 100분의 50 이상 증가시 변경승인 요청, 지정된 기관을 활용한 조사·분석 결과 작성
-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 작성 내용, 구비서류 및 제출 절차 등은 통상적인 승인절차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는 아니나, 이법 시행 당시 이미 광물 채굴·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인절차 이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지정·고시 후 1년 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개선권고
- 석면함유기준, 작업중지 및 회수 또는 유통금지 절차 규정(신설)
 - 수입·생산이 가능한 석면함유기준을 1% 미만,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작업중지·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개선계획서 제출,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규정
 - ☞ 상위법률(제11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석면함유 기준은 석면의 유해성, 환경 관련 선례(탈크)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며, 작업중지 및 개선조치 명령시 개선계획서 제출,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시 이행결과 보고의무는 제재 이행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에 있어 승인받은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변경승인 대상 및 절차를 규정(신설)
 - (대상) 승인받은 사업면적의 30% 이상 증가(여러 번의 변경으로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포함),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하는 경우
 - ☞ 당초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 증가하였거나, 착공이 5년 이상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석면의 유해성 변화 등을 감안, 비산방지계획서의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환경 관련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로서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석면조사가 필요한 건축물, 조사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 판단기준 및 관리기준을 규정(신설)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09년 이전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공공기관 소유 · 사용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국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유치원, 각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 문화 ·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중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 석면건축물 판단기준

- 건축물에 사용된 분무재 · 내화피복재가 석면건축자재인 경우
-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를 6개월마다 평가, 관리대장 기록 · 보관 등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규정

- ☞ 상위법률(제21~22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09.1월부터 석면함유제품 사용 금지된 점, 규제부담을 고려하여 다중 또는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및 공공이용시설부터 시행하는 점,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 · 조치토록 하는 등 관리기준이 통상적인 수준인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석면해체 · 제거작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0.01개/㎤로 규정(신설)

- ☞ 상위법률(제28조 제1항)에서 위임한 석면해체 · 제거작업 사업장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일본 등 선진국 사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신설)

- ☞ 상위법률(제33조~34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 운영 및 취소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신설)

- ☞ 상위법률(제49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석면의 종류 및 석면건축자재 범위를 정함(신설)

- (석면의 종류) 악티노라이트석면(Actinolite),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백석면(Chrysotile)

- (석면건축자재) 지붕재, 천장재, 벽재,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배관재, 그 밖에 고시 건축자재 중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

- ☞ 상위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석면 및 석면건축자재의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시 포함사항 추가 및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신설)

- ☞ 상위법률(제17조~18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석면방지계획서에 비산방지시설 관리인력 운영계획, 석면 모니터링 계획 등의 추가는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평가 방법 및 기준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방법을 규정(신설)

- ☞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는 물리적 평가,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 등 최소한의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석면지도는 서울시 등에서 기 작성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고 환경부가 제공하는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신설)

- ☞ 상위법률(제24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보수교육은 의무화하지 않는 등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시간(6시간) 및 교육경비 징수 등도 여타 입법례와 유사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신설)

- ☞ 상위법률(제34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도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매립되고 있는 석면함유 고형화처리물*이 향후 굴삭기 작업 등 정비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될 경우 폐암 등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처리를 위하여 매립기준(강화)
 - * 고형화처리물 : 유해 폐기물에 고체 형태의 고형화물질(예 : 시멘트, 점토, 아스팔트 등)을 다량 첨가하여 만든 단단한 덩어리 물질
- 석면 함유량이 1% 이상인 고형화처리물은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매립기준을 강화
 - 별도로 구획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매립표지판 설치 의무화
 -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예 : 폐유, 페인트, 폐석면,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등)
 - ☞ 관련부처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 폐가전제품,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및 재활용업체들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해체·파손을 금지하고, 파손·낙하·붕괴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강화)
 - ※ 피규제대상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3,036개, 재활용업체 5,490개
 - ☞ 관련부처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 폐가전제품 재활용업자 시설·장비기준
 - 형광물질 보관시설 등 재활용대상 폐가전제품 종류별 개별기준 마련
 - * 냉장고·에어컨(분리, 파쇄, 선별, 보관시설), 세탁기·휴대폰(파쇄시설), 텔레비전·모니터(분리, 보관시설),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분리시설)
- 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 (설치) 폐냉매물질 등 외부유출방지 및 회수장치 설치 등 추가

* 폐기물 처분시설(폐냉매물질 밀폐설비), 재활용시설(집진, 냉매회수, 밀폐시설 등)

- (관리) 폐냉매물질 등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밀폐운영 추가

※ 피규제대상 : 폐가전제품 재활용업자 59개 업체 중 시설기준 미충족 43개 업체

☞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한 만큼 비중요규제로 판단

* 영세 사업자들이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추가 시설비용이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중소기업청의 의견을 반영(‘13. 7월 시행예정)

(8)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등 4종을 석면함유 가능성물질로 지정함(신설)
 - ☞ 관련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추가 규제비용도 미약하여 원안의결
-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을 정함(신설)
 - 분말제품,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도, 바닥골재 등 최종제품으로 유통시 : 불검출
 -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원재료) : 1%
 - 기타 가공·변형된 형태(최종제품) : 0.1%
 - ☞ 석면허용기준은 유통단계별로 인체 위해성, 골재·파우더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성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특이 의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신설)
 -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며, 감리관련 유사사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기반영하였으므로 원안의결

(9)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분석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신설)
 -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활석(탈크) 분석방법 및 타 법률에서 공인된 시험법을 준용한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규제비용은 미미하나 동 규제에서 정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추가비용은 미미하나 이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은 훨씬 크므로 원안의결
-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신설)
 - ☞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에서의 석면 발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등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정한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규제에 따른 추가비용이 미미하고, 관계부처별로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신설)
 - ☞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주민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마련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일부 수용하였으므로 원안의결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을 규정(신설)
 - ☞ 석면 해체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마련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일부 수용하였으므로 원안의결

(10)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법률(제20조의2)에서 등록 및 변경신고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등록 및 변경신고시 제출할 서류와 사유 등을 구체화한 것임
-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기술진단 사업계획서, 진단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증명서류 등

● 변경신고 사유 및 제출서류

–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 및 실험실 소재지 변경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변경내용 증명서

☞ 관련부처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 법률(제20조의4)의 위임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취소

– 등록 후 업무 불개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 : 등록취소

– 등록요건 미달 : 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 변경신고 미신고 : 경고~영업정지 6개월

–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 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 기술진단전문기관 준수사항 관련 : 경고~등록취소

☞ 토양관련 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등 유사한 타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등

(1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률(제20조의2)에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마련하여 구체화

※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 (시설) 사무실과 실험실
- (장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시 필요한 측정기기 및 분석장비
 - 유속계, 소음측정기, 진동측정분석기 등 18종
- (기술인력) 수처리, 하수관거 진단 분야별 인력기준
 - 수처리 진단 분야(8명 이상) :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상하수도, 화공 등 관련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및 환경측정분석사
 - 하수관거 진단 분야(2명 이상) : 토목, 수질환경 관련 기사 및 산업기사
- (준수사항) 기술진단 결과의 기록·보존, 기술진단 실적 보고, 측정기기의 정도 검사 등

☞ 수도시설진단기관의 등록요건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나 규제비용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1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 추가 및 해제(내용심사)

– (현행) 총 221종, (개정) ‘수원청개구리’ 등 57종 추가, ‘바다사자’ 등 32종 해제

☞ 최근 생물종의 변화상 등을 반영하여 2005년에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목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공청회, 국회토론회, 민간단체 의견수렴(4회),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원안의결

● 수출·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지정 추가 및 해제(내용심사)

– (현행) 총 688종, (개정) 19종 추가, 133종은 해제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변경, ‘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규제자 수가 많지 않고, 입안시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원안의결

(13)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강화

*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 (수도꼭지) 6리터 이하(샤워헤드방향 7.5리터 이하)

● (변기) 대변기 사용수량 6리터 이하, 대소변 구분형 4~6리터 이하,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다만, 로탱크형 대변기는 7리터 이하)

※ 피규제대상 : 위생도기 생산업체(28개)

☞ 수도시설진단기관의 등록요건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나 규제비용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1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판매장소의 규모(10㎡ 이상)를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강화)

* 1차 위반 : 50만원, 2차위반 : 100만원, 3차위반 : 150만원

☞ 상위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기간(1년 이내)내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도 1·2·3차 위반 적발시마다 매회 배출시설 사용중지하도록 규정(강화)
-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유사한 규제내용과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16)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종이재질 완충재 사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기준 강화
 - － (현행) 제품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
 - － (개정) 공기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도 포장공간비율을 적용(제과류 35% 이하, 커피류 20% 이하)
-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 ☞ 강화된 포장공간기준 규격준수를 위하여 동판 제작비 등 1회성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나, 전체적인 규제 비용 수준은 미약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 피규제자 : 122개(커피·제과류 제조업체)
- 공기주입 포장공간비율 기준 강화
 - － 단위·종합제품으로서 종이·골판지·펄프물드포장재(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제품의 종류 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규정된 포장공간비율에서 5% 가산조항 삭제

☞ 사업자는 포장규격을 바꾸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나, 전체적인 규제비용 수준은 미약하고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17)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입·반입하는 경우 허가신청서에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 증명 서류’ 제출을 추가(강화)
 - * (현행)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 확인 가능 서류, 사용계획서, 수송계획서,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 ☞ 인공증식 증명서류는 무분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입·반입으로 인한 국내멸종위기종의 유전적 피해, 종 다양성 훼손, 질병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서류라고 판단되며, 별도의 규제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 상업적 목적의 인공증식을 위해 야생생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인공증식한 야생동물의 종류, 수량, 거래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 비치하도록 함(강화)
 - ☞ 관리장부 비치는 상업적 목적의 인공증식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관리 조치이며, 현재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추가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확인표지 부착 및 반납 사항을 추가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자 자격요건을 규정함(강화)
 - * 수렵보험 가입 및 5년 이상 수렵면허 보유자, 신청일 5년 내 수렵장 참가실적 보유, 신청일 5년 내 동법령 미 위반자
 - ☞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및 포획대행자 자격요건은 관련 지침 등에 규정된 내용을 법령 본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포획대행자 자격요건은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5, 강화 6)

■ 심사내용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사업계획 확정전에

지자체 및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신설)

☞ 상위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공개기간을 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사업계획 변경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환경영향평가 최소사업규모의 50% 이상 규모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주민의견을 재수렴(강화)

* (현행) '폐기물 소각시설과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만 적용

☞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 소각·매립시설과 유사한 주민혐오시설로서 주민혐오시설의 입지계획은 인근 토지가격 등에 영향을 주며, 민원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원형보전지 등에 대한 개발규모가 해당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 이상인 경우 추가(강화)

☞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원형보전지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피규제 대상(연간 1~5건)이 많지 않고 현행법령의 재협의대상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원안의결

-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연면적 20만㎡ 이상의 단일 건축물을 추가하여 건축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건축물 착공 이후 준공시까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함(강화)

☞ 현재 서울·부산·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일정규모(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굳이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철회권고

- 생산·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내의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과 가축사육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함(강화)

☞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사육부지 포함)은 수질오염 및 악취문제가 심각하여 보다 강화된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며, 5,000㎡는 허가대상 면적(500㎡ 이상)의 10배, 돼지 사육두수 1,500마리 수준으로 비교적 대형규모에 속하는 시설로서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시험에 필요한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일부과목 면제조건을 규정(신설)

－ (응시자격) 환경·에너지분야기술사자격자, 환경 분야기사자격취득 후, 4년이상 실무종사자, 환경 분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종사자, 환경관련 대학졸업자로서 6년 이상 실무종사자,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업무 5년(5급 이상은 3년)이상 수행자, 9년 이상 환경

분야 실무종사자

－ (시험과목) 1차(필기) :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2차(면접) : 전문지식 분야 및 인·적성 분야

－ (일부과목 면제) ① 5급(7급)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관련 실무경력 5년(7년) 이상인 자 :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면제

② 환경 분야 기술사 취득 후, 환경영향평가 분야 실무경력 7년(기사인 경우는 12년) 이상인 자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면제

－ (선발방식)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행

☞ 합격자 선발방식과 관련, 기존 진입자와 신규 진입자간의 형평성 및 평등성, 시험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하도록 개선권고하고 자격시험 일부면제와 관련, 경력인정 기준을 공무원과 기술사를 5년으로 동일하게 하고, 기사는 9년으로 개선권고

- 환경영향평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 마련(신설)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 자격취소

② 자격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격취소

③ 최근 1년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 자격취소

④ 자격정지 상태로 평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 1회 적발시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적발시 자격취소

⑤ 자격증 대여 : 1회 적발시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적발시 자격취소

⑥ 고의·중대과실로 부실평가서를 정당한 것으로 잘못 검증한 경우 : 1회 적발시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적발시 자격취소

⑦ 법률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자격정지 1년

⑧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은 자격정지 6월, 4회 이상은 자격정지 2년

☞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신설)

①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설계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및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 ②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전에 관한 사항
- ③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추가 저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 ⑤ 작업현장 직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협의내용 이행 등 해당 사업장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국회, 민간단체 등의 지속적인 협의내용 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된 업무범위 내용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 기존 환경영향평가대행업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전환하고, 자연생태 분야 요건을 강화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준을 마련(강화)

☞ 자연생태환경 분야에서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자연생태 분야 환경영향평가는 생물상의 지속적 관찰이 요구되는 등 타 분야에 비해 장기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대행업 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종(제2종)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수용하였으므로 원안의결

- 상위법률 근거에 따라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강화)

– 환경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 상위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아니함(신설)

☞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는 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상 필요하나, 사전에 시험 불참을 알리거나,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권고

(19)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7)

■ 심사내용

- 대기분야의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측정항목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추가(강화)

* 형식승인대상측정기기:굴뚝배출가스(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산소·먼지) 자동측정기·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온실가스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이미 이산화탄소와 메탄 연속자동측정기기를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어 형식승인 대상 항목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하여 관련 장비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측정기기 사용전 최초 정도검사를 받도록 규정(강화)

* (현행) 측정기기 사용자가 측정기기 취득일부터 검사주기(1~2년)마다 정도검사 시행

☞ 측정기기를 사용하기 전 최초 정도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기기 측정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존 ‘취득일’ 대신 입증하기 쉬운 ‘최초 정도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도검사의 횟수 증가 및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정도검사 실시 시기 조정에 불과하므로 원안의결

-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시험검사기관은 매년 숙련도 시험을 시행하여 부적합시 7일 이내 정도관리 검증서를 반납하고, 정도관리 또는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도관리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기관은 부적합 판정 3개월 경과 후 정도관리 신청 가능하도록 함(강화)

☞ 부적합한 시험검사결과로 인한 사회적 불신과 사회적 비용의 추가 발생 예방, 환경 및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규제로 판단되며 부적합기관의 정도관리 신청 3개월 경과규정은 최소한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본인(8개)이 사용하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의 자체적인 성능·정도검사를 금지하고 자동차 분야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중 입자개수 검증장치와 유량측정시스템을 추가함(강화)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법적기준장비는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기준이 되므로 외부

기관 검사를 통한 객관적인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기준장비 추가는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분야 배출가스 성능보증을 통한 자동차 수출 장애 요인 제거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분에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받은 ‘정도관리검증서’ 제출 추가(강화)

☞ 측정대행업 등록을 위해 ‘정도관리검증서’ 발급 전까지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187만원/1업체)은 발생하나, 사전검증기회를 통해 수요자나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배출부과금 산정 관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 허위 산출시 1년 내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2차 위반 등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측정결과 허위 산출시 1년 내 4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3차 위반 등으로 강화, 기술인력 부족한 경우 1년 내 4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3차 위반 등으로 강화

☞ 현재까지 등록취소 사례가 전무하고, 1개업체에 대해 연중 점검횟수도 3~4회에 못 미쳐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술인력 등록조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며, 이해관계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원안의결

- 수질분야 시료채취는 다른 분야 기술인력이 할 수 있었으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시료채취 관련 교육이수자로 한정하고 주요 서류의 보관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하며,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보관은 악취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강화)

☞ 수질 분야 시료채취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해당업체에 대한 원활한 정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적 인 규제사항이며 이해관계자와 합의하였기에 원안의결

(20) 환경 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자 중 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토양·먹는 물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활용하는 자를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추가(강화)
- ☞ 환경분야 각 분야별 시험·검사기관은 이미 정도관리를 시행 중이며,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도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예비형식승인 제품임을 알리지 않을시, 환경부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마련(강화)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상위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한 것으로, 동시행령 내 다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21)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정함(신설)

– 기술인력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법률에 의거하여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화학, 생물학, 역학, 의학, 대기, 수질, 토양, 먹는 물, 실내공기 또는 악취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5인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시설 및 장비

가. 시설 : 실험실

나. 장비 : 분석저울(0.0001g) 1대, 정제수 제조장치 1대, 히팅맨틀 1대, 가열혼합기 1대,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진공펌프 1대, 열탈착장치 1대, 튜브클리너 1대, 소형챔버 시스템 1대, 클린룸시스템 1대,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1대,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1대, 자외-가시선분광광도계(UV/VIS) 1대, 광학현미경 1대, 원심분리기 1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을 정하는 것으로, 유사 타법사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원안의결

-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기관 지정신청시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에 적합인증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지정내용 변경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와 구비서류를 정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신설)

☞ 상위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화한 것으로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원안의결

-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함(신설)

☞ 유사법령의 수수료 산정기준 및 유사시험기관의 시험분석비용과 비교시 동일 검사항목은 동일하게 산정하고, '도로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125만원)'의 경우 일견 수수료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나, 건당 소요시간이 35시간이고 장비가 고가인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원안의결

(2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원활한 검사제도 운영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정기검사 수수료·과태료·검사명령 등의 관련규정을 정하는 것임(강화)

☞ 이륜자동차 신고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0% 정도이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과태료 등은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원안의결

- 불법 자동차연료·첨가제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공급·판매 중지 명령 외에 불법제품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제조·공급·판매 중지된 불법제품이 시중에 기공급되어 있는 경우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자동차 성능 저하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회수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제품 제조·유통자에게 회수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것은 국민건강 및 운전자의 안전 등과 비교할 수 없으며, 유사사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한 규제가 아니므로 원안의결

- 황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사용하는 경우 현재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부과금액 상향(강화)

☞ 저황유 사용대상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고탄유 사용시 연간 약 2~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업체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도를 저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탄유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저황유 사용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제작·수입되는 농업기계 중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기계의 종류와 적용 기준 및 시기를 설정하고, 인증절차를 규정(신설)

☞ 미국·EU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농기계의 배출가스를 규제해 온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환경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 180여종의 농업기계 중 등록대수가 많고 도로운행이 빈번한 2종(트랙터, 콤바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시행시기 등의 문제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점, 향후 국산기계의 수출경쟁력 확보효과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가 아니므로 원안의결

(24)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대기환경기준에 합격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명, 제조공정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제조·수입자가 변동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강화)

☞ 사전검사 합격제품이더라도 변동사항 통보 없이 제품명 변경 및 제조지 등이 변경되면 사전검사 합격제품 여부 및 사업장 소재지 파악 등 기본적인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제조관련사항을 통보받아 정확한 변동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25)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다량 배출사업자”라 함) 의무사항인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시기, 기록보존 기간 등을 법률로 단 일화(제15조의2, 제36조 및 제38조)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의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시기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

－ 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한 장부의 보존기간을 2년으로 함

☞ 규제가 강화된 내용으로 18대 국회 폐기 후 재추진 법안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6)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자(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는 제외)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

☞ 제출명령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지정폐기물사업자와 사업자의 과태료가 현재보다 올라갈 수 있으나 (1회한 50만원→최대 300만원),

– 이는 환경개선효과 및 유사입법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는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7)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자체 소음 시험시설이 없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수입자 및 개별수입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인증시험대행기관(2개)을 통해 연간 약 1,700여건의 소음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따른 시험업무 중단시 이용자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어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28)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8)

■ 심사내용

- 화학물질의 국외제조자는 전권대리인을 선임하여 국내 수입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권대리인으로 선임·해임·변경된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신설)

☞ 국외제조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 수입자의 화학물질 제

조 등의 보고·등록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전권대리인제도를 둘 필요가 있으며, 전권대리인은 국내 수입자의 의무를 대행하고 의무 이행 관련 법적책임이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변동사항을 상시 파악해야 하며, 이미 EU 등에서 유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전권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내 기관 등이 다수 존재하여 시행에도 어려움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2년마다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등을 보고하고, 보고 내용 중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내라도 변경사항을 보고토록 함(신설)

☞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유해성 등에 관한 보고를 통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고주기 2년은 해외사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위해성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등록신청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등록 하도록 함(신설)

–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조·수입을 금지하며, 어길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

– 등록신청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계획서 보완 및 유해성과 위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 피해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와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를 확대·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변경등록 사유는 제조자등의 '확인' 여부에 대한 입증 곤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변경등록 완료전 제조·수입 금지 조항은 삭제하도록 권고함

- 동일 등록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 제출(신설)

–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 목적으로 자료의 중복생산을 금지하고, 자료보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사용승인을 거부하면 등록신청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도록 함

☞ 동일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개별제출보다 약 4.3배의 비용이 절감되어 피규제자에게 유리하고, 개별제출도 가능하여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아니며, 동물실험 중복을 막기 위해 척추동물시험자료 보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보유자에게 해당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사람 또는 동식물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로 확인될 경우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지정하고, 신기술 상용화로 위해성이 없게 되거나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새롭게 확인된 경우 지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생산·판매·사용은 금지되어야 하나, 산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 해당물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가 통지된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유해성 심사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공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려주도록 함(신설)

☞ 화학물질 사용자가 취급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모를 경우, 사용자의 건강 및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전달은 필요하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은 정부가 평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 작성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는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중복 문제는 없으므로 원안의결

-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등록신청자 등에게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거나 관련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 등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신설)

☞ 동 규제가 없으면 개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등록의무·관리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신설)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조자 등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개별제출 확인을 받지 않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
3. 화학물질 정보의 변경사항을 3개월 이내에 알리지 아니한 자 및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리지 아니한 자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위반한 자

☞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나, 해당조항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하므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함

(29) 환경보건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일몰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강화)

☞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물리적 환경영향에 치중한다면, 건강영향평가는 인체에 대한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지속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3년간의 운영만으로 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몰규정을 3년 연장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확인한 후 재검토하도록 개선권고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중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부착시설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황산화물 측정기기 부착시설에는 ‘연소이전 황성분 제거시설’을 추가함(강화)

☞ 동법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에 따라 새로운 연료와 공정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측정기기 의무부착 대상시설로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을 그룹별 동일 할당계수 부여 방식에서 배출구별 개별 할당계수 부여 방식으로 변경함(강화)

☞ 질소·황산화물 배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의 각각 1.5배, 1.8배 수준으로 높아 실효성 있는 총량관리를 위해 오염저감시설의 배출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며, 배출기준은 평균배출농도, 국내외 기술 수준, 시설개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고, 할당방식 변경은 기존의 배출허용총량 산정방식이 실제 배

출량에 비해 과대·과소 할당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 유출금지항목에 가짜석유 제품, 가짜석유대체연료 추가
 - ☞ 제18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으로서 '10.8.14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비중요규제)를 받은 법률안 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 외에 그 위반횟수 또는 초과정도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 제18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으로 '11.4.27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비중요규제)를 받은 법률안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3~36) 한강등 4대강 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수변구역 지정 이후 하수처리구역 편입시 수변구역 지정 유지 조건 추가
 - 지자체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요청한 경우 등
 -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수변구역에서의 설치 제한 시설 추가
 -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청소년 활동시설 및 공장 등 추가
 - 행위제한 추가 기준시설은 3년 후부터 BOD, SS를 각각 1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함

☞ 수용(또는 사용)의 범위를 환경기초시설 중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시행계획 수립지역(사업자 : 환경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기는 어려워 원안의결

- 수용(또는 사용)의 범위를 환경기초시설 중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시행계획 수립지역(사업자 : 환경부 장관)까지 확대

☞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종교시설, 공장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하는 것에는 동의

- 다만, 청소년 활동시설의 경우 입지제한 시설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

(37)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4종의 화학물질(DNOP, DINP, TBT, 노닐페놀)을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하고, 제한내용 및 용도 등을 정함
 - ☞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전이량 기준을 통한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에서 해당 환경유해인자(DNOP, DINP)를 함유한 제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 경우 고시(안)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내에 도입된 외래종 중 생태계 교란 또는 교란할 우려가 있는 꽃매미, 가시상추를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로 추가 지정(강화)
 - ☞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종 중 생태계 위해성이 높은 생물을 적정 관리하여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지정 생물 2종은 위해도 1등급 판정을 받은 4종(들고양이, 사향쥐, 꽃매미, 가시상추) 중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39)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SOC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의무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2016년까지 40% 이상)

☞ 의무사용량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원가상승, 품질·수급문제 등)을 감안하여 적용시기와 의무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또한 의무사용 예외규정* 등을 두고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급업체가 40km 이상 이격, 공급량 부족, 품질확보 곤란, 가격이 비싼 경우 등

(4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현행 폐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별 재활용의무량을 각각 부과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하여 부과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로 변경(개정법 제16조)

－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설정을 위한 고려요인은 현행법과 같이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폐전기·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시설규모 등으로서, 장기 재활용목표량은 5년마다,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매년 고시토록 함(제16조 제1항)

－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은 출고량 등을 기준으로 분담(제16조 제3항)

－ 다만, 재활용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히 필요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제4항)

- 또한, 대상제품을 재활용방법 등이 유사한 제품군(群)으로 분류하여 재활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하도록 함(제16조의2)

☞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제품군별로 묶어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설정하므로 기존 품목별 관리방식보다 과도한 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규제로 판단

- 폐전기·전자제품 내의 냉매로 사용하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적정 처리 근거규정 마련(개정법 제16조의3)

－ 제조·수입업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폐전자제품으로부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하 “폐냉매”)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하게 분리·보관 및 처리하도록 함

－ 폐냉매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내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냉매물질)을 적정하게 회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폐가스류처리업 시설기준 및 등록제로 변경(개정안 제32조의2 신설)

－ 폐자동차는 물론 폐전자제품 내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의무 부여(개정안 제36조5의2 신설)

-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마련(개정법 제45조 제2항5의2 신설)

☞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과정에서 회수한 냉매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시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등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4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시험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인증받은 제품을 부분적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침

- 시험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겉표면에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해당 제품의 인증일자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

☞ 불법 및 기준미달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난립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감소와 악취방지 등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현재의 전면금지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폐기물처리업의 처리시설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시 주변환경영향 등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소각시설 · 소성로 · 소각열회수시설 및 매립시설 환경성조사서
 - 기타 시설 : 경매 등으로 인수한 사실 증명서류 등
- ☞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내 환경오염 등 피해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주민건강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고 실무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서류들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환경성조사서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으로 일부 대체도 가능하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 추가
 -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관 종이거나 지자체에서 수집 · 운반 · 보관 중인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도록 규정
 - ☞ 유기물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자들이 수집하거나 운반이 가능한 폐기물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별도의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3) 수도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정기심사' 신설(강화)
 - 최초 인증 이후 위생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정기심사 근거 및 이와 관련한 인증 취소요건 등 신설
 - ☞ 수도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을 정기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물 절약 투자대행업 등록제 도입
 -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효율적 시행과 업체관리를 위한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의 등록제 및 등록취소요건 등 신설
 - ☞ 물절약투자대행업은 자본 및 기술투자가 선행되며 특히 누수저감 분야는 관망관리, 수압조정 등 수도시설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요한 최소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결과 미신고시 포획허가를 취소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강화)
 - ☞ 야생동물 밀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밀렵 및 밀거래에 대한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밀거래 가격을 고려할 경우, 포획허가 취소와 더불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원안의결

* 멧돼지 : 150만~250만원 / 1마리 등

- 야생동물 관리자에게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금지 의무, 질병감염 야생동물의 살처분, 사체의 소각·매몰 및 이동 제한의무를 부과하고, 사체 매몰지의 발굴을 금지하도록 함(신설)
- ☞ 야생동물 관리자는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역학조사, 질병감염 개체의 살처분, 소각·매몰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4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환경분야 측정기기 제조·수입자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과 사용자의 정도검사 수수료 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강화)
- ☞ 비현실적인 수수료에 의한 검사기관의 수지악화는 부실검사 및 검사기피 현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수료 현실화로 인해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04년 이후 8년 만의 조정인 점, 기재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물가상승 효과를 감안한 최저요율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용

- 배출시설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감소하거나 위탁자를 변경하고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변경신고하도록 함
- 재활용시설의 시설용량 증가(100분의 30 이상)나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을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
- ☞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행정·관리상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위탁자, 위탁량 변경, 명의 또는 대표자 등 변경사항을 허가(신고)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과 유출방지턱을 설치해야 함

- 퇴비화시설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비수기시 액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설치조건을 정함
- 시설의 뒤뜰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 호기성·혐기성 생물학적 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저장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함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장소는 넘치지 아니하도록 여유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는 정화시설 설치자에 한하여 기록·보존하도록 간소화하고,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퇴비 및 관리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등의 부적정한 처리 및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특정지역 허가대상 시설은 농가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수준의 강화된 기준 적용(BOD 40mg/L, SS 40mg/L, T-N 120mg/L, T-P 40mg/L)
- 그 이외에는 농가 정화시설의 정상 가동을 통해 달성 가능한 수준의 기준 적용(BOD 120mg/L, SS 120mg/L, T-N 250mg/L, T-P 100mg/L)
-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정화시설에서 배출되고 있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농림부, 대한한돈협회 등)간 합의를 도출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4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새로운 대기배출시설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질소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추가시설) LNG 사용보일러, 고효율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바이오매스, 목재 펠릿 등) 등

☞ 산업공정 및 연료 사용량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증가, 특정대기유해물질(수은, 비소 등)의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대상 추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나, 0.3% 저황유 사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180→160ppm)하는 것은 동법시행령(제40조 별표 10의2)과 상충하므로 현행 배출기준을 유지하도록 개선권고

(48)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

☞ 공공하수도 시설의 부실한 위탁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세부절차 및 변경등록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하수도법(제19조의4)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위반사항 및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행정처분기준 등 유사한 타 행정처분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기술진단전문기관, 방지사설업, 유독물영업자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측정기 휴대 내용을 추가

☞ 통상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의 특수성상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안전장비 휴대가 필수적이고 허가·등록조건에만 장비보유를 의무화할 경우, 허가·등록 후 장비를 매각 또는 임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준수사항에도 동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49)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등록기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

- (준수사항)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적절한 운영과 관리대행업자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나 규제비용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위반형태별로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

※ 하수도법 제50조 제1항에서 과징금을 2억원 이하로 규정

☞ 적정 하수처리 운영을 통한 깨끗한 상수원 확보 등 공공하수도 관리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필요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폐기물관리법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은 5년마다 1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관리대행업자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처리시설 운영 등을 주기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환경인력개발원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에서 운영 중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 규제수준이나 규제비용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화조, 맨홀 등의 청소나 폐쇄작업 중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등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비 보유를 허가·등록기준에 추가

- ☞ 통상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비 보유는 필요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동장비를 무료로 임대받거나 구입비용의 일부(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순환골재 사용자에게 용도와 품질기준 등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종료 등의 사유 발생시 계약갱신 의무 규정
 - 계약갱신 미이행자에 대하여 예약갱신 명령조치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계약갱신 명령 미이행시 허가취소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별도의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동 규제는 현행 배출자 신고를 미이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규제완화)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처리시 인수, 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추가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51) 하수도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시·도지사가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함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별운영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는 바람직하고, 개인하수도관리구역 지정(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보호가 시급한 지역 위주)에 따른 시설관리 위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공동관리로 인하여 운영·관리비의 감소도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비산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대상 업종을 정함(신설)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원유정제처리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3. 제1차 금속산업 중 제철업 및 제강업
 - ☞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부터 지정·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상 업종 선정 및 도입시기는 적용 대상 업종의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원안의결
-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를 통합한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정함(신설)
 -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존의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의 분야별 장비 및 인력기준을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통합하여, 규제수준의 변화는 크게 없으며, 기술 발전 등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추가 또는 삭제하였음
-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신설)

- 공기조화기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아니한 자 : 1차·2차·3차 위반 모두 100만원
-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 1차 위반 60만원, 2차 위반 8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 상위법에서 정한 과태료 한도금액 내에서 위반내용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부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공기조화기 냉매(불소계 가스)의 환경적 악영향 및 법정교육 위반시 유사사례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원안의결

(5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환경기술인의 교육의 주기, 기간 중 '09.7.1일부터 '11.6. 30일까지의 기간 중의 교육대상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 한시적으로 교육 면제('09.6.30)
- 직장 이직으로 환경기술인 재임명될 경우, 신규 교육 및 재교육 등 문제점 해소
- 사이버 교육개설 근거 규정 마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개정, '12.7.5)
- 시군별 맞춤형 현지 출장 교육실시로 교육방법 개선
-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주기, 기간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 필요
- ※ '환경교육관련 법령에 관한 규제영향분석' 연구용역 실시(한국정책학회, '12.4)
-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 ☞ 현행 교육운영 제도를 유지하되, 전문기술인에 대한 교육부분은 3년 후에 재검토하도록 개선권고

(5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소음·진동환경 기술인에 대한 교육주기 및 교육기간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행 일몰조항을 삭

제하고, 현행 교육운영 제도를 유지하고자 함(내용심사)

- 교육주기 : 신규교육(최초 채용일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최초 교육 후 3년마다)
- 교육방법 및 기간 : 집합교육(1일 6시간) 혹은 사이버교육(6시간)
- ☞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등을 위해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자들의 교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기간 단축, 사이버교육 병행 등 상당한 개선 노력이 있었으므로 재검토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원안의결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대기환경기술인 등에 대한 교육주기 및 교육기간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행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교육운영 제도를 유지하고자 함(내용심사)
- 교육주기 : 신규교육(최초 채용일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최초 교육 후 3년마다)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교육기간 : 1종·2종·3종 사업장(4일 28시간), 4종·5종 사업장(2일 14시간)
- ☞ 직장 이직 등 환경기술인 재임명시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을 면제하고, 전국 배출업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영세 사업장(4, 5종)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시·군별 권역별 출장교육을 확대·실시하는 등 교육운영 측면은 적정하나, 1~3종 사업장의 4일 교육(전문관리자 과정)은 다음 교육주기가 도래하는 3년 후에 추가 개선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개선권고

(5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사업장폐기물 감량 의무 대상업체 범위를 음·식료품 제조업 등 2개 업종과 연평균 100톤 이상 지정폐기물 배출자까지 확대함

* 감량 의무 대상 : 1,417개소 → 1,904개소(487개 순증)

☞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업체 확대는 폐기물 감량 등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5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주기 · 교육대상자별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 교육기간이 적절한지를 '12년 말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의 교육]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주기)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일수
배출자	배출시	사업장 (일반, 지정)	신고시, 법규 위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환경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음식물류 다량배출자	법규 위반시		
	시설 설치시 (자가처리)	사업장 (일반, 지정)	3년마다	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승인)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 (신고*) 환경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음식물류 다량배출자	시설 설치시		
처리자	처리업자	소각, 매립 등	3년마다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환경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수집 · 운반	허가시, 법규 위반시		
	처리신고자		3년마다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 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제시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
⇒ 규제 재검토행 일몰조항(제84조)을 삭제하고 현행 교육운영 제도를 유지

☞ 현행 교육운영 제도를 유지하고 규제 재검토행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원안의결

(58)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교육주기 및 교육기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조치 완료함에 따라 현행 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개인하수도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현행 교육 등 재검토 존속기한을 폐지
- ☞ 규제 재검토행 일몰조항을 삭제하여도 관련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59) 일몰도래 재검토행 규제 심사(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유독물관리자 · 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유지하고자 함(내용심사)
- ☞ 환경오염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규제 특성상 규제완화는 국민건강 피해와 직결되므로, 규제 개선은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환경보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유지하고자 함(내용심사)
- ☞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전문적이고 정확한 설계 · 시공이 필요하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경규제 개선은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환경보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토양정화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고자 함(내용심사)
- ☞ 오염된 토양의 적절한 정화작업은 일정수준의 시설 · 장비 및 숙련된 기술인력 등이 필요하고 이미 사무실 구비요건을 삭제하여 최소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개선은 사업자 부담완화와 환경보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전제요건을 유지하고자 함(내용심사)
-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인가요건은 적절한 재활용의무 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이며, 이해관계자

의 개선 요구도 없으며, 해외사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규제유지 필요성이 있으나, 인가 조건 중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은 연도별로 고시하는 재활용의무를 및 출고량에 따라 변동되므로 인가요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의무 및 준수사항, 제재근거 등을 유지하고자함(내용심사)

☞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야생동물 박제업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 및 유통·판매 장부 등의 구비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감소할 경우 규제폐지 및 개선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6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조명기구의 적용범위를 정함(신설)
 - 장식조명 : 연면적 2,000m²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위락 및 숙박시설 모두, 교량, 미술품
 - 광고조명 : 전기를 이용하는 허가대상 광고물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 ☞ 빛공해 우려가 큰 장식조명, 광고조명, 공간조명 등을 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용대상 선정은 적용 대상 업종의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하에 협의·결정하였기에 원안의결
- 상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신설)
 - 조명시설 사용중지·제한명령 위반 :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 (1.5배 미만) 1차 경고,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2.0배 미만) 1차 경고, 2차 100만, 3차 이상 200만원, (2.0배 이상) 1차 경고,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출입·검사를 방해·기피 :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세부기준'(10.6. 법제처)에 따라 위반 횟수별 부과금액을 정하여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시 최고 부과금액을 차등적용한 것은 위반정도별 피해규모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의결

- 빛방사허용기준의 세부기준과 기준의 적용 예외를 위한 신청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함(신설)

☞ 빛방사허용기준은 국내외 사례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대부분 수용하였고, 기존조명은 적용구역 지정 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기준적용 예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사성격, 규모 및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출기한과 관련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과 자료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조치기간(3개월 이내)을 정하고 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를 위한 서식과 첨부서류(이행결과 증명자료 등)를 정함(신설)

☞ 개선명령 조치기간은 피규제대상이 조명기구의 구매·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용하여 정하였으며, 이행결과보고서에 조치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한 것은 행정기관의 개선명령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이므로 원안의결

(6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또는 자체방제(防除)계획 변경제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강화)
 - 1차 위반 12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고,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위반 횟수별 부과금액을 정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유해성심사 시험기관 지정신청시 첨부할 서류에 시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강화)
 - * 기존 서류 : 시설 현황 내역서, 운영 현황 내역서
 - ☞ 시험기관의 실질적인 시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피규제대상은 기운영 중인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이미 수행한 시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며, 유사

사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한 규제는 아니므로 원안의결

- 사고대비물질의 세부 관리기준을 공통관리사항과 위험유형별(화재·폭발, 독성, 도난·전용 3개 분야) 관리사항으로 구분하여 정함(신설)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관리기준 및 유독물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대비물질의 약 60%가 이미 유독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며, 외부인 출입관리대장의 기록·보존의무를 추가한 것은 화학사고 및 테러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6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외국인 등이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생물자원 획득 30일 전까지 획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신설)
- ☞ 외국인 등이 국내 생물자원을 연구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국내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획득 목적, 생물정보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출기한은 획득신고서의 허위작성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서 반려시 수정·보완 및 포획·채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기간이므로 원안의결

- 위해우려종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함(신설)

* 위해성 심사서, 수입계약서, 수입국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증명서, 사용계획서

☞ 국내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는 외래종의 국내 생태계 위해성 정도, 사용목적, 적법한 유통 절차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 반입 승인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승인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국내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수입·반입여부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 자료이므로 원안의결

3. 기상청

최병근 | 사무관(044)200-2441, cbk3095@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기상법 개정안 등 2건에 대해 강화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원안의결

[기상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기상청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4.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기상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9.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기상청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기상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의 요건을 규정(강화)

(현행)

- 교육·훈련기관 지정 대상유형으로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

련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

(강화)

– 교육·훈련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및 시설·장비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인력 요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 3명 이상

* 기상예보사, 기상기사·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기상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기상 분야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4년) 이상자, 기상관련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자

• (시설·장비요건) 교육·훈련 사무실·강의실, 컴퓨터·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자재 1식 이상 확보

☞ 법률(35조 2항·5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의 필수요건인 인력, 시설·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기상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적격자의 확보, 교육·훈련 공간 및 기자재 등에 대한 요건 규정은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기상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요건에 지정기준이 미달인 경우와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추가로 규정(강화)

☞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와 교육지원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요건 등으로 추가한 것은 양질의 기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8절 |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1. 교육과학기술부

정 재 환 | 사무관(044)200-2437, congdamama@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자격기본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18개 법령 등에 대해 신설 10건, 강화 12건 등 총 2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였음
- 심사대상 22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9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7회 예비심사 (2012.2.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1회 분과위 (2012.3.23)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3.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 관리운영규정 개정안	제296회 예비심사 (2012.3.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제462회 분과위 (2012.4.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5. 자격기본법 개정안	제323회 예비심사 (2012.7.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468회 분과위 (2012.8.20)	원안의결 2	신설2 *중요 1, 비중요1
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제334회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진로교육법 제정안	제471회 분과위 (2012.9.28)	원안의결 2, 철회권고 1	신설 3 *비중요 2, 중요 1
10. 교원자격검정령	제472회 분과위 (2012.10.11)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12.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43회 예비심사 (2012.1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3회 예비심사 (2012.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6회 예비심사 (2012.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7회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19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신설 10 강화 12 *중요 6, 비중요 16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를 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등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또는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중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 최근 학교폭력 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기존 제도하에서는 위원회 소집 등 절차가 필요해 가해학생의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추가적 폭력 등으로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학칙개정절차 등 학교규칙 기재사항에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 종래 명확한 근거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던 두발·복장·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법령화한 것이며, 학교규칙제·개정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사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3)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 관리운영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WCU 육성 사업에 따라 초빙된 해외 학자에 대해 ‘연구실적의 저조’ 등을 이유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는 유형을 ‘유형1’ 뿐만 아니라 ‘유형2’까지 확대함
 - ☞ 실력 있고, 유능한 해외학자의 초빙은 WCU 사업의 근간으로, 연구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형1’과 동일하게 전일제 교수를 유치하는 ‘유형2’에까지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형 1 : 전공 · 학과를 신설하여 해외학자를 전일제 교수로 유치
- *유형 2 : 기존의 전공 · 학과에 해외학자를 전일제 교수로 유치
- *유형 3 : 기존의 전공 · 학과에 해외학자를 비전일제 교수로 유치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유치원이 공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7개 항목, 17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연 1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부칙을 통해 2년 이내 모든 유치원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 공시해야 할 내용이 중복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며, 홈페이지 구축비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유치원에 홈페이지를 2년 내 구축토록 하는 것은 공시 효과 대비 비용 부담 정도가 크다고 보여짐. 이에 따라 세부항목 중 '급식보건안전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유치원 보육과정 편성 · 운영 및 평가 항목에 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의 홈페이지 구축 의무를 삭제토록 개선권고

(5) 자격기본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민간자격을 '대외적 표시 · 광고 이전'까지 관계전문기관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표시 의무 및 거짓 · 과장광고 금지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등록 자격 관련 위반행위 또는 위법행위시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격관리 · 운영 정지 등을 신설하며, 등록자격관리기관의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등 민간 등록 자격에 대한 지도 ·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 2011년 7월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동의한 것으로, 제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상정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1.7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사결과

등록자격의 허위 ·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위법 행위 등을 하는 등록자격관리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등록자격관리자의 책무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

- 교육훈련과정 이수형 제도를 추가 도입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등 일정한 경우 공인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자격검정 · 교육훈련과정 운영 정지

☞ 2011년 7월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한 것으로, 제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상정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1.7 행정사회분과위원회(예비심사) 심사결과

기존 검정형으로만 운영되던 공인 민간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교육훈련과정 이수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개인과외교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신고증명서 등 서류비치 의무를 부여함
-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 일부 서류에 대한 비치が必要하며, 개인과외교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소와 달리 비치대상 서류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및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국 · 공립 유치원과 유아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정부지원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 교육기관과 같이 운영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며, 사립유치원 유아 정원 기준 역시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유아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유치원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원) 부과기준을 정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200	300	500
나.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100	200	300

☞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간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학교장에게 기존 학교폭력 관련 공시정보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대신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처리결과’를 공시하도록 강화함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축소·상정하는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 강화와 학교의 학교폭력 방지 노력을 제고할 수 있음. 또한 연2회 실시되는 온라인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교육감이 공시시스템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행정부담이 없고 학교차원의 축소·은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9) 진로교육법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진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학교장에게 의무 부과
- ☞ 심리검사(직업적성·진로성숙도검사·직업가치관 등)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데 필요하며, 무료 진로심리검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공공 검사 선택시 추가 비용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학교장에게 정규 수업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진로상담을 제공토록 함

☞ 진로 상담은 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역할로써 학교장에 적절한 수준의 의무 부과인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학교의 전문적인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배치

☞ 진로교육의 성격상 교사로 국한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형(스텝형)과 유럽형(교육교사형) 중 국내에 더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해당 규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권고

(10) 교원자격검정령(강화 1)

■ 심사내용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치원장의 자격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필수로 포함하고, 경력기간*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 전문대졸 이상 : 3년(현행) → 7년(‘14년) → 9년(‘16년)
고졸 이하 : 7년(현행) → 11년(‘14년) → 15년(‘16년)
- ☞ 유치원장의 자격기준을 어린이집 원장자격 기준에 비해 상향조정하더라도 부처 개정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력기준을 전문대졸의 경우 ‘7년’, 고졸 이하의 경우 ‘11년’까지만 두도록 개선권고

(11) 고등교육법 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 종전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그중 필요한 규정(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령에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 등에 대한 추가적 규제부담이 없는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2) 대학설립·운영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경영하려고 하는 경우 재산관련사항(재산목록, 재산의 수익조서 등)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 종전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그 중 필요한 규정(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령에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 등에 대한 추가적 규제부담이 없는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 ☞ 종전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그 중 필요한 규정(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령에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 등에 대한 추가적 규제부담이 없는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한국학교 교장 자격을 '국내 교장 자격 소지자 → 대한민국 이외 국가의 교장 자격에 상응하는 자'까지 기회를 확대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학교장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하도록 해당 규정 신설
- ☞ 한국학교 교장 자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책임성 강화 및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 방지 차원에서 임기 제한 규정이 필요하며, 파견 교장 임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 수준(3년, 1회 중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5) 대학설립·운영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대학 정원 증원시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의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학생정원 기준을 '계열별 학생정원(편제정원)으로 일원화하고, 대학 정원 증원은 대학의 편제 완성 후에만 가능하도록 개정
- ☞ 대학의 부실을 막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이 편제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정원 증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정원을 채운 대학에 비해 정원을 미충족한 대학의 정원증원이 용이한 현행 규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 또한, 편제미완성 대학의 경우 편제완성시까지는 정원 증원 등 외형 확장보다 대학운영의 내실과 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6) 고등교육법 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정원의 학사편입학 정원(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제3호)을 입학정원의 5% → 2%, 모집단위별 정원의 10% → 4%로 제한
- ☞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가 지나치게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실제 학사편입 모집가능인원에 비해 총원율은 30%대로서, 학사편입 모집인원 제한 강화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신설 1)

■ 심사내용

-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을 받지 못하게 한 자 등에게 부과토록 한 과태료(최대 100만원)를 위반 횟수(1~3회 이상)에 따라 세부기준 설정
- ☞ 아동·청소년이 가정 환경 등 일부 요인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상황, 위

반 횡수간 경중 등을 고려한 부과 기준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학급담당 교원(이하 ‘담임’)에게 학급 운영 및 학생의 교과 외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도록 의무부과함
- ☞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가장 많은 교류가 있는 담임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다른 제도(보직교사 등)와 같이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담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문화체육관광부

심정환 | 사무관(044)200-2438, sim5776@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9건, 강화 8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2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8건 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2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59회 행정사회분과위 (2012.2.2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4.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도서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4.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5.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2.7.16)	원안의결 7	신설7 *비중요7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467회 행정사회분과위 (2012.7.2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2 *중요 1, 비중요 1
7.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제467회 행정사회분과위 (2012.7.20)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8.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7.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2.8.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8.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2	강화 2 *비중요 2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 1
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14)	원안의결2	신설 2 *비중요 2
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77회 행정사회분과위 (2012.12.26)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25 개선권고 3	신설 19 강화 8 내용심사 1 *중요4, 비중요 24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을 금지(신설)
 - 단, 등급분류시 부착된 전자적 처리장치에 의해 점수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게임이용의 결과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케이드 게임기의 경우 온라인 게임과 달리 신원확인을 할 수 없어 점수보관증의 거래, 환전 등 사행화 우려가 크고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예외규정(단서)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환전 등이 금지되는 게임머니, 아이템 범위에 사업자 또는 법인이 영리목적으로 취득한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추가(강화)

☞ 불법게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위법령에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선권고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부착의무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을 추가(강화)

- 단, 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이 개·변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 현재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화

☞ 경품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하여 사행성 게임기로 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조항을 정함(신설)

☞ 동 사안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타 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 도서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과 관련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함(신설)

- ☞ 동 시안은 사립전문도서관의 변경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피규제자는 사립전문도서관 252개에 한정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함(신설)
 - 1차 위반한 경우 : 500만원
 - 2차 위반한 경우 : 700만원
 -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1,000만원
- ☞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범위 내에서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였고,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의 정도를 달리하여 과태료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7)

■ 심사내용

-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의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신설)
 - 〈대회관련 상징물〉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휘장, 마스코트, 메달 및 상장, 슬로건, 주제가, 픽토그램, 대회기, 기념주화, 기념우표, 공식간행물, 포스터 및 유니폼 디자인, 시각적 상징물(Look of the Games)
 - 올림픽(Olympic), 올림픽대회(OlympicGames), 올림피언(Olympian), 올림피아드(Olympiad)라는 명칭과 올림픽대회를 상징하는 오륜, 올림픽대회성화 및 성화봉, 올림픽대회기, 올림픽대회표어, 올림픽대회가, 역대 올림픽대회 상징물
 - 장애인올림픽(Paralympic), 장애인올림픽대회(Paralympic Games), 장애인올림피언

(Paralympian), 장애인올림피아드(Paralympiad)라는 명칭과 장애인올림픽대회 표장(Three Agitos), 장애인올림픽대회기, 장애인올림픽대회표어, 장애인올림픽대회가, 역대 장애인올림픽대회 상징물

- 제1호 내지 제3호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음악

-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

- ☞ 최근 국내외적으로 올림픽자산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IOC와의 마찰 사례가 증가하는 등 IOC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임. IOC-강원도-대한올림픽위원회간 체결한 개최도시계약은, 조직위원회에게 올림픽 자산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계약 불이행시 IOC는 대회 철회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책임은 조직위원회에 있도록 규정. 따라서, 동 규제는 사전 승인 대상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위해 적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특구(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서 아래의 행위를 제한(신설)

-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방법으로토지의형상을변경하는행위,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등의토석을채취하는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 ☞ 통상 특구 내 불법적 토지이용 등으로 인한 기대이익(부동산 투기 등)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특구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유도할 필요. 또한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다른 혁신도시 건설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신설)

☞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다른 법률의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기 때문에 승인 단계에서 감독기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또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은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특구사업시행자는 도지사와의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 범위에서 재투자하도록 규정(신설)

☞ 특구사업시행자는 자발적 신청에 의해 선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령에서 사전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신설)

－ 임대차계약의 상대방 :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되,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국내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투자규모, 투자시기 및 종사자의 수

－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되, 미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인의 주택수요는 임대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임대 조건이 필요함. 따라서 임차인 선정, 임대보증금 산정 및 분양계획서에 대한 승인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로 판단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결정

-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신설)

－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또는 시설

－ 대기·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 특구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을 저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 기술이전이나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 동 규제는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한 업종·시설을 사전에 공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혼란·재산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 또한 특구지정 고시일 현재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주한 해당 업종 종사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 유사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 1차(300만원), 2차(400만원), 3차 이상(500만원)

－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 이상(300만원)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음.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 심사내용

- 신설된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함(강화)

- 공통사항

- 전체 영업면적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복합영상기기(1대의 기기에서 비디오물 감상이 가능하고 이에 부가하여 게임이용 또는 노래 연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로 영업하는 경우는 이를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본다.
-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

- 시청실(노래연습실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 통로의 너비는 1m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의 조도가 20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리거나 잠금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래연습을 위한 조명기구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청실 안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청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복합영상물제공업은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공통사항 중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전체 영업면적 대비 비디오물감상실업 면적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각각의 면적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향후 법 적용시 다툼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면적비율과 관련 구체적 판단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강화)

- 비디오물감상실업자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차(영업정지 10일),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영업정지 3개월), 4차(등록취소)
- 비디오물감상실업자,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자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복합영상물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같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속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7)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자격요건과 그와 관련된 학력과 경력,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함(신설)

- 1급 자격요건

- 문화예술교육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 2급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4과목 이상 90시간
- 문화예술교육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 2급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7과목 이상 180시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140시수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수료 후 예술강사 경력 5년 이상(2급 자격 취득 면제), 7과목 이상 180시간, 7과목 이상 180시간
- 그 외 : 2급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7과목 이상 180시간

- 2급 자격요건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소유자〉

- 박사학위 취득자 : 경력요건 없음, 5과목 이상 10학점 또는 150시간
- 4년제 졸업자 : 경력요건 없음, 19과목 이상 48학점 또는 720시간
- 3년제 졸업자 : 경력 1년 이상, 19과목 이상 48학점 또는 720시간

- 2년제 졸업자 : 경력 2년 이상, 19과목 이상 48학점 또는 720시간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비소유자〉

- 문화예술교육 미관련 대학 이상 학력 소유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 경력 4년 이상, 19과목 이상 48학점 또는 720시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140시수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예술강사 경력 3년 이상, 교육과정 면제

☞ 정부는 학력규제를 철폐하고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학력규제 개선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개정안은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학력차별 철폐 노력과 맞지 않고 동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19과목 이상 48학점 또는 720시간)은 대학의 2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전공자·고졸자는 현실적으로 요건 충족이 어려움. 2급 자격요건 중 학력·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2급 교육과정의 이수를 면제하고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선권고

(8)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콘텐츠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계약강요 금지 및 부당이득 취득금지 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 ☞ 콘텐츠 유통사업자는 콘텐츠 제작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고, 콘텐츠는 포털 서비스·전자상거래·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유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적절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함(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1차(자격취소)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1차(자격취소)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1차(자격취소)

–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차(자격취소)

– 체육지도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로 인하여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1차(자격정지 2월), 2차(자격정지 4월), 3차(자격정지 6월)

☞ 자격취소 사유를 법 제12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한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0)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립중앙미술관이 아닌 자는 국립중앙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신설)
- 동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함
- ☞ 국립중앙미술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국가행정 일부를 위탁받아 집행하므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명칭 사칭·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으며 종전 법안 규제심사(‘10.7.19)시에도 비중요규제로 판단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연장안전진흥센

터에 기술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

- ☞ 다중 이용시설인 공연장의 안전검사 결과 확인 및 부실 안전점검 예방 등을 위해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피규제대상이 5개 기관으로 극히 소수이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을 강화(강화)
 -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m부터 2m까지의 부분(또는 0.8m부터 1.8m까지의 부분으로 낮추어 설치할 수 있다)에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개의 기기에서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하면서 노래연습 등 다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 이상에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리거나 잠금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 개정안은 멀티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기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강화)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쇼파를 비치한 때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3월), 4차(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처분기준 규정이 필요하며 유사입법례인 복합영상물제공업에 대한 제재조항과 동일한 수준인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강화(강화)
 -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쇼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정안은 멀티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동일한 수준으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으나, 동일한 이견이 제출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12.7.19) 결과 원안대로 통과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4)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신설)
 - 명칭을 사용한 경우 : 300만원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200만원
- ☞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

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준 설정인 점,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여객선 내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여객선 규모를 1만톤급 이상 → 2만톤급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되, 기존 요건 중 하나인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내용심사)
- ☞ 현재 국내 크루즈 운항 현황 및 추세 등을 볼 때 2만톤 이하의 크루즈 운항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규제를 실효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소형 여객선의 카지노 난립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을 연간 순 매출액의 1,000분의 3.5로 결정(신설)
-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비율을 낮출 수 있음.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음
 - 사행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 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 「지방세법」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사업의 경우 :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 ☞ 도박 중독의 폐해와 예방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행산업사업체에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부담금을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규제로 그 비율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심의위원회('12.11.13)의 결정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신설)

- 연체기간 1개월 이하 : 부담금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 :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
-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 가산금 조항은 부담금 체납에 따른 이행 수단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연체기간에 따라 15~25%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 내의 사항으로 타 법령과 비교시에도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승마장업의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함(신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것
 - 주차장, 휴게실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 ☞ 개정안은 관광객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하는 수준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게임결과물(경품)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전체 20%를 초과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과 관련하여, 동 규제의 존속기한(당초 '10.12.21~'12.12.20)을 2015. 12. 20까지 3년간 연장
- ☞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는 기존장치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기존 게임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수립시까지 청소년게임 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

3. 문화재청

심정환 | 사무관(044)200-2438, sim5776@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0건, 강화 7건 등 총 1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7건 중 1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4.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7	신설7 *비중요7
3.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7.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2)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7	신설 10 강화 7 *비중요 17

나. 201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금연구역으로 지정 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시설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함(신설)
 -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및 보물로서 동산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
 - 국가지정문화재 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로서 수목 및 초화류가 있는 지역
 - 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문화재로서 동산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
 -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동산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 ☞ 개정안은 담뱃불 등으로 인한 문화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정문화재 보관시설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금연구역의 표지 설치·스티커 부착 등, 소요비용의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7)

■ 심사내용

- 문화재청장은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 지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보존구역 관리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보존구역의 관리상황이 그 매장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금지나 제한
 - 보존구역의 관리단체에 대한 보존구역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 보존구역의 관리단체에 대한 보존구역 보호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존구역' 지정 및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존구역' 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리비용 지원, 토지매입 등 해당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원제도 가 마련되어 규제로 인한 국민 권리 제한 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10.12.9)에 따라 문화재발굴사와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인증제도(시험)를 도입(신설)

☞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따른 문화재발굴사와 준문화재발굴사의 권리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신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문화재보호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결격사유 규정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점과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규제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둘 이상의 조사기관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않도록 규정(신설)

☞ 내실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서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데 자격증 대여, 중복취업으로 자칫 문화재 발굴조사의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이고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신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를 사전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정행위 예방 효과를 높임.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취소 기준을 신설(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 매장문화재 조사 중에 매장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 제25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가 될 수 없는 경우

– 제25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조사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제25조의5 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 조사기관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 매장문화재 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동 규제는 자격취소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격증 불법 대여, 중복 취업 등을 방지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보수교육을 의무화(신설)

☞ 문화재발굴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새로운 전문지식을 적기에 제공·습득하게 함으로써 관련 자격자 등의 기술·자질 제고를 위해 필요.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3)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문화재매매업자는 거래장부를 기록하고 매년 1회 이상 및 폐업시에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

부를 검인받도록 규정(강화)

- ☞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규제를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음성적 문화재 유통의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문화재청장은 아래의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 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관한 정보
 - 자재 및 인력의 수급 상황 등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보
- ☞ 개정안으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실적 증빙을 위한 시간·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발주자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보하여 최적의 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개정안은 문화재 수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리능력을 평가·공시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고, 건설업 등 관련 분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취소 규정에 수리경력 및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를 추가(강화)
 - ☞ 경력관리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거짓 신고 등 법을 위반한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문화재 수리 등의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강화)
 - ☞ 수리능력 평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필요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보수교육대상자를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강화)
 - ☞ 최신 수리기술의 습득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보수교육의 취지와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재수리기술자도 문화재수리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의무보수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 또한 추가적으로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을 강화(강화)
 -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1차(자격정지 3월), 2차(자격정지 6월), 3차 이상(자격정지 1년)
 -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법 제2조 제1호 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1차(자격정지 1월), 2차(자격정지 3월), 3차 이상(자격정지 6월)
 - ☞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이 높아지는 시행규칙의 취지를 감안할 때, 3차 위반 이후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조항을 '3차 이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기준(강화)
 -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지정·가지정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1차(자격정지 3월), 2차(자격정지 6월), 3차 이상(등록취소)
-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법 제2조 제1호 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1차(영업정지 1월), 2차(영업정지 3월), 3차 이상(영업정지 6월)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 1차(영업정지 6월), 2차(등록취소)
- ☞ 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주위 시설물보다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처분기준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기술인력 충원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이므로 3개월이 지나서도록 인력충원이 되지 않는 것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7)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고도 지정지구에서 허가된 행위에 대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신설)
- ☞ 제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어 재상정한 법안으로 제237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의결된 바 있고(2011.8.22)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8)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시 및 매년 검인을 받도록 규정(강화)
- ☞ 제325회 예비심사(‘12.7.17~7.20)에서 비중요규제로 의결된 사안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4.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재환 | 사무관(044)200-2437, congdamo@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4개 법령 등에 대해 신설 6건(총 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였음
- 심사대상 6건 중 1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5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제464회 분과위 (2012.6.15)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23회 예비심사 (2012.7.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신설 6 *중요 1, 비중요 5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신설 4)

■ 심사내용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대상 범위와 등록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등록대상은 우라늄 235 등 방사성물질의 방사능 농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등록사항(원료물질 등의 종류, 방사능 농도 등) 및 등록 절차 신설

- ☞ 우선 등록대상 방사능 농도와 수량 값은 IAEA 및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등 국제기구의 방사선 방호에 대한 권고를 반영하여 정하였고, 국민 안전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공정부산물물 처리, 처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사항(피폭방사선량 저감 방안 수립 등)을 정하고, 관련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며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신설
 - ☞ 공정부산물 처리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공정부산물 취급 종사와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승무원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않도록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연1회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최소화 하면서 종사자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방사선 안전관리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가공업체의 제조업자는 자발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교환, 수거 및 폐기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정부가 사후적으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 방사선 안전관리 부적합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허용기준 및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 절차 등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제조업자 등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교환·수거 및 폐기 등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시행령안 제9조「조치 명령 등」은 규제의 목적이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 중인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개선권고하였고, 고시안 제4조는 "장난감, 화장품과 같이"라고 하여 규제의 대상이 불분명하며, 향후 지나치게 확장·해석될 우려가 있어 '장난감, 화장품 제품'으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
- 공항, 무역항,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에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경보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 국내에서 수집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 검출 사례가 종종 발생, 사회적 문제 및 무역마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왔고, 재활용 고철의 유통경로를 고려하여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이 혼입된 고철이 용융되어 제품으로 재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신설 2)

■ 심사내용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원자력사업자는 물리적 방호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상위법인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국내 핵물질 안전관리와 방사능 테러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 ☞ 제18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으로 '11.5.23. 규제개혁위원회심사(비중요규제)를 받은 법률안인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물리적 방호 교육 및 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방호교육·훈련에 대한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제18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으로 '11.5.23. 규제개혁위원회심사(비중요규제)를 받은 법률안인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재환 | 사무관(044)200-2437, congdam@pmo.go.kr

가. 2012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과학기술기본법 1개 법률(신설)에 대해 규제를 심사, 개선권고 하였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제476회 분과위 (2012.12.10)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나. 2012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부정행위 등을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사업참여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제한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및 영구참여제한을 신설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신설 규제임
 - ☞ 책임성과 윤리성 담보 측면에서 부정행위시 참여제한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되,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의 적절성 측면에서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9절 |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나민희 | 사무관(044)200-2442, iammini@pmo.go.kr
강민호 | 사무관(044)200-2443, kang2507@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일몰도래 재검토형 법령 등 4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97건, 강화 56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15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54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15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2.1.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5)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예비심사 (2012.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2.3.2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4.2)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9.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4.5)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10.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4.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2.4.12)	원안의결 9	신설 9 *비중요 9
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5.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5.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5.8)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1
1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5.8)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비중요 6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5.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5.15)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18.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5.21)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비중요 6
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2.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6.18)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2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6.29)	원안의결 7	신설 4, 강화 3 *비중요 7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6.29)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7.3)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비중요 6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7.6)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7.16)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2.7.16)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27.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1. 국민연금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3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7.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469차 행정사회분과위 (2012.9.4)	원안의결 3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35.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2.9.7)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3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9.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42.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2.10.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3. 의료급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12)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4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9	신설 6, 강화 3 *비중요 9
4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7. 지역보건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8.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17)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9.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제477차 행정사회분과위 (2012.12.2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중요 1
계		원안의결 152 개선권고 2	신설 97, 강화 56 내용심사 1 *중요 3, 비중요 151

나. 2012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설)
 - ☞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적절히 통제하여 최신의료기술 선도를 추구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시설 · 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및 방법, 평가 등을 규정(신설)

-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여 병원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신설)
 - ☞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정받거나, 지정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정취소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고 적법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대상을 보육정원 40명 이상 시설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신설)
 -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국공채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신설)
 -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사유 및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신설)
 -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유통기한 경과된 음식물 등 제공금지, 실내공기 질 지속관리, 보육교직원을 위해 4대보험 가입 등 어린이집 운영기준(신설)
 -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중증장애인생산물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확대(강화)

☞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업무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신설)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수용할 만한 수준
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공제회 인가 절차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신설)

- (신청 절차) 공제회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
- (준비금 확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은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적립하여야 함
- (구분 회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공제사업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전문기관 요건) 공공기관 또는 보건산업 분야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보건산업 정보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을 수행, 전담인력과 조직을 둘 것

☞ 인가절차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며 준비금 신설은 공제 계약상의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여 회원들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며, 구분회계는 다른 사업에 비하여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정성 확보차원에서 별도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작업장 내부 구조물·벽·바닥·천장등의 시설요건 및 급수시설 요건 강화, 운반시설 요건 신설 등(강화)

☞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선진국, Codex 기준 등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로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대상, 등록방법, 변경등록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신설)

- (제조판매업 등록대상) 직접 제조한 화장품, 위탁제조한 화장품, 수입한化妆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전자상거래상 수입대행형 거래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 (등록신청시 첨부서류)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이나 유독물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확인
- (변경등록) 제조판매업자변경·상호·소재지·제조판매관리자변경시,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의 유통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외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 범위를 규정(신설)

- (품질관리기준) 제조판매업자가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절차에 관한 문서, 기록 등
-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제조판매업자가 안전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정보 수집 및 안전확보 조치의 실시 등
- (제조판매관리자) 의사·약사 4년제 대학의 화학·생물학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졸업자로서 관련업무 경력자 등으로서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여

☞ 제조판매업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기 위한 품질관리 기준이며,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신설)

-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준수

- 제조회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
- 제조 또는 품질검사 위탁시 수탁자의 관리·감독에 철저
-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정보사항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식약청장에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등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당해연도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뿐만 아니라化粧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보고(신설)
 - ☞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기 사용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적절 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 (신설)
 - (교육실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전문교육기관 및 화장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에서 지정·고시
 - (교육계획) 최소한 교육 개시연도 1개월 전까지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료증 교부 및 매년 실적보고
 - (교육대상)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제조판매관리자가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 시간 이하
 - ☞ 제조업자 등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 등은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제고를 위해 적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신약개발정보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등(신설)
 - (전문기관 요건) 공공기관 또는 보건산업 분야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보건산업 정보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을 수행, 전담인력과 조직을 둘 것

- (지정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지 정서를 반납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피규제자(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200여개) 및 이해관계자(제약기업 752개)의 이견이 없고 별도 규제비용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 및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개설자가 동등한 비 율로 분담(각각 50%)(신설)
 - ☞ 분만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분만기관 급감, 산부인과 기피 등)을 고려,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 료기관개설자의 분담비율을 5:5에서 7:3으로 조정
 - 또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시행 후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사례 등을 토대로 시행 3년 후 에 규제를 재검토할 것을 개선권고(중요규제)
-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개설자별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도록 함(신설)
 - ☞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의 징수액, 부담 액수의 산정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 제로 원안의결
- 종합병원개설자에 대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신설)
 - ☞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설치범위를 종합병원 이상으로 설 정하였고 유사입법례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게 제출하고, 공제조합은 보건의료인 등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 배상 업무 및 가입 대상, 공 제규약 등을 포함하는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도록 함(신설)

- ☞ 공제조합의 설립절차·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민법·상법이나 유사한 개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재개 사유서,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결과보고서, 운영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강화)
 -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거주시설 이용희망자 등이 시설이용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신설)
 -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재산 신고서
 -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강화)
 -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9)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한약재 제조업체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함(신설)
 - ☞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제 도입은 한약재 품질제고를 위한 것으로 한약관련산업성장 및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혈장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을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혈장으로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원료혈장 마스터파일(PMF), 록백시스템, 격리보관 등을 의무화(강화)

- ☞ 국내외 원료혈장에 대하여 동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철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는 PMF, 록백시스템, 격리보관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의약품 등 회수계획을 공표한 회수의무자는 그 공표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청장에게 제출(강화)

- ☞ 위해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조기에 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회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수계획 미공표, 공표매체 오류 등의 사례 발생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임상시험의 조기종료 또는 중지를 결정하면 시험기관의 장 및 시험책임자에게 통지하고 시험기관의 장은 식약청장에게 보고(강화)

- ☞ 임상시험 관리의 실효성 및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0)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인 면허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신설)

* 신고 내용 :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 ☞ 의료인 면허신고내용은 의료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의료인 면허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자격관리 내실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의료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절반 이하의 작은 글씨 등으로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강화)

- ☞ 소비자의 의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기만적으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9)

■ 심사내용

-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동사(凍死) 우려, 폭염 등 응급상황에서 현장처치, 병원 이송 등 일체의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함(신설)
 - ☞ 규제수준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노숙인 급식시설과 자활지원사업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노숙인 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되었고,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기준(신설)
 - ☞ 노숙인 시설 재편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자원의 배치를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국가 및 지자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노숙인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서와 법인의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신설)
 - ☞ 규제수준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노숙인복지시설(급식·진료 제외) 운영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여성노숙인 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신설)
 - ☞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여성 노숙인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성별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입소시설(재활·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태별 특성에 맞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신설)
 - ☞ 규제수준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 실태, 자립계획 등에 대해 조사·

상담 후, 입퇴소 심사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신설)

☞ 규제수준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노숙인 등에 대한 시설입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재활·요양시설)에 보호하되,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신설)
 - ☞ 규제수준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신설)
 - ☞ 규제수준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최종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가격표에 붙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을 표시하는 경우 그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강화)
 - * 예 : 불고기 100g당 〇〇원(1인분 120g △△원), 갈비 100g당 〇〇원(1인분 150g △△원)
 - ☞ 식육의 가격표시를 최종 지불가격으로 일원화하고, 중량표시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편법적 가격인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적정규제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강화)
 - (공개내용)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함께 공개

- ☞ 국민건강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을 줄이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허가 대상,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허가신청·변경·폐업신고, 교육의무 등을 규정(신설)
 - ☞ 과징금 부과기준,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허가신청, 변경허가 및 폐업신고, 교육의무 등의 기준은 현재의 마약류 관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취급자와 같은 기록의 작성·비치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대상상의 재고량과 차이가 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강화)
 - ☞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취급자와 같이 마약류의 보관·유통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임시 마약류저장기준을 기존 마약류저장기준과 동일하게 규정*(강화)
 - * 업소 또는 사무실안에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고, 이중 잠금장치 철제 금고(임시 마약) 또는 잠금장치 설치 장소(임시 향정신성의약품)에 보관
 - ☞ 임시 마약류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신체상·정신상 위해 효과가 있어 기존의 마약류와 동일한 저장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허가, 마약류 취급승인자의 기록 의무 부과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강화)
 - ☞ 기존의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자 및 마약류 취급자에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의 정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3)

■ 심사내용

- 입양기관 변경신고 내용으로 '직원 명단', '설비(평면도)' 변경을 추가(강화)
 - ☞ 규제수준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입양기관의 장(4시간)과 종사자(8시간)는 입양아동, 미혼모,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 등에 대한 심리·상담이론 등의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신설)
 - ☞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입양기관장이 중앙입양원에 제공해야 할 입양 정보의 제공범위와 입양업무 기록 의무 및 기록물 영구보존 범위를 규정(신설)
 - ☞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담당직원이 매 3개월마다 가정조사를 실시(강화)
 - ☞ 입양아동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입양인이 공개청구할 수 있는 입양정보의 범위(신설)
 -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입양시 친생부모 연령, 입양사유, 거주지역(시·군·구 단위) 등
 - ☞ 입양인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입양기관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강화)
 - ☞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무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부작용사례 포함) 보고시점을 '확인한 때'에서 '알게된 때'로 전환하고, 보고 의무자에 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추가하고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강화)
- ☞ 정책당국이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시점을 '알게된 때'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통상 소비자가 위해사실 신고를 판매업자에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통 전문판매업자에게도 보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7)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강화 2)

■ 심사내용

- 위탁가정은 적합한 수준의 소득,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가정위탁될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함(신설)
- ☞ 위탁가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강화(신설)
- ☞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최소한 상담원(사회복지사 1급)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실과 상담실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심리검사·치료실, 집단상담실, 교육실 등 설치기준 신설(강화)
- ☞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 자격 및 시설기준(강화)
- ☞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기준(신설)

☞ 법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무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교육 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를 부과(신설)

☞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되었고,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8)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신설 3)

■ 심사내용

- 의약품등 제조관리자가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원이 품질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50만원)(강화)
- ☞ 약사법에 따른 제조관리자 및 품질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의약품등 제조관리자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기관지정 등 및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신설)
- ☞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은 의약품 품질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2년에 16시간의 교육시간은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음
- ☞ 또한 교육기관 요건 및 지정절차 등은 의약품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로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시 의약품 품목허가 받은 자의 보고 시점을 '현행 중단후 10일 이내'에서 '중단 60일 이전' 사전보고로 변경(강화)
- ☞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도 요양기관 및 정부 등이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신설)

- ☞ 동 규제는 의약품에서 기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규격 및 그 함량과 제형,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로서 효능·효과를 달리 하여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해당 일반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제한(강화)
- ☞ 동시 분류 의약품인 일반의약품의 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광고가 제한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 광고효과가 발생하여 일반소비자의 오남용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품질검사기관 대표자 및 검사원의 교육이수시간 규정(대표자 매년 4시간, 검사원 매년 21시간)(신설)
- ☞ 품질검사의 중요성과 품질검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부적합 의약품 등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입법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아동·청소년 등 3대 분야 20개 사업에 자격기준 설정(신설)
- ☞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명칭, 주소, 근로자 수, 미이행 사유 등을 공표(신설)
-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맞벌이·다자녀가구 등의 영유아 보육 우선 제공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신설)
-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맞벌이·다자녀가구 등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가능하도록 하여 실수요충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어린이집의 설치·변경인가 신청시 등기부등본 및 그 밖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강화)
- ☞ 규제필요성이 인정되고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세분화하고,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기준 강화(강화)
- ☞ 유사제도와와의 형평성이 인정되며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강화 3)

■ 심사내용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부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사 추천 요청(신설)
- ☞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은 보다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 산하 시설의 연간 세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 중 1명을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로 선임(신설)
- ☞ 대규모 사회복지법인 재정이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시정요구 없이 바로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시정요구 기간 내의 경우와 불법행위가 판결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요구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시정요구 절차를 제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거주시설에서 모든 사회

복지시설(이용시설 포함)로 확대(강화)

- ☞ 이용시설 중 대다수가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가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처분 대상 법인·시설명 등을 해당관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신설)
- ☞ 유사제도와외의 형평성이 인정되며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 보고서 및 향후 운영계획서를 제출(강화)
- ☞ 규제수준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처분 기준 신설(강화)
- ☞ 법적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2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신설)
- ☞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적립시 적립 및 사용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보고(신설)
- ☞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수 있음(강화)
- ☞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간접비 사용비율 50% 이내로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3)

■ 심사내용

-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신설)
-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 조화를 실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신설)
- ☞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 실시(신설)
-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함(강화)
- ☞ 행정절차적 규제로 규제내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수교육(연간 10시간) 추가(강화)
- ☞ 규제수준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언어재활사가 고의·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등 처분 기준 신설(강화)
- ☞ 법적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위반행위 발생시 반드시 지정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업무정지기간 중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경우’를 추가(강화)
 - ☞ 장기요양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 또는 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신설)
 - ☞ 장기요양기관 이용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이용시설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및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수급질서를 위한 규정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 승계되도록 규정(신설)
 - ☞ 행정처분 회피 목적으로 폐업 후 친족 등 타인명으로 재개설하거나, 타 법인에 통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수급자나 가족이 적합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보게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강화)
 - ☞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되었고,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장례지도사 자격검정 기준(신설)
 - ☞ 규제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신설)
 - ☞ 행정절차적 규제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변경 등(신설)
 - ☞ 요양보호사 및 보육교사 등 유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동의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등 장례지도사 자격취소 등 기준(신설)
 - ☞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장례지도사 자격취득 특례대상자 자격증 발급(신설)
 - ☞ 기존 종사자들에게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특례를 인정하기 위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26) 장애인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중앙·지역 장애인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신설)
 - ☞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의결
- 금융기관 등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신설)
 - ☞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의 제공 의무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신설)
 - ☞ 현재 장애인복지가족지원 사업지침(장애인 재활치료사업)에 따라 시행 중인 내용이며, 별도 추가 부담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특수교사와 보육교사 등의 자격 및 배치(신설)
 - 특수교사 :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보육교사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및 관련교과 8과목 24학점 이수한 자

☞ 장애영유아에 대해 유치원과 동등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용도 유치원에 준하는 수준이므로 원안의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신설)

☞ 현재 지침(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부담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자료제출 ·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신설)

☞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7)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주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식약청장에게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식품위생법상 일반식품 제조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강화)

☞ 타 식품제조 · 가공업자 등 영업자간 형평성, 위생수준 제고 및 국민 건강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위해 시 · 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를 지정 · 운영 중(신설)

☞ 현재 운영 · 관리되고 있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9)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비선택진료의사 확보, 선택진료 안내문 게시, 신청서 사본 발급 및 기록 보존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강화)

☞ 의료기관의 의무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상위법의 처분기준(시정명령)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므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0)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의료기관 내 환자의 권리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강화)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게시물 크기, 수단 등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게시 내용도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 관계법상 근거를 두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 운영 확대(신설)

– (현행)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장 → (개정)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장과 200병상 이상 병원의 장

☞ 확대 범위가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총 337개로, 179개 순증)되었고, 법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최소한으로 규정(1명 이상)되어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1) 국민연금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 기관 등에 자료 요청 및 제공(신설)

☞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 대상기관과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응급구조사 미탑승 구급차에 대한 과태료(150만원) 부과(강화)
 - ☞ 응급구조사 미탑승 구급차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 과태료 금액도 타 의무위반과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권역외상센터 지정 요건 및 기준, 제출자료 등을 규정(신설)
 - ☞ 지정신청시 제출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만 이뤄져 있으며, 지정 요건 및 기준은 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받는 자가 부담(강화)
 - ☞ 현재도 응급구조사가 경비를 부담(5만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부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사 법률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 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구급차 등 운용자는 매월 출동 및 처치기록을 제출토록 함(강화)
 - ☞ 정보의 양(11년 기준 월별 15만건)을 고려했을 때 월단위 제출이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되고, 정보망을 통해서도 기록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장애인이 문화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연장, 영화관을 편의제공 대상 시설로 추가(강화)
 -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동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유사입법례에서도 공연장의 경우 동일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강화)

☞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시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신설)
 - ☞ 국내 의료기관 개설시 요구되는 사항과 동일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료라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외국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협약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신설)
 - *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은 협약병원 소속의사로 구성하는 등
 - ☞ 동 규제는 외국 의료기관으로서의 실질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되고,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인원·구성비 등의 하한만 최소한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전체인력 중 외국 의사 면허자의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 면허자 배치가 필요한 진료과목*에는 외국 면허자를 1인 이상 확보토록 함(신설)
 - *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 ☞ 외국병원의 외형만 갖추고 실제로는 국내 의료진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서, 의료기관 설립·운영 후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최소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중요규제)

(35)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2)

■ 심사내용

-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신청을 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갱신에 필요한 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신설)

☞ 갱신 제출 자료로서 제품 허가(신고)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요구되고 있고, 미국·EU 및 국제기준과도 부합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법률에 따라(안전상비의약품 1회 판매수량을 제한) 안전상비의약품을 1일분씩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의약품 공급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업자 준수사항으로 규정(강화)

☞ 소량포장단위의 제품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유통망 증가로 시장확대가 가능하므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현재도 식약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 제품을 제조·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히 규제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폐업·휴업·재개시 신고 의무 부과(신설)

☞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수수료 등 비용과 비교할 때 사전에 의약품 유통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행정적 대처가 가능한 편익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판매자 등록 전 사전교육의 내용 및 절차를 정하고, 유통관리·진열·판매량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신설)

☞ 의약품의 품질관리, 약화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서 교육 시간 및 경비, 판매제한 연령 및 판매장소 관리의무 등이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판매업 신고 및 교육의무의 이행 담보를 위해 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부과액을 정함(강화)

☞ 약국의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약사법 체계 내에서 약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을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로 함(신설)
 - ☞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력

이 있는 의료인이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66㎡ 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외부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표시(강화)

☞ 적용 대상을 한정(1만 6,000여개, 전체의 13%)하고 게시규격을 특정하지 않아(A4 1면으로도 가능) 피규제자의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 편익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은 외부에 최종가격표를 의무적으로 부착 또는 게시(강화)

☞ 적용 대상을 한정(8만 383개소, 전체의 11.8%)하고 게시규격을 특정하지 않아(A4 1면으로도 가능) 피규제자의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 편익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비를 반드시 설치(강화)

☞ 소독장치 설치 및 유지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부 급식소에 예산이 지원(1,206개소)되고,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시 상시적으로 안전한 지하수를 공급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3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신설)

☞ 법정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40)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포장단위를 지정(13종)(신설)
 - ☞ ‘당번약국 시범사업’(09년) 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선정(1년 후 품목 재조정)하고 포장단위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포장단위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조업체의 시설투자 비용은 판매처 확대에 따른 이익 등을 감안해 제조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과도한 규제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강화)
 - ☞ 응급구조사 미탑승 구급차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 과태료 금액도 타 의무위반과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시 제출서류를 명확화(신설)
 - ☞ 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출자료 역시 지정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근거규정 마련(강화)
 - ☞ 이미 응급구조사가 경비를 부담(5만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부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응급환자 이송에 직접 책임이 있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매월 출동 및 처치기록을 정보센터로 제출토록 의무화(강화)
 - ☞ 정보의 양을 고려했을 때 월단위 제출이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되고, 정보망을 통해서도 기록제출이

가능하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2)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위한 연구인력 및 연구실적 기준,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화(신설)
 - ☞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3) 의료급여법 개정안(신설 3, 강화2)

■ 심사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통보(신설)
 -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신설)
 - ☞ 업무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높여 기금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신설)
 - ☞ 제조업자 등이 의료급여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금지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의료급여비용의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강화)
 - ☞ 의료급여기관이 이의신청 제기를 이유로 환자에게 신속하게 환불하지 아니한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강화)

-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정수급 방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4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6, 강화 3)

■ 심사내용

-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사항에 ‘소재지’를 추가하고, 휴업·폐업 신고시 제출서류에 ‘이관 확인서’를 추가(강화)
 - ☞ 유전정보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해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입법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구체화하고, 변경신고 사항에 ‘시설 및 인력’을 추가하고, 신고 구비서류에 ‘유전자검사항목과 목적’을 추가(신설)
 - ☞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설정하였고, 최초 신고 구비서류에 유전자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 시행령에서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기관위원회 설치,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인체유래물 익명화 등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새로운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기준 설정(강화)
 - ☞ 사안의 경중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반횟수, 가중정도 등을 규정하였고, 유사 입법사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법령에서 위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운영(통합운영, 공동운영 등), 인증기준, 공용위원회 요건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구체화(신설)
 - ☞ 유사입법 및 해외사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기관 자율적 연구윤리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대상자 보호, 심의의 공정성 및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인간대상 연구에 있어 기록·보관해야 하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보관기간 3년), 연구대상자

가 정보공개 청구시 기관위원회의 정보공개 방법, 비공개 사유통지 절차 등을 규정(신설)

- ☞ 연구대상자의 알권리와 연구자의 편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공개 절차는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 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실적(평균 월 1회) 및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고, 인간복제 위험이 있는 체세포복제배아나 단성생식배아를 이용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기관의 신고 및 준수사항을 규정(신설)

- ☞ 기존의 난자채취 빈도(6개월)를 고려할 때 난자기증자의 건강권을 위한 조치로 합리적 수준이며, 인간개체복제방지 예방을 위한 상시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연구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인체유래물 등을 타 연구자에게 제공할 때 기증자의 동의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인체유래물은행장은 인체유래물 제공현황을 연 4회 기관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의무를 신설(신설)

- ☞ 규제로 인해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미미한 반면 인체유래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기증자 보호 및 국민의 안전 등의 편익이 크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으로 ‘배아줄기세포주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추가(강화)

- ☞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시 필요한 규제로서 승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 재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규제완화(승인권차 변경)도 이뤄졌으므로 특별히 과중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신설)

- ☞ 양질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를 파악·관리하고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출서류도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4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음식점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적용을 영업장 넓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적용(강화)
- 「도로법」상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등을 규정
- ☞ 일반음식점 등은 공중의 이용이 빈발한 생활편의업종으로 흡연시 간접흡연의 노출과 피해가 큰 곳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흡연실 설치기준도 기존 규정에 비해 과도한 의무가 아니라고 판
- ☞ 무엇보다 동 제도 도입을 통해, 흡연·비흡연자 모두에게 실내 흡연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계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의결

(4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담배에 가향물질(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신설)
-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7) 지역보건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류에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새로 포함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

상기관에 이를 추가(강화)

- ☞ 연간 1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유사명칭으로 겪을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법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규제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보건소 관련 업무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이용을 금지(신설)
- ☞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다루는 보건기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부과는 타입법례를 감안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8)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신설)
- ☞ 동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 위임 범위(300만원 이하) 내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기준을 두었고,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수행기관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신설)
- ☞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고,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서 역량을 갖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신설)
- ☞ 국민에게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간이 일정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평가 결과 현저히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개선 지시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함(신설)

☞ 지정 취소 전에 의무이행 기회를 재차 부여하는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행기관의 무책임한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9) 일몰도래 재검토행 규제심사(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규제 중 금년도('12.12.31)에 도래하는 '한지의료인의 의료행위 종사지역 변경허가' 등 총 15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한지의료인의 의료 행위 종사지역 변경 허가	한지의료인이 허가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 의무	의료법 제79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행위금지	보건·의료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당행위 금지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 행위지정고시 제3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	허가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3년주기 허가사항 갱신 의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공중위생 영업 변경 신고 사유 및 구비서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이·미용사 업무범위	이·미용사의 영업장소 범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모지의 사전매매 금지	매장될 자의 사망전 모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의 금지 의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규제유지 일몰삭제
법인모지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변경)신고	법인모지 등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의 시설사용료·관리비용 산출근거 제출 의무 및 가격표 게시항목 범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장례식장 영업시 게시된 금액외 비용징수 금지 위반시 처분기준	장례식장 영업자의 가격표에 게시된 금액 이외의 비용징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기간 및 행정처분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규제유지 일몰삭제
기부금품 모집 승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승인 의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위생사 면허	위생사 면허증 재교부 사유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제폐지	원안동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원천공제 계산서의 작성교부	공제계산서 작성 및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 의무	국민연금법 제90조	규제폐지 ('11.6.7)	기폐지
간호조무사 입소자격	국립서울병원 정신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입교 연령기준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교육훈련규정(예규) 제8조	규제폐지	원안동의
재입원의 제한	국립서울병원 퇴원환자에 대한 재입원 제한	국립서울병원기본운영규정 제11조	규제폐지	원안동의
전공의의 임용 시험	수련기관의 전공의 추가 공개경쟁시험 실시 승인 의무	전문의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규제폐지 ('12.8.23)	기폐지
입원기간	국립재활원 입원기간 제한 및 퇴원 후 6개월 이내 재입원 제한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10조	규제폐지	원안동의

☞ 14건에 대해서는 규제유지·폐지 등에 원안동의하고, 법인모지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변경)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건에 대해서는 사용료, 관리비 등의 근거없는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유지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격표 게시항목 범위 등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몰설정을 유지하는 것을 개선권고

2. 식품의약품안전청

나민희	사무관(044)200-2442, iammini@pmo.go.kr
최병근	사무관(044)200-2441, cbk3095@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대한약전 개정안,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제정안,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3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1건, 강화 22건으로 총 3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3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대한약전의 의약품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2.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12.3.5)	원안의결 1	강화 3 *비중요 1
4. 대한약전 개정안	예비심사 (2012.3.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전부개정안	예비심사 (2012.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제정고시안	예비심사 (2012.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2.3.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2.4.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5.17)	원안의결 1	강화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 국가검정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5.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2.6.18)	원안의결 1	신설 2 *비중요 2
12.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2.7.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7.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2.7.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예비심사 (2012.8.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검사능력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2.1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2.1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2.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5.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9.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대한약전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2.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대한약전의 한약(생약) 규격집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3	신설 11 강화 22 *비중요 33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세포치료제의 기준규격을 원료의약품의 기준규격으로 별도 설정하지 않고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일부 항목에 포함
 - 자료제출의약품 중 신규 품목에 대한 안정성 시험자료 중 장기안정성시험 자료만 제출
 - (개정안)
 - 세포치료제 제조과정 중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세포 동결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원료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별도로 설정
 - 자료제출 의약품 중 신규 품목에 대한 가속 및 가혹시험 추가 제출
- ☞ 최근 첨단기술을 이용한 생물학의약품의 개발에 따라 제제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을 국제수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기준의 선진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코자 하는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대한약전외 의약품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중 게파르네이트 캡슐 등 136개 품목을 삭제하고, 구연산나카메테이드 정 등 33개 품목의 시험항목 개정(강화)
 - 방사성의약품 중 [N,N'-에칠렌디-L-시스테인이트(3-)]옥소테크네튬(99mTc) 디에칠에스테르 주사액 등 5개 품목 삭제
- ☞ 의약품의 품질 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해 일부 시험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심의('11.6.28)를 거쳐 마련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식품첨가물 4개 품목(뮤타스테인, L-소르보오스, 가재색소, 크릴색소)의 지정취소(강화)
 - 계피산 등 식품첨가물 70개 품목의 납 규격 신설 및 강화(강화)
 - 국내 생산 및 수입실적이 없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성분 2종(도데실펜옥시벤젠디선포산, 설포지방산) 삭제(강화)
- ☞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11년도 재평가사업 결과를 토대로 미국·EU 등 선진국 수준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12.1.18)를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대한약전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의약품 기준규격의 국제 조화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페르페나진말레산염 및 페르페나

진말레산염정 삭제

– 겐타마이신황산염 주사액 등 165개 품목의 일부 시험항목 신설

☞ 국내 의약품 허가 현황과 생산량 및 국제기준 동향을 반영하여 조정하여 정신신경계용 약물인 페르페나진말레산염은 국내 허가제품이 없어 삭제하며, 주사용 제제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시험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11.10.28)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5)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 지침 전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의약품 등 연간 생산·수입실적 보고기한

–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 관련협회(한국제약협회 등) : 다음 해 4.15일까지

– 관련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다음 해 6월 이내

– 실적보고시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제출 가능

● (개정안) 의약품 등 연간 생산·수입실적 보고기한(강화)

–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 관련협회 : 다음 해 1.31일까지

– 관련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다음 해 2월 이내

– 실적보고시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제출가능

☞ 의약품 등 연간 생산·수입실적이 다음 해 6월 말에 식약청에 보고됨에 따라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배포가 하반기 이후로 지연되어 실적자료의 조속한 제공 및 의약품 정책통계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보고시기 등을 개정하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제정고시안(신설 1)

■ 심사내용

● (현행)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범위(안 제2조)

–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당뇨병치료제·비만치료제 등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수입신고한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

–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 등

● 검사결과 등의 제출(안 제4조)

–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검사로서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동 고시안은 식품위생법 제19조의4(검사명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식품 등을 취급하는 영업자의 위생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검사명령 시행을 통해 식품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아마’를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개정(신설)

– 효소불활성화 등을 위해 열처리한 씨에 한함.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함

- ☞ 생아마씨 섭취로 인한 식중독사고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국 등 외국기준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피규제자의 수가 적고(총 42개 업소), 규제비용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건조과실류 중 오크라톡신 A 기준 신설(10μg/kg 이하)(신설)
 - * 오크라톡신 : 곰팡이독소의 일종으로 곡물 및 건조과실의 저장 중 곰팡이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독소임. 이 중 오크라톡신 A는 독성이 강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
- 가공식품 중 오염물질(중금속, 곰팡이독소, 패류독소 등) 기준은 원료식품의 기준 범위 내에서 적용(신설)
- 식품 중 농약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기준설정지침(기준설정 대상 · 방법, 제출 자료 범위, 제출서식 등) 신설(신설)
 - ☞ 수입된 농산물의 오크라톡신 A 오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오염물질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여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잔류허용기준 업무를 명문화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별도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9)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동물유래품목에 대한 관리강화(강화)
 - ‘단백 · 장기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안전성 시험, 항원성 시험, 히스타민 시험을 설정하여 관리
 - ☞ 단백질 · 장기추출물의 경우 체내에서 알려지 등 이상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원료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당초 본 규정이 「의약

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한약(생약)제제 부분을 분리하여 동 고시를 제정하면서 해당 조항 누락된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범위 명확화(강화)

-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 유효성, 기준, 시험방법 등의 심사를 위해 제조(수입)업체에서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신설 및 명확화
- ‘한약서 처방으로 대한약전,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이외의 생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 ‘한약서에 수재되어 있으나 공정서 미수재 한약’에 대한 제출자료 신설
 - ☞ 한약서 처방임에도 공정서 이외의 생약을 사용하는 경우 본문 규정에서 안전성 · 유효성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누락되어 신설한 것으로 자료제출 범위가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에 새로운 방법으로 가공한 생약을 포함하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는 등 과도하지 않음
 - ☞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료의약품으로 허가(신고)받는 의약품’에 준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피규제자(제조 · 수입업체 등)의 불필요한 자료 준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 자료의 범위가 명확화한 내용임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0) 국가검정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약사법 개정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장에게 출하승인을 신청하여 시험검정과 함께 출하승인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
 - * 살아 있는 생물체로부터 유래된 단백질이나 다당류 또는 살아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
 -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완제품 출시관리 방식을 국가검정제도*에서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법 제53조, 시행규칙 제67조)함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서류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함을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 완제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정 실시
 - ** 제조단계별 제조 · 품질 관리 기록 검토 + 완제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정

- 의약품 제조업자는 출하승인 신청시 식약청장에게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를 제출
 - 요약서에는 제품정보, 주요 제조공정 요약정보, 제조단계별(제조원료-원액-최종원액-완제 의약품) 제조 기록 및 시험결과 등을 포함
 - ☞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제조단계별 성분의 일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생물학적 제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에는 유통 전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가 포함
 - 미국·유럽 등에서도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가 사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제출 자료가 미비하거나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식약청장은 기초자료 제출 요구, 실태조사 실시 등 기능동물유래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 '단백·장기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안전성 시험, 항원성 시험, 히스타민 시험을 설정하여 관리
 - ☞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서면에 의해 검토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실태조사 등이 필요
 - 제조업자에게 새로운 실험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 단계별 일반 정보, 기 실시한 시험 결과 등을 단순 요약해서 기재하는 데 그치고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거의 없음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1)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신설)
 - 시설을 소유하거나 교육기간 중 임차
 -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및 주차장
 - * 1개 이상으로 바닥면적 150㎡ 이상, 교육인원 100명 초과시 1인당 1.5㎡씩 추가 확보

- 의자·탁자 등, 시청각 시설(스크린, 음향 등), 환기 및 조명시설, 그 밖에 휴대용 컴퓨터·빔프로젝트 등

- 교육인력관련 교육관리자는 1명 이상

* 강사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교육과정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기관에서 관련 교육훈련을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 강의 / 이와 동등한 강사자격이 있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자

☞ 약사법 개정으로 제조관리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함에 시설요건이나 인적요건은 일정수준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 강의실 1인당 1.5㎡, 교육관리자 1명, 강사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 등

● 변경사항 보고(신설)

- 교육실시기관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및 변경 사유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

- 교육실시기관의 교육실시규정(교육목적, 교육과정·강사 및 수강료·결강 등에 관한 사항 등) 변경 사항 발생시 관련기록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

☞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교육실시규정 등은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시 기재해야 할 사항(시행규칙 제42조의2 ④항)으로 사후관리를 위해 파악해야 할 중요사항이고, 보고 시한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설정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2)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 식품위생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에 방사능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과 평가기준을 설정(강화)

☞ 적합한 방사능 검사능력을 갖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의 방사능 오염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안전 검사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일본 원전 사고 직후 한시적으로 지

정·운영되어온 시설·인력 및 평가 기준과 동일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다른 검사 업무의 기준과 유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평가대상 확인을 위한 시험자료 제출, 안전성평가 제출자료 추가,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의견수렴 기간(20일→30일) 및 후대교배종의 검토기간 연장(30일→90일)(강화)

☞ 시험법 자료 등 제출자료를 추가하는 것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이며, 의견수렴기간 및 심사기간 연장은 생명공학기술 발달에 따라 복잡한 조합의 후대교배종이 개발되고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사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배추, 인삼 등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강화)

☞ 잔류시험, 농약 전문가 검토회의, 해외 잔류허용기준 검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별도 의견이 없고 추가 검사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5)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강화 1)

■ 심사내용

-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추가 지정(강화)

－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인공안면턱관절, 안면아래턱인공보형물 등)

☞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사전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합성수지제(1-1 폴리염화비닐, 1-4 폴리염화비닐리덴, 1-11 폴리아미드, 1-29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금속제(5), 법랑(7) 등의 재질에 대한 용출규격 강화(강화)

－ 알코올함량 20% 이상인 주류를 담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용출규격 시험에 쓰이는 침출용매인 에탄올 비중을 상향(20%→50%)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유통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7)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업체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의 보고기한을 기존 4월 15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단축

－ 관련협회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식약청 최종 보고기한을 기존 6월 15일에서 2월말까지로 단축

☞ 의료기기 생산·수입 등의 실적 취합 및 분석*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사후 안전관리 대응을 위해 보고기간의 단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문제 등 발생시, 다양한 사후관리 툴(tool)의 조치(기획합동단속, 수거·검사, 회수·폐기 등)를 위한 유통정보(취급업체, 유통량, 유통추이 등)를 파악

(18)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의 글자 크기 및 줄 간격 지정 등

–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다음의 경우는 7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0.5포인트 이상

- 제품명[상품명, 품목(류)명, 형명(모델명),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사용시 주의사항 중 “경고” 항목 및 “의료기기”, “일회용”, “재사용 금지”, “임상시험용”, “임상시험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

※ 본 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지침(10년 10월에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내용임

☞ 의료기기의 구체적 표시기재 지침 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기의 적절한 관리와 사용으로 오작동 및 부작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9) 검사능력 관리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검사능력관리* 관련,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제출 기간 단축(45일→30일)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장이 검사능력을 측정·평가(식약청장 시료 배포→검사기관 검사수행·결과제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 식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수산물 검사에 限),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88개

☞ 제출기간 단축에 따른 검사기관의 불편이 수반될 수는 있으나, 기간 단축에 따른 보관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특례 삭제)에 따른 검사기관의 신뢰보호 이익보다 검사결과와 신뢰성 등 식품안전의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별도 이견 및 추가비용이 없음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0)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화장품 표시·광고를 실증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자료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신설)

– 실증자료(시험결과, 조사결과), 시험결과의 요건, 조사결과의 요건 등

☞ 화장품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자료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요건 등)을 정할 필요성에 따른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1)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강화)

* 제조용 동물 :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제조시 주로 마우스가 사용되며 마우스의 뇌에 바이러스를 배양한 후 정제 및 불활화과정 등을 거쳐 의약품 제조

☞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제조용 동물이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기준의 조화를 도모하고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2)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 혈장 제조업소 등* 실태조사 신청절차, 식약청의 세부 점검사항 및 통보절차를 정함

* 혈장 제조업소 등 : 국내 혈장제조업소, 혈장수출업소 및 수입 혈장분획제제의 혈장제조업소

☞ 원료혈장 관리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3)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화장품 제조판매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1월 말까지 관련단체*에 제출(신설)

*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 (사)대한화장품협회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관련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식약청 장에게 보고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에 의해 생산실적 등의 보고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강화)
 - 갑각류(근육살) 및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낙지의 납, 카드뮴 기준 신설
 - * (갑각류) 납 1.0mg/kg 이하, 카드뮴 1.0mg/kg 이하(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납 2.0mg/kg 이하, 카드뮴 5.0mg/kg 이하(내장을 포함한 낙지) 납 2.0mg/kg 이하, 카드뮴 3.0mg/kg 이하
 - 김(조미김 포함)의 카드뮴 기준 신설(0.3mg/kg 이하)
 - 사탕의 납 기준 신설(0.2mg/kg 이하)
- 식품 중 곰팡이독소 규격의 유효자릿수 개정(ex) 15μg/kg 이하 → 15.0μg/kg 이하)(강화)
- 흑삼(분말포함) 및 흑삼농축액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흑삼 2.0μg/kg 이하, 흑삼농축액 : 4.0μg/kg 이하)(강화)
-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규격 개정(강화)
 - * (예시) n(검체수) = 5, c(최대허용시료수) = 2, m(허용기준치)=1,000, M(최대허용한계치) = 10,000
- 떡류의 대장균 기준 신설(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함)(강화)
 - ☞ 국내 제조 및 수입식품 모니터링, 해외 기준·규격 검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설정된 기준으로서 이해관계자의 별도 이견이 없으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기업의 자가품질검사 비용 등보다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 설정으로 얻는 국민의 안전 등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5)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품목허가가 없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스코폴리아엽 등 총 13품목* 삭제 등(강화)
 - * 스코폴리아엽, 스트로판투스, 키나, 탈지맥각, 수은, 경분, 영사, 양기석, 청몽석, 화예석, 연단, 옹황, 자황 등(강화)
- ☞ 여러 고시에 분산되어 있는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통합·배치하고, 국내 허가제품 등이 없는 품목을 삭제하며, 한약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품목에 시험항목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6)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용기 및 포장표시에 있어 의약품 명칭, 제조연월일/사용기한, “의약품” 문자 : 7포인트 이상, 제조업자·수입자의 상호 및 제조번호 : 6포인트 이상 등(강화)
 - ☞ 의약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7)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추가(강화)
 - ☞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化妆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분석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사용한도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 미생물 한도 기준(신설)
 - ☞ 화장품 안에 미생물성 오염물질은 화장품의 품질과 국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진국 기준과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8)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18개 품목 농산물(쌀, 대두, 고추 등)에 대한 수입식품의 관능검사 기준(구체적인 검사방법, 판정기준) 및 연구·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강화)

* 제조방법 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이 포함된 연구조사계획서 제출

- ☞ 현재도 자체매뉴얼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규제자(수입자)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는 반면, 검사원의 업무 적용을 명확히하여 수입자들의 오인·혼동 여지를 없애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수입자가 부적합 처분에 따른 조치(반송·폐기 등) 이행기간 명확화(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설정)(강화)

- ☞ 관세법상 기준을 준용하여 이행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정밀검사 대상인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 신설(강화)

* 발기부전치료제·당뇨병치료제·비만치료제 물질 및 그 유사물질과 기준·규격이 없는 화학적합성품 및 인체에 위해가 인정되는 물질

- ☞ 유통 이전 단계에서 국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최근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정밀검사 대상 동시다성분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조정(50종 → 59종)(강화)

- ☞ 최근 5년간 동향을 분석하여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9)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부적합 처분된 수입건강기능식품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신고된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

- ☞ 유사입법례를 감안시, 규정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혼선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0) 대한약전 전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품목허가가 없거나 안전성 우려가 있는 건조갑상선 등 총 225품목 삭제(강화)

- 최신의 과학기술 반영 및 국제조화를 위해 리스페리돈 등 총 126품목에 대해 확인시험 등 일부 시험항목(강화)

- ☞ 우리나라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선진화 및 국제조화를 위해 '07년 이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국내 허가 제품 등이 없는 품목을 삭제하고, 국제조화를 위해 최신의 과학기술을 반영한 시험방법을 일부 품목에 신설·강화하는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1)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교육실시기관의 교육시설 및 장비(신설)

-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교육기간 중 임차,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및 주차장, 시청각 시설, 휴대용 컴퓨터·빔프로젝트 등

* 1개 이상으로 바닥면적 150㎡ 이상, 교육인원 100명 초과시 1인당 1.5㎡씩 추가

- 교육관리자는 1명 이상, 교육강사의 자격요건*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하고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기관에서 관련 교육훈련을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 강의 등

☞ 시설 및 인력요건은 일정수준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유사입법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2)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한 1년 연장(‘12년 말→’13년 말)
 - 표시기준 유효기간 만료시 그간 식약청 동등성 인정기준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던 유기가공식품 중 농림부 별도 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식품에는 “유기” 표시 불가
- ☞ 표시기준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원활한 수급 차질 및 외국과의 통상마찰 예방을 위해 농림부에서 동등성 기준을 마련·시행(‘14.1.1)할 때까지 동 규제의 효력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3)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강화 1)

■ 심사내용

- 스코폴리아엽 등 총 13품목 삭제, 귀관 등 4품목 총 아플라톡신 15.0ppb 기준 추가 및 감초가루 등 17개 가루생약의 잔류농약(원생약 기준 준용)기준(강화)
- ☞ 의약품(생약) 기준·규격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크지않고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여성가족부

강민호 | 사무관(044)200-2443, kang2507@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1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7건, 강화 4건 등 총 3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1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4.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5.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5.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5.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7.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6.15)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8.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2.7.13)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7.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7.13)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8.3)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1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1	신설 27, 강화 4 *비중요 31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신설)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37조(과태료) 조항이 신설·공포('11.9.15)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과태료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과태료금액은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고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윤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신설)
 - ☞ 일종의 절차규정으로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6월에서 3년간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제한으로 개정(강화)
 - ☞ 외국 현지에서 불법 결혼중개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국내법 위반사항과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유도하고 인권침해적인 결혼중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복지급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추가(신설)
 - ☞ 일종의 행정 절차적 규정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이 제공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신설)
 - 보호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유흥주점영업자가 게시할 성매매 방지 내용의 게시물 크기, 장소, 재질 및 색상을 규정하고, 미게시자는 500만원 이하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신설)
 - ☞ 유흥주점에 게시할 게시물의 크기, 장소, 색상 등은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입법례에도 적용되고 있으

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결혼중개계약서, 종사자명부, 회원명부 등 결혼중개업 장부·대장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강화)
 - ☞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장부 등의 비치기간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실적 등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신설)
 - ☞ 국제중개실적을 파악하고 중개업체의 지도·감독 등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7)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신설)
 - 사무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교육실 등을 설치
 - (시·도 센터) 소장, 팀장, 팀원, 행정원, 생활지도원, 청소년상담사 3인 이상
 - (시·군·구 센터) 소장, 팀장, 팀원,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
 - ☞ 설치기준은 현재 운영 중인 센터의 면적, 사업 등을 고려하였고, 자격기준은 현 지침을 기준으로 학력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예산반영을 감안하여 3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 청소년복지시설(일시쉼터, 단기·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건물형태, 침실, 상담실 등의 시설기준과 건강 및 생활 관리, 관리규정, 장부 등의 비치, 종사자의 수 등 운영기준을 정함(신설)

☞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고, 3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장, 보호·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정함(신설)
 - ☞ 자격 및 배치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및 현 지침(12년도 청소년사업 안내)의 내용을 이관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회계부정 등 위반사항과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신설)
 - ☞ 법적 의무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위반사항과 위반횟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3년마다 평가 실시(신설)
 - ☞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사업별 또는 기관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8)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금융기관 등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신설)
 -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법령에서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등의 제공 의무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신설)
 - ☞ 법적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원안의결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신설)

- ☞ 일정수준 이상의 아이돌봄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설정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신설)
 - ☞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 서비스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지침(201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과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원안의결
- 아이돌보미 자격, 자격취소 및 보수교육(매년 30시간 이내)을 정함(신설)
 - 아이돌보미 자격 : 1. 보육교사, 2. 유치원교사, 3. 교사, 4. 의료인 등
 - ☞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교육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지침(201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원안의결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신설)
 - ☞ 법적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원안의결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정함(신설)
 - ☞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전국 201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기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원안의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신설)

-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 4. 비영리단체, 5. 학교 등

-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을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위탁대상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므로 원안의결
- 보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함(신설)
 - ☞ 질 높은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8시간) 등 유사서비스의 전문인력 보수교육시간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정함(신설)
 -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관리가 필요하고, 다른 법령에서도 유사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 지정 기준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1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변경(강화)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이 대부분 개별방이거나 밀실형태로 꾸며져 있어 남·여 청소년이 함께 출입할 경우 청소년 일탈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높아 규제가 불가피하므로 원안의결
-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적합한 매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나이등급 외에 내용정보(선정성·폭력성·사행성 등) 표시(신설)
 - ☞ 청소년 본인이 적합한 매체물을 선택하거나 보호자·교사 등의 매체물 이용지도를 위하여 매체물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사입법례에서도 내용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신설)

- ☞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건전한 매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장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청소년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여부 확인 추가(신설)
 - ☞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한 확인방법이 불가피하므로 원안의결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 공표(신설)
 -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발행·유통하는 제공자에게 공표제도를 통해 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내용과 방법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1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신설)
 - ☞ 법정 상한금액 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수교육 실시(신설)
 - ☞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시간보다 완화되어 있으므로 원안의결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성매매 예방교육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성매매 예방교육 점검결과 공표(강화)
 - ☞ 성매매 예방교육의 법적 의무이행과 교육의 내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례로 성화롱 방지조치가 부실한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관리자 특별교육과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통일부

우세윤 | 사무관(044)200-2445, woosey@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총 6건(신설)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음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계	-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교역사업자 등록제

- 교역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일정 요건을 갖춰 통일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사업자는 각종 승인 신청 및 신고시 편의를 부여받음(신설)

☞ 제18대 국회 임기종료에 의한 폐기법안으로 '11.9.8.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개선권고*)를 받고 권고내용을 수용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권고내용) 등록제가 진입장벽이 안 되도록 등록요건을 최소화하여 법에 명기하고, 등록 변경사항 발생시 등록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유효기간 및 갱신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폐업 또는 사업중단시 신고하도록 개선권고

● 제3국에서의 대북지원 승인제

- 인도지원사업자가 남한외에 외국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여 북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승인받도록 함(신설)

☞ 현재 규정상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시 승인이 필요하나 제3국에서 북한으로 물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 미비 사항으로서 그 흠결을 해소하려는 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 등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남북간 금전이동 규율

- 교역 등 거래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 외에 북한으로의 이전성 금전 이동 등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신설)

☞ 그동안 법제도 밖에 있던 교역외 금전 송금문제로서 친북 세력의 불법송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북한이탈주민 및 이산가족이 재북가족에게 보내는 생계유지비 등 인도적 송금은 승인 면제 조항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한도물량품목 운영

- 국내 농수산물물의 수급 조절, 국내 생산자 보호, 위장반입 방지 등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물량을 일정 수준 제한하여 운영토록 함(신설)

☞ 신설 제도가 아니라 기존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 등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인도지원사업자 지정제

-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려는 자 중 적합한 자를 통일부 장관이 지정토록 하고, 지원목적, 지원능력 등 지정요건 및 지원방법 등과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정부지원(매칭펀드 형식)을 토대로 운영하는 만큼 공익성·투명성이 요구되는 바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으로 운영되어오던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으로 추가 비용이 없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 등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제3국을 통한 협력사업 신고제

- 협력사업을 시행하려는 제3국 법인의 설립 주체가 남한주민(모기업)인 경우에 대북 투자현황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신설)

☞ 현행법은 남한의 법인이 남북간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만 규정하여 남한주민이 제3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입법 미비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인 소재지 특수성상 실질적인 규범력 확보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를 고려하여 신고제로 운영토록 완화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 등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외교통상부

우세윤 | 사무관(044)200-2445, woosey@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 등 3개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내용심사 2건을 규제심사
- 총 4건 중 1건은 부대권고, 1건은 일몰삭제,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외교통상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5회 본위원회 (2012.6.14)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2.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제336회 예비심사 (2012.9.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제477회 사회분과 (2012.12.21)	원안의결 1 일몰삭제 1	내용심사 2 *중요 2
계	-	원안의결 2 부대권고 1 일몰삭제 1	신설 2 내용심사 2 *중요 3, 비중요 1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여권의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을 음절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고, 외국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을 외국의 현지발음에 맞추어 등록한 경우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신설)

☞ 여권은 국가가 발급한 공적신분증이므로 여권성명의 표기기준은 국제적이고 일반화된 객관적 표기 기준과 한글의 특성(음운변화 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여권 영문성명의 정정·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여권·위변조 증가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나,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시 외국 영문성명의 병기 표기를 장기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조건으로 원안동의(부대권고)

(2)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여권의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을 음절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고, 외국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을 외국의 현지발음에 맞추어 등록한 경우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신설)
- ☞ 여권은 국가가 발급한 공적신분증이므로 여권성명의 표기기준은 국제적이고 일반화된 객관적 표기 기준을 갖추고 한글의 특성(음운변화 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여권의 위변조 증가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문성명 정정·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나, 영문성명 표기시 외국 영문성명의 병기 표기를 장기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조건으로 원안동의(부대권고)

(3)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의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의무 및 등록요건(내용심사)
 - * 등록요건 : 자본금 1억원 이상,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 제출서류 : 정관,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가입 확인 서류
- ☞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요건은 이주알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이주자 감소에 따른 휴·폐업 등의 증가(약 66%)와 보증보험 청구 건수* 증가를 고려할 때 규제를 유지하고, 향후 피해 발생건수, 피해 금액,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제 폐지·개선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
- * 보증보험청구 현황 : '10년 37건, '11년 43건, '12년 49건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4항의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 사전 신고의무(내용심사)
 - ☞ 알선료 및 수수료 신고의무는 알선업체의 알선료 폭리 등의 사전 방지, 이주자들에게 비용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자율적인 알선료 책정후 신고만 하는 것이므로 주기적인 재검토 실익이 없어 일몰기한을 삭제

3. 국가보훈처

최병근 | 사무관(044)200-2441, cbk3095@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8건, 강화 1건 등 총 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모두 원안의결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5.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5.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6.1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	예비심사 (2012.11.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계	-	원안의결 9	신설 8 강화 1 *비중요 9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 1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규정
 - * (금융정보)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채권, 채무증서, 연금저축 등의 납입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 * (신용정보)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 (보험정보) 보험증권, 연금보험
-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는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법 14조의4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대해 금융회사등의 장은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을 포함해 제공의무
 - ☞ 법률 개정('12.7월 시행)으로 수급희망자 등의 금융정보제공동의 의무규정(법 14조의2, 법 22조, 법63조의 2)과 금융회사등의 금융정보제공 의무규정(법 14조의4, 법 22조, 법63조의2)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수급희망자의 생활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 14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범위*를 규정
 - * (금융정보)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채권, 채무증서, 연금저축 등의 납입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 * (신용정보)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 (보험정보) 보험증권, 연금보험
-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는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법 1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대해 금융회사등의 장은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을 포함해 제공의무

* i) 수급희망자 및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ii)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iii)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iv) 금융정보등의 내용

☞ 법률 제정('12.7월 시행)으로 수급희망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 의무 규정(법 14조, 법 29조 3항)과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제공 의무 규정(법 16조, 법 29조 3항)이 마련됨에 따라,

-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수급희망자의 생활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 및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안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신설)
 - (수익금 사용계획심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함
 - (회계감사)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
 - ☞ 수익금 사용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는 수익사업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 ☞ 본 개정안건은 '10. 10. 26 제167회 예비심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제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기처리되었으나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재추진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국가유공자 단체의 범위반 행위 및 결의에 대한 시정조치(안 제24조, 강화)
 - (현행)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 (개정) 위 조항 외에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가 그 사업을 불법·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각 단체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용도를 벗어난 수익금 사용과 사업을 불법·부당하게 운영할 때 각 단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10. 10. 26 제167회 예비심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제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기처리되었으나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재추진하는 안건

-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되는 법안의 재추진을 위한 입법과정의 효율화 방안」('02.5.8,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의제하여 원안의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 제공의무(신설)
 - ☞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을 위해 개인에 대한 정확한 재산·소득 등의 확인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보훈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법인에 대한 신고의무 및 시설기준 근거 마련(신설)
 - ☞ 보훈복지 시설이 설립목적에 벗어난 부당한 영리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운영현황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신고의무 및 시설기준 필요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국방부

현정주 | 사무관(Tel. 200-2447,jj0435@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1건, 강화 3건 등 총 1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 중 1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방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제304회 예비심사 (2012.4.26)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2. 국군포로의 송환 및대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21회 예비심사 (2012.6.29)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3. 군인연금법 개정안	제321회 예비심사 (2012.6.29)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4.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38회 예비심사 (2012.10.16)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5.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2	강화 2 * 비중요 2
6.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4)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 비중요 2
7. 지뢰제거업법 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6	신설 6 * 비중요 6
계	—	원안의결 14	신설 11 강화 3 * 비중요 14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신설)
- 시행령 제정안 제18조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준은 최근 1년이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300만원 이내) · 경감 가능
- ☞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과태료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자의 부담경감 및 사회적 비용발생을 사전예방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 제13조(주거지원)에 따라 귀환포로에게 지원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양도 · 저당권 설정을 제한
- ☞ 귀환포로에 대한 지원 · 보호 차원의 규제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 군인연금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 제26조 제2항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하하고, 현재 시행령(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보상금을 법(제31조)으로 이관하면서 공무원의 사망보상금은 폐지(신설)

- ☞ 법 개정이후 신규 임용 군인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70%에서 60%로 인하하는 것은 장래 군인연금재원의 부족을 고려하면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고, 공무외 사망보상금은 군인에 한정하지 않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방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측정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신설)
- ☞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기 설치의 필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신체진단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급여의 1/2을 정지하는 대상을 현행 상이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유족연금 지급대상자*(18세 이상의 폐질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강화)
-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또는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있는 경우로 한정)
-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적정 관리 및 일부 수급권자의 폐질상태 해소에 따른 부정 연금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진단을 불응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신체진단 결과 폐질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미지급한 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방부 장관(제23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각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강화)

- ☞ 군인연금(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공무상요양비)의 수급권자 최초 대상여부 확인 및 고령 연금수급권자의 생사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연금수급권자 관리를 위해 개인의 건강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6)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유족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61세 이전 혼인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이의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체방안인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강화)
- ☞ 유족연금 등의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61세 이전에 혼인한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불가피하고 실무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서류들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추가 규제비용은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유족연금 등 급여사유 발생시 연금액의 1/2을 감액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어 이를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신설)
- ☞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 제도 취지상 중과실에 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중과실 여부에 따라 급여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과실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판단을 지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현행 군부대에서 독점하고 있던 지뢰제거를 민간에게도 개방하면서 지뢰의 탐지부터 최종 처

리에 이르기까지 공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뢰제거업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 지뢰제거업 등록과 관련된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신설)

☞ 지뢰제거업은 전문적인 장비와 지뢰탐지 및 폭발물처리에 관한 전문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지뢰제거에 따른 국민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위험폭발물인 지뢰의 안전한 제거를 위해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뢰제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 지뢰제거시 허가절차, 도급, 하도급, 재해예방, 작업기록 보존 및 각종 보고·검사관련규정 등을 구체화(신설)

☞ 지뢰제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방부 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지뢰제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뢰제거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뢰제거업자의 지뢰제거 실적, 기술인력·장비의 보유 현황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에 따라 지뢰제거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지뢰제거업자는 전년도 지뢰제거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국방부 장관은 지뢰제거 작업의 부실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지뢰제거업자가 협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지뢰제거의 범위·방법과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시할 수 있음(신설)

☞ 동 규제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미미하며, 규제수준 또한 과도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위험폭발물인 지뢰의 안전한 제거를 위하여 교육 등 안전관리 조치의무를 지뢰제거업자에게 부여(신설)

☞ 지뢰제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안전관리 절차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지뢰제거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지뢰제거에 따르는 위

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격시험, 의무,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실무교육 등을 규정(신설)

☞ 지뢰제거사 자격제도의 초기정착과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자격,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지뢰제거기술협회에 대한 인가 등 관리·감독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뢰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차원에서 공제사업(회원 : 회원 분담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해외건설촉진법 등

11절 일반행정 분야

1. 행정안전부

서문수 | 사무관(044)200-2436, sun61@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승강기 검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등 13건의 법령에 대해 신설 33건, 강화 6건, 존속기한연장 9건 등 총 4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8건 중 10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38건은 원안의결하였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승강기 검사기준	제458회 행정사회분과위 (2012.1.26)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0회 행정사회분과위 (2012.3.9)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제295회 예비심사 (2012.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61회 행정사회분과위 (2012.3.3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11회 예비심사 (2012.5.21)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0회 예비심사 (2012.6.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회 예비심사 (2012.6.21)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8.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0회 예비심사 (2012.6.2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9.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2회 본위원회 (2012.5.18)	원안의결 5 개선권고 8	신설 13 *중요 11, 비중요 2
10. 전자서명법	제335회 예비심사 (2012.9.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6회 예비심사 (2012.1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46회 본위원회 (2012.12.17)	원안의결 7	신설 5, 강화 2 *비중요 7
13. 2012년 도래 일몰규제심사	제468회 행정사회분과위 (2012.8.17)	원안의결 9	존속기한 연장 9 *중요 9
계		개선권고 10 원안의결 38	존속기한연장 9 강화 6, 신설 33 *중요24, 비중요24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승강기 검사기준(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승강기 검사기준(舊 일본기준을 근간으로 제정)을 국제표준 기준인 유럽식 검사기준(EN)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강화)

현행 검사기준	개정안 검사기준
<p>〈각종 안전기능 및 안전장치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로프, 도르래의 규격, 안전울 등• 에스컬레이터 경사도, 속도, 스커트 가드의 강도 등• 비상정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의 설치 기준 등	<p>〈각종 안전장치 추가 등 유럽식 기준으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엘리베이터 도어 비상가이드(엘리베이터 문이탈로 인한 추락사고 방지)•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속도 감지장치(발판과 손잡이간 속도차이 감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브러시 등(발판 틈으로 신발 등 끼임 방지)• 정전사태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갇힘시 외부 유지업체로 자동으로 전화 연결되도록 인터폰 자동 외부연동장치 의 무화 등

☞ 현행 일본식 승강기 검사기준을 전 세계 80%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럽식 검사기준(EN : European Normalization)으로 변경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최근 아파트 및 업무용 건물의 고층화, 승강기 설치·이용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 승강기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도어 비상가이드 등 승강기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 보호 및 안전사고 최소화 필요성이 인정됨(원안동의)

(2) 지방재정법 시행령(신설 1)

■ 심사내용

- 현재 제1금융권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일부 제2금융권도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해 금고지정이 가능하도록 금고의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신설)

안정성 기준안	
– 자산총계 2,500억원 이상	– 자본총계 250억원 이상
– 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 10% 이상	–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3년 연속 흑자

☞ 제2금융권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진입을 허용한 것은 규제 완화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신흥·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파산금증으로 불안감이 상존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 지정요건으로 지방은행 설립기준 최저자본금과 제2금융권 자기자본비율을 일반은행 BIS 법적의무 비율(8%)보다 높은 10% 수준으로 적용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원안동의)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신설 1)

■ 심사내용

- 국가안전 및 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 기반보호시설 소관기관이 수립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요청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신설)

*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현황 : 186개(121 현재)

- 공공 : 121개(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시설 등)
- 민간 : 65개(KT 인터넷접속망, SK텔레콤 이동전화, 삼성SDS 인터넷전화서비스,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 현대아산병원 등 주요대학 병원정보시스템 등)
- ☞ 동 규제는 국가안전 및 국민생활안전에 중요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수립된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수준도 낮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2)

■ 심사내용

- 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요구시 일정금액(50만원) 이하의 채권금액, 과거 주소 변동사항, 병역사항의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강화)

☞ 현재 채권·채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50만원 이하인 경우 타인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소액의 금액까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비교할 때 편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이나 법인과 의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도 같은 수준으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사실 통지서, 독촉문 등을 발송하기 위한 채무자의 현 주소지 확보가 본질적인 요소임으로 과거 주소나 병역사항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도하며 제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2년)을 두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요구시 주민등록전산자

료 제공내용 및 요건을 강화(현 주소지만 제공)하고, 전산자료 이용·활용자에 대한 기관 지도·감독 범위 확대(전체 48개→63개 기관),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승인시 사전심사 강화(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신청도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절차를 강화(강화)

- ☞ 주민등록 전산자료는 그 정보의 특성상 유출량, 확산성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전산자료 제공 요건과 지도·감독 등을 엄격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내용 및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시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자료에 대한 사전심사시 심사기관의 업무부담이 있으므로 사전심사 승인시 1년 경과 후 재심사하도록 개선권고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5)

■ 심사내용

- 보행자전용길은 장애인용 의자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효폭을 확보하고 포장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투수성 포장을 도입할 수 있으며 각종 안내시설은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임(신설)
- ☞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내용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사업으로 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외), 공원, 유원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령에 추가하고자 한 것임(신설)
- ☞ 법 제20조에서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추가되는 사업은 법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사업으로 도로, 공원, 유원지 등 도시기반시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한 사업이 대부분임.
- ☞ 대규모 주거, 생활시설 조성, 역세권 개발 등은 교통량, 보행자 통행량의 대 폭 증가를 유발하므로 각종 도시개발 사업 시행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시기를 대상사업에 관한 계획의 승인·인가 등을 완료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20조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제출하는 사업은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신설)

- ☞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사업의 규모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분석, 개선대책 제출 대상규모의 50%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 제30조 제1항에서 보행자전용길에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신설)

- ☞ 차마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다른 입법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신설)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안

-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짧고 안전한 경로와 시야 확보, 경사지의 최소화, 계단, 연석 등의 적절한 제공
-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은 최소 2m를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 1.2m 이상은 확보하도록 함
- 미끄럼 저하성, 평탄성, 투·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출 것 등

- ☞ 시설의 설치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와 제38조를 준용한 것으로 공사 중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행안전기준을 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6)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신설 2)

■ 심사내용

- 소방방재청장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행정기관만 해당)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바,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이행내용 및 방법, 이행기간 등을 적시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임(신설)
- ☞ 동 규제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관계인의 인적사항, 이행내용·방법, 이행기간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행계획서 적시내용은 이행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필요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재난예보·경보 전달 등의 협조요청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 요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임(신설)

협조요청 기관	확대안
전기통신 사업자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 *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 포털업체 약 146개
신문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	－ 신문사업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반일간신문 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한정 *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332개, 인터넷 신문사업자 265개 정도임

-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한 재난 예·경보와 정보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설 5)

■ 심사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신설)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신청에 대해 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규제 내용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서 제출시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한 것임(신설)
 - ☞ 온라인상에서 본인 확인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 등은 보안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방법과 절차이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무인날인 후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신청서에 동의 사실을 기재하고 무

인날인 후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신설)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보안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승인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철회 및 중지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신설)

(철회 요건)

- － 민원인이 사망한 경우
- －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사유가 발생하여 국내거소신고표가 정리된 경우
-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이 중지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지 요건)

- －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 － 발급시스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에 신청한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된 경우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와 직결되므로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특정한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2011.9.30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발급기관 등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신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본인의 동의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발급시스템 운영·관리자에게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권한을 부여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8) 국가정보화기본법(신설 4)

■ 심사내용

- 인터넷중독 예방조치 및 이용자 인식제고 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부여 및 벌칙(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취득 및 부여기준 위반 등에 해당시 인증 취소, 인증을 받지 않은 유사 마크 등 표시자에 대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신설)
 - ☞ 동 심사안은 제18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으로 '11.9.7 규제개혁위원회심사(비중요규제)를 받은 법률안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학교,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교육의 실시 의무를 규정함(신설)
 - ☞ 동 심사안은 제18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으로 '11.9.7 규제개혁위원회심사(비중요규제)를 받은 법률안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로 인증 표시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신설)
 - ☞ 동 심사안은 제18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으로 '11.9.7 규제개혁위원회심사(비중요규제)를 받은 법률안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신설)
 - ☞ 동 심사안은 제18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폐기법안으로 '11.9.7 규제개혁위원회심사(비중요규제)를 받은 법률안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9)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신설 11)

■ 심사내용

-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사유가 없어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취소사항 규정(신설)

☞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발생시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납부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며 동 규제는 지방세기본법 제27조 및 국세기본법 제6조의2를 준용한 것으로 관련 부처·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징수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를 진행하지 않도록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 규정을 마련(신설)
 - ☞ 징수유예는 천재지변, 전쟁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이며,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기간도 권리행사를 위한 쟁송이 진행되는 기간이므로 지방세외수입의 채권유지를 위해 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필요하며 지방세외수입의 채권유지를 위해 소멸시효의 중단 이외의 대체수단이 없다는 점과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동 제도 도입은 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방세외수입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가산금(100분의 3에 상당)을 징수(신설)
 - ☞ 가산금 징수는 납부의무자가 납부 불이행을 했을 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금 성격의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조세, 과태료, 사용료 등 징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봄
지방세외수입도 조세에 준하는 채권·채무이므로 납부지연시 국세·지방세와 동일한 비율(3/100)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 체납된 세외수입을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최대 60개월까지)을 기존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도록 규정(신설)
 - ☞ 증가산금 징수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제도로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 축소와 납부시기에 따른 부담체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납금액에 대한 증가산금 징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지방세외수입은 대부분 사용료, 수수료, 임대수입 등 공법상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조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증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세·지방세 및 개별 법령(과태료 등)에 근거를 둔 증가산금을 제외한 사용료 등 공법상 계약관계의 지방세외수입 증가산금의 부과 규모를 낮추는 방향(예시 : 36/100)으로 개선권고
- 특별한 사유없이 지방세외수입의 납부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 인·허가 중지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과징금·강제금 등을 「1년, 3회,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기존 인·허가 정지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 근거를 마련(신설)
 - ☞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것은 이를 통해 납부를 강제하

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조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법 등에서 적용되고 있음.

제정안 제30조 제2항에서 허가 등을 받은 자가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에 한해 “허가 등의 정지”를 하는 것은 다른 세외수입과는 달리 개별법령에 부과근거를 두고 공법상 의무관계를 위반한 행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인·허가 제한은 가능하다고 봄

그러나 제정안 제30조 제1항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시 세외수입 과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신규허가 등을 중지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의 인·허가 정지 요건과 같이 법 제30조 제1항에서 신규 인·허가 제한시 규제의 대상과 요건(예시: 체납한 세목 관련 사업의 인·허가 요청 등)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 자치단체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해 필요시 공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신설)

☞ '10년 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61%(체납액 5조 5,000~원)로 국세(91%), 지방세(91.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이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정보 결여로 효과적인 징수가 곤란하였기 때문임.

지방세외수입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납부의무자의 재산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제정안 제31조 제1항에서 자료의 제공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요청에 따르도록 강제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므로 강제규정의 완화(예시: ~할 수 있다) 및 규제대상 범위(예시: 민간 신용정보회사 제외 등)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 신용정보회사 등의 장이 요구할 경우 지방세외수입 중 과태료, 과징금, 강제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지방세외수입의 자발적인 납부의식 확보 및 사회적 신용도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법과 상충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시 반영토록 하고 원안동의

- 지방세외수입의 고액상습 체납자(체납기간 1년 이상으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 체납자의 성명, 주소, 나이, 직업, 체납내용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하거나 인터넷, 관보 등에 게재하는 명단 공개제도 규정(신설)

☞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한 사실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로 공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

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나 개인의 명예·신용·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수단임.

현재 명단공개는 국세와 지방세의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하에 적용되고 있고 다수의 개별법령에서도 명단공표가 시행되고 있음.

제정안은 명단공개 대상의 세외수입 범위에 있어 법무부의 의견(질서관련 세외수입에 한정)을 수용·반영하였으나, 명단공개 요건이 국제·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명단 공개 요건을 강화(1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방향으로 개선권고

- 세외수입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 부터 대금을 받을 때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등 일정한 경우 세외수입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신설)

☞ 지방세외수입 납부의무자가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을 받을 경우와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채권확보를 위한 장치라고는 하나, 그 의무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세외수입 납부증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가 해야 하고 또 세외수입을 체납하면 대금지불을 중단하면 되므로 납부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체납사실은 국가·지자체가 확인하도록 개선권고

-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재산상황 등 변화로 징수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등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징수유예 취소사유 발생시 취소요건 등을 규정(신설)

☞ 징수유예는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특별한 사정(자연재해, 사업위기, 질병 등)이 납기개시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납부의무자의 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추후 원활한 세외수입의 납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납부의무자에게 징수유예 취소로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납부의무자의 귀책사유로서 보호할 이유가 없으며 징수유예 등의 취소요건은 다른 조세 관련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 지방세외수입을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다만, 지방세외수입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우선 보장)토록 규정(신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권을 실현하는 자주재원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국세·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기본법 제99조 등에서는 국세·지방세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징수토록 하면서도 임금채권 우선 변제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0조 등에서 사회보험료 우선징수 규정과 상충됨.

따라서, 지방세외수입 우선징수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세외수입 채권과 사회보험료간 우선 징수권 순위는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조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후 시행하도록 부대권고

-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외수입 징수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 지방세, 다른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금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 징수하도록 규정(신설)

☞ 체납처분비의 우선 징수는 체납처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납처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 징수하는 것으로 조세 관련 체납처분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조항으로 체납처분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체납처분비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가산금은 직접 체납처분비가 아니므로 제56조에서 가산금 부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등을 위해 필요시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고 조사에 필요시 관련자에게 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징수공무원에게 질문·검사권을 부여(신설)

☞ 납세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납할 경우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공무원에게 세무공무원과 같은 질문·검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상당부문은 임대료, 사용료 등 공법상 계약관계로 구성되어 세외수입 징수공무원에게 세무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제정안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납부의무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사람이나 거래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까지 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의무위반의 질서벌 성격에 한정하여서만 질문·검사권을 부여하고 제3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삭제하거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10) 전자서명법(신설 1)

■ 심사내용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신설)

☞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동 기간내에 공인인증업 무준칙의 성실 이행 확인, 정기점검 여부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한 것으로 일정기간 범위 내 지정갱신 미신청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인인증 기관의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 없 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설 1)

■ 심사내용

- 입찰참가자 등에 대해 금품·향응 및 담합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제」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청렴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및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기존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신설)

☞ 현재 자치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입찰과 계약과정에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렴서약제」를 시행중이나 법령상 관련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을 위반해도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 담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이를 강제하는 규범력 부여 필요
「청렴서약제」는 타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며, 동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후 19대 국회 재추진 법안으로 '10.12.22 규제위에서 심사(비중요)를 완료한 사안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5, 강화 2)

■ 심사내용

-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자본금·기술인력·제조설비·시험설비 등 등록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신설)

☞ 국회발의로 개정된 법률('12.2.22)에 의거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절차 및 업 종별 등록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 및 설치단계부터 등록 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고 등록된 제조·수입업체를 통한 안전한 승강기 설치 및 부품 유통을 유도할 필요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등록기준 및 절차는 승강 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승강기 제조·수입업에 대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보완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등 위반행위별 세부적인 행정처분 내용을 규정(신설)

☞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과 같이 등록에 필요한 절차·기준이 미비할 경우 보완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충족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완명령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적 규정이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처분내용도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12.2.2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하도급 허용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하는 것으로 하도급 허용범위를 총 유지관리 업무 중 50% 및 자체점검 업무 중 2/3 이하로 제한(신설)

☞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으로 인한 유지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업무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체점검 업무는 매월 진단을 통해 위험요소 발견 및 사고·고장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업무로 원도급자가 수행함이 바람직하나 정책변화를 감안, 우선 2/3 이하까지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동 개정안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안에서 규정한 50% 이하 하도급 허용기준은 2011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심의시 정부안으로 이미 확정된 내용('10.12월 규개위 심의, '11.3.22 국무회의 의결)이며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을 감안해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현행 별도의 구분이 없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4종*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력과 유지관리설비 등록기준*을 세분화 함(신설)

* 고속엘리베이터(분속 240m 초과), 중저속엘리베이터(분속 240m 이하), 유압식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유지관리업 등 4종

* 기술인력과 유지관리설비 등록기준

구 분	현 행	개정안
기술인력	승강기 100대 기준 5명 (보수책임인력 2명, 실무기술인력 3명 이상)	승강기 500대 기준 8명 (고급기술자 1명, 일반기술자 4명, 실무기술자 3명 이상)
유지관리설비	9종의 장비 1대 이상	관리업의 종류에 따라 7~13종의 설비 1대 이상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야간, 휴일 등에도 고장수리 또는 간힘 승객의 구조를 위해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야 하나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보수책임인력 과소로 인해 고장수리 또는 구조 출동 지연 사례 발생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신속한 A/S와 철저한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개정안은 승강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마련되었으며, 제도도입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해 1년 6개월 후에 시행토록 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된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승강기 종류에 따라 자체점검자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고속엘리베이터의 경우 자체점검자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첨단기술을 요하는 고속엘리베이터의 자체점검은 고급기술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유지관리기술자 자격요건도 등급을 세분화(고급기술자, 일반기술자, 실무기술자)하여 차등화* 함(강화)

* 고급기술자 : 자격요건(승강기 기사 7년, 산업기사 10년, 기능사 12년) 및 학력요건(학사 9년, 전문학사 12년, 공업계고등학교 15년) 필요
일반기술자·실무기술자 : 현행과 유사

☞ 승강기 자체점검업무는 승강기 정기검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활동이기 때문에 승강기 관리 주체가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승강기 자체점검자에 대해 엄격한 자격요건과 기술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바, 승강기 종류별로 자체점검 자격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승강기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기준안은 승강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마련되었으며 자격요건도 기존의 규정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고장 보고 범위에 기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사고·고장만 포함하였던 것에 휠체어리프트로 인한 사고·고장까지 추가함으로써 현실 반영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강화)

☞ 현재 승강기 관련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보고 대상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사고·고장만 보고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법상 승강기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고·고장 보고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법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업, 제조·수입업 등록에 관한 사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사무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강화)

☞ 승강기 안전관련정보의 종합관리, 검사기관 지정 및 자료제출·보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이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제도 신설 등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강기 제조·수입업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및 기술자 경력관리 및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대표자 및 기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규제내용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2012년 도래 일몰규제심사(존속기간 연장 9건)

■ 공인인증기관 지정(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

-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으로 기술능력(12인 이상의 전문가)과 재정능력(80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 지정기준을 정함(3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 ☞ 현재 금융·증권·온라인 상거래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적 거래가 보편화되어 있고 거래규모 등도 급증하고 있는 등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상거래 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의 기술·재정능력,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며, 영구적인 규제보다는 3년 일몰제를 존속시켜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규정 존치

■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등(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

- 공인인증서의 발급관리, 전자서명키 생성·저장·백업·파기 등 공인인증기관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규정(3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 ☞ 동 지침은 전자서명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위임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써 특별한 기술적 상황변화가 없는 한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영구적인 규제보다는 일몰제를 존속시켜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규정 존치

■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

- 정보시스템 감리업무 등록 요건으로 인력(5인 이상의 감리원) 및 자본(1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 설정(3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 ☞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감안 등록요건에 대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3년 일몰제는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규제보다는 3년 일몰제를 존속시켜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규정 존치

■ 도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

-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 공공기관 및 단체로 하

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생활필수품 운반 등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도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일정면적의 토지소유자, 공공기관, 농협 및 수협 등)을 규정(3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 ☞ 도서개발사업은 낙도 등 소외된 도서지역에 주거환경 및 주민 소득증대 사업, 도로·방파제·연도교 등 건립과 유지관리, 도선건조 등 주민의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현재 도서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로 인해 사업성이 없어 공공기관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익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일정요건 이상을 구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도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생활을 지원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며 영구적인 규제보다는 3년 일몰제를 존속시켜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규정 존치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조, 제9조)

- 일정 조건의 지역·장소·물건에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를 규정(3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제는 도시미관의 질적 향상과 공중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판단되어 규제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3년 일몰제는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규제보다는 3년 일몰제를 존속시켜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규정 존치

■ 옥외광고업 등록(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 옥외광고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옥외광고사 등 기술자격증 취득자 1인 이상)과 시설기준(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 등 등록요건 규정(3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 ☞ 사무실·작업장에 대한 면적 제한을 철폐하는 옥외광고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3년 일몰제는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규제보다는 3년 일몰제를 존속시켜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규정 존치

■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

- 옥외광고 사업자단체(현, 한국옥외광고협회)의 회원자격 요건을 옥외광고업 등록자 등으로 한정하고 단체의 업무범위 규정(3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 ☞ 옥외광고업 등록업자에게 단체 설립 및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공익적 사업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규제의 유지 필요성은 인정되나, 3년 일몰제는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규제보다는 3년 일몰제를 존속시켜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규정 존치

■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 굴착 허가(온천법 시행령 제13조)

-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 굴착 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토지굴착 동의서, 지적도 등 서류 제출 및 토지소유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서 유효기간(1년 이상) 등 규정(3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 ☞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 굴착허가 신청제도는 토지 굴착의 남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3년 일몰제는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규제보다는 3년 일몰제를 존속시켜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규정 존치

■ 온천의 이용 허가(온천법 시행령 제17조)

-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시 온천이용계획서, 수질검사서 등 첨부 서류와 양수량 등 이용허가 규정(3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 ☞ 온천수 이용에 따른 인체 유해여부 확인, 온천수 보존 및 절약을 위한 1일 이용허가량 설정 등 온천수의 적정한 이용·보존 관리를 위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3년 일몰제는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규제보다는 3년 일몰제를 존속시켜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규정 존치

2. 소방방재청

김하나 | 사무관(044)200-2446, hana88@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자연재해대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1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8건, 강화 27건 등 총 3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5건 중 원안의결 33,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건으로 의결하였음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제279회 예비심사 (2012.1.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제279회 예비심사 (2012.1.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제279회 예비심사 (2012.1.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제279회 예비심사 (2012.1.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제279회 예비심사 (2012.1.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01회 예비심사 (2012.4.1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제314회 예비심사 (2012.5.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제316회 예비심사 (2012.6.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24회 예비심사 (2012.7.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제325회 예비심사 (2012.7.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67회 예비심사 (2012.7.20)	원안의결 6 철회권고 1	신설 1, 강화 6 *중요 4, 비중요 3
12.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제329회 예비심사 (2012.8.2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334회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38회 예비심사 (2012.10.19)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1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40회 예비심사 (2012.11.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474회 분과위 (2012.11.08)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2회 예비심사 (2012.11.1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1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3회 예비심사 (2012.11.2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33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8 강화 27 *중요 5, 비중요 30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법률 제9조 제1항 / 강화)
 - 구성품중 음향경보·비상전원의 설치기준 강화(제4조 제7호, 제6조 제2항)
 - ※ 화재발생시 자동화재탐지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비상방송설비 등이 상호연결되어 동시 작동
 - 현행 건물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이었던 설치기준을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하여 화재특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 설치기준 강화

※ 29층 이하 건물은 현행과 동일

(현행)

- 음향경보 :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 비상전원 :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용량

(개정)

- 음향경보 :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우선 경보(5개층)
- 비상전원 :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 용량

☞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하여 각종 법령에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고층건물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시설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소방안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 30층 이상 건물 화재시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 상부층 화재경보가 지연 신속한 피난이 어려우므로 소방설치기준 강화 필요. 규제비용은 방송설비의 소프트웨어 변경등으로 가능하여 매우 미미(약 4만원)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적정.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법률 제9조 제1항 / 강화)

- 현행 건물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이었던 설치기준을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하여 화재특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 설치 기준 강화

※ 29층 이하 건물은 현행과 동일

(현행)

- 비상전원 : 20분 이상 유지
- 급수배관 : 각각의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겸용할 수 있음

(개정)

- 비상전원 : 30~49층 – 40분, 50 이상 – 60분이상 유지
- 급수배관 :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금지

☞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하여 각종 법령에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고층건물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시설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소방안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 30층 이상 건물 화재 시 지속적인 소화용수 확보 곤란, 거주자의 화재 인지 및 피난, 소방대의 활동여건의 제한 등 조기 대응이 불가하므로 30층 이상 건물에 대한 설치기준의 강화는 필요. 설치기준 강화로 규제비용이 증가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기준의 강화는 불가피하고, 또한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규제정도는 적정. 비중요규제로 판단

※ 부산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170여개 동시개방되어 조기 수원 고갈, 연결 송수관설비가 무력화

(3)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건물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이었던 설치기준을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하여 화재특성과 위험성등을 고려, 설치기준 강화

※ 29층 이하 건물은 현행과 동일

(현행)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비상전원 : 20분 이상 확보
- 옥상수조 : 조건에 따라 설치 면제 가능
- 펌프, 급수배관 : 각각의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겸용할 수 있음

(개정)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비상전원 : 30층~49층 40분, 50층 이상 60분
- 옥상수조 : 의무설치
- 펌프, 급수배관 : 스프링클러설비와는 겸용금지

☞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하여 각종 법령에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고층건물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시설 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소방안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 30층 이상 건물 화재 시 지속적인 소화용수 확보 곤란, 거주자의 화재 인지 및 피난, 소방대의 활동여건의 제한 등 조기 대응이 불가하므로 30층 이상 건물에 대한 설치기준의 강화는 필요. 설치기준 강화로 규제비용이 증가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기준의 강화는 불가피하고, 또한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규제정도는 적정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법률 제9조 제1항 / 강화)

- 현행 건물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이었던 설치기준을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하여 화재특성과 위험성등을 고려, 설치기준 강화.

(현행)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비상전원 : 20분 이상 확보
- 옥상수조 : 조건에 따라 설치 면제
- 펌프 · 급수배관 : 각각의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겸용할 수 있음
- 음향경보 :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개정)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비상전원 : 30~49층 - 40분, 50 이상 - 60분이상
- 옥상수조 : 의무설치
- 펌프 · 급수배관 : 전용설치
- 음향경보 :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 우선 경보(5개층)

☞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하여 각종 법령에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고층건물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시설 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소방안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 30층 이상 건물 화재시 지속적인 소화용수 확보 곤란, 거주자의 화재 인지 및 피난, 소방대의 활동여건의 제한 등 조기 대응이 불가하므로 30층 이상 건물에 대한 설치기준의 강화는 필요. 설치기준 강화로 규제비용이 증가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기준의 강화는 불가피하고, 또한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규제정도는 적정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법률 제9조 제1항 / 강화)

- 현행 건물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이었던 설치기준을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하여 화재특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 설치기준 강화

(현행)

- 음향경보 :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 비상전원 :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용량
- 감지기 : 건축물의 형상 및 용도에 따라 설치장소별 적응성 있는 감지기 자율 선택 설치

(개정)

- 음향경보 :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우선 경보(5개층)
- 비상전원 :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 용량
- 감지기 : 감지기의 설치 위치가 수신기에서 확인 가능한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설치

※ 아날로그형 감지기는 화재시 온도 및 연기의 변화량을 데이터화하여 작동하므로 화재발생장소를 정확히 표시, 초등대응 용이

- ☞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하여 각종 법령에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고층건물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시설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소방안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 30층 이상 건물 화재시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 상부층 화재경보가 지연되어 신속한 피난이 어렵고, 화재발생장소의 확인이 곤란하므로 초기대응이 불가, 소방설치기준 강화 필요, 설치기준 강화로 규제비용이 증가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기준의 강화는 불가피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규제정도는 적정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2조 / 강화)

-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시 대처요령 등을 영상물 상영·방송 등을 통해 안내 (법 12조 2항·16조 2항)

- ☞ 법률 개정('12.8월 시행)으로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항 안내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법 42조)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범위(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에서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유·도선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위반행위 유형 및 정도, 여타* 의무 위반사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보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과태료 100만원 부과 유사사례 :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유도선의 영업구역(시행령 제7조 / 강화)

- 법 8조 1항에 따른 유·도선 영업구역의 범위에 중간 기착지를 명확히 규정

- (현행) 사업 면허(신고)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영업구역에 중간 기착지가 있는 경우 명시토록 규정

- (개정) 면허·신고(변경 포함)시 중간 기착지가 있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규정

- 다만, 다른 사업자 등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운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은 중간 기착지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

- ☞ 사업자들은 영업이익을 위해 중간 기착지 지정의 유인이 많으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구역과 중복시 영업권분쟁을 야기. 현재는 사업 면허·신고(법률 3조 1항)시 영업구역 내 중간 기착지 유무만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중간 기착지 지정을 제지할 방안이 없어 논란이 지속. 영업구역과 관련한 중간 기착지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유·도선 사업자들의 영업권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간 기착지 허용 범위 확정 및 지정시 신고를 의무화하여 영업구역을 명확히 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판단됨.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추가 규제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재해복구사업 토지 등의 수용(강화)

- 시행청이 기존 재해복구사업뿐만 아니라 재해대책사업에서도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도 증가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사업 추진시에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재해대책사업은 우기(雨期) 전 등 사업의 적기추진이 중요하므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또는 무산되어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입법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 없음. 비중요규제로 판단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 확대(신설)
 - 지하 건축물의 설계·시공에 적용하는 수방기준*을 제정하도록 소방방재청장 등에 의무 부과
 - * 침수방지대책, 출입구 방지턱, 방수판, 배수펌프 설치 등
 - (현행) 지하도로, 지하광장, 공동구, 지하도상가,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변전소
 - (개정)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물 중 지표면 아래에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의 건축물도 추가(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제외)
 -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지하 건축물의 침수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해 일정 지역의 지하 건축물 설계 또는 시공할 때 적용해야 하는 방지턱, 방수판 등 수방기준을 제정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려는 것임. 동 규제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종합대책」(2011.12월) 후속조치로서 건축허가 및 협의 대상 건축물 중 침수위험지구 등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내의 건축물에 한해 적용되며, 신규 건축물 외 기존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9호)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축허가 등의 동의(법 제7조)
 - 행정기관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하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는 용도변경이 신고제에서 허가 또는 신고제로 전환('09.5.9)됨에 따라 소방시설을 사전체크하기 위함
 - ※ 현행 규정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 등
 - (개정) 상기 허가사항외에 용도변경의 허가 등을 추가
 - ☞ 18대 법안 폐지후 19대 재추진 법안으로서 2011.6.22. 비중요규제로 심사·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0)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실태점검(법 제41조의2, 제79조)
 - 대행자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및 대행자가 수행하는 방재안전대책 수립 실태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대행자 실태점검의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 준수사항', '대행자의 등록 취소'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 필요
 - ☞ 18대 법안 폐지 후 19대 재추진 법안으로서 2011.8.18. 비중요규제로 심사·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6)

■ 심사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등에 보조설비장치 설치 및 유지 의무(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 신설)

–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자동잠금해제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조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함

※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내용(안)

(설치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용 시설의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설비종류) 자동잠금해제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조설비 및 장치

☞ 옥상과 연결된 피난계단 등이 잠금장치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잠금해제장치 등 보조설비 설치유지 의무를 부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신규 건축물 외 기존 건축물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음

- 방염성능검사의 거짓시료 제출 금지 준수 의무 대상자 확대(법률 제13조 / 강화)

–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방염성능검사에서 거짓 시료를 제출하지 말아야 함

– (현행)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개정)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검사 신청은 방염처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능하나, 거짓시료 제출금지 의무는 방염처리업자에 게만 부과해 일반인이 거짓 시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 있음. 신청자 모두에게 거짓시료 제출금지 의무를 부과해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2011년 감사원 지적사항」 후속조치임. 따라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법률 제20조, 제41조 / 강화)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함. 기술인력 확보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층 또는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

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함.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및 인원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현재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종합방재실 설치와 3인 이상 상주 인력 배치 의무가 있으나, 30층 이상 49층 이하 고층건축물에는 방재실 및 상주 인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초대형건축물일수록 상시 출입자가 많고 소방안전관련 설비도 복잡하여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높이에 따라 다수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도 「전기사업법」등에서 유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보조자를 선임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의 우려가 있으나,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는 종합방재실 상주 인력 중 보조자를 선임하면 됨. 30~49층 건축물에도 대부분(97%) 자율적으로 방재실(평균 5.8명)을 운영 중에 있음. 보조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미미한 수준임. 따라서 동 규제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의 방화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법률 제25조 / 강화)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등을 할 때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하고 그 배치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현행)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개정) 배치기준 준수 의무와 그 현황 통보 및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함

☞ 내실 있는 소방시설점검을 위해서는 적절한 점검인력 배치가 필수적이고 배치현황에 대한 전수 확인을 통해 점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존 제도로는 관리업자에 대한 전수 확인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소방시설점검 실시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음. 관리업자가 여러 지역의 건물을 점검한 경우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별로 제출하고 소방특별조사도 소수의 시설에 한해 실시될 수밖에 없어 관리업자 및 점검결과 신뢰도에 대한 현황 파악이 곤란. 자체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11년, 총 508개)가 점검인력 배치현황을 통보하고 확인받는 데 필요한 부담이 일부 있으나,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므로 규제부담이 과도하지는 않음. 따라서 동 규제는 내실 있는 소방시설 점검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법률 제34조 / 강화)

– 공공기관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현행)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개정) 공공기관인 특정소방대상물 추가

☞ 동 규제는 점검 결과의 거짓 보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모든 소방대상물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신규 점검 외 기존 점검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따라서 비중요규제임

● 방염업 · 소방시설관리업 등 수수료(법률 제47조 / 강화)

– 자체점검 등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기 위해 배치현황을 통보하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그 확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함

※ 피규제대상 : 소방시설관리업 508개소(2012.1월 기준)

☞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 점검인력 배치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국가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에 따른 비용도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철회권고함

● 소방시설 유지 · 관리의무 등 과태료(법률 제53조 / 강화)

–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등 거짓 보고 및 허위 자료 제출한 자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추가함

–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점검인력 배치현황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관리업자,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제33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관리업자

※ 피규제대상 : 소방시설관리업 508개소(2012.1월 기준)

☞ 거짓 보고 및 허위 자료제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체점검 및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능력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에 따라서 비중요규제임

(12)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의 범위 확대(법 제5조)

– 현재는 대표자에게만 소방시설업 등록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임원까지로 확대

☞ 동 규제는 경영전반의 핵심관리자인 임원에게 그 지위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해 범법자 등이 소방시설업을 편법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 사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업체의 등록결격사유에 임원을 추가하였음.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원의 등록결격사유 확대를 개선권고함(2009.10.22)

●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사유 확대(법 제9조)

– 소방시설공사 관련 뇌물 수수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 마련

☞ 동 규제는 소방시설 설계 · 시공 · 감리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부실공사로 인한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 업종인 건설업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뇌물수수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제재 조항 신설을 권고함(2009.10.22)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불법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법 제10조)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기준에 위반된 때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 또는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18대 법안 폐지 후 19대 재추진 법안으로서 2011.6.9 중요규제로 심사 ·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안 제15조의2)

-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해야 할 소방시설에 경보설비*를 추가

* 초기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사실을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알려 신속히 대피하거나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는 소방시설(비상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 ☞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중요하므로 지진으로 인한 파손을 막기 위해 경보설비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경보설비의 내진설계 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는 크지 않으며 규제 대상도 신규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도 없으므로 규제 수준은 적정함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대상 확대(안 제19조, 제20조)

- 실내장식물과 커튼 등 물품을 불에 타지 않게 처리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육연구시설의 흡속소'(학교 운동부 흡속소)를 추가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사용해야 하는 방염 대상물품에는 '섬유류 · 합성수지류 소재의 소파 · 의자'를 추가함

※ 현황 통계 : (교육연구시설의 흡속소) 887개소, (다중이용업소) 191,871개소

- ☞ 방염처리는 화재 발생시 연소 속도를 지연시켜 조기 진압을 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화재 위험이 높은 데에는 방염처리가 필요함. 교육연구시설의 흡속소는 단체시설의 특성상 화재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방염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제9조 제3호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과 유사하게 방염처리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섬유류 등의 소파 · 의자도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므로 방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규제 대상도 신규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최근 화염사 각황전 화재사고에서 방염처리 덕분에 문화재의 소실을 막을 수 있었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안 제15조, 별표 5)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주택이 포함된 1,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요양병원, 600㎡ 이상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가함

- ☞ 간이스프링클러는 소화기보다 화재의 초기 진화효과가 뛰어나면서 스프링클러보다는 설치비용이 저렴하므로 다수가 출입하는 중간규모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근린생활 · 판매 · 주택 등이 포함된 1,000㎡이상 복합건축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만 1,000㎡ 인 건축물과 그 화재 위험도가 유사하므로 이와 동일하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고, 600㎡ 이상의 생활형 숙박시설도 중대형 규모로서 다수가 취사를 할 수 있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동 규제는 타당함. 그리고 요양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24시간 생활하므로 화재발생시 자력 탈출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타당함. 규제 대상도 신규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입법에

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없음. 따라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옥외탱크저장소 등의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를 추가(안 제6조 제2항)

- 50만 ℓ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 변경허가신청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이 실시하는 기술검토 대상에 고정식 포소화설비 등의 '소화설비'를 추가

- ☞ 위험물 탱크는 석유류 등 인화성 · 발화성 물질 저장소로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환경오염 등 그 파급력이 크므로 설치 · 변경시 전문가의 기술검토가 매우 중요함. 소화설비의 기술검토는 위험물 탱크의 구조 등과 연계해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최소 보름이상이 소요되므로 기술원에서 기존의 '기초 · 지반 및 본체' 검토회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규제대상은 신규 설치 · 변경 허가대상으로 최소화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화재배상 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안 제9조의3)

- 다중이용업주(18개업종, 19만 1,142개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i) 안전시설 유지 · 관리 의무 불이행, ii)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한 중요사항 고지의무 불이행

- ☞ '중요 질의사항 고지의무' 이행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하므로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거의 없음. 외국은 의무보험의 거부사유가 별도로 없고, 보험법의 일반원칙인 중요 사항 고지의무에 따라 계약 거부 · 해제 등을 결정. 따라서, 영업주의 안전시설 등 유지 · 관리에 대한 사항을 중요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영업주의 자율책임의식은 제고하면서 보험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판단됨. 만약 부당한 계약거부가 발생한다면, 'SPEED119민원처리'(08.7월 시행)절차에 따라 1일 이내 소방관서가 이를 처리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제9조의3 제1호(안전시설등 유지 · 관리의무불이행)는 삭제하고, 제9조의3 제2호의 중요사항 고지의무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선권고함

※ 부당한 거부임이 확인되면, 보험회사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됨(법 제2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임

** i)보험계약의 통지에 관한 사무, ii)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의 확인 등 사무

- ☞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계약의 통지,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사전확인, 책임보험전산망 구축·운영 관련 자료제출 등을 위해서 보험가입신청자의 동의 절차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3조)

- 방화문 폐쇄 등 안전시설 설치·유지 의무 불이행한 다중이용업주에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1회 : 50만, 2회 : 100만, 3회이상 : 200만)까지 과태료를 부과함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해 다중이용업주에는 가입지체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회사에는 계약만료 통지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 ☞ 방화문 폐쇄 등 안전시설 설치·유지 의무 불이행 위반횟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지체기간 등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한 것으로 일반적 과태료 부과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옥외탱크저장소 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의 기술검토 수수료(안 별표 25)
 - 50만ℓ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부과

* (통계) 50만 ℓ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4,596개소

** (수수료 추정액) 소화설비 약 30만원, 기초·지반 및 본체 약 148만원

- ☞ 옥외탱크저장소 등의 설치·변경허가에 필요한 기술검토는 소방서가 아닌, 특수법인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과 수익이 있는 옥외탱크저장소 등 설치자가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추가되는 수수료(건당, 100만ℓ ~ 300만ℓ 기준)는 약 28만원으로 위험물 탱크 설치자(약 42억 3,600만원/개당)에게 부담이 가는 수준은 아님. 규제대상은 신규 설치·변경 허가로 최소화하였고, 기획재정부와의 수수료 협의 결과 이견도 없었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따라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옥외탱크저장소 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 사업자가 지하탱크와 주유취급소의 ‘탱크 내부를 개조’하는 경우 등 변경허가 대상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함

※ 저장소 및 주유소 : 총 5만 2,720개(옥외탱크 2만 5,648, 지하탱크 1만 2,156, 주유소 1만 5,916)

- ☞ 옥외탱크저장소 등의 탱크 재질, 내부 등이 변하면 유류의 하중에 따라 탱크 뒤틀림 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변경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비중요규제임

● 주유취급소의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기준(안 별표 13)

- 주유취급소 내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와 충전 전용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면서 그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신설
-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환경부)을 기본으로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안전성과 주유소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전용 공지 보유 등 충전설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일반적 주유소의 설치기준에 비추어 특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비중요규제임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여야 할 영업장 확대(안 제10조)
 - 영업장 내부가 각각의 실(툼)로 구획된 경우 내부 통로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 2)을 적용해

야 하는 영업장을 ‘고시원’에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함

*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참고 1) : i) 폭은 최소 120cm이상, 다만 양 옆에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이면 최소 150cm이상, ii) 구획된 실에서부터 비상구까지 이르는 구조는 세 번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면 안됨

☞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은 출입문 폭과 성인 신체구조 등*을 감안해 여러 개의 실(룸)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올 때 피난 동선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요건임. 유흥주점 등 5개 업종은 밀폐된 실에서 음주, 노래반주, 비디오물 상영 등이 이뤄져 다른 곳보다 화재 대피가 지연될 우려가 더 크고, 고시원보다 화재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특히, 산후조리원의 산모와 신생아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대피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부 통로를 넓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규제대상은 신규 영업장이고, 다만 기존 영업장의 경우에는 내부구조를 변경할 때에만 개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소화하였음. 따라서 비중요규제임

* 출입문의 폭은 평균 75cm이상이고, 성인남자의 어깨 폭은 평균 60cm임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 · 해지 가능 사유(안 제14조의6)

– 다중이용업주(18개업종, 191,142개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이후, 영업 폐업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 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2013.2.23. 시행예정)

** i) 다중이용업을 폐업한 경우, ii) 다중이용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iii) 천재지변 · 사고 등으로 다중이용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iv) 보험료 미납, 보험회사 파산선고 등 「상법」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화재보험 계약은 다중이용업을 전제로 유지되므로 폐업, 업종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실질적 폐업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짐. 그리고 의무보험이더라도 「상법」 제650조(보험료 미납) 등에서처럼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게 정하는 것이 사적 계약관계를 존중하는 사회경제적 일반원칙에 부합함. 의무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도 계약 해제 사유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음. 따라서 비중요규제임

3. 경찰청

김하나 | 사무관(044)200-2446, hana88@pmo.go.kr

가. 2012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자격 및 자격장단속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2건 등 총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 중 원안의결 2, 부대권고 1, 개선권고 1건으로 의결하였음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자격 및 자격장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제272회 예비심사 (2012.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69회 분과위 (2012.9.3)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3.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469회 분과위 (2012.9.3)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2 부대권고 1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2 *중요 2 비중요 2

나. 2012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자격 및 자격장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자격장의 CCTV 설치기준(시행령 제2조 제4항(신설) / 신설)

- 법 제5조*에 의거 사격장의 CCTV 설치대상 및 설치장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설치대상) 화약총을 사용하는 클레이 · 라이플 · 권총 사격장과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리용 목적으로 하는 공기총 · 석궁사격장
- (설치장소) 사좌, 출입구, 총기 · 실탄저장소, 기타 허가관청 지정장소

* 법률 제5조 : 사격장 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12.25일시행)

☞ 화약으로 인한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격장 내부의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법 개정취지 인정. CCTV 설치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격장에 한정하고 있으며 설치 · 유지 비용도 크지 않아 규제수준은 적정.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09.11월 부산 ○○사격장 화재 사고로 16명 사상(死15, 傷1), ’06.10월 서울 ○○사격장에서 총기1정 절취, 은행강도에 이용함에 따라 내부 관제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

● 사격장설치자의 자체 안전점검 실시기준(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제3항(신설) / 신설)

- 법 제10조*에 의거 사격장 설치자의 안점점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의무대상) 실내 권총사격장 설치자에 한함
- (점검내용) 사로 등의 화약가루 잔류 여부나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설치
- (점검주기등) 월1회 이상 점검, 점검결과 1년간 보관

* 법률 제10조 : 사격장 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내 권총사격장은 밀폐된 장소에서 사격이 이루어져 미연소 화약가루가 누적되어 화재 가능성이 높고, 화재 발생시 피해가 심각한 상황. 특히 실내 권총사격장에서 연속된 화재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자체 안전점검은 필요한 조치임. 규제 대상이 전국 9개소에 불과하고, 점검에 별도의 인력 · 장비나 기술을 요하지 않고, 점검 결과의 기록관리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규제수준은 적정.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실내 권총사격장이 전국 12개소(現 9개소)에 불과함에도, ’06년 서울 ○○사격장, ’09년 부산 ○○사격장 등에서 화재사고로 17명 사망, 7명 부상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등(강화, 제91조 및 별표 28)

-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정지 및 정차 상태 포함)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에 대해 벌점을 신설

☞ 최근 운전 중 담배꽂초 투기 등으로 인한 사고*(뒤차량 화재 등)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현재 도로에 위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및 통행하는 차마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범칙금액이 적고 벌점 부여가 없어 교통사고 유발 위험도에 비해 제재수준이 낮아, 벌점(10점)을 신설은 타당. 다만,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청이 부과하는 범칙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부대권고함

* 앞차에서 버린 담배꽂초가 뒤따라오던 트럭의 짐칸에 떨어져 화재 발생 등

**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12.5.21.~5.24) 결과, 국민 1,000명 중 97.3%가 운전 중 담배꽂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 필요가 있다고 답변

(3) 도로교통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운전자의 준수 의무(강화, 제4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호의2)

-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운전중 금지사항을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에서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하고, 금지행위는 ‘시창’에서 ‘표시’로 확장하며 이동 중 화상표시장치 조작도 금지

* 자동차등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거나 휴대하여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인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노트북, 태블릿 PC 등

☞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DMB를 조작할 경우 운전자의 전방주시율(50.3%)이 만취 음주운전의 경우(72.0%)보다 낮아 더 위험하나 아직까지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 각종 영상물을 보는 게 현실임* 특히,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는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동 규제는 교통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유사사례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길 안내 목적 외의 화상표시장치 주시 및 조작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다만, 모든 영상물의 표시(지리안내 또는 교통정보 제외)와 화

상표시장치의 조작을 금지함에 따라 국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 허용사례를 마련할 필요. 휴대전화의 경우 운전 중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에 예외적 허용사례(안전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두고 있음. 따라서 전후방 카메라 영상물 등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허용 대상 및 행위를 법률에 규정하거나, 필요시 대통령령에 허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함

* 운전 중 영상 시청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12.7.18.~7.20) 결과, 운전자(700명) 중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300명)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

4. 법무부

최병근 | 사무관(044)200-2441, cbk3095@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비전문취업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일몰심사 등 2건에 대해 신설 3, 강화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원안의결하였음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 제정안	예비심사 (2012.4.0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 비전문취업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일몰심사	제468회행정사회분과위 (2012.8.27)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중요 1, 비중요 3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재산관리인 본인과 북한주민의 인적사항, 관리인 사임·변경, 재산 목록 및 변동사항* 등을 법무 장관에 신고(신설)

*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재산 현황, 변동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여, 다음 해 1,31까지 신고

– 법무부 장관은 신고사항에 대해 자료 보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입법취지인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보호·관리 및 해당 재산의 북한 유출 제한을 위해서는 재산관리인 및 북한주민의 인적사항(성별, 주소, 직업 등), 재산현황(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등) 및 변동사항(변동 내용, 사유)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 이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 신청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신설)

* 허가 대상 재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처분 내용, 처분 기간, 허가신청 사유 등

– 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가 기간 내 허가받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효력 상실

– 법무부 장관은 신고사항에 대해 자료 보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재산관리인의 배임행위를 감독하여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반출을 규제하기 위해, 법(제18조)에서 재산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고 허가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신설)

* 직접 사용·관리하려는 목적 및 필요성, 재산 종류, 수량 및 가액, 사용·관리 기간 등

– 법률에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조건 부과를 인정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의 내용*을 규정

* 직접 사용·관리하려는 목적이거나 사후 신고에 관련된 사항, 사용·관리시 준수사항 등

– 법률에서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설정을 인정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고시

*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 월 50만원 이하, 친족의 질병치료 및 기타 허가사유(주택수리비, 학업소요비용)의 경우 1회 50만원 이하 등

– 법무부 장관은 신고사항에 대해 자료 보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남한 내 재산이 무제한으로 유출되어 북한 당국에 의해 군사적으로 전용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생계 유지나 질병치료와 같이 인도적 차원에서만 유출을 허가하도록 하기 위해

– 법(제 19조)에서 북한주민이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 및 불허사유의 추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허가시 부과조건의 내용, 허가 재산의 범위 등은 무제한 유출을 방지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반출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판단됨

– 인도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허가의 경우 ‘(법률)생계, 질병치료’에서 ‘(시행령)거주지, 학업’ 등으로까지 반출 이유를 확대했고, 불허 사유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며, 허가 취소의 경우 불허 사유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권리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음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비전문취업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일몰심사(강화 1)

■ 심사내용

-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발생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인원 수를 비전문취업자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하는 일몰규제(3년) 폐지여부 검토(강화)

☞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불법체류 및 무단이탈 등 체류외국인의 질서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

5. 국무총리실

홍성애 | 사무관(044)200-2399, hong@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2건의 법령에 대해 신설 8건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 중 3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5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음

[국무총리실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291회 본위원회 (2012.9.27)	개선권고 2 원안의결 4	신설 6 *중요3, 비중요 3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472회 행정사회분과위 (2012.10.1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신설 8 *중요4, 비중요4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신설6)

■ 심사내용

〈배출권의 할당〉

- (할당기준) 할당대상업체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해당 업종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기준으로 함

- (무상할당 비율)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은 1차 계획기간(15년~17년)은 100% 2차 계획기간(18년~20년)은 97%, 3차 계획기간 이후는 90%이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함
- (민감업종 선정기준)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인 업종은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함

☞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법률 내용을 시행령에 다시 구체화한 기술적인 규정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 중 2차 계획기간의 3% 유상할당 부담이 과도한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 고려, 거래시장의 가격지표 기능 제시, 향후 유상할당제 본격도입에 대비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경험축적, 외국사례, 민감업종으로 인한 부담유예·조기감축실적·상쇄·차입 등의 규제완화조치 등을 감안할 때 2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3% 유할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민감업종 선정기준은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 유상구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규제유예 제도에 관한 규정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배출권 예비분의 배분〉

- (조기감축실적 인정) 조기감축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를 정함
 - － 인정대상 : 목표관리제에서 의무량 초과 감축분, 목표관리제 적용 이전 자발적 감축실적 중 목표관리제 미반영분
 - － 인정비율 :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할당된 총 배출권 수량의 3% 범위 내
- (배출권 추가할당)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 배출량 증가분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할당,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배출량이 30%이상 증가한 경우 배출량 증가분의 50%를 추가할당

☞ 조기감축실적 인정과 배출권 추가할당은 일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완화적 제도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배출권 거래에 관한 규제〉

- (배출권 거래 시장참여자 제한) 배출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권등록부에 계정을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인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참가가 허용된 외국 법인 또는 개인만 거래시장 참가가 가능하며, 1·2차 계획기간 중에는 할당대

상업체, 정책금융기간만 거래를 허용함

● (배출권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 시장안정화조치 발동기준 및 조치방법을 규정함

– 발동기준 ①배출권가격이 6개월 연속 직전 2개 연도의 평균가격보다 3배이상 높게 형성된 경우, ②최근 1개월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배출권 가격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③최근 1개월 동안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평균가격보다 60%이상 낮은 경우

– 조치방법 ①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 설정, ②차입한도의 확대·축소 또는 이월한도의 제한, ③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 ④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매매가격 설정

☞ 배출권거래시장 참여자 제한은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한 조치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시장안정화 조치방법 중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이월한도의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과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좌절시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권고

〈배출량 인증〉

● (배출량의 보고·검증)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주요 생산시설·공정별 연료 및 원료소비량, 제품생산량,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검증기관에 대한 규제)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는 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을 규정함

– (지정기준) 인적, 물적 능력을 갖추고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관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나 제한) 거짓,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 검증기관이 동일한 관리업체를 3년 연속 검증한 경우 다음 3년간 해당업체를 검증할 수 없도록 함

● (배출량의 직권 인증) 할당대상업체가 배출량 미 보고시 주무관청이 배출량을 10%~20% 가산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배출량의 보고·검증은 현재 목표관리제하에서 제출하고 있는 명세서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으로 할당대상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검증기관에 대한 규제 중 업무정지나 제한, 동일업체 3년 연속 검증 시 다음 3년간 해당업체 검증금지, 할당대상업체의 검증기관 선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삭제권고
배출량 가산인증은 사실상 의무부담을 추가한 벌칙적 성격의 규제로 법률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이중벌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삭제권고

〈배출권 제출의 유형〉

● (차입) 배출권 차입의 사유 및 한도를 규정함

– 사유 :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 수량이 부족한 경우

– 한도 :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 (상쇄) 상쇄의 배출권 전환기준 및 한도를 규정함

– 전환기준 : 온실가스 감축량 1톤을 1배출권으로 전환

– 제출한도 :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해외상쇄는 5%를 넘을 수 없고 1·2차 기간에는 해외상쇄 불인정

☞ 차입 및 상쇄제도는 할당된 배출권 이외의 의무이행수단을 인정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완화 성격의 조치로 보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과징금〉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가산금을 규정함

– 부과기준 :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 징수

☞ 과징금은 제도 이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할당대상업체의 의무이행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3배의 과징금을 부담할 상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관리업체가 기존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증설 미이행, 인수·합병·분할하는 경우 수정 목표 부여
-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실적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
- 신규 관리업체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관장기관에게 제출
 - ☞ 관리업체의 목표수정, 시설 신·증설에 따른 실적 제출, 신규지정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은 목표관리제 운영상 필요한 내용으로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검증기관은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근거 마련
 - 지정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허위 또는 고위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
 - 1년 이내의 사업정지나 제한 : 중과실, 인적·물적능력 요건 미달기관
- 동일업체에 대한 3년 연속 검증시, 향후 3년간 해당업체에 대한 검증금지
 - ☞ 검증기관의 사업정지나 제한요건 및 동일업체 연속검증 제한은 벌칙적 성격의 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권고

6. 국가인권위원회

나민희 | 사무관(044)200-2442, iammini@pmo.go.kr

가.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등 1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규제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인권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2.9.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는 ‘다수인 보호시설’의 범위 확대(강화)
 - 「아동복지법」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로 추가함에 따라 이를 다수인 보호시설에 반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기 포함되어 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새롭게 추가
 - ☞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및 권리구제가 필요하고, 피규제집단의 부담에 비해 피해자 권리 구제, 시설의 공공성 확보 등의 편익이 크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04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제1절 규제일몰제

1. 규제일몰제 개요
2. 기존 규제일몰제 운영의 문제점
3. 규제일몰제 도입 확대

제2절 규제정보화 추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2. 규제정보화 사업 내용
3. 향후 추진계획

제3절 행정조사 정비

1. 행정조사 개요
2. 행정조사 정비원칙
3. '12년도 행정조사 운영 및 정비실적
4.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자료 감축 사업

제4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1. 개관
2. OECD 국제회의 참석
3. APEC 국제회의 참석
4. 규제개혁 경험전수

1절 | 규제일몰제

김유일 | 사무관(044)200-2409, enogengi@pmo.go.kr

1. 규제일몰제 개요

일몰제(sunset law or sunset legislation)는 법률이나 예산 등에 폐지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승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종결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영역에 대한 일몰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각의 규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존속기한을 미리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근본적으로 규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일몰제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양을 줄이고, 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존속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존속 필요성을 검토해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기존 규제일몰제 운영의 문제점

기존의 효력상실행 일몰제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법령이 영속을 전제로 만들어져 존

속기한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방안이 없는 한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일몰 설정이 어려웠던 규제에 대해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따라 일몰 설정 여부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일몰제를 적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규제일몰제 유형]

구 분	효력상실행 일몰제	재검토행 일몰제
내 용	- 일몰기한 도래시 효력을 상실 - 기한 연장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 필요	- 일몰기한 도래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개선 등을 재설계 - 재검토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입법조치 불 필요

3. 규제일몰제 도입 확대

규제일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보다 더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재검토행 일몰제’다. 재검토행 일몰제는 기존의 ‘효력상실행 일몰제’와 달리 존속기간이 끝나면 규제의 적정성과 존속 여부를 검토하는 새로운 일몰제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일몰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민간 건의를 수렴하여 시범적으로 201건의 규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검토행 일몰제”를 적용하였다. 재검토행 일몰제를 적용한 주요 사례로서 ‘무선통신사업의 연도별 출연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4년간의 존속기한을 부여하였다.

이어 국무총리실에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본격적으로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추진하였다. 우선 1단계로 7,000여건의 전체 규제 중에서 2,200여건의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 규제일몰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규제일몰제 검토대상 총 2,200여건 중에서, 14건은 ‘효력상실행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고, 544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행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였다. 일몰주기로 볼 때, 총 일몰적용대상 규제 558건 중에서 3년 주기가 516건, 5년 주기가 30건, 기타 주기가 12건이었다. ‘재검토행 일몰제’를 적용한 주요 사례로서, ‘정보통신공사의 도급계약 분리 규제’는 5년의 일몰을 부여하고, ‘전기공사업의 등록’에 대해서는 3년간의 존속기한을 부여하였다.

[1단계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 결과]

구분 계	일몰 유형		일몰 주기		
	효력상실형	재검토행	3년	5년	기타
558건	14건(2.5%)	544건(97.5%)	516건(92.5%)	30건(5.4%)	12건(2.1%)

2009년 11월 1단계 규제일몰제 확대를 추진하고, 그 다음조치로서 2010년 6월 2단계 규제일몰제 확대를 추가로 검토하였다. 검토대상으로는 사회·행정적 규제 등 4,700여건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83건에 대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고, 990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행 일몰제’를 적용하였다.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작업단계는 2009년 11월 작업과 유사하게, 먼저 관계부처에서 ‘효력상실형 일몰제’ 또는 ‘재검토행 일몰제’를 검토토록 하였고, 국무총리실에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다.

두 번의(2009년11월, 2010년6월) 규제일몰제 적용 검토를 통하여, 전체 규제에 대한 일몰설정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7,000여건의 전체 규제 중에서 1,600여건(23%)에 대한 일몰설정이 이루어졌다.

[2단계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 결과]

구분 계	일몰 유형		일몰 주기		
	효력상실형	재검토행	3년	5년	기타
1,044건	66건(6.3%)	978건(93.7%)	885건(84.8%)	96건(9.2%)	63건(6.0%)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가능해져 규제의 현실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몰 대상 규제는 관보에 고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이후 규제일몰제 적용건수와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규제일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2012년 규제일몰제 적용 현황]

연도	심사규제건수(A)	일몰제 적용건수(B)	재검토행 적용건수	효력상실형 적용건수	비율(%) (B/A)*100
2010	1086	128	112	16	8.34
2011	1304	134	128	6	9.73
2012	1662	157	143	14	10.59

2절 | 규제정보화 추진

안창민 | 사무관(044)200-2406, cmahn@pm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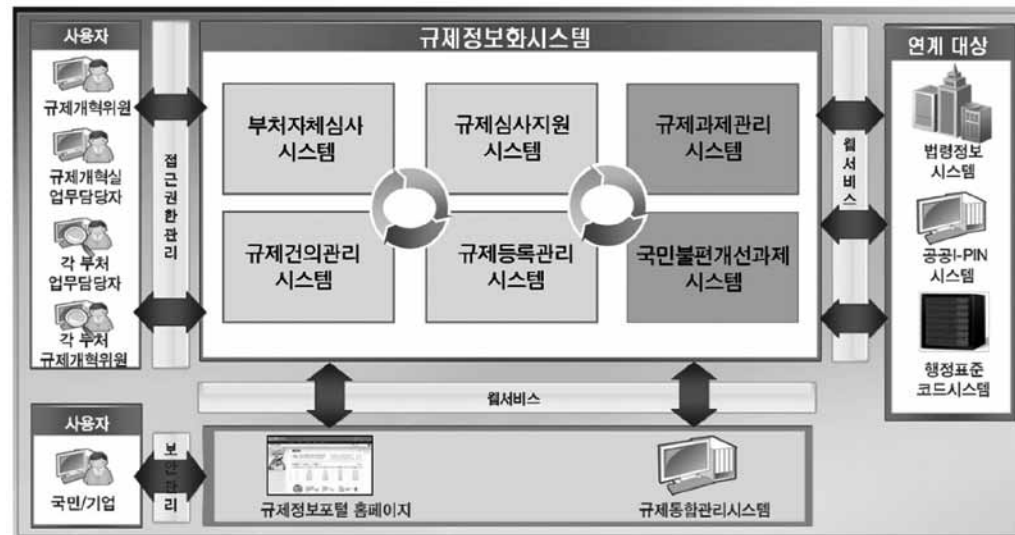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경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국정 의 주요 아젠다로 관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규제와 관련된 정보나 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필요한 규제 정보의 검색도 어려워, 규제관련정보관리와 규제등록관리, 규제심사 등 규제개혁 업무에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08.3월 규제개혁차관회의시 국무총리실에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결정되어 국무총리실은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08.4)하고, ISP사업발주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08.7~11)

이렇게 수립된 규제정보화 추진전략을 토대로 '0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09년에는 1단계 사업(2~8월)으로 ▲규제심사지원시스템 ▲규제등록관리시스템 ▲규제과제관리시스템 등 기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0년에는 2단계 사업(4~10월)으로 ▲부처자체심사시스템 구축 ▲규제건의관리시스템 구축 ▲규제정보포털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년에는 3단계 사업(3~9월)으로 ▲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 확대 ▲국민생활불편개선과제시스템을 마련하였고, '12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등록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규제정보화 사업 내용



(1) 부처자체심사시스템 구축

부처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검토, 상정, 심의 등 부처자체심사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기관별 상이하게 운영되는 자체심사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양식의 표준화를 통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지원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였다.

(2) 규제심사지원시스템 구축

부처자체심사를 걸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분과위/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규제의 정합성을 심사하여 규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규제심사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전산화하여 규제심사관련 자료와 심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난 심사정보 검색이 용이하고 관련 통계자료 제공 등으로 효율적인 심사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규제등록관리시스템 구축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규제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의 생성·변동·소멸과정 등 규제에 관한 정보를 DB화하고, 이를 검색어 입력을 통해 규제내용, 규제심사결과, 규제성격 등 다양한 검색 항목 제공과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규제에 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부수규제관리 기능을 구현하고, 존속기한이 미설정된 규제, 등록이 누락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단계부터 절차별로 규제를 관리하도록 하여 규제등록 변경사항 및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4) 규제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매년 부처에서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따라 발굴하여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 경제5단체 건의과제 등 각종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등 과제의 종류별, 완료 시기별 등으로 실적관리, 이행상태 점검, 과제관련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관리를 규제 등록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규제건의관리시스템 구축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온라인 규제건의와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접수된 오프라인 규제건의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건의된 규제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을 휴대폰과 메일 등으로 알려줌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관련한 규제건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한 대국민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였다.

(6) 국민불편개선과제시스템 구축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선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제별 부처의 추진상황을 규제정보포털과 연계하여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개선과제에 대한 부처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며, 개선과제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7) 규제정보포털시스템 구축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규제정보포털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에게 좀 더 다양한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규제관련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의 규제등록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업종별·분야별로 분류하여 보여주는 “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주 1회 규제관련 최신정보를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8) 규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령 제·개정을 통한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자치법규도 이에 맞춰 제때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규제등록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앙부처는 소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의 정비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3.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규제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통해 규제개혁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좀 더 다양한 규제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3절 | 행정조사 정비

우세윤 | 사무관(044)200-2445, woosey@pmo.go.kr

1. 행정조사 개요

(1) 행정조사의 개념(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을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국가안전보장, 국방, 조세, 형사, 근로감독, 금융감독, 공정거래 조사 등은 동법의 적용을 제외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등)

-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조사권 남용을 금지
-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자 선정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
- 법률근거 없이 행정조사 내용 공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법률근거 없이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행정조사 정보의 이용 및 타인 제공 금지
-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주기는 정기조사가 원칙
- 출석·진술 요구서, 보고·자료제출 요구서 및 현장출입 조사서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2. 행정조사 정비원칙

(1)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만 존치시키고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행정조사 폐지

(2) 행정조사기준 완화

- 행정조사 대상 업종별 성수기 등을 피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행정조사의 횟수, 주기 등을 완화·조정
-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
- 기술발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 현장조사 및 서면에 의한 조사 등을 on-line 등에 의한 조사로 전환하는 등 조사방법 개선

(3) 공동조사 대상 발굴 및 실시

- 기업 및 사업자 단체·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조사 대상이 되는 행정조사 자체 발굴
- 동일·유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간 공동조사 실시

(4) 자율관리체제로의 전환

행정조사 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조사·신고하면, 이를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

정하여 주는 기업의 행정조사 자율준수 program의 도입을 확대·활성화

(5) 행정조사 근거법령의 정비

- 행정조사의 근거가 원칙적으로 법령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상의 명확한 위임 없이 자의적, 편의적인 지침·계획 등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금지
- 개별 행정조사의 근거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

3. '12년도 행정조사 운영 및 정비실적

'12년도에는 24개 부처에서 총 405건의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형별로 현장조사 266건(66%), 보고·자료제출 125건(31%), 시료채취 13건(3%), 출석·진술요구 1건(0.2%)이고, 부처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91건, 환경부 66건, 통계청 35건, 식품의약품안전청 35건, 국토해양부 26건, 관세청 14건, 지식경제부 15건, 보건복지부 14건 등이며, 이 중 141건의 행정조사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24건(87.9%)을 정비완료하였다.

4.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자료 감축 사업

(1) 추진배경

행정기관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자료 제출 요구 등은 행정비용을 상승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기업과의 접촉이 빈번하고, 자료요구가 많은 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자료 감축을 추진하여 행정부담 경감 도모

* (선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2) 감축원칙

- 업무 미활용, 법령 근거 부존재, 최근 2년간 요구 실적이 없는 경우 자료제출 폐지
- 제출 범위 및 횟수를 최소화하고, 제출내역을 쉽고 간소하게 요구
- 법령상 ‘필요한 경우’ 등 자의적인 사유/내역의 구체화
- 부처간, 부처 내 중복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행정정보 공동 활용

(3) 행정자료 감축 현황(총 122건)

- 자료제출 대상 완화,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 완화(64건)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시 독성 없음이 이미 확인된 원료에 대해서는 독성시험자료 면제, 파견검역 지정검역물 합격품은 반출시 반출신청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파견검역관에게 구두로 반출참관 요청 등
- 자료제출 사유 및 내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제출요구 지양 및 예측가능성 제고(22건)
 - 개발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과 운영실태 자료제출 기준’ 제정으로 영업자가 제출하는 행정자료의 범위 및 내용 구체화 등
- 자료제출 주기 및 횟수를 완화하고, 온라인 제출시스템 활용 등으로 제출 수단을 다양화하여 자료제출의 편의성 제고(23건)
 -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 주기를 매월에서 분기별로 개선, 국외 검사기관 인정·변경 신청시 별도의 인쇄본 없이 전산화된 파일(CD 등)의 제출 허용 등
- 현장조사계획 사전 통보,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 기업의 행정부담 최소화(13건)
 -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경우 필요시 검사에서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여부 확인기간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 등

4절 | 규제개혁 국제협력

김유일 사무관(044)200-2409, enogengi@pmo.go.kr

1. 개관

규제개혁 국제협력의 가장 큰 부분은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의 현황과 추진성과를 정확히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외에 APEC 경제위원회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타 국제회의 참석과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경험전수 등의 대외협력 업무가 있다.

OECD 회의와 관련하여 규제정책위원회(12.4월, 11월) 및 OECD 규제성과측정 워크숍(12.6월)에 참석하였으며, 그 외에 APEC 규제수렴 워크숍(12.2월)에도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 소개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관련 대외협력도 강화하여, KDI·생산성 본부 등과 연계하여 3개국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체계 및 전략 등을 설명하였다.

2. OECD 국제회의 참석

가.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12년.4월.11~12일, 프랑스 파리)

'12년.4월.11~12일까지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을 논의하고, OECD 회원국의 규제성과 측정체계 개발, 러시아 OECD 가입심사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 OECD 사무국은 규제정책위원회에서 2012~2014년간 새로운 논의주제로 “성장을 위한 규제 정책”을 제시하였다.
- 사무국은 규제정책과 성장의 상관관계 규명을 통해 규제가 경제성장 및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하고, 회원국들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규제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 우리나라 대표단은 2009년에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한 결과 경제위기를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였다.

(2) OECD 회원국의 규제성과 측정체계 개발

- OECD 사무국이 제시한 규제성과 측정체계 초안을 캐나다 및 네덜란드에서 시범적용해 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회원국은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규제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참가국은 규제성과의 양적 측정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사무국은 동 작업이 회원국의 규제성과 비교가 아닌 성과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2012.6월 베를린 성과측정 워크숍에서 재논의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3) 러시아 OECD 가입심사 : 공공관리부문 심사

- 공공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러시아 공공관리부문 OECD 가입심사가 진행되었으며, 러시아는 대체적으로 볼 때 2011.4월 각국이 권고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 다만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법치주의 및 청렴성 등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 회원국은 공공관리 부문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투명성 증진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노력, 부패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제시하였다.

나. OECD 규제성과측정 워크숍(Developing A Framework for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in OECD Countries, '12년.6월.11~12일, 독일 베를린)

'12년.6월.11~12일까지 개최된 OECD 규제성과측정 워크숍에 참석하여 규제지출 통제전략 및 규제와 경제성장 · 복지증진간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규제지출(regulatory expenditure) 통제전략에 대한 논의

- OECD 사무국은 '11년.11월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에서 논의했던 규제지출 원칙 관련 개념을 재소개하고, 각국은 OECD에서 제시한 규제지출 원칙이 규제비용 절감 전략수립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 한국은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기회복시까지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 철회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 캐나다는 2010년부터 형식주의적 절차 감소를 위한 위원회(Red Tape Reduction Commission)를 운영하면서, 절차 간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One-for-One’ 원칙* 마련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다른 측면에서 행정부담을 감축시켜야 하고,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존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영국은 기업이나 시민사회에 영향이 없는 규제, EU 규제, 국제협약, 조세, 수수료나 벌금과 관련된 사항 등은 제외하고 'one in one out' 원칙을 적용하였다.

(2) 규제와 경제성장·복지증진간 상관관계 분석

- 회원국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서는 정책 초기단계에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최근 각국에서 활용 중인 규제개혁 전략을 공유하였다.

- 미국은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review)*, 공공제안(public suggest)** 등을 운영중이며, 매 반기마다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 규제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다.

*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점검·평가하여 규제 폐지여부를 결정

** 규제 수정시 반드시 대중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제도

- 영국은 ①최소한의 규제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②강한 기업규제통제를 통한 신뢰제고, ③경제적 편익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략을 통해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였다.

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12년.11월.19~20일, 프랑스 파리)

'12년.11월.19~20일까지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을 논의하고, OECD와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 OECD 사무국은 12~14년간 논의주제로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을 제시하고, '12.4월 '위기사 성장 친화적 규제도구 활용 현황'에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책도구의 향상방안'을 논의하였다.
- 사무국은 경제성장과 포괄성(Inclusiveness, 복지/불평등 해소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여, 양자간 상관관계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가별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 대표단은 '09년 한시적 규제유예, '12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 및 '공공 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등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정책 추진사례로 소개하였다.

- 또한 대표단은 건강하고 역량있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세대간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홍보·설명회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 OECD와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방안

- OECD 규제정책위원회를 운영·관리하는 공공행정국장(Rolf Alter)과의 면담('12.11.21)을 통해, OECD와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Alter는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 및 최근 실시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며, 사례발표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규제정책과 거버넌스 관련 OECD 권고안」이행상황 평가('13~'14년), 국가별 규제개혁 평가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 대표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OECD와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실무급에서도 밀접히 상호 접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3. APEC 국제회의 참석

가. APEC 규제수렴 워크숍('12.2.10~13, 러시아 모스크바)

'12.2.10~13 개최된 APEC 규제수렴 워크숍에서 주요 회원국들이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고, 규제 관련 국제협력 방안 및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APEC 주요 회원국의 규제개혁 사례 발표

- 한국 대표단은 규제개혁 추진배경 및 체계를 설명하고, 규제개혁의 주요전략 및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였다.

- 핵심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였다.
- 대표단은 ①규제법정주의, ②규제등록, ③규제심사(규제영향분석), ④기존규제 정비(전략과제), ⑤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⑥규제개혁평가(만족도 조사) 등 6가지 전략을 통하여 기업친화적·민생친화적(Business-friendly & Life-friendly)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또한, 국내 규제 프레임 개선사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농수산물 가격명령제도' 철회사례를, 국제 규제 프레임 개선사례로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omatic Economic Operator) 도입사례를 소개하였다.
-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기술규제(technical regulation) 통합사례를 소개하면서, 법 기반 마련 및 규제적용, 협약 준수여부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 점진적 규제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호주는 완벽한 국가경제(Seamless National Economy) 구축에 있어서 규제가 기업운영이나 투자결정, 순응비용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2) 규제 관련 국제협력 방안 논의

- APEC 회원국간 무역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 국제협력의 내실화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ABAC은 규제는 경제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므로,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수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 미국은 국제 규제협력이 부당한 무역장벽을 규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간 APEC에서 논의해 온 모범규제관행*은 자국의 규제성과를 개선할 뿐 아니라 규제협력을 증진시켜 개방적·경쟁적·역동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것임을 주장하였다.
- * 규제의 국내조정(Internal Coordination of Regulatory Work),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Mechanisms)

(3)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내실화 방안

- 호주는 규제영향분석(RIA)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PEC에서 'RIA 목적, 모범규제 원칙, RIA 구성요소, RIA 예시, RIA 연습'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RIA를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 RIA 교육과정(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담당기관의 역할 정비, 이해관계 규명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규제개혁 경험전수

KDI·생산성 본부 등과 연계하여 3개국(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목표·추진체계·주요사례 등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12년.10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차원의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 관련 정책자문을 제공하였다.

05

제5장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2년 규제개혁평가

1. 규제개혁평가 개요
2. 2012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3. 부문별 평가결과

제2절 외부전문가 평가

1. 등록규제 DB를 이용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

제3절 2013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1.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2. 중점 추진분야

1절 | 2012년 규제개혁평가

신지성 | 사무관(044)200-2398, ooo2879@pmo.go.kr

1. 규제개혁평가 개요

매년 자율적, 적극적, 효과적인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을 유도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몇 건 개선했나'보다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평가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평가대상은 28개 중앙행정기관의 1년간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부 단위(17개)와 청 단위(11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28개 중앙행정기관 중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통계청과 병무청 등 9개 기관과 사회·경제적 여건상 규제개혁이 어려운 통일부 등 3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평가항목은 계획/집행/성파로 크게 나누어, 규제개혁 분야의 적절성, 추진의 적극성, 개혁과제 이행률 및 이행효과, 고객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계획과 집행보다는 규제개혁의 효과와 만족도 등 산출과 결과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평가가 진행되었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리서치 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

2. 2012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2년의 규제개혁의 방향은 '공생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각 부처가 총 1,473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와 직결되거나 다수부처 관련 과제는 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점 개선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공생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규정을 정비('12.2)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12.9)를 추진하여 경제회복과 중소·서민 지원에 기여하였다.

또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합리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로 불합리한 규제 형성을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 총 1,643건을 심사, 중요규제 190건 중 101건을 개선 또는 철회권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개혁 노력의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상승하였다.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노력의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규제개혁만족도 조사결과 5년 동안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61.9→69.4, 총 7.5점 상승)하여, 2012년도에는 전년(67.2) 대비 2.2점 상승한 69.4점으로 나타났다.

3. 부문별 평가결과

■ 계획 단계

2012년 경기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민·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연초 총 1,18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였고, 경제단체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되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과제수가 최종적으로 총 1,473건에 달했다.

국민의 규제개혁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 의뢰, 여론조사 실시, 경제단체 건의, 민원·언론보도 분석 등 과제발굴에 있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부처가 규제개혁과제 발굴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완책을 함께 마련·시행하고 있었다.

■ 집행단계

불합리한 규제 형성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643건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90건의 중요규제 중 101건(53%)에 대해 철회·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각 부처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율도 평균 27%로서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10% → 27%, 17%p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표 및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특히 주요 규제개혁과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웹툰 등 홍보 영상물 및 심볼마크 제작, SNS, 지하철 광고 및 홍보 로고·캐치프레이즈 제작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주요 사례

- 단말기 유통·개방, MVNO(알뜰폰) 번호이동성 허용 등의 과제는 이행 이전부터 지하철 스크린도어, 옥외 전광판, 홍보대사 등 통해 적극 안내(방통위)
- ‘지식재산 대중화’, ‘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개선 실적을 집중 홍보(특허청)
-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유발을 위해 웹툰 제작·배포,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실내공기 측정장치) 개발·보급(환경부)
- 농림어업 애로해소 만화 제작·배포(농식품 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바꿔나가는 제로맨)(농식품부)

■ 산출/결과단계

2012년 규제개혁 만족도는 69.4점으로 2011년 조사결과(67.2점) 대비 2.2점 상승하였으며 특히 전문가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1.9점 상승)하였다. 특히, ‘의미 있는 과제 포함정도’(71%)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노력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별 연도별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10	'11	'12	증감	'10	'11	'12	증감	'10	'11	'12	증감	'10	'11	'12	증감
만족도	64.8	65.0	67.6	▲2.6	70.7	72.6	73.1	▲0.5	63.9	64.1	68.7	▲4.6	66.4	67.2	69.4	▲2.2

* 증감은 2011년 대비

2절 외부전문가 평가

이종한 | 한국행정연구원

1. 등록규제 DB를 이용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

가. 서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는 학계나 정부에서나 항상 문제가 되고 평가자의 주관이나 평가대상 기관의 성격에 따라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항상 있어왔다. 다른 정책평가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규제개혁 분야의 평가는 소관부처의 규제개혁 업무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반영해야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규제개혁 분야는 특정평가로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규제개혁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구축하고 있는 등록규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미 규제등록시스템을 운용한 지도 십 년 이상이란 세월이 흘렀고,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규제개혁에 활용해야 함에도 아직 등록규제를 이용한 연구나 자료는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건,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등록규제 데이터일 것이다. 따라서 등록규제 데이터의 신설·강화규제와 폐지·완화규제를 분석하여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규제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일정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나. 규제등록시스템과 규제등록

본고에서는 규제등록시스템에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규제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규제변동 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소관부처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

장점은 우선 실제 규제로 분류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실제 변동내용에 기초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흔히 규제개혁 평가에서 다른 제도개선 과제를 규제개혁 과제로 평가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의지나 방향을 쉽게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규제개혁도 정책적 방향에 따라 제도개선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규제 DB만 가지고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은 우리가 구축한 등록규제 DB를 평가에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과 백서에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노파심에서 비롯되었다.

현실을 따지지 않고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신설·강화규제는 모두 등록되어 이들만 검토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중요한 신설·강화규제는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된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우선 규제의 강화나 완화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내용변경이나 기타증가, 기타감소, 합리화, 구체화 등의 범주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직 충분히 검토된 바도 없거니와 지극히 곤란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기존규제’로 분류된 규제등록 건수만 4,229건이며 ‘누락등록’의 경우에는 6,077건에 달한다. 물론 이러한 누락등록의 급작스런 증가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추진된 미등록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급증하였다. 2009년에만 4,352건이 ‘누락등록’으로 등록되었다. 이것은 2008년 28건에 비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2010년 615건에 비해도 7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기존규제’로 등록한 건수도 2008년에 2,980건에 달해 ‘누락등록’과 ‘기존규제’를 합한 건수는 2008년 3,008건, 2009년 5,260건에 달했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모두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이고, 관리의 필요에 대한 판단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면이 있지만, ‘누락등록’을 포함하여 ‘기타(증가, 감소, 내용변경)’ ‘내용심사’ 사유로 등록되는 규제 건수가 상당하다는 점은 이러한 사유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기존 규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규제의 강도를 강화시키는지 완화시키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것이 피규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가 불명확한 것이다. 이것은 규제의 등록취지와도 맞지 않고 이러한 규제가 많을수록 전체 규제들 중에 관리의 필요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의 규제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결코 기업이나 국민에

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 신설·강화규제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5년 동안 신설·강화된 규제는 모두 1,487건으로 주요규제가 665건(44.7%), 부수규제가 822건(63.3%)이었다. 규제의 성격별로 보면 경제적 규제가 465건(31.3%), 사회적 규제가 573건(38.5%), 행정적 규제가 449건(30.2%)으로 사회적 규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적 규제, 그리고 행정적 규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규제 중 단연 눈에 띄는 부처는 금융위원회이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 167건을 등록하여 타 부처에 비해 압도적인 증가를 보였다. 동 법률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다. 자본시장의 규제원리를 업역별 규제체계에서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네거티브 원리를 도입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이 개발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다.

소관부처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	총합계	부수규제	주규제
국토해양부	63	82	111	256	157	99
금융위원회	204	2	40	246	8	238
보건복지부	4	111	48	163	100	63
농림수산식품부	25	76	57	158	100	58
환경부	0	129	15	144	73	71
고용노동부	4	32	20	56	23	33
공정거래위원회	46	0	9	55	47	8
방송통신위원회	33	4	18	55	50	5
식품의약품안전청	0	48	6	54	3	51
지식경제부	16	17	12	45	11	34
소방방재청	3	32	8	43	24	19
산림청	14	13	8	35	30	5
행정안전부	5	7	19	31	11	20
기획재정부	18	1	7	26	0	26
문화체육관광부	9	4	9	22	3	19
여성가족부	0	6	13	19	3	16
교육과학기술부	1	1	11	13	5	8

소관부처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	총합계	부수규제	주규제
법무부	0	0	13	13	5	8
중소기업청	6	1	3	10	3	7
관세청	6	0	3	9	4	5
문화재청	0	0	9	9	0	9
기상청	4	1	0	5	0	5
국방부	0	0	4	4	1	3
금융감독원	3	0	1	4	3	1
해양경찰청	0	4	0	4	0	4
국무총리실	1	2	0	3	0	3
통일부	0	0	3	3	1	2
경찰청	0	0	1	1	0	1
외교통상부	0	0	1	1	0	1
총합계	465	573	449	1,487	665	822

신설·강화규제건수로는 국토해양부가 256건을 등록하여 가장 많았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사법(32건 등록)’을 비롯한 49개의 법령에 근거한 규제를 신설·강화하였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23건)’, ‘항공법(22건)’, ‘해사안전법(22건)’, ‘건설기술관리법(15건)’, ‘주택법(14건)’, ‘해운법(13건)’, ‘자동차관리법(11건)’ 등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건축법’상의 규제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설치대상 확대’를 비롯하여 대부분 주택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강화가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다음으로 농림수산물부와 환경부가 있다. 환경부의 규제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련규제들이 다수 신설되었다. 금융위원회를 제외하면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물부, 환경부는 대체로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와 행정적 규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처다.

사회적 규제는 국민들의 생활에 더욱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피규제 집단이 규제기관의 규제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가진 부처의 규제신설 및 강화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 폐지·완화규제

소관부처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	총합계	부수규제	주규제
금융위원회	343	13	26	382	1	381
국토해양부	54	40	63	157	33	124
관세청	42		5	47	15	32
농림수산물부	12	6	11	29	3	26
보건복지부	4	19	4	27		27
식품의약품안전청		27		27	13	14
특허청	13		13	26	23	3
방송통신위원회	9	3	8	20	11	9
소방방재청	1	18	1	20	7	13
환경부		14	5	19	7	12
고용노동부	2	11	5	18	2	16
행정안전부	4	2	7	13		13
법무부	1		10	11	2	9
지식경제부	5	3	1	9	2	7
국방부	1		6	7		7
중소기업청	7			7		7
문화체육관광부	4		2	6		6
여성가족부		4	2	6	1	5
교육과학기술부		4	1	5		5
문화재청	3		2	5	3	2
산림청	4	1		5		5
기획재정부	4			4		4
통일부	1		3	4		4
공정거래위원회	2		1	3	1	2
국가보훈처	1		2	3	1	2
외교통상부			3	3	1	2
해양경찰청		3		3		3
농촌진흥청	1			1		1
총합계	518	168	181	867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에 대해 살펴보자. 규제개혁을 규제의 완화나 폐지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규제개혁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에 의한 부담을 최소화하며 가능한 한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않도록 규제를 관리하는 정부의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그러나 규제정비의 관점에서는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규제개혁에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에 속한다.

위의 표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법제를 대체하느라 신설·강화된 규제보다 더 많은 규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역시 규제가 많은 국토해양부가 폐지·완화규제 건수 15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선박직원법', '삭도·궤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련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다. 관세청의 경우 대폭적인 규제완화 노력이 돋보이는데 2011년 통관관련 다양한 '관세법'상의 경제규제들이 폐지되었다.

전체 규제폐지 및 완화 건수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규제법의 재정비로 대폭적인 규제폐지 건수를 제외하면 실제 폐지·완화건수는 500여 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동일한 기간 동안 신설·강화규제의 약 1/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규제건수의 변화를 가지고 실제 규제부담의 증감을 논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증가속도와 감소속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규제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이명박 정부의 규제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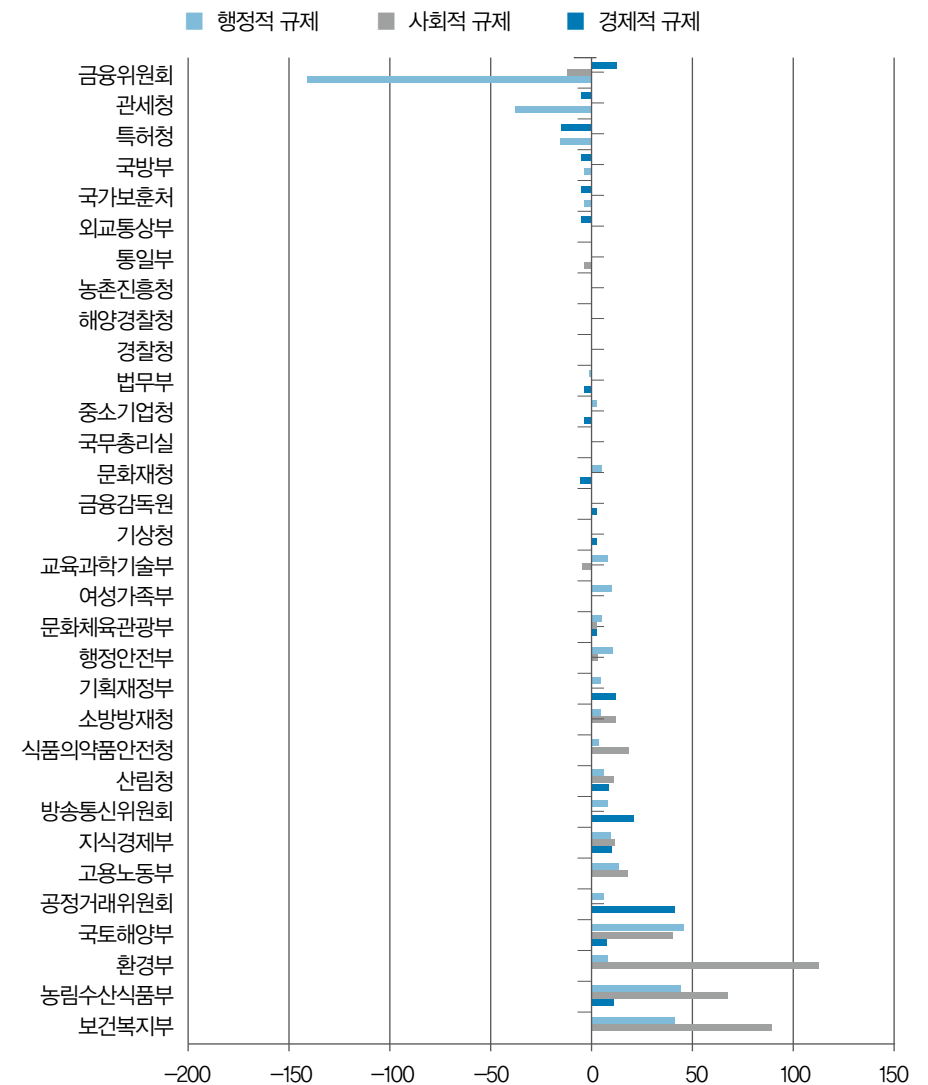
규제의 신설·강화 건수에서 폐지·완화 건수를 빼준 규제의 순증가 건수를 비교해 보면 각 부처의 규제개혁 노력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증가한 규제보다 감소한 규제가 더 많은 부처와 증가한 규제가 더 많은 부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부처는 규제의 순변동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규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관세청, 특허청이 감소한 규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융위원회를 제외하면 관세청과 특허청은 소관규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소한 규제가 많은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소관규제가 많지 않은 부처의 이러한 노력은 규제감소를 위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다수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부처들은 조금씩 규제가 순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농림수산물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는 사회적 규제의 순증가가 가장 많은 부처들로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처가 사회적 규제를 필두로 한 규제강화 움직임을 선도하는 입장이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이들 부처의 규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경제적

규제의 순증가를 보여주는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규제가 증가한 것이다.

분업의 심화와 상호의존성의 강화로 현대사회에서 규제의 수량적 증가는 일정 한도까지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규제의 급속한 증가는 50~60년대 미국과 유럽의 규제인플레이션처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기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차적인 균형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바람직해 보인다.

[소관부처별 규제 순변동(신설·강화건수-폐지·완화 건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규제성격별로 규제 증감을 고려한 순변동 내용을 살펴보자. 경제적 규제의 세부유형별로 순변동 내용을 보면 가격과 진입규제는 증가하였고, 거래나 품질관련규제는 감소하였다. 말하자면 가격이나 진입규제는 더욱 강해졌고, 거래나 품질관련규제는 더욱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규제 세부유형별 순변동]

	가격	거래	진입	품질
신설·강화 경제규제	19	163	153	130
폐지·완화 경제규제	6	185	142	185
순변동	13	-22	11	-55

사회적 규제에 대한 규제영역별 순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적 차별 등 영역에 상관없이 사회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규제 규제영역별 순변동]

	사회적 차별	산업재해	소비자 안전	환경
신설·강화 사회규제	75	23	300	175
폐지·완화 사회규제	22	11	104	31
순변동	53	12	196	144

[사회적 규제 규제방식별 순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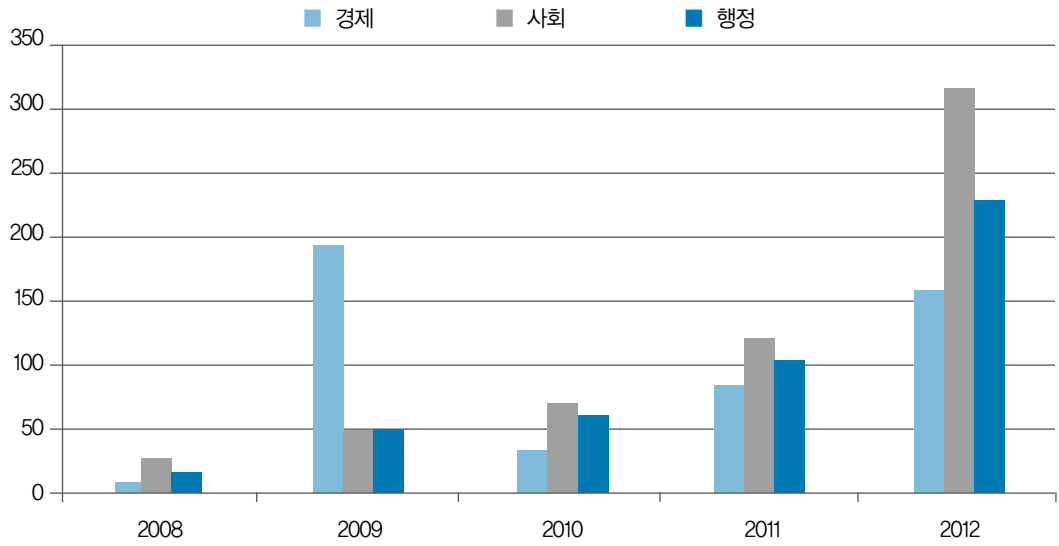
	성과	시장유인	투입
신설·강화 사회규제	79	98	396
폐지·완화 사회규제	7	21	140
순변동	72	77	256

바. 연도별 규제변동 분석

우선 연도별로 신설·강화규제를 살펴보자. 규제성격별 신설·강화규제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거의 새로운 규제가 등록되지 않다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신설·강화규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2009년의 자본시장 관련규제법제 정비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기존 규제의 폐지과정을 예외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집권 초기의 기업친화적 정부의 이미지 때

문에 신설·강화규제의 등록을 최대한 자제하다가 임기가 끝나갈수록 신설·강화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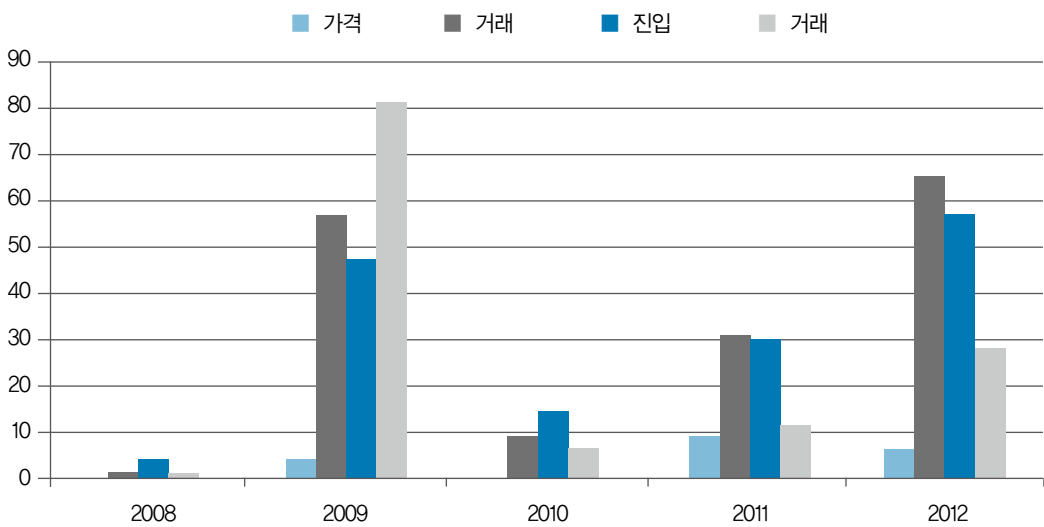
[연도별 규제성격별 신설·강화 추이]



[연도별 규제성격별 신설·강화규제 등록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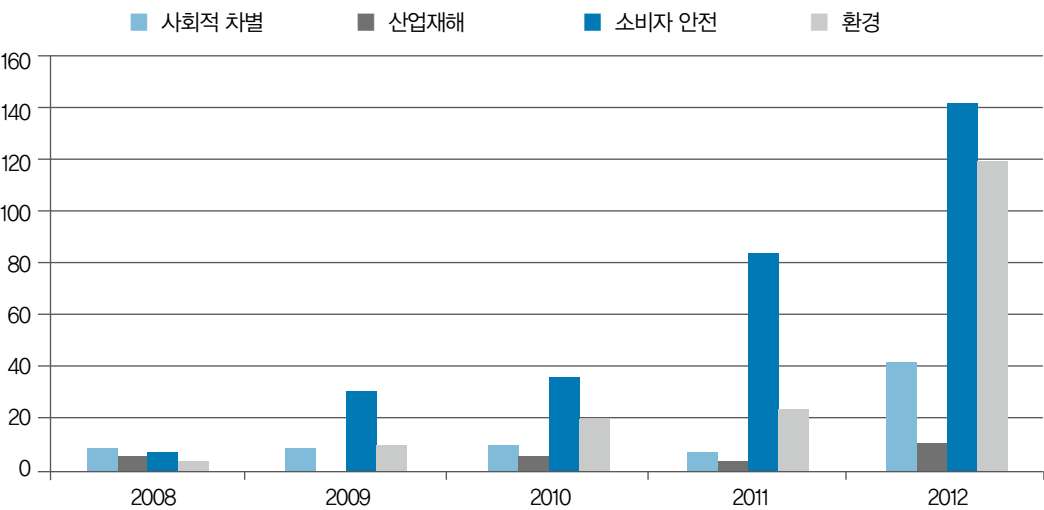
연도	경제	사회	행정	합계
2008	6	25	15	46
2009	190	49	48	287
2010	31	68	59	158
2011	82	119	102	303
2012	156	312	225	693
합계	465	573	449	1,487

[연도별 경제규제 세부유형별 신설·강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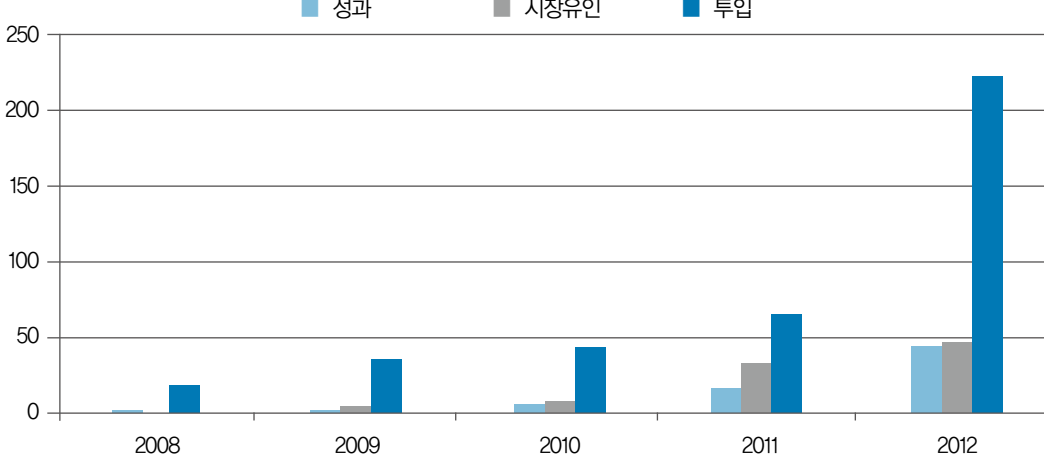


경제규제 세부유형별로 보면 역시 집권 초기에 비해 후반기로 갈수록 신설·강화규제의 등록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규제의 신설·강화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규제와 마찬가지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등록건수가 증가한다. 경제규제에서는 거래규제가 가장 많고 다음이 진입규제, 품질규제의 순이었는데, 사회규제에서는 소비자안전규제가 가장 많고 다음이 환경규제, 다음이 사회적 차별방지구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회규제 규제영역별 신설·강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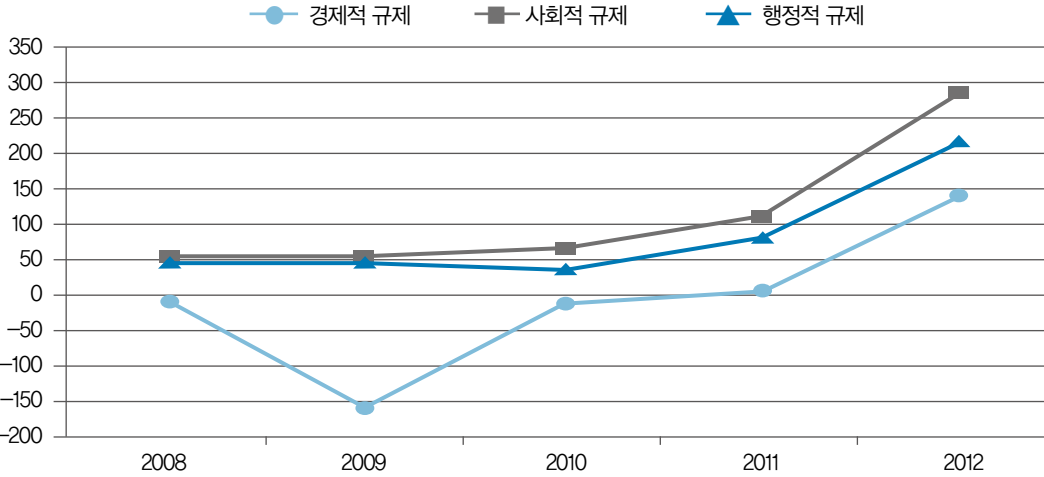


[연도별 사회규제 규제방식별 신설·강화 추이]



사회규제의 규제방식별 유형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투입규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장유인과 성과규제의 순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설·강화규제만 살펴보면, 집권 초기에는 거의 규제강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꺼려지는 분위기였다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신설·강화규제의 등록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신설·강화규제뿐만 아니라 폐지·완화규제까지 고려한 규제의 순변동을 연도별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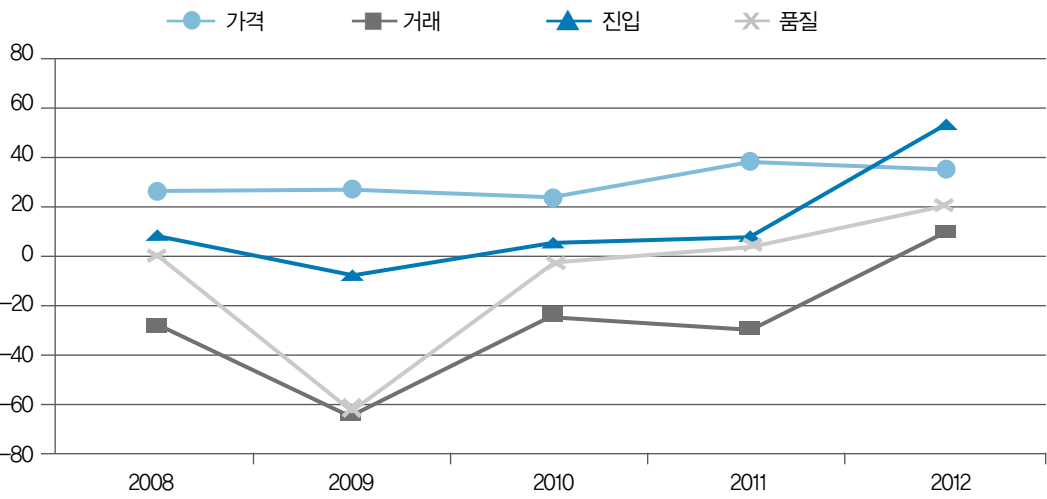
[연도별 규제성격별 순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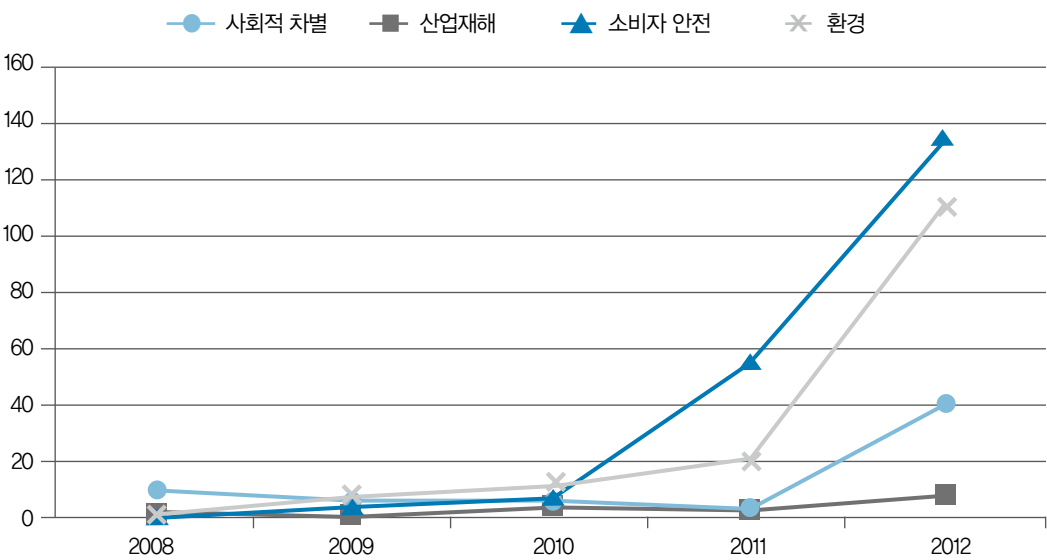
2009년의 경제적 규제를 예외로 하면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 모두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규제의 순증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외부전문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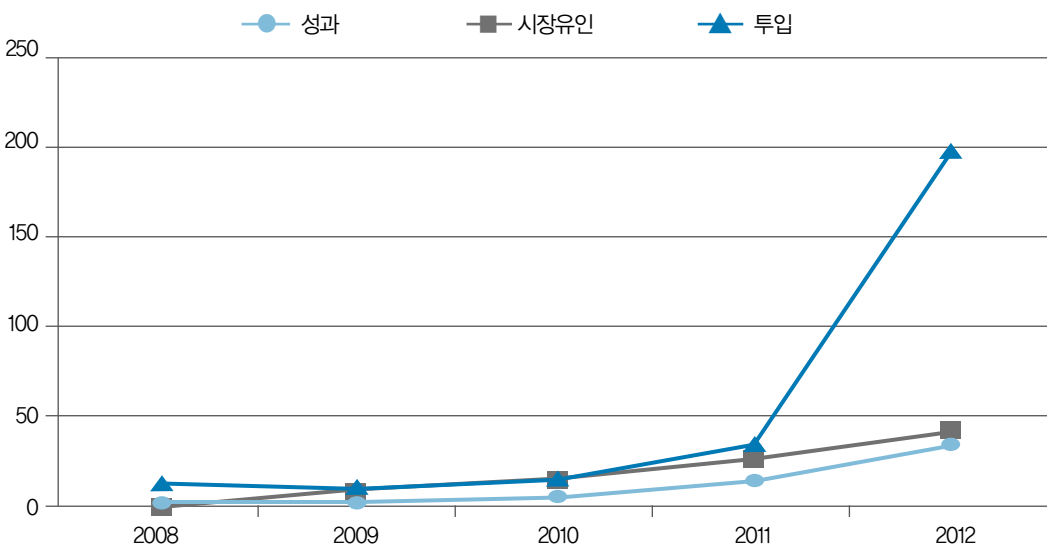
[연도별 경제규제 세부영역별 순변동 추이]



[연도별 사회규제 규제영역별 순변동 추이]



[연도별 사회규제 규제방식별 순변동 추이]



이러한 추이는 위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의 세부유형의 순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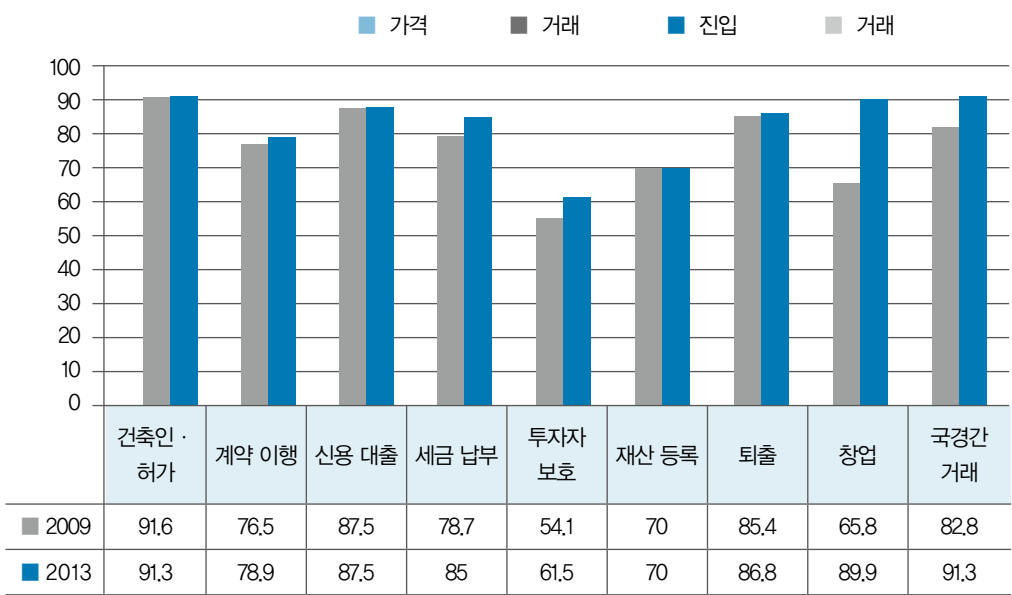
사. 해외기관의 우리나라 규제개혁 평가

등록규제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규제와 관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해 보자.

먼저 기업활동의 환경을 9가지 분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는 'Doing Business'의 각 분야별 점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표는 건축관련 인·허가, 민간의 계약이행, 신용대출, 세금납부의 용이성, 투자자 보호, 재산권 등록, 기업퇴출제도, 창업, 국경간 거래 등 대부분 규제와 밀접히 관련된 기업환경을 측정하는 변수들로 구성된다.

이명박 정부 집권초기인 2008년도와 2012년도의 우리나라 각 분야별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 그래프와 같다. 다음 그래프의 점수는 각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국가의 점수를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환산점수(distance to frontier)이다. 우수국가에 근접한 분야는 건축인·허가, 창업, 국경간 거래, 기업퇴출 절차, 신용대출, 세금납부 용이성 등이다. 주목해야 할 분야는 투자자 보호와 재산권 등록은 아직 70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한국 항목별 점수(distance to frontier)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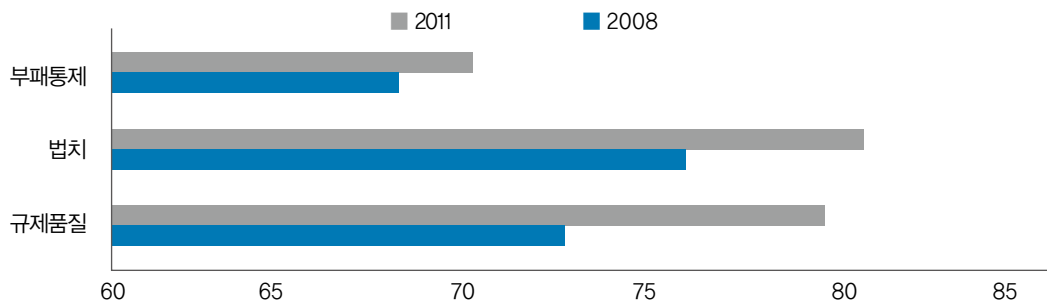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2013 Doing Business Report

2009년 보고서의 한국의 순위는 23위였는데 2013년에는 8위로 상승하였다. 기업환경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개선된 분야는 창업, 국경간 거래, 투자자 보호, 계약이행, 세금납부, 퇴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창업은 2008년에 126위에서 2012년 24위(점수로는 65.8에서 89.9)로 상승하였다. 창업을 위해 거쳐야 할 단계가 10단계에서 5단계로 절반으로 줄었고, 시간도 17일에서 7일로 감소했다.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도 폐지되었다. 국경간 거래는 12위에서 3위(점수로는 82.8에서 91.3)로 상승하였다.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4개에서 3개로, 소요시간은 8일에서 7일로, 비용은 767달러에서 665달러로 감소하였다. 특히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6개에서 3개로 감소하였고, 시간은 8일에서 7일로, 수입비용도 747달러에서 695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관세청의 규제완화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는 70위에서 49위(54.1에서 61.5)로 상승했는데 투자자 보호지수가 5.3에서 6.0으로 상승하였다. 계약이행은 8위에서 2위로, 세금납부는 43위에서 30위로 상승하였다. 1년 동안 납부하는 세금의 수가 14개에서 10개로 감소했고, 세금납부에 소요되는 시간도 연간 250시간에서 207시간으로 감소했다.

Doing Business와 함께 규제관련 지표로 많이 사용하는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에 반영된 평가를 살펴보면, 규제품질은 2008년의 72.8에서 2011년에는 79.7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치구현은 76.4에서 80.8로 상승하였고, 부패통제수준도 68에서 70.1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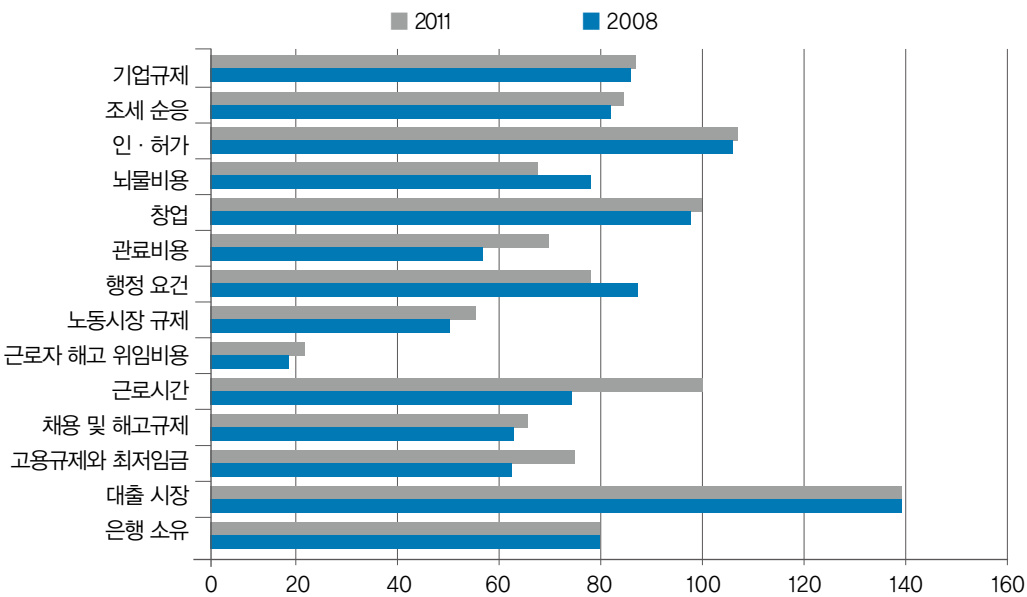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수 중 한국의 규제관련 지수 변화 추이]



자료) World Bank, 2013 Governance Indicators

이명박 정부 동안 세계은행의 한국 규제개혁과 관련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Fraser Institute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의 규제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세계은행보다는 못하지만 긍정적인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규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점수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보았다. 영국에 비해 우리가 더 나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인·허가 관련규제와 대출시장 접근성이었다. 대출시장 접근성은 무려 140점을 기록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개선된 지표는 근로자해고 비용과 근로시간 관련규제, 그리고 행정업무로 인한 관료비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근로시장의 유연성이 조금 더 제고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행정요건(요구사항)과 뇌물비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의 규제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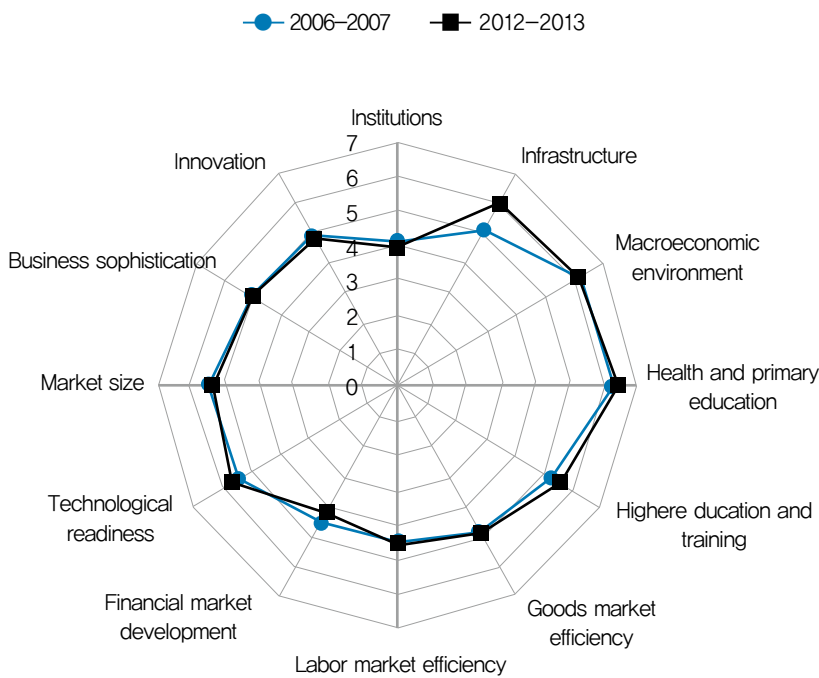


자료) Fraser Institute(2013), 2012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Report, 영국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점수를 계산

다음은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나타난 규제관련 현황을 살펴보자. WEF는 아래 그림과 같이 12개 분야의 경쟁력 요인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우리나라의 점수가 낮은 분야는 제도,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 등이다. WEF는 비교대상 국가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요소주도 발전단계, 효율성 주도 발전단계, 혁신주도 세 가지 발전단계로 나누어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혁신주도 발전단계 국가에 속해 이들 국가와 비교하게 된다. 2008년도 GCI(Global Competitiveness Indicator)에 따른 우리나라의 순위는 13위였는데 2012년에는 19위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동안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각 지표들의 점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는 2006년에 비해 2012년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변화의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오히려 점수가 감소한 지표는 제도와 금융시장발전 지표이다. 제도품질은 조사대상 국가들 중 62위, 노동시장 효율성은 73위, 금융시장 발전은 71위를 하고 있어 계속되는 지적이지만 이 분야의 지표개선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규제와 관련된 제도품질,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과 같은 지표들은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였다. 이것은 다른 기관들의 평가결과와는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006년 대비 2012년 우리나라 GCI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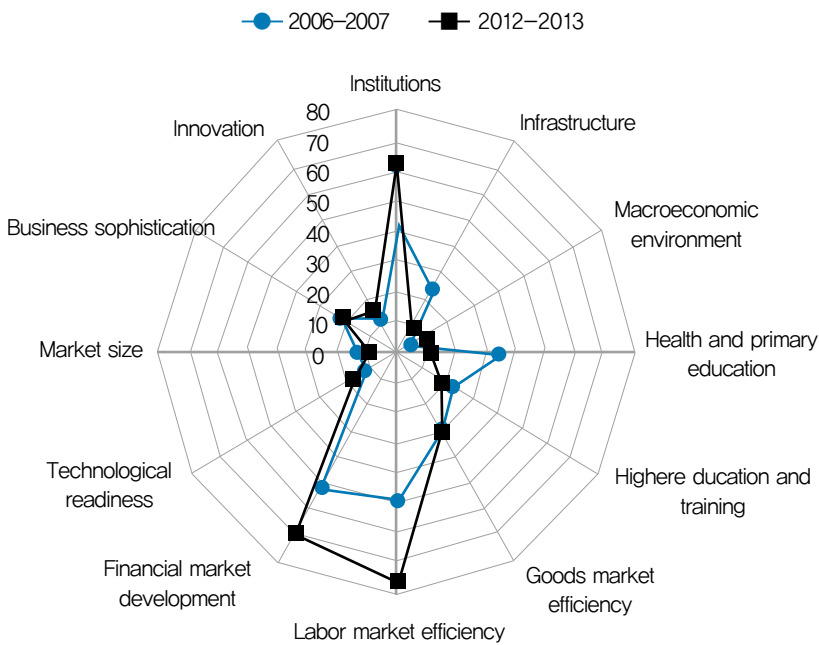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 분야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정치인 신뢰(117위), 예산 낭비(107위), 규제부담(114위), 정책 투명성(133위), 이사회 효율성(121위), 소액주주보호(109위) 등으로 나타났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상대적 순위로 평가하면 상위권과 하위권 점수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로 평가된다.

비교대상 국가의 변화도 고려할 수 있는 순위를 가지고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거시경제적 환경과 관련된 지표들은 순위가 상승하였고, 규제와 특히 관련된 상품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의 순위는 오히려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제도품질도 마찬가지로 하락하였다. 독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거의 대부분 주관적 데이터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물론 기관마다 조사방법과 설문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설문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 국가의 이미지 효과가 반영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부문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어도 그것의 집행과정에서 또는 일선 현장에서 그러한 개선에 대해 체감하기 어렵거나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제도에도 관성이 있듯이 사람의 인식에도 한번 굳어진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006년 대비 2012년 우리나라 GCI 순위 비교]



WEF에서 조사한 기업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조사한 내용에도 이러한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조사된 설문 결과에서는 정치적 불안과 관료주의 비효율성, 노동관련규제가 가장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은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남북의 대치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국내에서 느끼는 불안과 해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조사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WEF의 기업활동 장애요인 조사결과]

2008~2009년 기업활동 장애요인		2012~2013년 기업활동 장애요인	
정치적 불안	17.3	정치적 불안	18.3
비효율적 정부관료주의	12.9	비효율적 정부관료주의	13.4
노동관련 규제	11.3	자금조달 접근성	12.8
조세관련 규제	8.3	부족한 혁신능력	10.3
인플레이션	7.9	노동관련 규제	9.3
자금조달 접근성	7.8	조세관련 규제	6.2
세율	6.5	경직적인 노동의식	5.8
경직적 노동의식	5.8	세율	5.2
부적절한 노동교육	5.7	인플레이션	5.1
인프라 공급부족	5.5	부패	4.5

아. 정책적 시사점

이명박 정부의 규제변동 내역에 대한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든 평가의 기초는 데이터에서 출발한다.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이 기본이다. 평가방법은 다음의 문제이다. 우리는 훌륭한 규제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평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부처의 소관규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규제개혁백서에 보고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와 실제 등록된 규제는 시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수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심사완료된 규제가 다 등록되지는 않을 수 있다. 아직 거쳐야 할 입법과정이 있어 중간에 더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 DB상에도 이러한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마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처럼 규제도 입안단계부터 DB상에서 철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과제가 100% 수행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번 원고를 작성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제출된 과제를 등록규제 시스템에서 개별 규제변동 내역을 확인하기는 무척 어렵게 되어 있다. 나름 규제전문가라고 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그러니 하물며 일반국민의 입장에서야 이러한 과제 하나하나를 확인한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인다.

평가를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작성을 위해서는 규제정비도 물론이거니와 규제개혁 과제의 제출도 등록규제상의 규제분류나 규제번호를 표시하고 시스템에서 그 변동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때 규제개혁은 기업이나 국민에게도 더욱 쉽게 홍보되고 이러한 효과는 다시 규제담당 부처로 전달되어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기업친화적 정책을 강조하고 전봇대 규제로 대표되는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는 해외의 평가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듯이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그러나 신설·강화규제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권 초기에는 신설·강화규제가 거의 등록되지 않고 후기로 갈수록 신설·강화 등록규제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규제기관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항상 규제의 신설과 폐지 활동이 공존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항상 소관규제는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규제관리가 가능하고 규제관리를 정책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절 | 2013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신지성 | 사무관(044)200-2398, ooo2879@pmo.go.kr

1.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올해는 세계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우리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내외 경제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악화, 소비위축 등이 나타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쾌적한 생활환경이나 생활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규제개혁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이고, 그간 규제 수혜집단의 저항으로 개혁이 어려웠던 고질적 규제에 대해서도 새 정부 초기 강력한 추진동력을 바탕으로 개선이 가능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2013년 규제개혁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확연히 다르게 추진된다.

첫째, 경제적 효율성과 기업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사회적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국민중심의 규제개혁으로 패러다임을 재구축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흡한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민생 관련규제는 합리화하여 규제가 국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경제의 활력은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잘못된 시장질서를 시정할 수 있는 질 좋은 규제를 생산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규제개혁이 중점 추진해 오던 기업애로 해소, 규제부담 완화

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를 생산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동반발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셋째, 새 정부 초기에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이 강력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먼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집중 발굴·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소 미진했던 규제성과 이행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규제개혁의 효과가 중앙부처로부터 지자체까지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점 추진분야

2013년 규제개혁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3不 해소', '서민생활 안정과 신뢰사회 구축', '창조경제 지원과 투자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3不해소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범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대규모 점포 규제 등을 통해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해 나가 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부담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이 나 중소·중견 기업이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체계화·합리화해 나가 고자 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 보육, 교육, 근무 여건 등 국민 생활불편 규제를 개선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 근로를 통한 복지를 구축(고용복지)하고,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토록 근무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소방·식품 등 안전관련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 관련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ICT 산업의 진입장벽 및 영업규제를 완화하여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시키고, 의료·숙박·교육시설 등 서비스산업의 인력·시설기준,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지규제 및 기업 금융제도 등 기업 투자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이 3가지 방향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개별 과제를 발굴, 연중 개선을 추진하는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평가하여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에는 각 부처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총리실에서도 중소기업 3不해소, 국민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 등의 방향과 합치하는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미흡한 점은 지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시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작성지침 및 양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도 도래 일몰에 대해서 부처별로 10% 이상 폐지(완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규제 타당성, 존속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방방자치단체간 규제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 사항이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규정의 정합성, 제·개정 필요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관법령과 연결된 지자체 규제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지자체 등 현장에서 보다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행정조사에 대한 체계적 감축을 추진하여 기업의 노동생산성 및 경제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해 나가기 위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조사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록

제1절 규제개혁 관련법령

- 가. 행정규제기본법
-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일부개정 2012.7.6)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 가. 규제개혁위원회
- 나. 경제분과위원회
-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

1절 | 규제개혁 관련법령

가. 행정규제기본법

- 제 정 1997. 8.22 법률 제5368호
- 일부개정 1998. 2.28 법률 제5529호
- 일부개정 2005. 12.29 법률 제7797호
- 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9. 3.25 법률 제9532호
- 일부개정 2010. 1.25 법률 제9965호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

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3조(적용 범위)

-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4조(규제 3법정주의)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5>

제5조(규제의 원칙)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 2010.1.25>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9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0조(심사요청)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7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 2. 제7조 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11조(예비심사)

-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2조(심사)

-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14조(개선 권고)

-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5조(재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25>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개정 2010.1.25>

제17조(의견 제출)

-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0.1.25>
 - 1.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2. 삭제 <2009.3.25>
 -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2조(조직 정비 등)

-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정 2010.1.25>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1.25>

제2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1.25]

제25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雇)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0.1.25]

제28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5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총리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부칙 <제5368호, 1997. 8. 22>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1年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法律 第4735號 行政規制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法 施行 당시 既存規制의 自體整備에 대한 特例)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 施行 후 5年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月 31日까지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既存規制의 自體整備에 갈음하여 이 法 施行 당시 모든 소관 規制에 대한 年次別整備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整備計劃 및 그 施行 결과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4條(訓令·告示 등의 再檢討)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 施行 후 1年 이내에 이 法 施行 당시 施行 중인 訓令·例規·指針·告示등에 規定된 規制에 대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再檢討하여야 한다.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討 결과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근거하지 아니한 訓令·例規·指針·告示 등에 規定된 이를 지체없이 廢止하거나 關係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 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中 “다른 法令의 規定”을 “다른 法令(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規定”으로 한다.

第42條 中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62條 第3號 中 “制定 또는 改正”을 “改正”으로 하고, 同條 第5號 中 “行政規制”를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委員會는 第1項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調査 · 審査事項 中 行政規制에 관한 法令 · 制度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改革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規制改革委員會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할 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關聯資料와 함께 規制改革委員會에 移送하여야 한다.

부칙 <제5529호, 1998. 2.28>(정부조직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 行政規制基本法 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6條 中 “總務處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⑥ 내지 <34> 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부칙 <제7797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2008.2.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749>까지 생략

<750>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中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32호, 2009.3.25>(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9965호,2010. 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 일부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 일부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 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조 삭제 <2006.3.31>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명칭

-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 3. 규제의 처리기관
 -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 6. 규제의 존속기한
 -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① 삭제 <2006.3.3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 ④ 위원회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 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내용
 - 2. 위원회의 심사의견
 -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 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 3. 기타 참고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 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 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 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 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 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5조 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법 제2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지식경제부 장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③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삭제 <2006.3.31>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 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 · 조사요원 · 이해관계인 ·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 여비 기타 경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 · 평가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확인 · 점검사항
 - 2. 확인 · 점검일정
 - 3. 확인 · 점검자 인적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5681호,1998. 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령 · 조례 · 규칙이나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 예규 · 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 2. 법 시행일 전 5년간 개정되는 아니한 규제
 -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36호,2006. 3.31>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32> 생략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34>내지 <241> 생략

부칙 <제20724호, 2008. 2.29>(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 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⑦ 생략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일부개정 2012.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08.10.2. 개정)

-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1급 상당 고위공무원 이상인 관계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2.7.6. 개정)

제2조의2(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08.10.2. 신설)

제3조(의안의 제출)

-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 2(중요규제 등의 결정)

- ① 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 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12.7.6. 개정)
-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12.7.6. 개정)
 -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의3(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12.7.6. 개정)

- 1.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구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경제분과위원회
- 2. (삭제)
-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08.10.2. 개정)

제6조(소관)

-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 해경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 ② (삭제)
- ③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12.7.6. 개정)
- ④ (삭제) (‘08.10.2.)

제7조(회의)

-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08.10.2. 개정)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8조(삭제) (‘08.10.2.)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실의 직무) 규제개혁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삭제) (‘08.10.2.)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발언할 수 있다.(‘12.7.6. 개정)

제5장 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08.10.2. 개정)
-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08.10.2. 개정)

제14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08.10.2. 개정)

제15조(삭제) (‘08.10.2.)

제16조(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국무총리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08.10.2. 개정)

부칙

이 운영세칙은 201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2절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규제개혁위원회

회차	부처명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76회 ('12.1.16)	총리실	201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보고	0	0	0	0
	행안부	2012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0	0	0	0
	중기음부즈만	2012년 중소기업음부즈만 활동계획	보고	0	0	0	0
제277회 ('12.2.23)	국토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	의결	0	1	0	1
	금융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278회 ('12.3.8)	금융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3	2	6
	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의결	0	1	0	1
제279회 ('12.3.22)	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0	1	0	1
	공정위	과징금부와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의결	1	0	0	1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0	0	2
제280회 ('12.4.5)	지경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3	0	4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81회 ('12.4.19)	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0	4
제282회 ('12.5.3)	방통위	설비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	의결	5	0	1	6
	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4	7	0	11

회차	부처명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83회 ('12.5.17)	외교부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	의결	1	2	0	3
	농림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0	2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284회 ('12.5.31)	지경부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285회 ('12.6.14)	지경부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의결	4	3	1	8
	외교부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86회 ('12.7.5)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0	0	0	0
제287회 ('12.7.19)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안	의결	4	0	0	4
제288회 ('12.8.16)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289회 ('12.8.30)	총리실	중소기업 음부즈만 2012년 상반기 규제개선 추진실적	보고	0	0	0	0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안	의결	1	0	0	1
	복지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290회 ('12.9.13)	지경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제291회 ('12.9.27)	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2	0	3
제292회 ('12.10.11)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93회 ('12.10.25)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0	4
제294회 ('12.11.8)	총리실	2012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보고	0	0	0	0
제295회 ('12.11.22)	지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1	2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회차	부처명	안건명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96회 (‘12.12.7)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총리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	의결	0	0	0	0
	복지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97회 (‘12.12.21)	총리실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0	0	0	0

나. 경제분과위원회

최두영 | 사무관(044)200-2414, choedy@pmo.go.kr

회수	부처별	상정안건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40회 (‘12.2.23)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441회 (‘12.3.8)	지경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442회 (‘12.3.22)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443회 (‘12.4.19)	국토부	도로법 개정안	의결		1		1
444회 (‘12.5.31)	공정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445회 (‘12.6.14)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1		3
	지경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정안	의결	1			1
	방통위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 준 제정안	의결		1		1
	국토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 개정안	의결		2		2
446회 (‘12.7.5)	금융위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정안	의결	1			1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447회 (‘12.7.19)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회수	부처별	상정안건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48회 (’12.8.30)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3	1		4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의결			1	1
449회 (’12.9.13)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450회 (’12.9.27)	국 세 청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의결		1	1	2
	국 토 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국 토 부	건축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국 토 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2
	국 토 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4
451회 (’12.10.11)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			1	1
	기재부	관세사법 개정안	의결			1	1
452회 (’12.10.25)	농식품부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의결			1	1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	1		3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계속심사)	의결	2		2	4
453회 (’12.11.8)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454회 (’12.11.22)	국토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관세청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2	1	3
	특허청	변리사법 개정안	의결			2	2
455회 (’12.12.7)	국토부	택배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재심사)	의결		1		1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정환 | 사무관(044)200-2438, sim5776@pmo.go.kr

회수	부처명	안전명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58회 (’12.1.26)	행정안전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의결	1	0	0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459회 (’12.2.23)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1	0	3
460회 (’12.3.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0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3	1	0	14
461회 (’12.3.2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462회 (’12.4.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463회 (’12.4.1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7	0	0	7
464회 (’12.6.14)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안	의결	3	1	0	4
465회 (’12.6.28)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8	2	1	11
466회 (’12.7.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467회 (’12.7.1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0	2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6	0	1	7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회수	부처명	안건명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68회 (‘12.8.16)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0	0	2
	행정안전부	2012년도 일몰규제 재검토 심사	의결	9	0	0	9
	법무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의결	0	1	0	1
	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6	2	0	8
469회 (‘12.8.30)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3	0	0	3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0	1	0	1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470회 (‘12.9.13)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법 제정안	의결	계속심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환경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3	1	0	4
	환경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3	1	0	4
	환경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3	1	0	4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3	1	0	4
471회 (‘12.9.27)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법 제정안	의결	2	0	1	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의결	0	0	1	1
472회 (‘12.10.11)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의결	0	1	0	1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0	2
473회 (‘12.10.25)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0	0	3

회수	부처명	안건명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74회 (‘12.11.8)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1	0	3
475회 (‘12.11.2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476회 (‘12.12.7)	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	0	1	0	1
	고용노동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12건	의결	10	2	0	12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12건	의결	9	3	0	12
477회 (‘12.12.2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1	0	0	1
	보건복지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15건	의결	8	1	6	15
	외교통상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2건	의결	2	0	0	2
	소방방재청	재검토형 일몰규제 4건	의결	4	0	0	4
	경찰청	재검토형 일몰규제 2건	의결	2	0	0	2

2012년도 규제개혁백서

발 행 일 : 2013. 3

발 행 처 : 규제개혁위원회

편집 · 인쇄 : 엔더블유기획정보(02-2235-6114)

